

2025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RINSA)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NDU)

유의사항

1.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2. 본 연구보고서는 정책입안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타 기관에 불필요한 자료유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서

2025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정태연 (중앙대학교)
공동연구원 최영진 (중앙대학교)
박준성 (중앙대학교)
심세현 (강원대학교)

발간사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가안보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198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범국민안보의식조사'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며, 30여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 안보의식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본 정책대안연구는 이러한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를 단순히 정리하고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과 과거 추세와의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정책 및 안보전략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70여 개의 고정 설문을 통해 확인된 여론의 장기 추이와 시의성 있는 현안 설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올해 조사 결과는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5개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바람직한 관계 방향, 대북 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국방정책에 대한 인식과 군 신뢰도 제고 방안, 병역제도 및 병영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대주변국 인식 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이 그것입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분야의 우수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책당국과의 발표 및 소통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를 더욱 정교화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안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안보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교수 박영준

CONTENTS

2025
법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제1장 조사 개요	1
가. 조사목적	2
나. 조사방법	2
다.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2
라. 응답자 특성	3
마. 핵심 분석 영역과 차원	5
제2장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7
요약문	8
가.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	10
나. 기초 통계분석	12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47
라. 정책대안 제시	53
제3장 국민의 대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57
요약문	58
가. 국민의 대북 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60
나. 기초 통계분석	62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97
라. 정책대안 제시	104
제4장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 제고 방안	107
요약문	108
가.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	110
나. 기초 통계분석	112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148
라. 정책대안 제시	154
제5장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와 정책적 함의	159
요약문	160
가.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162
나. 기초 통계분석	164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199
라. 정책대안 제시	205

제6장 대주변국 인식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	211
요약문	212
가. 대주변국 인식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	214
나. 기초 통계분석	216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251
라. 정책대안 제시	257

2025

법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제 1 장

조사개요

제1장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본 조사는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중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안보의식에 관한 조사로서, 안보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의 바람직한 안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조사방법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군인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국방·안보 전문가	현역 군 간부 및 병사
표본수	1,200명	100명	1,447명
조사방법	면접조사	웹조사	
조사지역	전국		
조사도구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표본 추출 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 층화추출		
표본 오차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pm 2.8\%p$ (일반국민)		
조사기간	2025년 00월 00일 ~ 00월 00일		

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1) 입력 구조 구성 \Rightarrow 2) 부호화 및 입력 \Rightarrow 3) 점검 과정을 거쳐 통계 프로그램 (SPSS 28)으로 전산처리한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 중 응답자 특성의 사례수가 30표본 미만인 경우, 모집단 정규 분포에 수렴하지 않아 이를 분석하지 않았으며, 별도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직업별 분석 중 '무직/휴직/은퇴자'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사례수가 30표본 이상이어도,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다.

라. 응답자 특성

표 1 응답자 특성표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747)	100.0
대상별	일반국민	(1,200)	43.7
	전문가	(100)	3.6
	군인	(1,447)	52.7
[일반국민 특성별 분석]			
성별	남성	(605)	50.4
	여성	(595)	49.6
연령별	18~19세	(38)	3.2
	20대	(189)	15.8
	30대	(203)	16.9
	40대	(223)	18.6
	50대	(244)	20.3
	60대	(228)	19.0
	70~74세	(75)	6.3
지역별	서울	(139)	11.6
	경기/인천	(247)	20.6
	부산/울산/경남	(208)	17.3
	대구/경북	(139)	11.6
	광주/전라	(171)	14.3
	대전/충청/세종	(205)	17.1
	강원/제주	(97)	8.1
지역크기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522)	43.5
	중·소도시	(565)	47.1
	군지역	(113)	9.4
직업별	농/어/임업	(38)	3.2
	자영업자	(151)	12.6
	판매/서비스직	(247)	20.6
	기능/숙련공	(99)	8.3
	일반 노무직	(49)	4.1
	사무/기술직	(296)	24.7
	경영/관리직	(13)	1.1
	전문/자유직	(12)	1.0
	군인/경찰/소방	(2)	0.2

	구분	사례수	비율
직업별	전업주부	(170)	14.2
	학생	(75)	6.3
	무직/휴직/은퇴	(47)	3.9
	기타	(1)	0.1
학력별	중졸 이하	(65)	5.4
	고등학교(중퇴 또는 졸업)	(434)	36.2
	전문대(재학, 중퇴 또는 졸업)	(239)	19.9
	4년제 대학교(재학, 중퇴 또는 졸업)	(459)	38.3
	대학원 이상	(3)	0.3
혼인 상태별	미혼	(297)	24.8
	기혼	(845)	70.4
	이혼/별거	(30)	2.5
	사별	(28)	2.3
종교별	기독교/개신교	(272)	22.7
	불교	(206)	17.2
	천주교/가톨릭	(77)	6.4
	원불교	(13)	1.1
	기타	(-)	-
	종교 없음	(637)	53.1
군 복무 경험별	경험 있음	(548)	45.7
	경험 없음	(652)	54.3
	현역병	(505)	42.1
군 복무 방식별	부사관(하사관)	(8)	0.7
	장교	(5)	0.4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방위병 등	(24)	2.0
	전환복무	(1)	0.1
	대체복무요원	(5)	0.4
	소속없음, 100만원 미만	(18)	1.5
월평균 가구 소득별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6)	3.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5)	12.9
	300만원 미만~400만원 미만	(247)	20.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8)	18.2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274)	22.8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91)	15.9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54)	4.5
	1000만원 이상	(7)	0.6
생활 수준별	상층	(3)	0.3
	중상층	(73)	6.1

	구분	사례수	비율
생활 수준별	중간층	(589)	49.1
	중하층	(464)	38.7
	하층	(71)	5.9
개인 성향별	매우 진보적	(44)	3.7
	진보적인 편	(328)	27.3
	중도	(497)	41.4
	보수적인 편	(306)	25.5
	매우 보수적	(25)	2.1

마. 핵심 분석 영역과 차원

1. 핵심 분석 영역

표 2 2025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의 5대 핵심 분석 영역 및 정의

분석 영역	핵심 개념	개념 정의
1.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관계 방향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확장성	전통적 군사 안보 차원의 결속력을 넘어, 경제·기술·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진화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
2. 국민의 대북 인식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	이중적 인지 구조와 전략적 선호	북한을 '경계해야 할 적'과 '함께해야 할 동반자'로 구분하는 이중적 인식 하에서, 핵 위협 고조에 따른 현실적 억제와 원칙적 관여 사이의 정책적 선호도
3.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 제고 방안	안보 정책 지지를 위한 사회적 자본	군 조직의 청렴성·투명성·혁신성에 대한 믿음이자, 국방 예산 증액 등 안보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정책 수용성의 선행 요건
4. 병역제도 인식변화와 정책적 함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보상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병역 의무 이행 과정의 공정성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존중 및 보상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권리 기반 안보 의식
5. 대주변국 인식변화와 외교정책 추진 방향	전략적 피아식별과 외교적 균형	주변 4강(미·중·일·러)을 우리 안보의 '기여 요인' 혹은 '위협 요인'으로 식별하는 과정이자,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선택한 외교적 무게중심의 방향성

2. 핵심 분석 차원

표 3 국민 통합형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5대 심층 분석 프레임워크

분석 차원	1단계: 배경 및 원인 진단	2단계: 현상 분석	3단계: 심층 기제 파악	4단계: 정책적 목표
1. 세대 간 인식 격차	<p>역사적 경험의 상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화(생존) vs 86세대(민주화) vs MZ세대(공정/경쟁) 간 안보 '원체험'의 근본적 차이 	<p>가치관의 파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 가치가 '생존'이라는 단일 가치에서 '공정', '비용', '실리', '평화' 등으로 분화 및 충돌 	<p>인구구조 변화와 부담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 속 청년 세대의 '박탈감'과 '보상 심리'가 안보 수용성 결정 	<p>소통 채널 차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 미디어 이용 행태를 고려한 맞춤형 언어와 논리 개발
2. 정치적 태도 상호 작용	<p>안보의 정치화 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 이슈가 국익이 아닌 '정치적 득실'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구조 	<p>확증 편향과 비토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내용과 무관하게 진영 논리에 따라 무조건 반대(Veto)하거나 맹신하는 여론의 허수 식별 	<p>정책 신뢰의 전이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군에 대한 신뢰도가 개별 정책(징병, 방위비 등) 수용성으로 전이되는 상관관계 규명 	<p>초당적 안보 합의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정책 불변 영역' 확보
3. 정서 및 정보 환경	<p>인지전 위협의 일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짜뉴스, 괴담 등 인간의 마음을 겨냥한 '인지전'이 핵심 위협으로 부상 	<p>알고리즘과 에코 챔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튜브 등 알고리즘이 공포와 혐오를 증폭시켜 극단적 안보 인식을 형성하는 폐쇄적 구조 	<p>정서적 기제 작동 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성적 판단보다 '불안', '분노' 등 감정이 정책 지지에 더 강력하게 작용 (행동경제학적 접근) 	<p>사회적 회복탄력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왜곡과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는 '미디어 리터러시' 및 심리적 방어 기제 구축
4. 전략적 공간 구획	<p>안보 비용의 공간적 불평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 혜택은 전 국민이 공유하나, 비용(소음·규제)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불일치 	<p>위협 인식의 온도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방 지역의 '추상적 안보'와 접경 지역의 '구체적 생존 위협' 간 인식 괴리 분석 	<p>민-군 갈등 선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대 이전, 소음 등 갈등 요소를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데이터 기반으로 예방 관리 	<p>상생 발전 모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부대를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경제의 동반자로 전환(도시/농촌/접경 맞춤형)
5. 정책 민감도 지수	<p>여론의 가변성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충격(도발 등) 시 여론이 요동치는 '변동성'을 측정하여 단기/장기 과제 구분 	<p>정책 저항 임계점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병제, 국방비 등 민감 이슈에 대해 국민이 감내 가능한 비용과 변화의 한계선 추정 	<p>추진 우선순위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의 '시급성'과 대중적 '수용성'을 교차 분석하여 추진 순서 과학적 분류 	<p>갈등 비용 최소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수화 하여 최적의 추진 타이밍과 속도 조절

2025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제 2 장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제2장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요약문-

- 한미동맹 인식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한미동맹 결속성 지수(ASI)’, ‘주한미군 효용 체감 지수(UUPI)’, ‘동맹 지속성 기대 지수(ASEI)’ 등 5대 핵심 지수를 새롭게 개발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 결속성 지수(ASI)는 71.40점으로 매우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68.32점에 달하는 높은 안보 위협 민감도(CSTI)에 기인한 결과로,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는 현실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반면, 동맹이 주는 실질적 혜택을 의미하는 효용 체감 지수(UUPI)와 미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속성 기대 지수(ASEI)는 모두 50점대에 머물렀다.
- 즉, 국민들은 안보를 위해 동맹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비용 대비 효과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당위와 실익의 괴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대 · 이념 · 지역 · 매체에 따른 인식의 균열

- 이러한 전반적인 인식 속에서도 집단별로 뚜렷한 온도 차이가 감지된다.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세대 간의 인식이다. 5060세대가 동맹을 ‘혈맹’으로 인식하며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반면, 2030 MZ세대는 동맹을 철저히 ‘국익 실현의 수단’으로 바라본다. 특히 30대는 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위비 분담 등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용 대비 혜택이 낮다는 불만을 가장 크게 표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동맹은 무조건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가성비를 따져봐야 할 대상이다.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진보와 보수 모두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동맹의 ‘주둔 조건’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보수층은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보지만, 진보층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만 주둔해야 한다는 ‘조건부 주둔’을 선호하며 자주국방과 안보 주권을 증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 지역적 관점에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난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면서도, 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불공정한 희생’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서울 시민들은 용산 기지 반환 이슈 등 도심 내 토지 사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보 시설을 부동산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 마지막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안보 인식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2030세대는 유튜브와 포털을 통해 안보 정보를 활발히 소비하며 군사 동맹의 필요성을 이성적으로는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습득이 군에 대한 정서적 친근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방부 공식 채널의 도달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 채널에 의존하는 정보 소비 패턴은 자칫 편향된 안보관을 형성할 우려를 낳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관리와 소통 전략

- 종합해 보면, 한미동맹은 여전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그 기반은 ‘위협에 의한 공포’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용과 효용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잠재적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동맹은 굳건하다”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동맹 인식 지수(ASI, UUPI 등)를 상시적인 정책 관리 지표로 제도화하여, 방위비 협상이나 전작권 전환 같은 민감 이슈 발생 시 국민 인식과의 괴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 무엇보다 대상별 맞춤형 소통 전략이 시급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2030세대에게는 방위비 분담금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 신용도 상승과 기술 이전 등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안보 투자수익률(ROI)’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에는 안보 상생 기금 조성 등과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하며, 뉴미디어 세대에게는 딱딱한 공식 발표 대신 인기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보 정보에 ‘스토리’를 입혀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한미동맹은 막연한 당위성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용과 비전을 제시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

1. 한미동맹 인식의 개념적 정의

-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 인식을 단순한 호감도 평가로 한정하지 않고, 복합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동맹의 굳건함’, ‘위협에 대한 지속가능성’, ‘미래 포괄적 협력으로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표면적인 지지율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여론의 구조적 특성과 잠재적 가변성을 포착하기 위한 접근이다.
- 구체적으로 ‘동맹의 굳건함’이란 북핵 위협 등 안보 상수 앞에서 현시점의 동맹 신뢰도와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필수성에 대해 국민이 부여하는 심리적·물리적 안정감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성’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나 자국 우선주의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와 회복탄력성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확장성’은 전통적인 군사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기술·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기대 수준을 의미한다. 본 장의 기초통계분석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동맹 인식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 주력한다.

2. 기초통계분석 개요

- 상기 정의된 개념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설계된 ‘5대 핵심 분석 차원’을 적용하여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의 주요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세대 간 인식 격차 차원에서는 ‘혈맹’ 가치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공정·비용·실리’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세대별로 상이한 동맹 지지 기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둘째, 정치적 태도 상호작용 차원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한미연합훈련 및 전작권 전환 등 민감 이슈에 미치는 진영 논리의 영향력을 진단하고, 정치적 지향을 초월하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초당적 합의 영역이 존재하는지 탐색한다.
- 셋째, 정서 및 정보환경 차원에서는 뉴미디어 의존도 및 반미 혹은 숭미 정서가 합리적 동맹 인식을 왜곡할 가능성을 분석하여, 가짜뉴스 등 인지전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넷째, 전략적 공강 구획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 및 접경지역 거주 여부가 소음이나 규제 등 동맹 비용 수용성에 미치는 ‘공간적 불평등’ 인식이 실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섯째, 정책 민감도

차원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나 북핵 위협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동맹 지지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여론의 가변성을 측정할 예정이다.

3. 지수 개발 개요

- 개별 문항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보 정책 수립의 정량적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고유한 ‘한미 동맹 결속력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 이 지수는 동맹의 굳건함,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 미래 발전 방향의 포괄성 변수를 가중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표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수 분석의 최종 목표는 산출된 지수를 앞서 제시한 다섯 차원과 교차 분석함으로써, 동맹 지지가 견고한 ‘핵심 집단’과 비용 이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탈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집단’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 우선순위 및 타겟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나. 기초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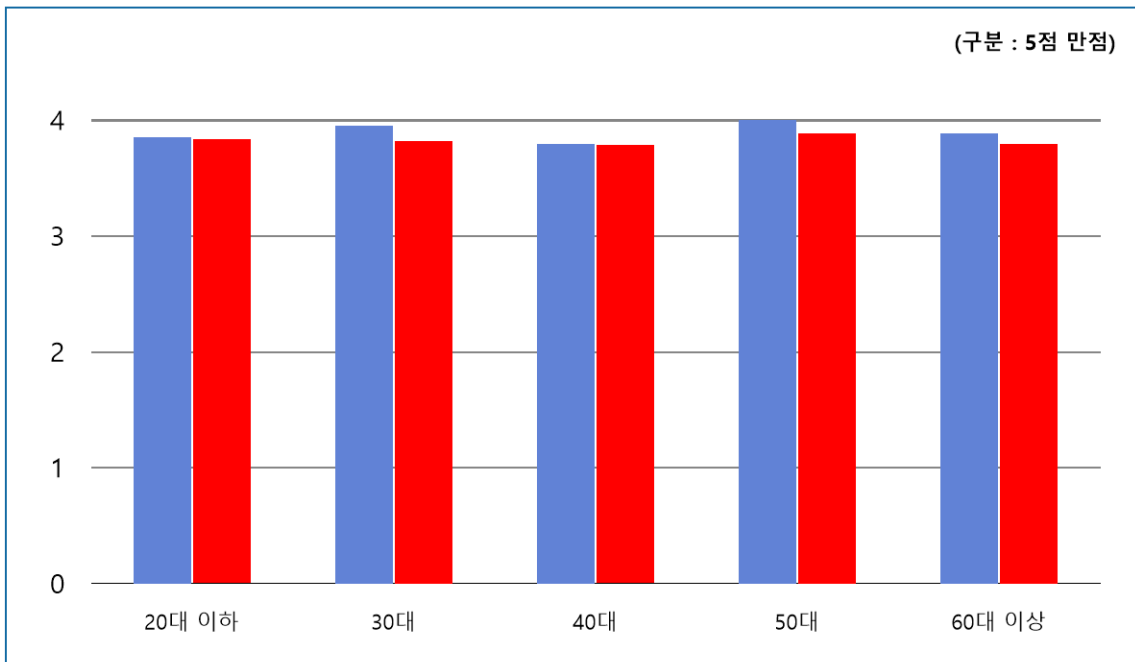
1. 세대 간 인식 격차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미래 방향):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중 군사적 위협 대응 동맹 vs 경제 및 기술 동맹 선호도 비교 (Q16_1, Q16_2 / 평균비교)
 - 분석 2 (주둔 조건): 주한미군 주둔 시기 인식 (Q20 / 교차분석)
 - 분석 3 (비용 효용):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중요성(혜택) vs 주한미군 관련 의견 중 방위비의 적절성(비용) 간 괴리 (Q18, Q21_2 / Gap 분석)
 - 분석 4 (갈등 요인):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Q17_1 / 교차분석)
 - 분석 5 (의존 전략):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중 군사안보적 측면 vs 경제안보적 측면 (Q6_1, Q6_2 / 비율비교)

1) 미래 방향: 2030의 실용적 균형 vs 50대의 적극적 확장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사동맹 강화	3.85	3.95	3.79	4.00	3.88
경제협력 강화	3.83	3.82	3.78	3.88	3.79

그림 2-1 연령별 향후 동맹 방향성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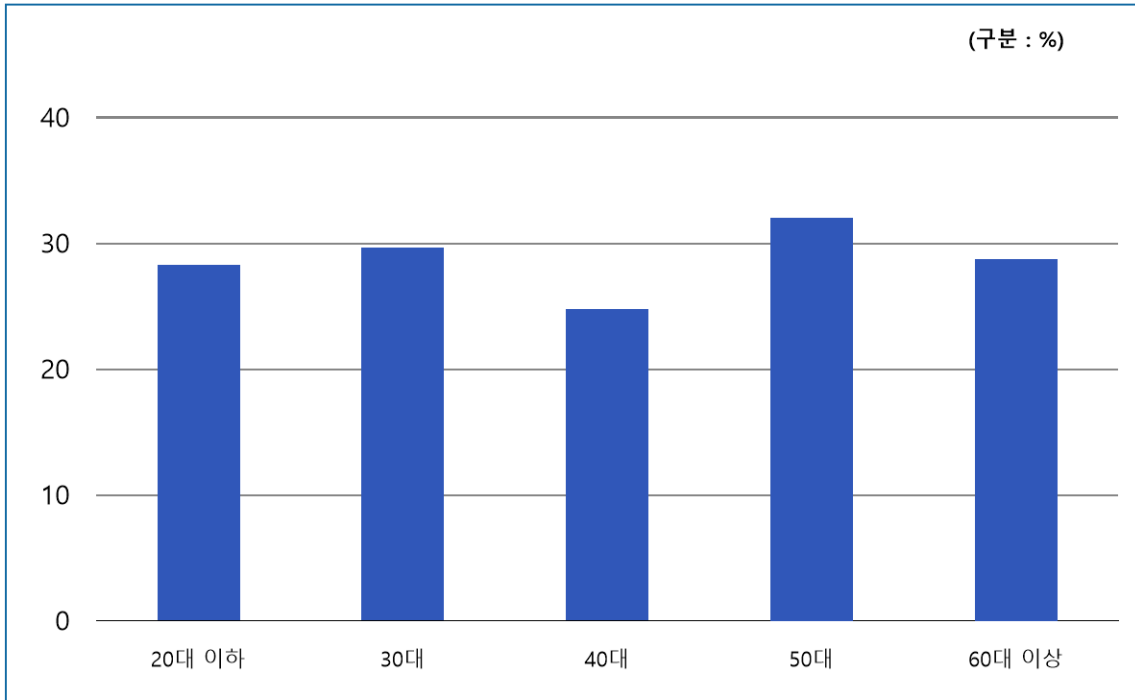


- 50대는 군사(4.00)와 경제(3.88) 모든 면에서 동맹 강화를 가장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반면, 20대와 30대는 군사와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거의 대등하게 평가하며 안보+경제 복합 동맹을 지향한다.

2) 주둔 조건: 중추 세대의 조건부 주둔 선호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조건부 주둔	28.2%	29.6%	24.7%	32.0%	28.7%

그림 2-2 연령별 조건부 주둔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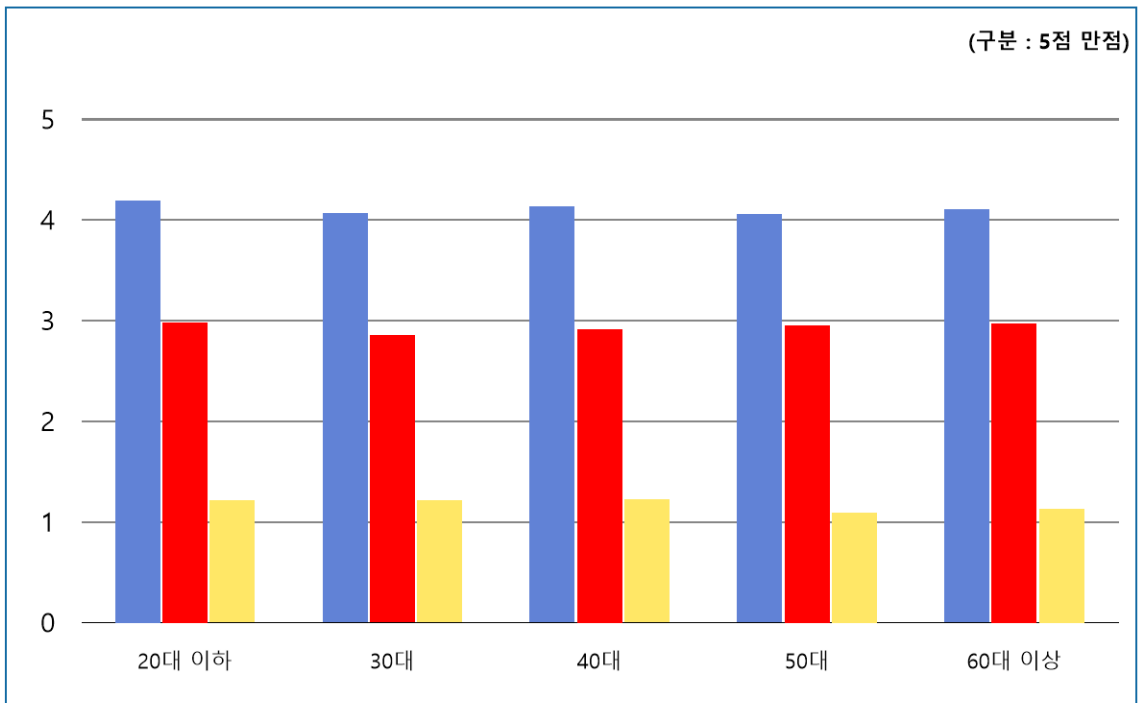


- 무조건적 주둔이 아닌, “한국군 단독 대처 가능 시까지”라는 조건부 주둔 인식이 50대(32.0%)와 30대(2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주국방 역량에 대한 기대와 동맹의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3) 비용 효용: 30대의 고관여·비판적 태도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요성	4.19	4.06	4.13	4.05	4.10
방위비 적절성	2.98	2.85	2.91	2.95	2.97
괴리	1.21	1.21	1.22	1.09	1.13

그림 2-3 연령별 주한미군 비용 효용 태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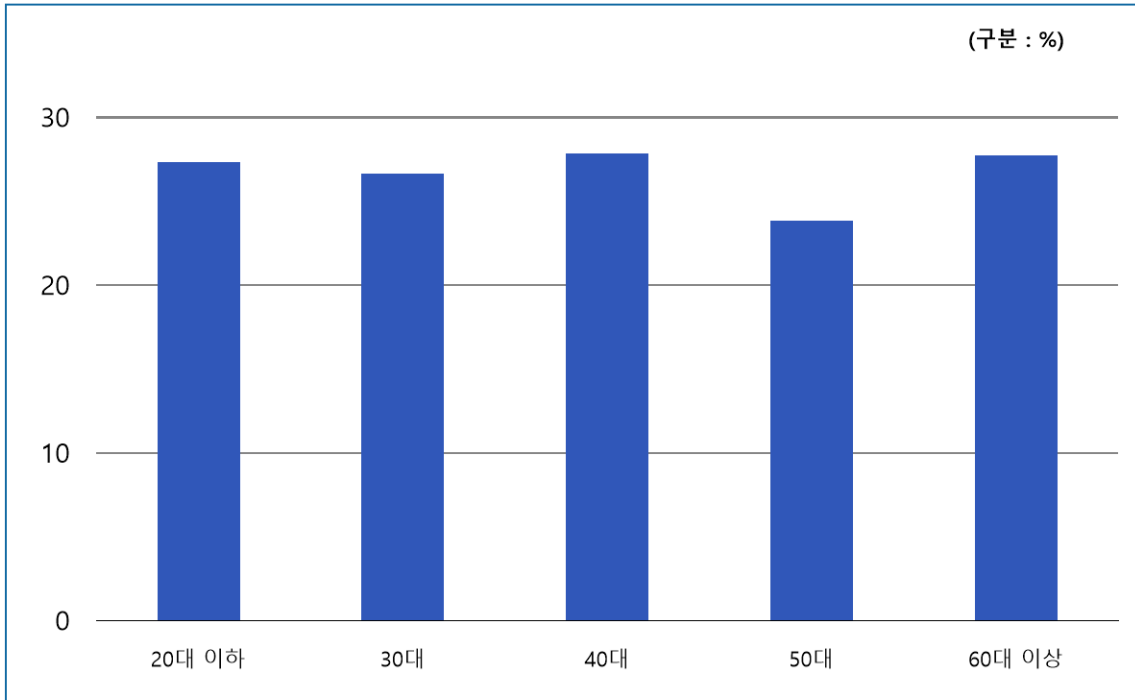


- 30대는 주한미군 중요성(4.06)은 인정하나 방위비 부담(2.85)에는 가장 비판적이다. 혜택과 비용 인식 간의 괴리(Gap)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가성비**에 민감한 불만층임을 시사한다.

4) 갈등 요인: 방위비 리스크의 보편성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방위비 문제	27.3%	26.6%	27.8%	23.8%	27.7%

그림 2-4 연령별 방위비 문제 지적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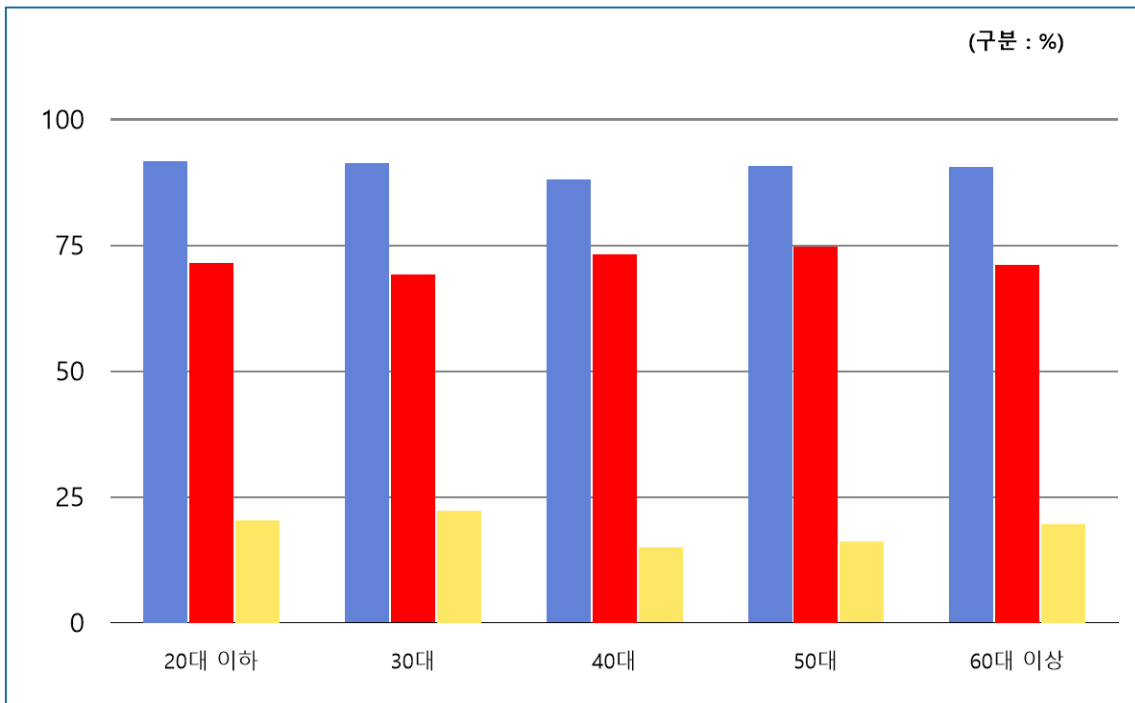


- 모든 세대에서 **방위비 부담 문제**가 동맹 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지목되었다. 40대(27.8%)의 우려가 가장 높다.

5) 의존 전략: 30대의 안보-경제 분리 대응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사 안보 (미국)	91.6%	91.1%	87.9%	90.6%	90.4%
경제 안보 (미국)	71.4%	69.0%	73.1%	74.6%	71.0%
의존도 차이 (%p)	20.3	22.2	14.8	16.0	19.5

그림 2-5 연령별 주한미군 효용 태도 인식 차트



- 30대는 군사적으로는 미국 의존(91.1%)이 확실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 의존도(69.0%)가 전 세대 중 가장 낮아 22.2%p의 최대 격차를 보인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다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인식이 가장 뚜렷하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30대의 이중적 잣대:
 - 안보 서비스의 질(중요성)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청구서(방위비)에는 가장 냉혹하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일변도를 경계하는 등 가장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동맹관을 가지고 있다.
- 50대의 안보 허리 역할:
 - 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조건부 주둔)을 동시에 지지하며, 군사/경제 모든 면에서 동맹을 적극 활용하려는 가장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다.
- 20대의 실용주의:
 - 청년층에게 동맹은 혈맹의 가치보다 **나의 이익(경제+안보)**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 동맹의 가성비 입증 필요:
 - 국민들은 동맹의 중요성은 알지만 **"비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30대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면 방위비 협상 시 여론 악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
- 경제 안보의 독자성 요구:
 - 3040세대를 중심으로 **"안보는 미국과 하되, 경제는 국익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미국 추종 경제 정책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 한미동맹 ROI(투자수익률) 백서 발간 및 홍보:
 - 방위비 부담금이 단순 지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보호, 기술 이전, 국가 신용도 상승 등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여 **가성비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전략 구체화:
 - 경제적 미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최대 22%p 격차)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경제 안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 조건부 전작권 전환 가시화:
 - 조건부 주둔 인식이 가장 높은 50대를 위해, 우리 군의 핵심 능력 확보 현황과 **언제쯤 우리 주도로 안보를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타임라인을 공유하여 자주국방의 효능감을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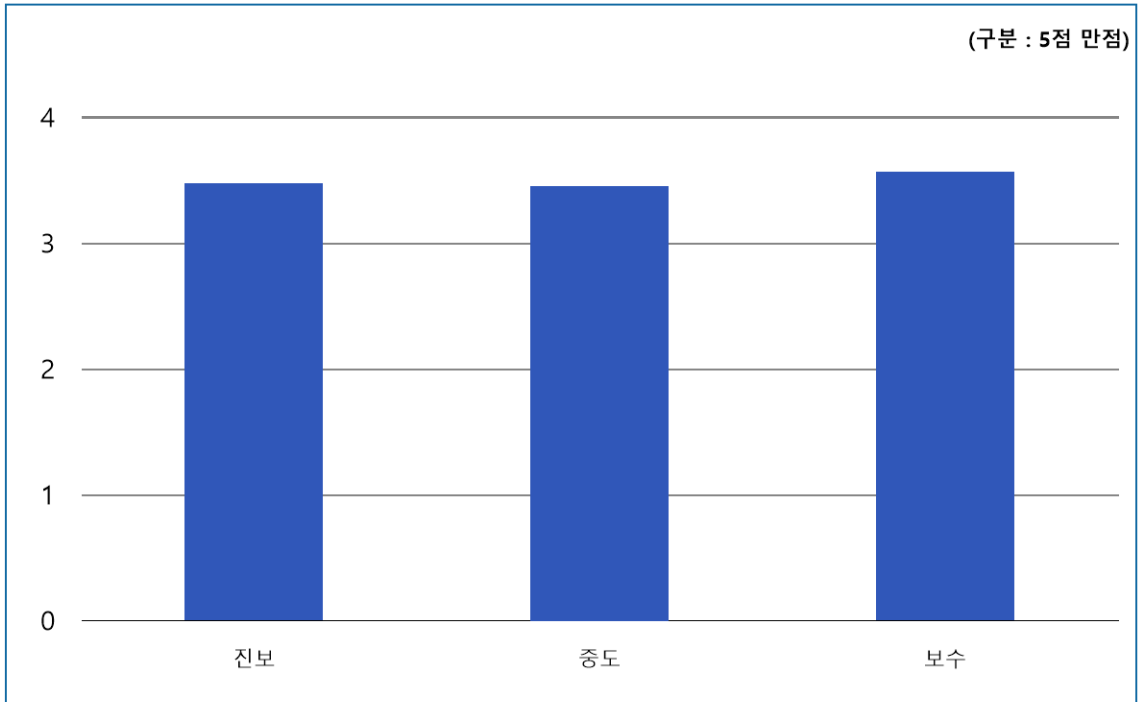
2. 정치적 태도와 정책 신뢰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개인 성향 (DQ8) (진보 / 중도 / 보수)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신뢰의 기반): 한미동맹 굳건한 정도(신뢰도) 인식 차이 (Q15 / 평균비교)
 - 분석 2 (방향성 갈등):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중 군사적 위협 대응 동맹 vs 경제 및 기술 동맹 선호도 비교 (Q16 / 평균비교)
 - 분석 3 (전제 조건): 주한미군 주둔 시기(통일 vs 평화 vs 자주국방) (Q20 / 교차분석)
 - 분석 4 (위협 인식):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Q24 / 교차분석)
 - 분석 5 (경제 전략):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중 경제안보적 측면 미국 vs 중국 선호도 (Q6_2 / 교차분석)

1) 신뢰의 기반: 보수층의 높은 신뢰 vs 중도의 유보

구분 (5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동맹 굳건함(신뢰)	3.47	3.45	3.56

그림 2-6 개인 성향별 한미동맹 신뢰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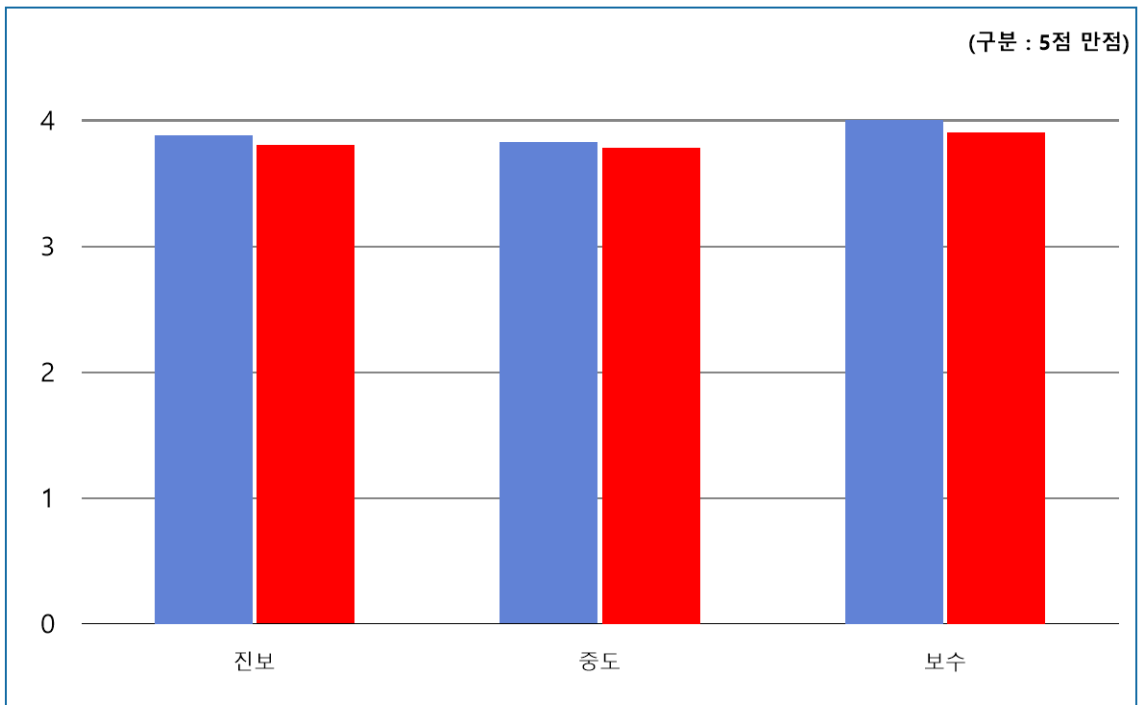


- 보수층(3.56점)이 현재 한미동맹의 상태를 가장 굳건하다고 평가하며 높은 신뢰를 보인다. 반면, **중도층(3.45점)**은 진보층보다도 낮게 평가하여 현 정책에 대해 가장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방향성 갈등: 안보 방향의 초당적 합의

구분 (5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군사동맹 강화	3.88	3.82	4.01
경제협력 강화	3.80	3.78	3.90

그림 2-7 개인 성향별 한미동맹 방향성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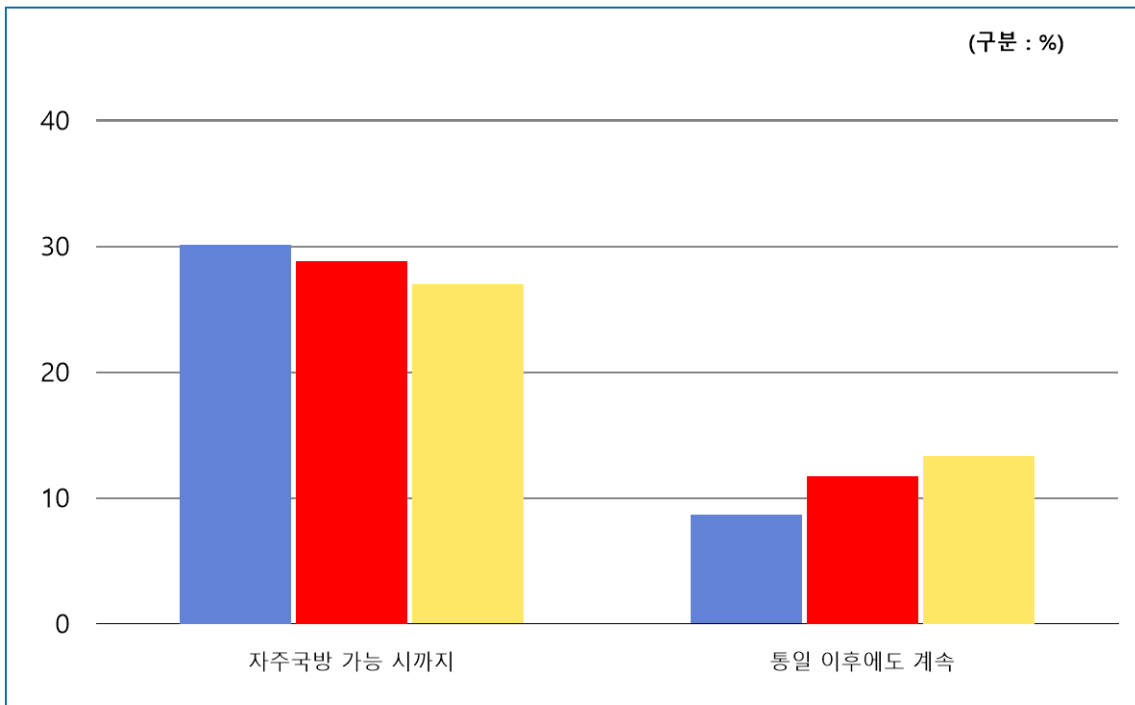


- 예상과 달리 진보층도 군사동맹 강화(3.88)와 경제협력 강화(3.80)를 매우 높게 지지한다. 보수층의 지지도가 더 높긴 하지만,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방향성에는 이념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3) 전제 조건: 진보의 '자주국방' vs 보수의 '통일'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자주국방 가능 시까지	30.1	28.8	26.9
통일 이후에도 계속	8.6	11.7	13.3

그림 2-8 개인 성향별 주한미군 주둔 시기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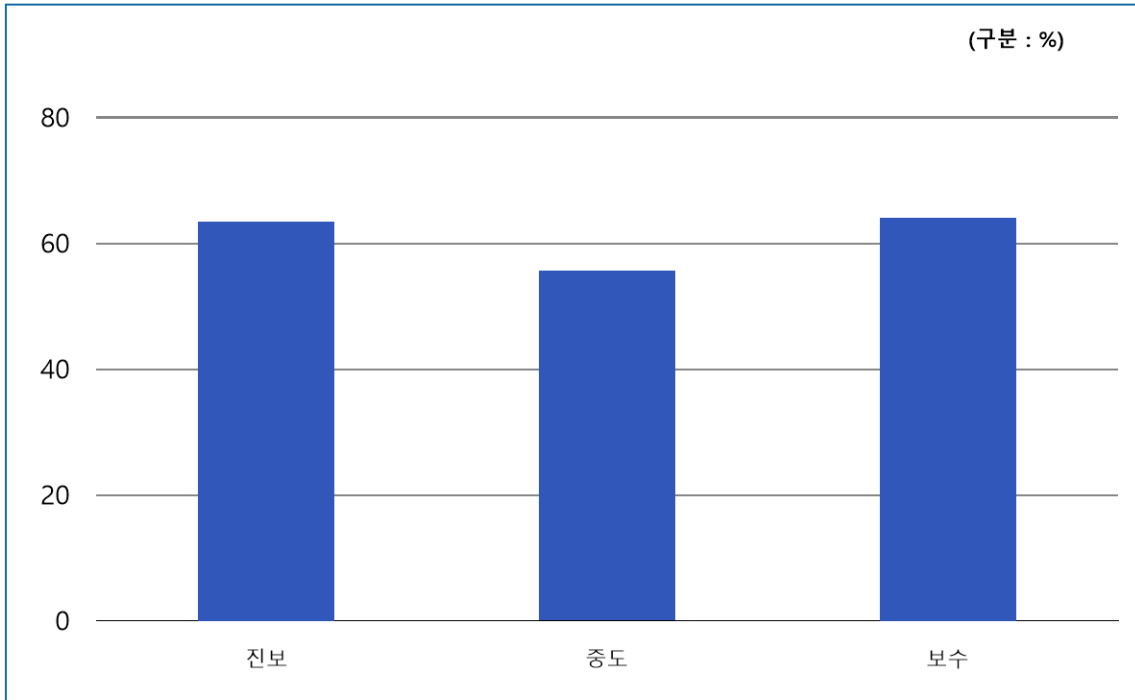


- 진보층은 주한미군 주둔 조건으로 '한국군 단독 대처 가능 시까지(30.1%)'를 가장 많이 꼽아 **자주 국방(자립)**을 중시한다. 반면, 보수층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13.3%)'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 성향 대비 높다.

4) 위협 인식: 진보와 보수의 '적대감 동조화'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북한 정권 적대시	63.4	55.5	64.0

그림 2-9 개인 성향별 북한 정권 적대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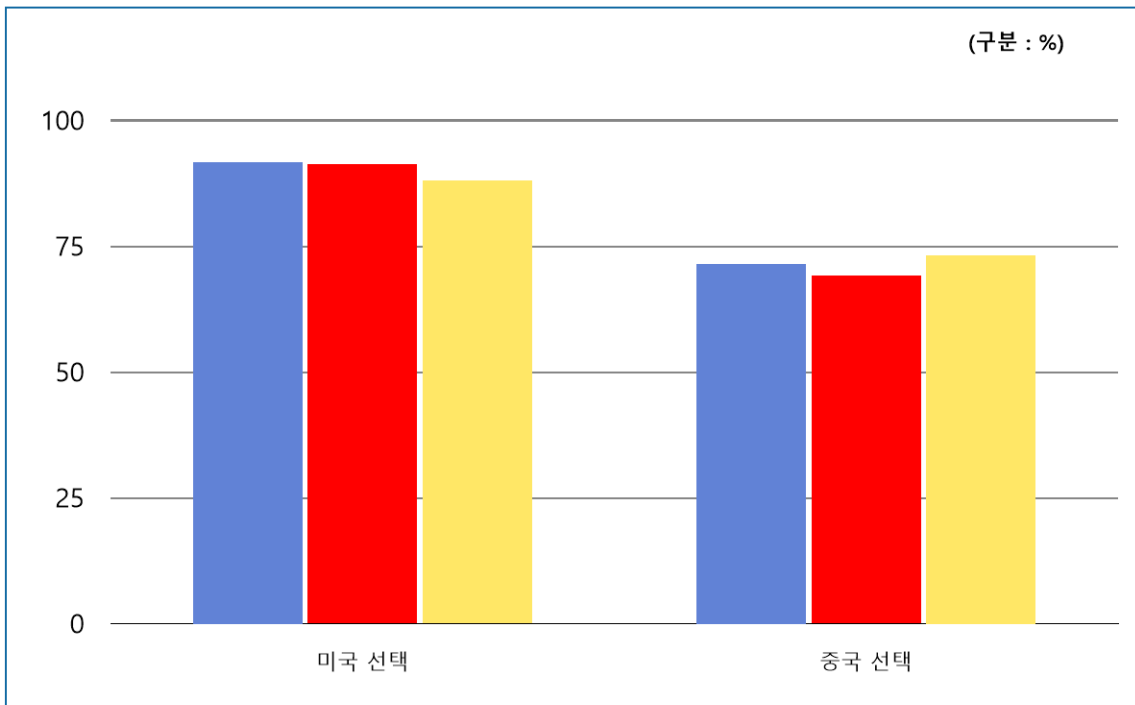


- 통념과 달리 **진보층(63.4%)**의 북한 정권 적대시 비율이 보수층(64.0%)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중도층(55.5%)**이 적대 인식이 가장 낮다. 이는 진보 성향 국민들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냉정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경제 전략: 진보층의 '친중(親中)' 인식 소멸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미국 선택	91.6%	91.1%	87.9%
중국 선택	71.4%	69.0%	73.1%

그림 2-10 개인 성향별 경제적 협력 국가 인식 차트



-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 선호도는 보수(76.4%)가 가장 높지만, 진보(72.8%) 역시 압도적으로 미국을 선택했다. 중국 선택 비율은 진보층에서도 18.0%에 불과해, 경제 영역에서의 '친중 프레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안보 이념 갈등의 완화:
 - 과거 "진보는 반미/친북, 보수는 친미/반북"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진보층도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보수층 못지않게 갖고 있다.
- 중도층의 스윙 보터 성격:
 - 중도층은 동맹 신뢰도와 북한 적대 인식이 가장 낮아, 현 안보 상황을 가장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정책의 성패는 이들 중도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 자주성 vs 영속성:
 - 동맹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는 진보(자주 국방 달성 시까지)와 보수(통일 후에도 영속) 간의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 초당적 안보 정책의 가능성:
 -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경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념을 초월해 형성되어 있으므로, 안보 이슈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자주국방이 진보 설득의 열쇠:
 - 진보 성향 국민들은 동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경계한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이슈를 동맹 강화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보 정책의 탈(脫)정치화 선언 및 거버넌스 구축:
 - 동맹 강화와 대북 인식에서 진보/보수의 차이가 미미함을 근거로, 여야가 참여하는 **초당적 안보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한 일관된 외교안보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 조건부 동맹 발전 로드맵 제시:
 - 진보층의 "자주국방(30.1%)"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이 단순한 보호 관계를 넘어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발전과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 안보 효능감 제고 커뮤니케이션:
 - 가장 회의적인 중도층을 설득하기 위해, 이념적 구호가 아닌 "**한미동맹이 내 주식 시장과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식의 체감형 경제 안보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홍보해야 한다.

3. 정서적 변수와 정보환경 변화가 정책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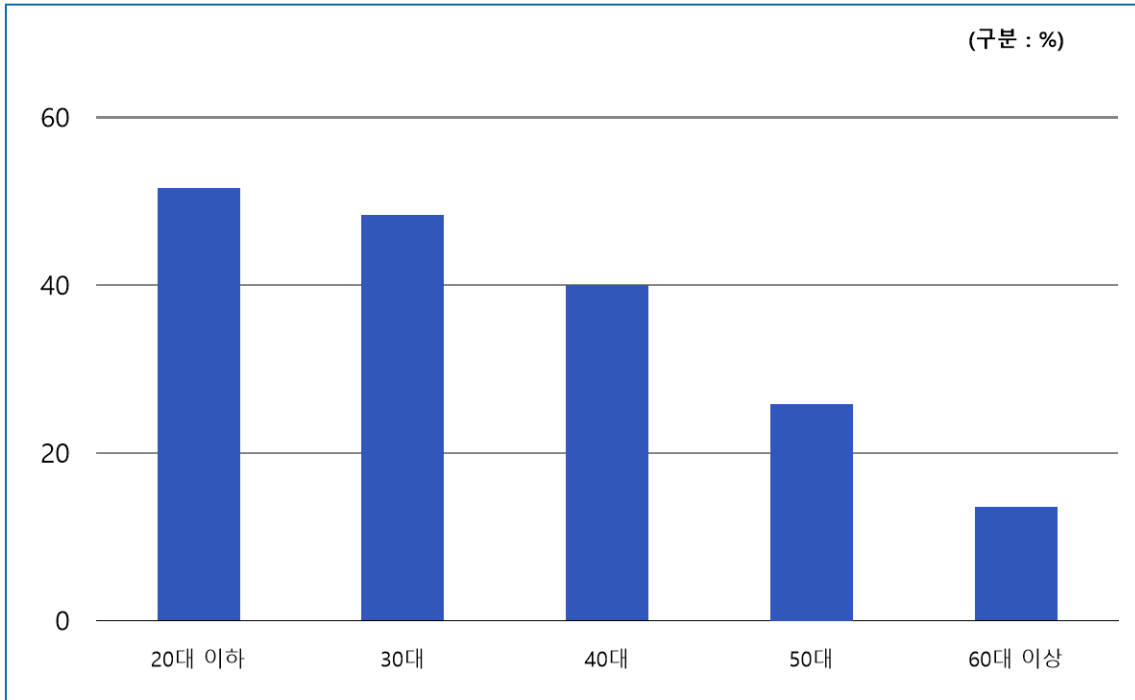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정보 환경):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중 '뉴미디어(포털/유튜브/SNS)' 의존도 (Q64_1 / 비율비교)
 - 분석 2 (접촉 경험): 지난 1년동안 국방홍보 매체 경험 여부 중 국방부/군 운영 '공식 뉴미디어 (유튜브 등)' 접촉 경험률 (Q65_6 / 비율비교)
 - 분석 3 (정서적 태도):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 중 '친근하다(Emotional Affinity)' (Q66_5 / 평균비교)
 - 분석 4 (가치 공감):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 중 '사회·문화적 협력(Soft Power)' 지지도 (Q16_3 / 평균비교)
 - 분석 5 (정책 수용):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견의 '군사적 적 위협 대응 동맹' 지지도 (Q16_1 / 평균비교)

※ 평균 산출 방식 : 5점 척도 문항은 역코딩(6-x)하여 5점 만점(높을수록 긍정/동의/친근)으로 환산했다.

1) 정보 환경: 2030의 '유튜브/포털' 안보 학습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뉴미디어 의존도	51.5	48.3	39.9	25.8	13.5

그림 2-11 연령별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시 뉴미디어 의존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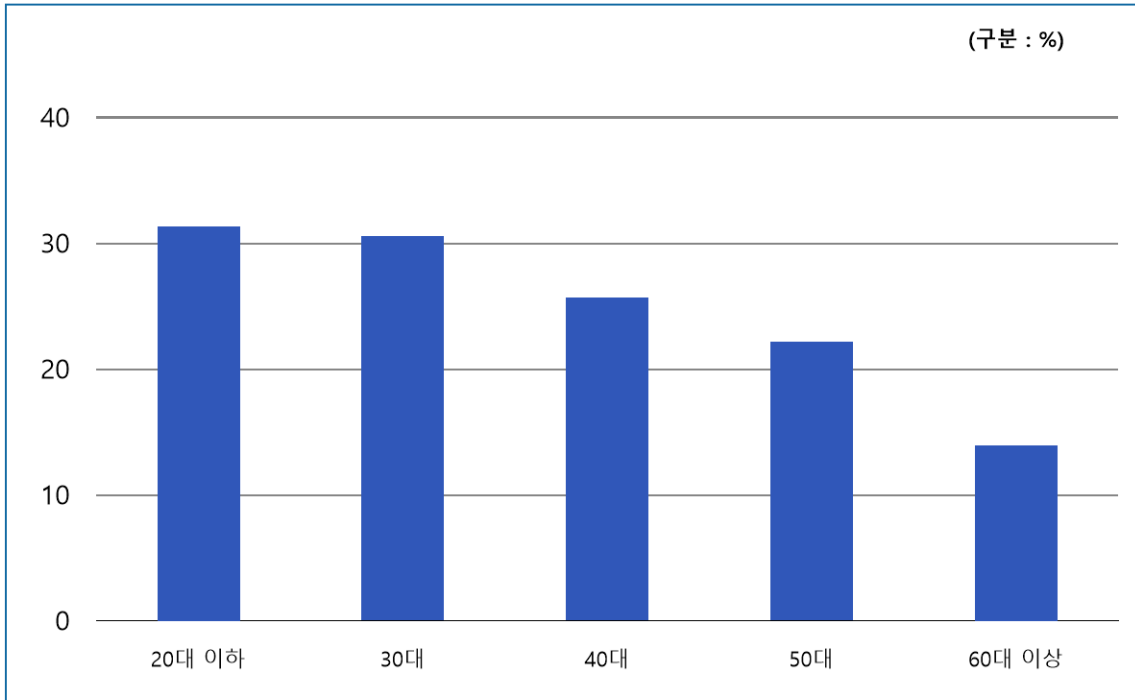


- **20대 이하**(51.5%)와 **30대**(48.3%)의 절반가량은 포털,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안보 소식을 접한다. 반면, 60대 이상은 13.5%에 불과해 정보 습득 경로의 '디지털 격차'가 극명하다.

2) 접촉 경험: 국방 공식 채널의 청년 도달률 미흡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식 뉴미디어 경험	31.3	30.5	25.6	22.1	13.9

그림 2-12 연령별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시 뉴미디어 의존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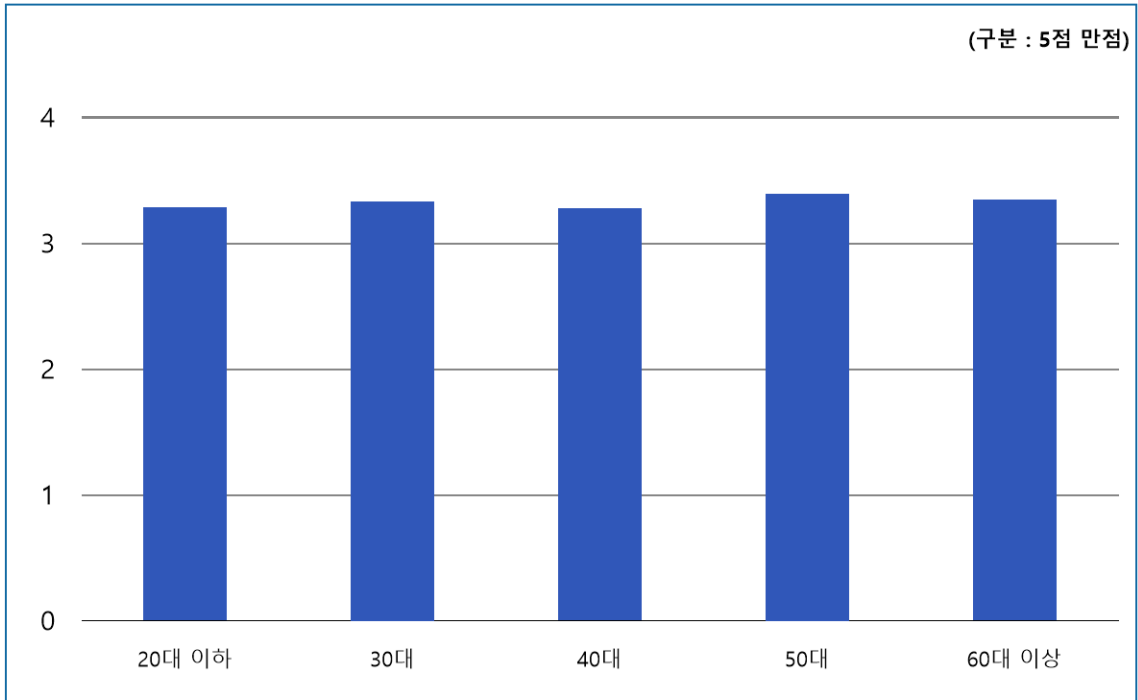


- 2030세대가 뉴미디어에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공식 뉴미디어(유튜브 등)를 접해본 비율은 **30% 초반**(31.3%, 30.5%)에 그친다. 민간/개인 채널이 아닌 공식 채널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3) 정서적 태도: 20대의 낮은 친근감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에 대한 친근감	3.28	3.33	3.27	3.39	3.34

그림 2-13 연령별 군에 대한 친근감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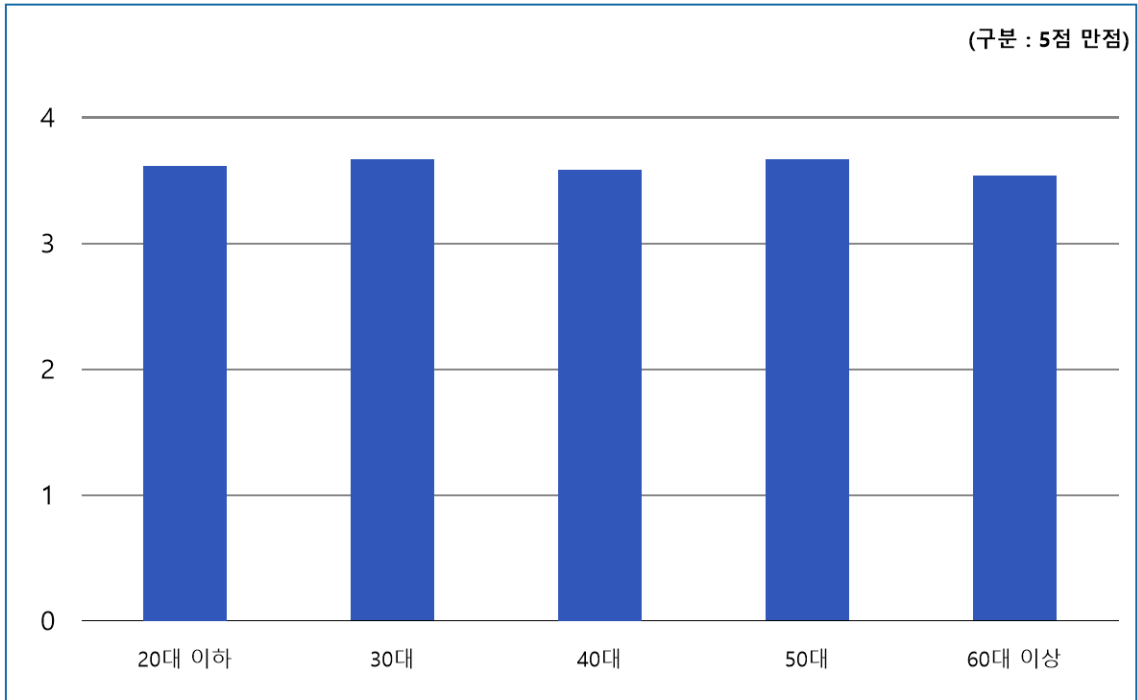


- 군에 대한 '친근감'은 **40대(3.27점)**와 **20대(3.28점)**에서 가장 낮다. 20대는 가장 활발한 정보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세대는 **50대(3.39점)**이다.

4) 가치 공감: 친근감이 낮으면 '가치 동맹' 지지도 낮다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회문화 협력 지지	3.61	3.66	3.58	3.66	3.53

그림 2-14 연령별 한미동맹의 사회문화적 협력 동맹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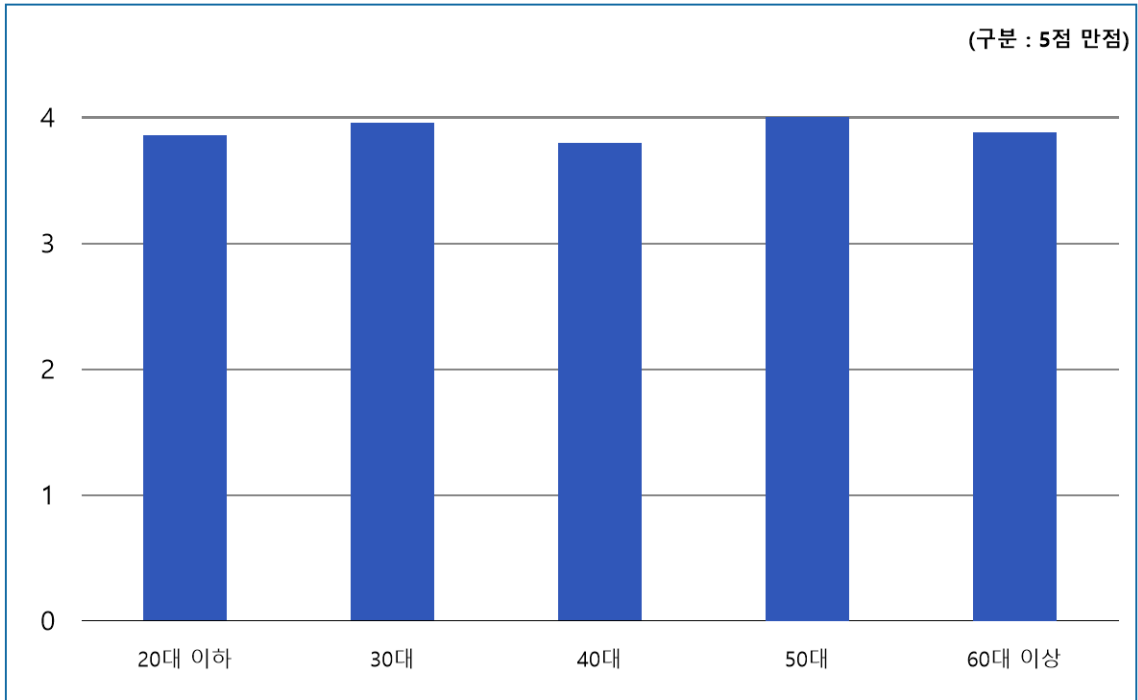


- 친근감이 가장 낮은 **20대(3.61점)**와 **40대(3.58점)**는 한미동맹의 '사회·문화적 협력(가치 동맹)'에 대한 지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친근감이 높은 30대와 50대는 가치 동맹 지지도가 높다(3.66점).
- 군과 동맹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친근감)**이 연성 권력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정책 수용: 정보력이 높은 2030의 '안보 지지'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사동맹 강화 지지	3.85	3.95	3.79	4.00	3.88

그림 2-15 연령별 한미동맹 군사적 대응 동맹 지지 차트



- 정보 습득력이 높은 **20대(3.85점)**와 **30대(3.95점)**는 전통적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지지를 보낸다.
- 뉴미디어를 통해 습득한 안보 정보가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여주지만, '정서적 친밀감'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매체는 바뀌었지만, 감성은 그대로:
 - 2030세대는 유튜브와 포털을 통해 안보 정보를 활발히 소비하며 **군사적 동맹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소비가 군에 대한 정서적 친근감으로 이어지는 않고 있다.
- 공식 채널의 한계:
 - 국방부 공식 채널 접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여, 청년층이 접하는 안보 정보의 상당수가 자극적이거나 편향될 수 있는 민간 채널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정서와 정책의 디커플링:
 - 40대는 군에 대한 친근감(3.27)과 사회문화 협력 지지(3.58)가 모두 최저 수준이다. 이는 40대가 가진 정서적 비호감이 정책 수용성을 낮추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보를 넘어 감성으로:
 - 단순히 안보 팩트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30세대의 높은 정보력을 호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안보 논리 대신 **매력과 스토리**가 필요하다.
- 플랫폼 전략의 수정:
 - 60대 이상은 TV/신문 중심, 2030은 유튜브 중심이라는 이분법적 매체 환경을 고려하여, 세대별로 메시지의 톤앤매너(Tone & Manner)를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
- 국방 인플루언서 협업 확대:
 - 도달률이 낮은 공식 채널(30%)만 고집하지 말고, 2030세대가 이미 구독 중인 인기 유튜버(게임, 역사, 과학 분야 등)와 협업하여 자연스럽게 안보 메시지를 녹여내는 **브랜드드 콘텐츠**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 감성 터치 캠페인:
 - 정서적 비호감이 높은 40대를 위해, 군사적 위용보다는 **재난 구조, 대민 지원, 가족애** 등 군의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하는 감성적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여 심리적 무장해제를 유도해야 한다.
- 안보 정보 팩트체크 허브 구축:
 - 민간 뉴미디어 의존도(51.5%)가 높은 상황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안보 이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친화적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여 정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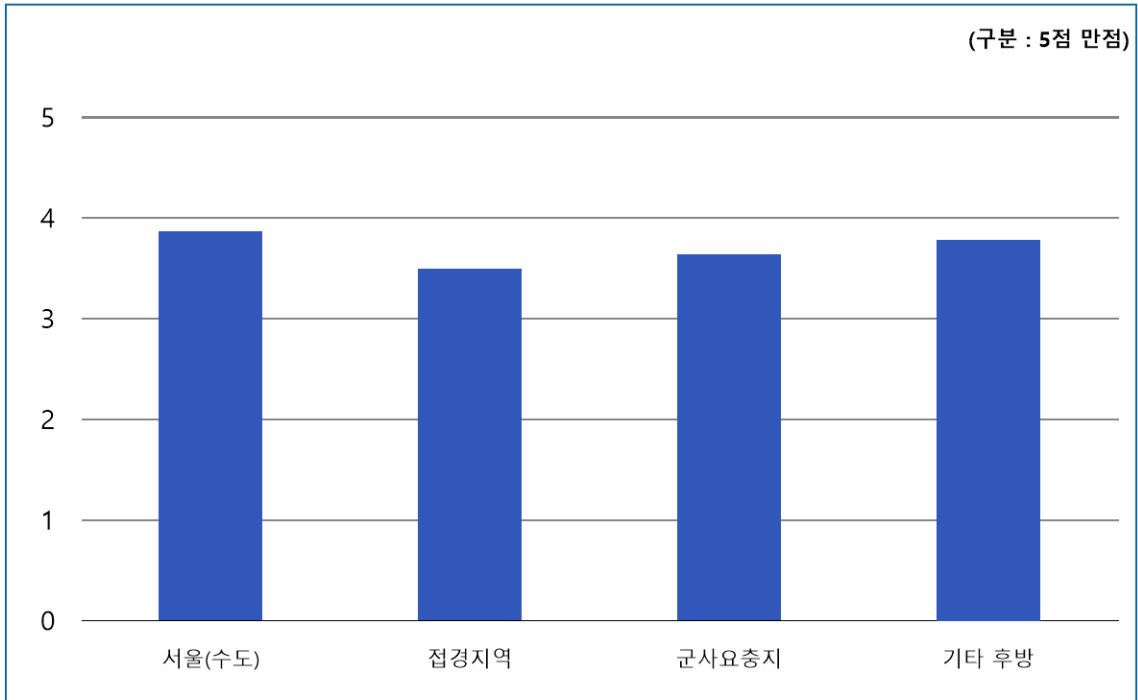
4. 전략적 공간 구획(접경/군 주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2)
- 분석 기준: 지역 (PQ3 지역 재분류)
 - 서울 (수도): 수도권 방어의 핵심이자 인구 밀집 지역
 - 접경지역 (인천/경기/강원): 휴전선 인접 및 주한미군/한국군 주력 부대 주둔지
 - 군사요충지 (대구/경북): 후방 핵심 기지(군수사령부, THAAD, 미군 기지 등) 소재지
 - 기타 후방지역: 직접적 군사 시설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지역 수용성):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인식 (Q49 / 평균비교)
 - 분석 2 (갈등 요인): 한미동맹 관계 발전 저해 요인 중 '토지 사용 문제' 지목을 (Q17_1 / 교차분석)
 - 분석 3 (안보 체감): 주한미군의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성 인식 (Q18 / 평균비교)
 - 분석 4 (주둔 조건): 주한미군 주둔 시기 중 '한국군 단독 대처 가능 시까지(자주국방)' 주둔 선호도 (Q20 / 교차분석)
 - 분석 5 (위협 체감): 우리나라 전반적인 안보 상황 중 불안정 인식 (Q1 / 평균비교)

1) 지역 수용성: 접경지역의 '희생' 인식 뚜렷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지역발전 긍정 영향	3.86	3.49	3.63	3.78

그림 2-16 지역별 군의 지역발전 긍정 영향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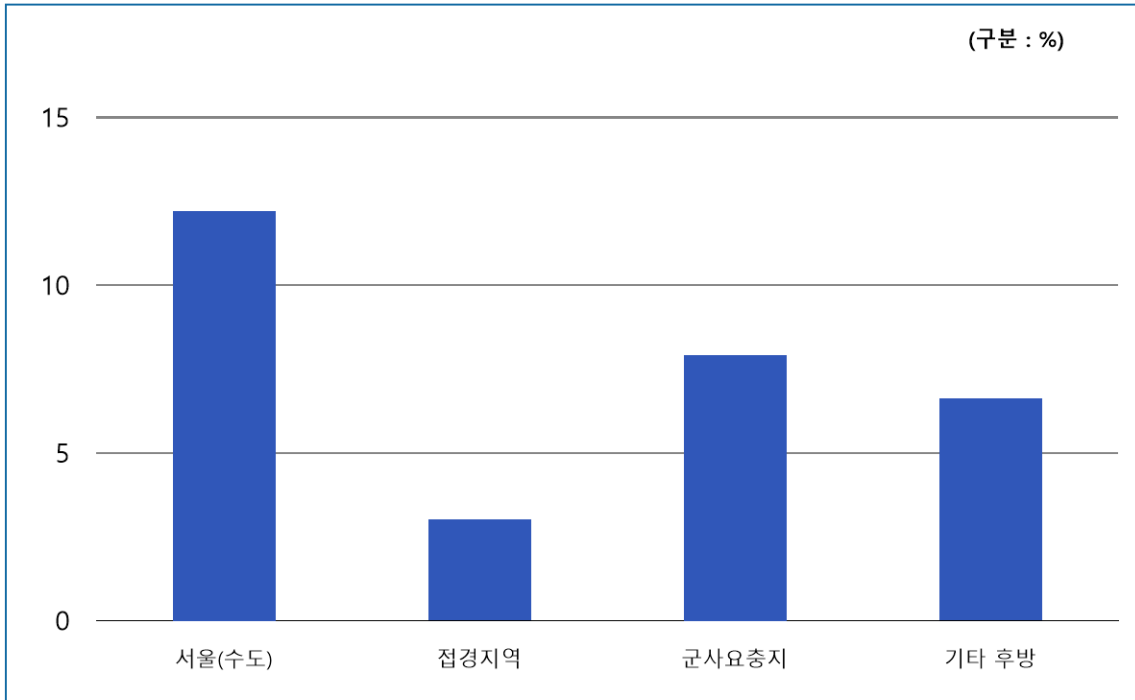


- 군 주둔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은 **서울(3.86점)**과 **후방지역(3.78점)**에서 높지만, 실제 부대가 가장 많은 **접경지역(3.49점)**에서 가장 낮다.
- 안보 혜택은 전 국민이 누리지만, 개발 제한이나 소음 등 비용은 접경지역이 감당하고 있다는 '불공정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 갈등 요인: 서울의 '땅 문제' 민감도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토지문제 지목	12.2	3.0	7.9	6.6

그림 2-17 지역별 주한미군 토지 사용 문제 지적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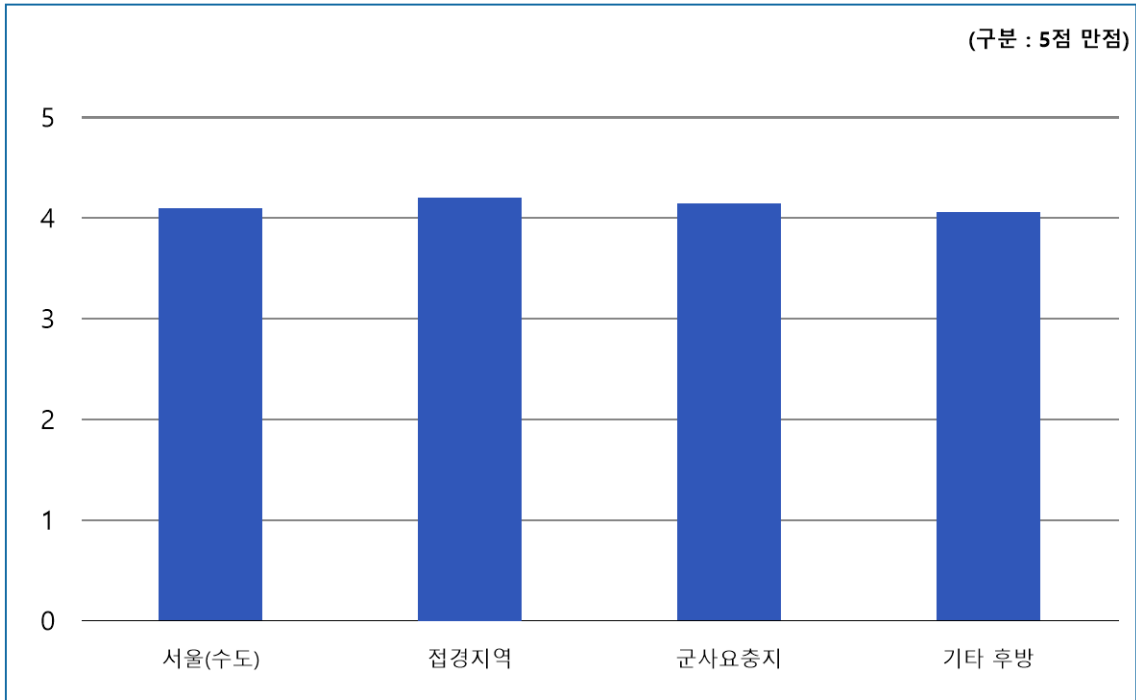


- 의외로 '주한미군 토지 사용 문제'를 동맹 저해 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서울(12.2%)**이 가장 높고, 접경지역(3.0%)은 매우 낮았다.
- 접경지역은 이미 군사 시설 공존이 일상화된 반면, 서울은 용산 기지 반환 이슈 등 도심 내 금싸라기 땅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

3) 안보 체감: 최전방의 높은 미군 의존도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주한미군 중요성	4.09	4.20	4.14	4.05

그림 2-18 지역별 주한미군 중요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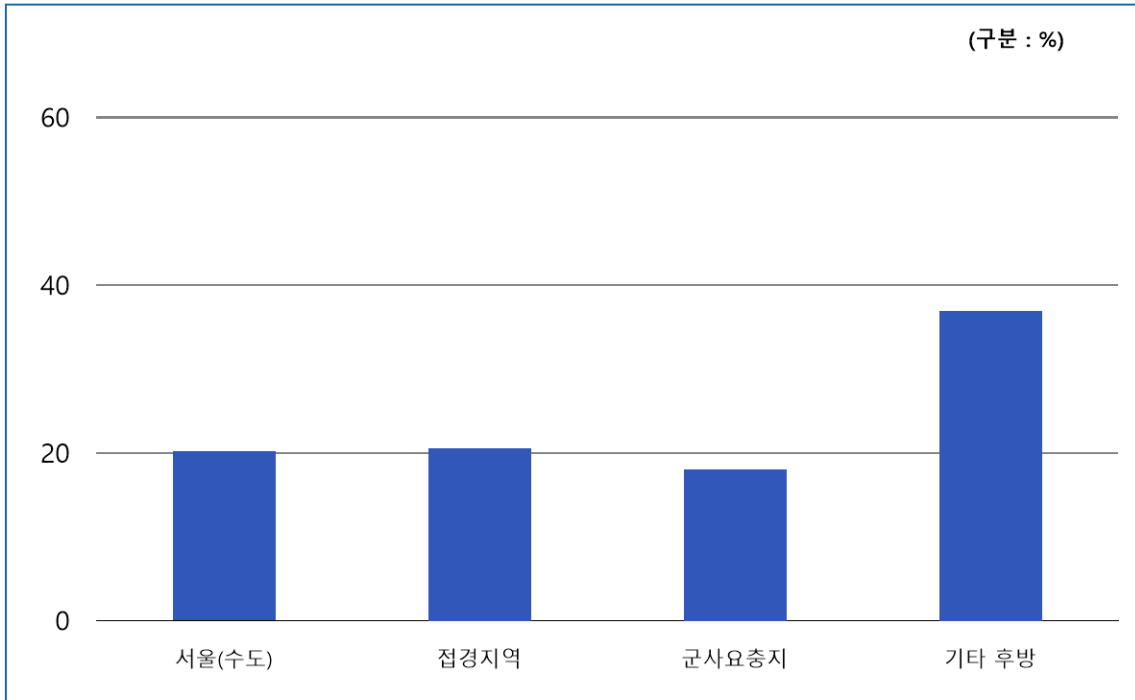


- 주한미군 중요성 인식은 **접경지역(4.20점)**과 **군사요충지(4.14점)**에서 가장 높다.
- 북한의 위협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접경) 혹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요충지) 체감하는 지역일수록 미군의 억제력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인식한다.

4) 주둔 조건: 후방의 '자주국방' 요구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자주국방 조건부	20.1	20.5	18.0	36.9

그림 2-19 지역별 주한미군 조건부 주둔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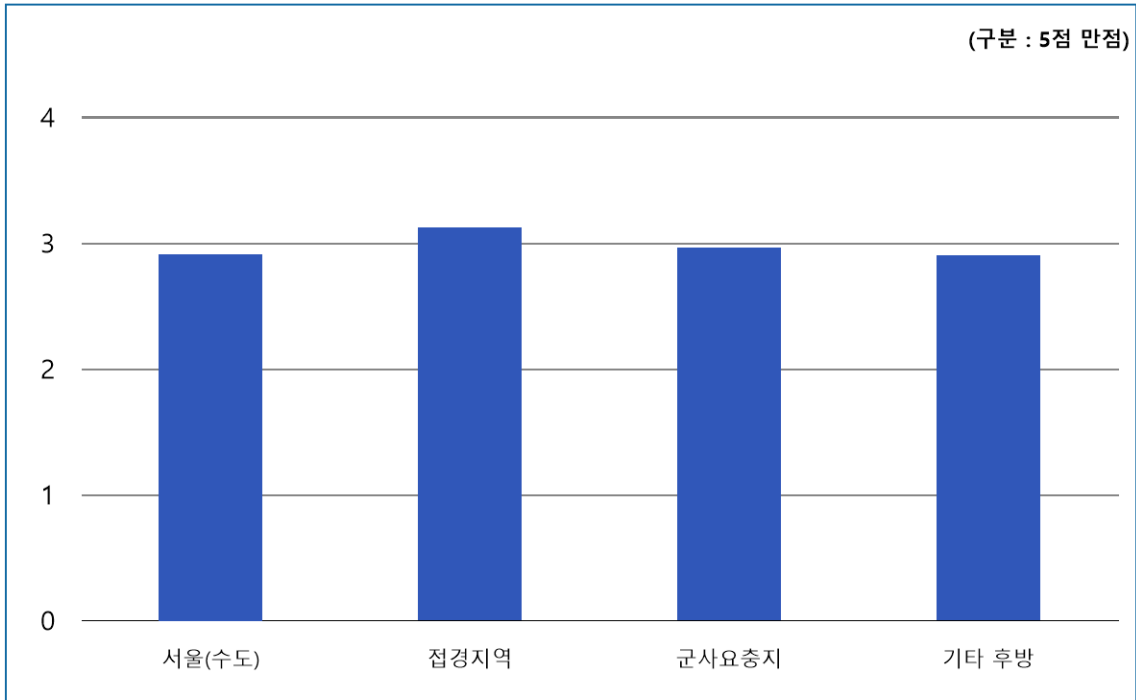


- '한국군 단독 대처 가능 시까지'라는 조건부 주둔 인식은 안보 위협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 후방지역(36.9%)**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접경지역(20.5%)과 군사요충지(18.0%)는 조건부 철수보다는 지속 주둔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5) 위협 체감: 접경지역의 불안감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안보 불안정 인식	2.91	3.12	2.96	2.90

그림 2-20 지역별 안보 불안정 인식 차트



-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은 **접경지역(3.12점)**이 타 지역(2.9점대)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정세 변화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존적 공포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안보의 비용과 혜택 불일치:
 - 접경지역 주민들은 가장 높은 안보 불안(3.12점)을 안고 살면서, 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3.49점 최저)를 감내하고 있다. 이들에게 안보는 **애국심**이 아니라 **희생**이다.
- 부동산 안보 갈등:
 - 서울 시민들에게 안보는 **토지 효율성**과 충돌하는 가치이다. 용산 공원 조성 등 기지 반환 이슈가 지체될수록 서울 지역의 동맹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
- 후방의 안보 낙관론:
 - 직접적인 위협에서 먼 후방지역은 미군의 조건부 철수(자주국방 전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안보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 보상의 불균형 해소:
 -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지역(접경)이 희생하는 구조를 방지하면, 해당 지역의 안보 정책 수용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안보세**를 내는 지역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도시형 안보 갈등 관리:
 - 서울 등 대도시의 군사 시설은 **안보 기지**가 아닌 **개발 장애물**로 인식된다. 기지 이전이나 반환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 안보 상생 기금 조성:
 - 접경지역의 낮은 지역 발전 인식(3.49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 예산의 일부나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접경지역 주민 편의시설 확충, 소음 피해 보상, 군 장병 소비 촉진 쿠폰 발행 등에 직접 투입해야 한다.
-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모델:
 - 서울의 토지 문제 민감도(12.2%)를 고려하여, 도심 내 군사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담장을 허물고 체육/문화 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등 단절된 섬이 아닌 지역 자산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 지역별 안보 위협 알림 서비스 차별화:
 - 접경지역에는 대피소 안내 등 **실질적 안전 정보**를, 후방지역에는 안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 안보 체감도(불안감)에 맞춘 차별화된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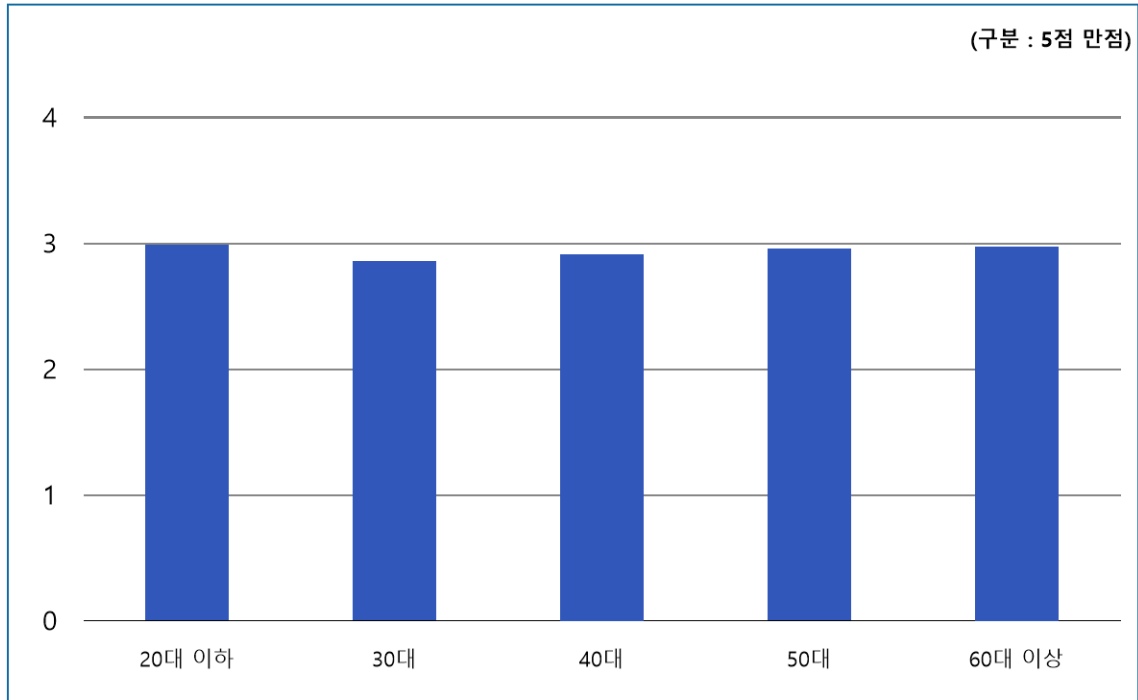
5. 장기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민감도 지수 개발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프레임: '정책 민감도'를 5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세대별 반응성을 측정
 - 지표 1 (비용 민감도): 주한미군 관련 의견 중 방위비의 적절성 인식 (Q21_2 / 역코딩 평균)
해석: 점수가 낮을수록 비용 문제에 민감하고 불만이 큼.
 - 지표 2 (주권 민감도): 주한미군 주둔 시기 중 '자주국방(한국군 단독대처)' 선호 비율 (Q20 / 비율비교)
해석: 비율이 높을수록 안보 주권과 자립에 대한 욕구가 강함.
 - 지표 3 (범위 민감도): 향후 한미동맹 발전에 의견 중 국제테러, 기후변화 등 세계 문제에 대한 대처 선호 (Q16_4 / 평균비교)
해석: 점수가 높을수록 동맹의 역할 확대에 유연함.
 - 지표 4 (신뢰 민감도):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한 정도에 대한 평가 (Q15 / 평균비교)
해석: 점수가 낮을수록 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
 - 지표 5 (전략 민감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중 '한미동맹 우선' 선택 비율 (Q11_1 / 비율비교)
해석: 비율이 높을수록 전략적 선명성을 선호함.

1) 비용 민감도: 30대의 '가성비' 경보 발령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용 적절성 인식	2.98	2.85	2.91	2.95	2.97

그림 2-21 연령별 방위비 비용 적절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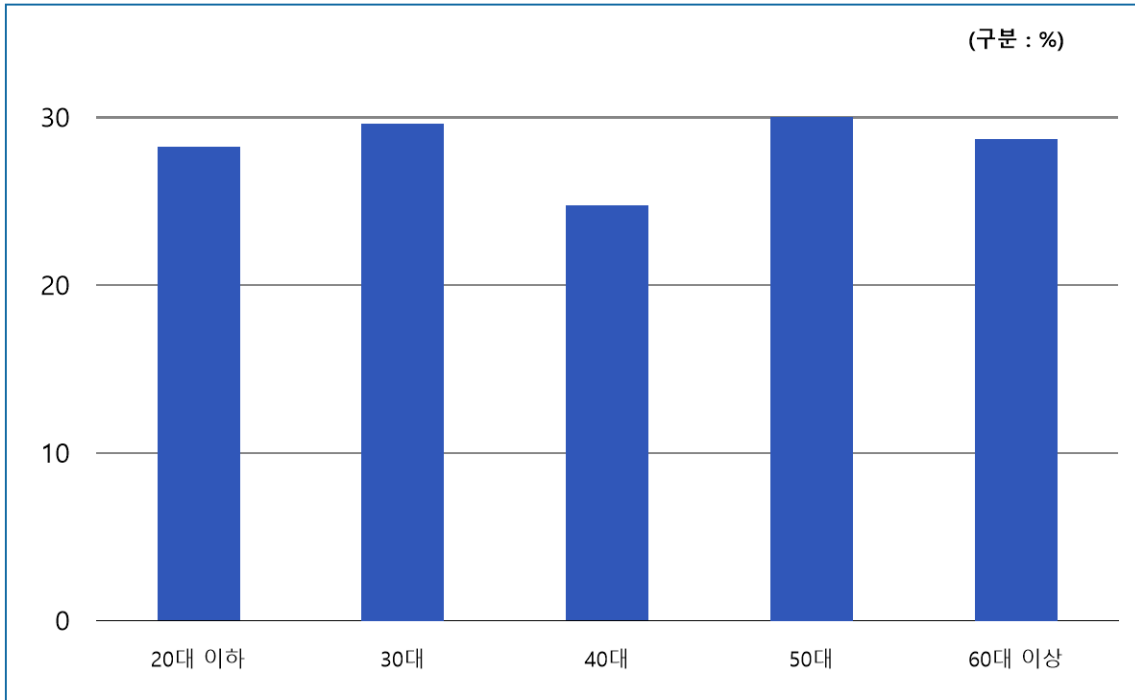


- 방위비 부담이 적절하다는 인식은 **30대(2.85점)**에서 가장 낮아, 비용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군'임이 확인되었다. 전 세대가 3.0점 미만으로, 비용 문제는 언제든 점화될 수 있는 뇌관이다.

2) 주권 민감도: 50대와 30대의 '자주국방' 갈증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주국방 선호	28.2	29.6	24.7	32.0	28.7

그림 2-22 연령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자주국방 선호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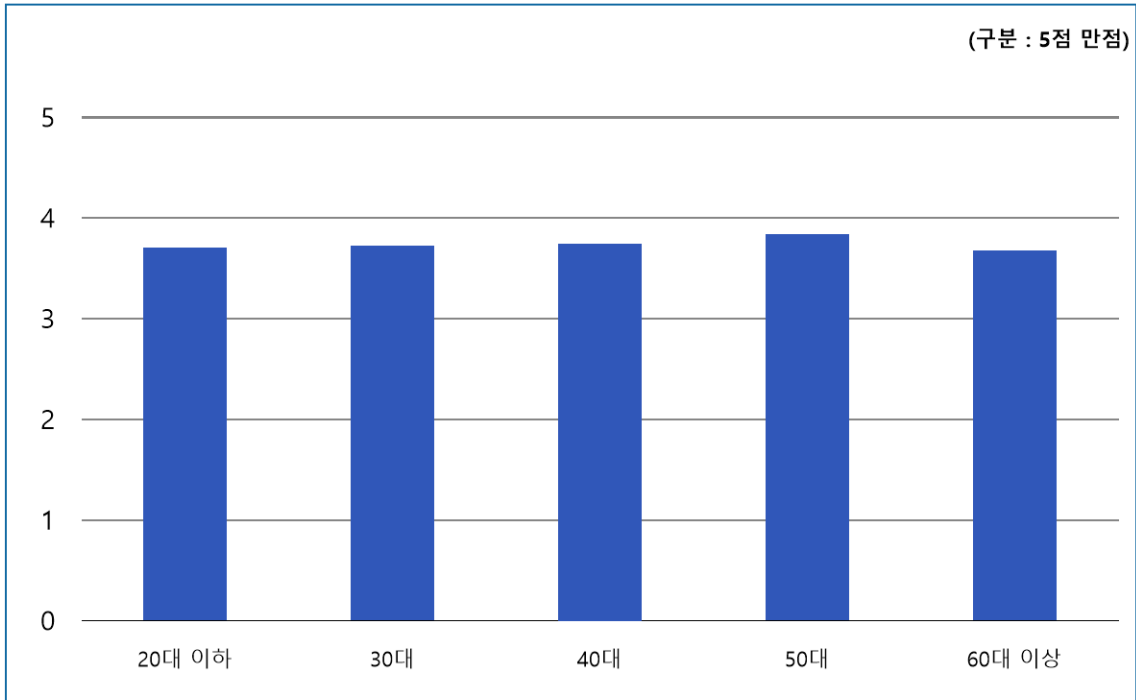


-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만' 주둔해야 한다는 자주권 민감도는 **50대(32.0%)**와 **30대(2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동맹을 '영원한 의존'이 아닌 '자립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으로 인식한다.

3) 범위 민감도: 50대의 높은 확장 수용성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글로벌 확장 수용	3.70	3.72	3.74	3.83	3.67

그림 2-23 연령별 한미동맹의 글로벌 이슈 수용 방향성 발전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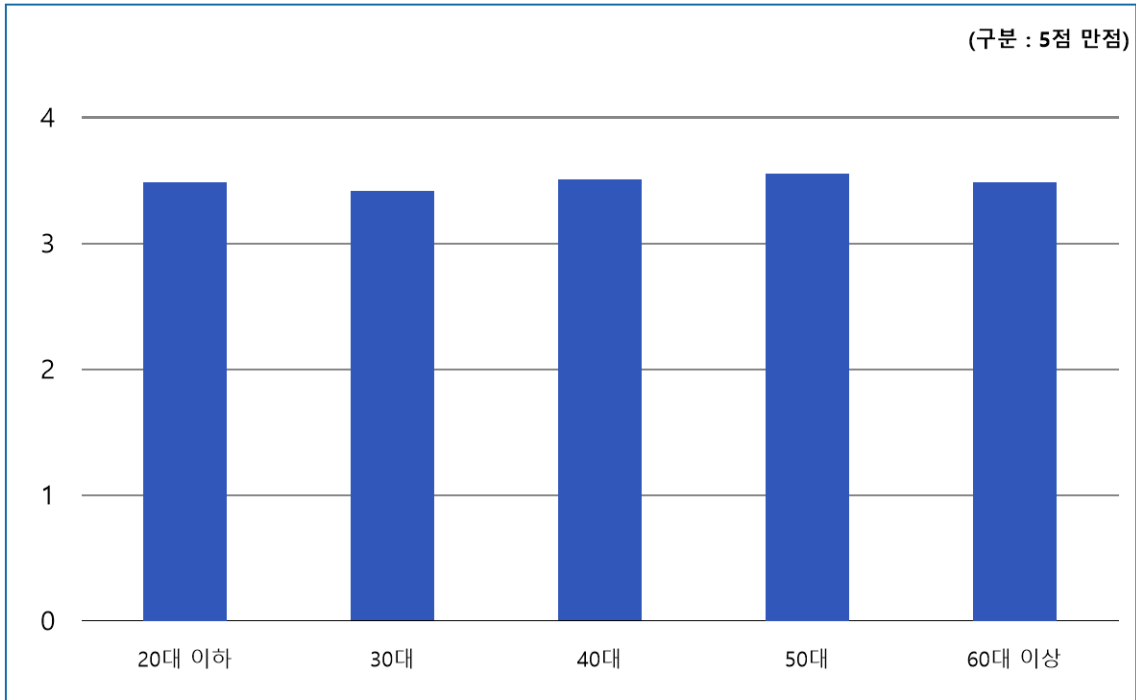


-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기후변화, 테러 등 글로벌 이슈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 **50대(3.83점)**가 가장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3.67점)은 전통적 안보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4) 신뢰 민감도: 30대의 '동맹 불안' 최고조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맹 신뢰도	3.48	3.41	3.50	3.55	3.48

그림 2-24 연령별 한미동맹 신뢰도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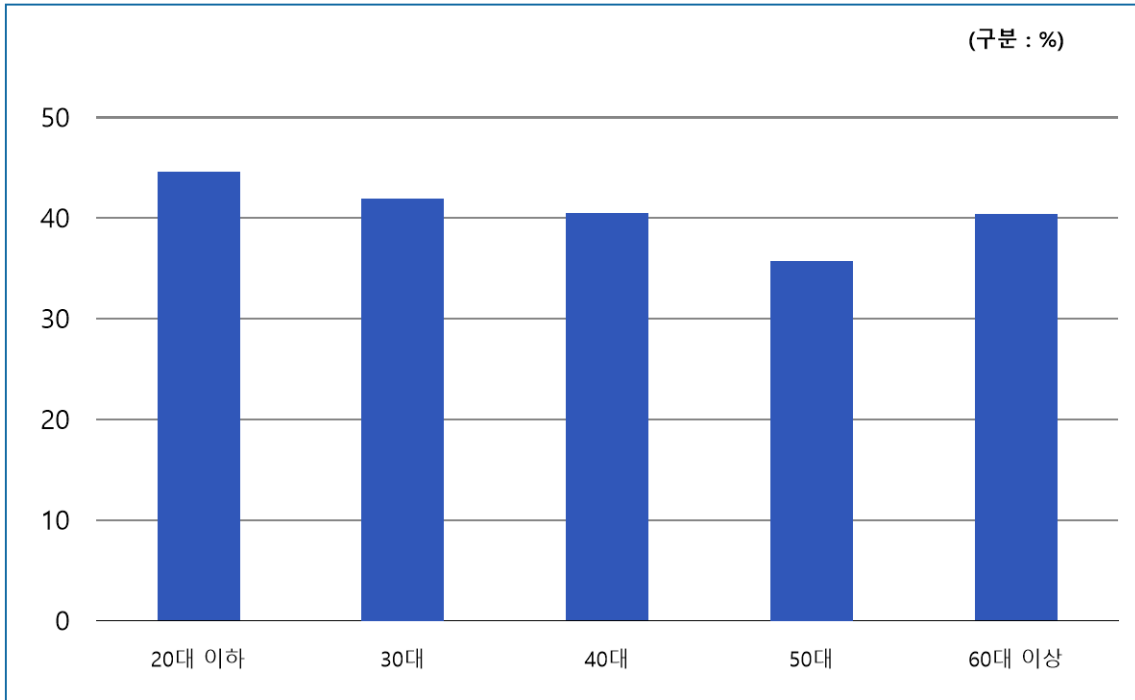


- 현재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느끼는 신뢰도는 **30대(3.41점)**에서 가장 낮다. 30대는 비용에는 가장 민감하면서(지표 1), 동맹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가장 불안해하는(지표 4) '이중고' 상태에 있다.

5) 전략 민감도: 20대의 선명한 '줄서기'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미동맹 우선	44.5	41.9	40.4	35.7	40.3

그림 2-25 연령별 미중 갈등 시 한미동맹 우선 인식 차트



-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전략적 선택은 **20대 이하(44.5%)**에서 가장 뚜렷했다. 50대(35.7%)가 전략적 모호성을 선호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청년층은 확실한 노선을 선호한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30대의 복합 민감성 위기:
 - 30대는 비용에 불만이 가장 크고, 신뢰는 가장 낮으며, 자주권 욕구는 높은 **가장 까다로운 정책 소비자**이다. 장기적 동맹 관리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할 타겟이다.
- 50대의 전략적 허리:
 - 50대는 동맹의 글로벌 확장은 가장 열려있으면서도,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하고, 대중 전략에서는 신중함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실용주의**를 보여준다.
- 20대의 안보 선명성:
 - 20대는 복잡한 쟁점보다는 **확실한 동맹**을 선호하지만,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30대 못지 않게 냉정하다. "**돈값 하는 확실한 안보**"를 원한다.
- 정책 뇌관은 돈과 자존심:
 - 방위비 부담금(비용)과 전작권 전환(자주권) 이슈는 전 세대에서 민감도가 높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인 3040에게 **동맹 비용**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내 세금 문제**로 인식된다.
- 미래 동맹의 확장성:
 - 50대를 중심으로 동맹의 역할을 **군사에서 글로벌 포괄**로 확장하는 데 긍정적이므로, 이를 **한미 과학기술 동맹이나 기후 동맹**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지지를 넓힐 수 있다.
- 동맹 비용-효익 대시보드 공개:
 - 비용 민감도가 높은 30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가 한국 경제(신용등급, 외국인 투자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대시보드를 운영하여 가성비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공유:
 - 동맹 확장 수용성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한미동맹이 단순한 반도 방위를 넘어 한국이 G7 수준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임을 강조하는 비전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 자주국방 마일스톤 제시:
 - 주권 민감도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을 키우는 과정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 완성률, 독자 위성 확보 현황** 등 자주국방의 성과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1.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지수 개발

1) 한미동맹 결속성 지수(Alliance Solidity Index, ASI)

- 정의: 동맹의 현재 굳건함과 미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복합적 지지 강도

- 구성 변수:

- Q15 (한미동맹의 굳건함): 1(매우그렇다) ~ 5(전혀아니다) → 역코딩
- Q18 (주한미군의 중요성): 1(매우중요) ~ 5(전혀중요X) → 역코딩
- Q16_1 (한미동맹_군사동맹 강화): 1(매우찬성) ~ 5(매우반대) → 역코딩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ASI = [(5 - Q15) \times 25 \times 0.3] + [(5 - Q18) \times 25 \times 0.4] + [(5 - Q16_1) \times 25 \times 0.3]$$

※ 100점에 가까울수록 '핵심 동맹 지지층', 0점에 가까울수록 '동맹 회의론자'

2) 미래 동맹 확장성 지수(Future Alliance Expansion Index, FAEI)

- 정의: 군사를 넘어 경제, 사회,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의 발전 지향성

- 구성 변수:

- Q16_2 (한미동맹_경제협력), Q16_3 (한미동맹_사회문화), Q16_4 (한미동맹_글로벌문제)
- 모두 1(매우찬성) ~ 5(매우반대) → 역코딩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FAEI = \frac{[(5 - Q16_2) \times 25] + [(5 - Q16_3) \times 25] + [(5 - Q16_4) \times 25]}{3}$$

※ 점수가 높을수록 '포괄적 동맹(Comprehensive Alliance)' 지지 성향

3) 주한미군 효용 체감 지수(USFK Utility Perception Index, UUPI)

- 정의: 주한미군이 주는 안보/경제적 혜택(Benefit)에 대한 체감도
- 구성 변수:

- Q21_1 (주한미군 의견_비용절약),
Q21_3 (주한미군 의견_전쟁억제),
Q21_4 (주한미군 의견_정세안정)
- 모두 1(매우그렇다) ~ 5(전혀아니다) → 역코딩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UUPI = \frac{[(5 - Q21_1) \times 25] + [(5 - Q21_3) \times 25] + [(5 - Q21_4) \times 25]}{3}$$

※ 점수가 낮을수록 주한미군을 '비효율적 비용 유발자'로 인식 (방위비 협상 저항증)

4) 동맹 지속성 기대 지수(Alliance Sustainability Expectation Index, ASEI)

- 정의: 동맹의 현재 굳건함과 미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복합적 지지 강도
- 구성 변수:

- Q20 (주둔 시기)
 - 1 (통일 이후 계속) → 100점
 - 2 (통일 전까지) → 75점
 - 3 (자주 국방 가능시) → 50점
 - 4 (평화체제 정착시) → 25점
 - 5 (조기 철수) → 0점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ASEI = (5 - Q20) \times 25$$

※ 100점은 '영구 주둔', 50점 이하는 '조건부 주둔/철수' 희망

5) 포괄적 안보 위협 민감도 지수(Comprehensive Security Threat Index, CSTI)

- 정의: 북한 및 주변국, 대외 요인으로부터 느끼는 안보 불안감의 총량
- 구성 변수:

- Q30 (향후 북한 도발가능성): 1(매우높다) ~ 4(매우낮다) → 4점 척도 역코딩
- Q32 (북한 핵위협): 1(매우위협) ~ 5(위협아님) → 역코딩
- Q13 (러북 협력위협): 1(매우위협) ~ 5(위협아님) → 역코딩
- Q4_8 (대외 안보 위협_북한 군사위협): 1(위협아님) ~ 5(매우위협) → 정방향 코딩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CSTI = [(4 - Q30) \times 33.33 \times 0.2] + [(5 - Q32) \times 25 \times 0.3] \\ + [(5 - Q13) \times 25 \times 0.2] + [(Q4_8 - 1) \times 25 \times 0.3]$$

※ 점수가 높을수록 안보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

6) 지수 결과 제시

순위	지수명	Mean	SD	중위수	설명
1	한미동맹 결속성 지수, ASI	71.40	12.67	75.00	동맹에 대한 지지는 '매우 견고함'
2	포괄적 안보 위협 민감도 지수, CSTI	68.32	12.73	67.50	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히 높음'
3	미래 동맹 확장성 지수, FAEI	67.94	16.35	66.67	경제/기술 동맹으로의 발전도 '긍정적'
4	동맹 지속성 기대 지수, ASEI	56.48	25.18	50.00	주둔 기간에 대해서는 '중도적 유보' (영구주둔 vs 철수 팽팽)
5	주한미군 효용 체감 지수, UUPI	56.17	18.52	58.33	비용 대비 효용감은 상대적으로 '낮음' (취약점)

그림 2-26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 종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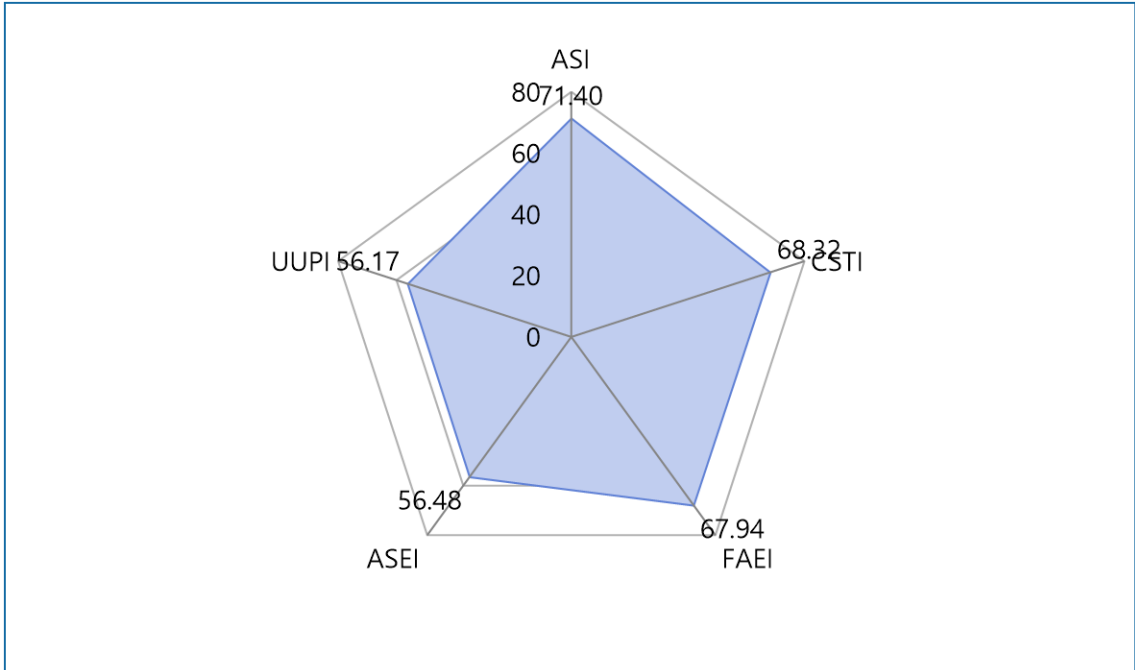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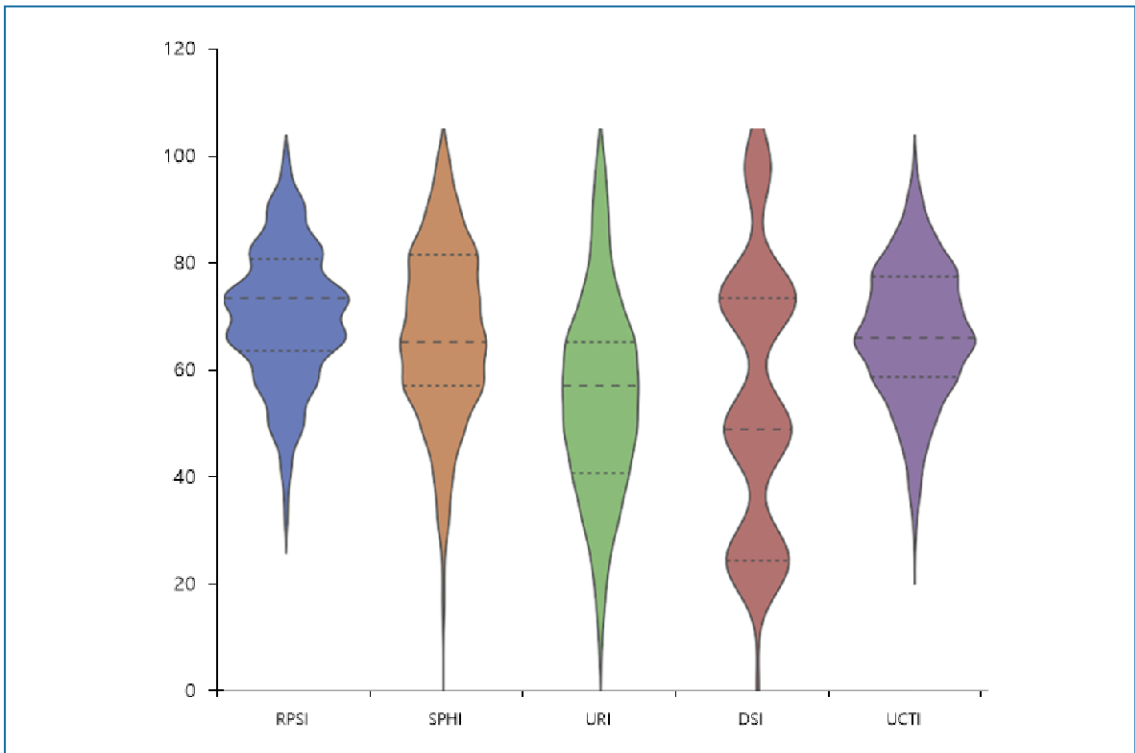


그림 2-27 한미동맹 인식과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방향에 대한 분포 분석



7) 결과 분석

- 지수에 대한 해석:
 - ASI(동맹 결속)와 CSTI(위협 민감도)는 70점대로 팽창해 있는 반면, 아래쪽의 ASEI(지속성)와 UUPI(효용성)는 50점대로 수축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이 동맹을 안보의 필수재로 인식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 분포 분석:
 - ASEI(지속성)의 뚱뚱한 허리로 동맹 지속성 지수가 50점 부근에서 매우 넓게 퍼져 있다 (항아리형). 이는 "통일 후에도 주둔" vs "자주국방 시 철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ASI(결속성)의 상단 집중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상위권(60~90 점)에 몰려 있어, 한미동맹 지지는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8)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안보 위협에 기인한 견고한 동맹지지:
 - 한미동맹 결속성 지수(ASI)는 71.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포괄적 안보 위협 민감도 지수(CSTI, 68.3점)와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현재의 높은 동맹 지지율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선호라기보다,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안보 필요성**에 기반한다.
- 당위와 실익의 괴리:
 - 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한미군 효용 체감 지수(UUPI)는 56.2점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대(MZ세대)에서 동맹 지지(ASI)와 효용 체감(UUPI) 간의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 (Dumbbell Chart 참조), 젊은 층일수록 동맹을 비용 대비 효율성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군사동맹을 넘어선 미래 동맹으로의 확장 의지:
 - 미래 동맹 확장성 지수(FAEI)가 67.9점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가치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여론의 뇌관이 될 가능성:
 - 효용 체감(UUPI)이 낮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비용이 혜택을 초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지지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 존재한다.

- 거래적 안보관의 부상:
 - 과거 이념 중심의 동맹관에서 벗어나, "**동맹이 나에게(국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는가?**"를 묻는 실리 중심의 안보관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동맹 지속성의 딜레마:
 - 동맹 지속성 기대 지수(ASEI, 56.5점)의 분포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은, 통일 이후나 자주 국방 달성 시 주한미군 위상 변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미완성임을 시사한다.
- 동맹의 가시적 혜택 홍보 전략 강화:
 - 추상적인 **평화 수호** 구호를 넘어, 한미동맹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술 이전, 우주/사이버 협력 등 국민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 혜택을 수치화하여 소통해야 한다.
- 청년층 타겟 기회 플랫폼으로서의 동맹 재정의:
 - 2030세대에게 한미동맹을 군사적 의무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AI, 반도체) 협력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프레임(Framing) 전환 필요하다.
- 위협 기반에서 가치 기반 동맹으로의 내러티브 전환:
 - 현재 위협(CSTI)에 의존하는 동맹 지지는 안보 상황 변화(평화 무드 등)에 따라 휘발될 수 있다. 동맹의 영속성(ASEI)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등 공유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외교의 축을 이동해야 한다.

라. 정책대안 제시

1. 문제의 구조: 한미동맹의 필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화

-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필요성**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맹안보지수(ASI)는 71.40으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이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달리, **동맹 운영과 효용성에 대한 체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한미동맹 효용인지지수(UUPI/UUIP)와 동맹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ASEI)는 모두 50점대에 머물러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적·경제적 효익과 장기적 지속성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러한 인식 구조는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확산이라기보다, **동맹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부족과 정책적 소통의 한계**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주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같은 핵심 현안이 반복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소비**되면서,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억제 효과가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 또한 조사 결과는 **세대별 인식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젊은 세대일수록 한미동맹을 이념적 상징이나 혈맹 혹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기보다 **개인의 안전과 미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현실적 정책 수단**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한미동맹 정책이 더 이상 추상적 가치나 역사적 정당성에 의존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 따라서 현재 한미동맹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동맹의 존속 여부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동맹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안보적 안정과 위험 감소로 환원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2. 정책대안 A: 한미동맹 인식 지수 기반 정책 관리 체계 도입

- 첫째, 범국민안보의식조사에서 도출된 ASI, UUPI(UUIP), ASEI 지수를 단순한 인식 조사 결과가 아니라, **한미동맹 정책을 관리·조정하는 정책 지표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 동맹과 관련된 국내의 논쟁은 개별 사안별로 단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

- ASI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UUPI는 동맹 효용에 대한 체감 수준을, ASEI는 동맹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각각 반영한다. 이들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공개함으로써, 동맹 정책이 국민 인식과 괴리되는 지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정부는 방위비 협상, 대규모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논의 등 주요 동맹 현안 발생 전후에 지표 변화를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하로 지표가 하락할 경우 설명 강화, 정책 보완, 지역 상생 대책 등의 후속 조치를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동맹 정책을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갖는다.
- 지수 기반 관리 체계가 부재할 경우, 동맹 논쟁은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지표를 정책 관리 도구로 활용할 경우, 한미동맹은 국민 인식을 고려한 안정적 정책 영역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

구분	지수	점수	정책적 의미
동맹신뢰	ASI	71.40	동맹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체감효용	UUPI	50점대	비용 대비 효과성 인식
지속성 기대	ASEI	50점대	장기주둔·동맹 지속에 대한 인식

- 특히 방위비 분담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 조정과 같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국민 인식과의 괴리가 누적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맹 인식 지수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동맹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3. 정책대안 B: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연계한 단계적 동맹 관리 전략

- 두 번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한미동맹 약화나 주권 논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미연합 방위체체의 진보 혹은 진전의 의미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현재 전작권 전환 논의는 조건과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
-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동맹 유지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군의 지휘·통제 능력, 정보·감시·정찰 자산,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이 단계적으로 강화될수록, 한미동맹은 점진적으로 안정적이고 수평한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조건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동맹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 갈등 역시 완화될 수 있다.
-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상징으로 소비될 경우, 동맹 신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반대로 조건과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될 경우,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질적 성숙을 보여주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4. 정책대안 C: 세대·집단별 인식 차이를 반영한 동맹 정책 소통 전략

- 셋째, 세대 및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한미동맹 인식 구조를 정책 수립 및 추진, 소통 전략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한미동맹을 이념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 미래 위험 관리와 연계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 이에 따라 동맹 정책은 '혈맹'이나 '의무'의 언어보다는, **전쟁 위험 감소, 위기 관리 비용 절감, 불확실성 최소화라는 실질적 효익 중심의 메시지**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 인식에 맞게 정책 언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 이처럼 세대별 인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동맹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세대별 인식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소통 전략이 정착될 경우, 한미동맹은 세대 간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5. 정책대안 D: 접경지역 상생형 정책 추진

- 넷째, **한미동맹으로 인한 부담이 집중되는 접경지역과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상생 정책**을 강화하고, 동맹 현안을 공론의 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동맹의 비용이 특정 지역과 집단에 집중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따라서 **방산·정비(MRO) 인프라,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환경 개선**과 같은 실질적 상생 정책을 통해 동맹의 부담 및 이익이 보다 공정하게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방위비 분담,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국회·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맹 정책을 정치적 공방이 아닌 공공 정책의 영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공론화와 상생 전략이 부재할 경우, **한미동맹은 반복적으로 정치적 소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체계가 정착될 경우, 한미동맹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결론

- 본 정책제안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여전히 높은 수준(ASI 71.40)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체감 효용(UIIP)과 장기 지속성 기대(ASEI)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2025년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 다수가 **한미동맹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성과에 대해 보다 투명한 설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에 본 제안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재조정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 인식 지수 기반의 정책 관리 체계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연계한 단계적 동맹 관리 전략,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정부 주도의 동맹 소통 채널 강화, ▲접경지역 상생형 정책 추진**을 통해 동맹 운영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이러한 정책대안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실용외교 기조와 **미래형 · 포괄적 전략동맹, 책임국방**이라는 **국정과제의 방향**과도 부합한다. 본 정책제안은 한미동맹을 군사적 필요성의 차원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신뢰 위에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 정책적 보완 방안으로 기능할 것이다.

2025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제 3 장

**국민의 대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제3장 국민의 대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요약문-

-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과거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당위론적 접근에서,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반응하는 '실리적 안보관'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의 구조적 변화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북한 정권-주민 분리 인식 지수(RPSI)', '대북 안보 강경화 지수(SPHI)', '통일 수용성 및 효능감 지수(URI)' 등 5대 핵심 지수를 새롭게 개발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60점대 후반의 높은 적대감을 보이지만, 주민에 대해서는 포용하려는 분리 인식(RPSI, 69.58점)이 뚜렷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DSI, 56.0점)을 드러냈으며, 통일 수용성(URI, 46.21점)과 통일 비용 감수 의지(UCTI, 42.79점)는 40점대에 머물러 통일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즉, 국민들은 북한 정권은 싫지만 전쟁은 원하지 않으며,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세대 · 이념 · 지역 · 매체에 따른 대북 인식의 균열

-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도 변수별로 독특한 인식의 균열이 관찰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세대 간 인식의 변화다. 2030 청년 세대는 북한 정권에 대해 60대 노년층 못지않은 높은 적대감(62.6%)을 보이며 '안보 보수화' 경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북핵 해법으로 전쟁이나 압박보다는 '대화화 협상(약 59%)'을 가장 선호한다. 이는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과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리스크 관리형' 선택이다. 이들에게 북한은 타도해야 할 주적이라기보다, 내 삶의 안전을 위해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인 것이다.
-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석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분리 인식'에서 나타난다. 진보층은 북한 정권(적대)과 주민(포용)을 명확히 분리해서 인식(격차 47.6%p)하는 반면, 보수층은 북한 전체를 경계하는 경향이 강하다. 흥미로운 점은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진보층조차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엄격한 상호주의(44.4%)'를 1순위로 꼽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공정성 원칙이 이념을 초월한 대북 정책의 골든룰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 지역적 관점에서는 '거리의 역설'이 나타난다. 북한 장사정보 위협에 직접 노출된 서울 시민들은 정권 적대감(74.8%)이 가장 높지만 통일에는 무관심한 '적대적 무관심'을 보인다. 반면, 최전방인 접경지역 주민들은 도발 위협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생존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화와 통일(54.3%)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안전한 후방에 있는 서울보다 최전방 주민들이 오히려 유연한 대북관을 가진 셈이다.
- 마지막으로 미디어 환경은 청년층의 대북관을 '쿨'하게 만들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폭력성과 주민의 참상을 가감 없이 접한 디지털 세대는 정권에 대한 혐오와 주민에 대한 연민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습득이 통일 비용 지불 의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정권은 나쁘고 주민은 불쌍하지만, 통일 비용을 내가 내고 싶지는 않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 지향에서 '안정적 평화 관리'로의 전환

- 국민들은 더 이상 '민족적 당위'만으로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는 막연한 '통일'에서 구체적인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역지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리 수단으로 재정의 되어야 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투트랙 소통 전략'이 시급하다. 공정성에 민감한 2030세대에게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여 안보 불안을 해소해주되(안심), 인도적 지원 시에는 투명한 분배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공정)해야 한다. 또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40대에게는 대북 관여 정책이 무리한 통일 추진이 아니라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리스크 관리 행위'임을 강조하는 경제 안보 중심의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향후의 대북 정책은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주는 '관리의 효능감'을 입증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국민의 대북 인식변화와 대북정책 추진 방향

1. 대북 인식의 개념적 정의

-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과거 민족적 특수성에 기반한 ‘당위론적 접근’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천명과 실존적 핵 위협에 반응하는 ‘실리적 안보관’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대북 인식을 ① 이중적 인지 구조의 지속 여부, ② 위협에 대한 민감성, ③ 통일 효능감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분석한다.
- ‘이중적 인지 구조’란 북한 정권(적대 대상)과 북한 주민(협력 대상)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전통적인 대북관을 의미하나,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무차별적 도발로 인해 이 경계가 무너지는 ‘인지 구조의 붕괴’ 현상을 진단하는 데 주력한다. ‘위협 민감성’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 및 비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의 심도를 뜻하며, ‘통일 효능감’은 통일을 민족적 과업이 아닌 비용 대비 편익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현실적 기대 수준으로 정의한다.

2. 기초통계분석 개요

- 상기 정의된 개념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설계된 ‘다섯 차원’을 적용하여 변화된 대북 인식의 지형도를 분석한다.
- 첫째, 세대 간 인식 격차 차원에서는 ‘민족 공동체’ 담론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통일의 당위성 보다는 ‘공정성’과 ‘경제적 손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2030 세대의 ‘실리적 통일관’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로 파편화된 통일 인식의 간극을 확인하고 새로운 안보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 둘째, 정치적 태도 상호작용 차원에서는 대북 지원 및 제재 방식을 둘러싼 여론이 안보 상황의 본질보다는 진영 논리에 따라 양극화되는 ‘남남갈등’의 구조를 진단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합의 가능한 대북 정책의 최소 공약수를 식별한다.
- 셋째, 정서 및 정보환경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이 유발하는 국민적 ‘피로감’과 ‘혐오’ 등의 정서적 기제가 대화론을 위축시키고 강경 대응(자체 핵무장 등) 여론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 넷째, 전략적 공간 구획 차원에서는 실제 포격 도발이나 화성기 소음 피해에 노출된 접경지역 주민과 후방 지역 주민 간의 위협 체감도 격차를 분석하여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 다섯째, 정책 민감도 차원에서는 북한의 도발 수위 변화에 따라 유화 정책 지지 여론이 얼마나 신속하게 철회되는지 여론의 가변성을 측정한다.

3. 지수 개발 개요

-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수립을 위해, 정량적 지표인 '대북정책 수용성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 이 지수는 북한에 대한 포용적 인식, 통일 필요성, 안보 위협 체감도 변수를 종합하여 산출된다. 분석의 최종 목표는 이 지수를 통해 우리 사회 내에서 대북 관여 정책을 지지하는 '정책 수용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반대로 강경한 봉쇄를 요구하는 '매파적 여론'이 2030 세대와 특정 정치 성향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국민 통합형 대북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 기초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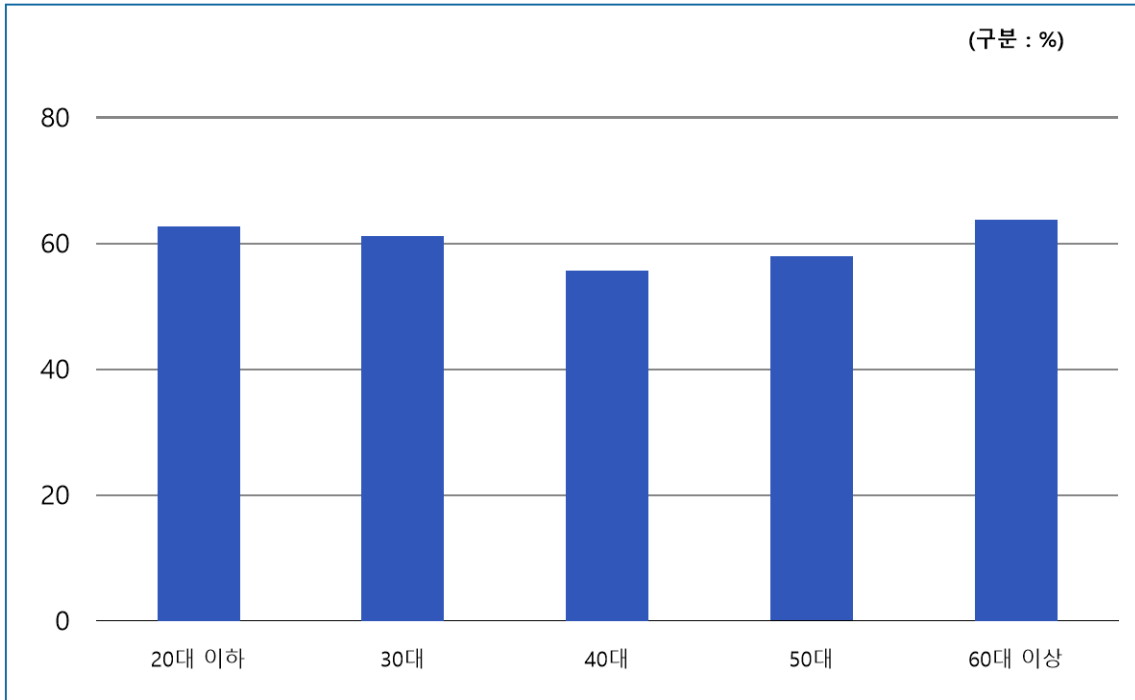
1. 세대 간 인식 격차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연령대 (SQ2_1)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위협 인식):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중 적대시 비율 (Q24 / 비율비교)
 - 분석 2 (통일 가치): 한반도 통일 필요성 인식 (Q36 / 비율비교)
 - 분석 3 (미래 선호): 한반도 통일 방식 중 현상유지 선호 (Q40 / 교차분석)
 - 분석 4 (정책 원칙):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 중 '엄격한 상호주의' 요구도 (Q28 / 비율비교)
 - 분석 5 (해법 선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중 '대화과 협상' 선호도 (Q33 / 비율비교)

1) 위협 인식: 20대의 높은 적대감, 60대와 동조화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정권 적대시	62.6	61.1	55.6	57.8	63.7

그림 3-1 연령별 북한 정권 적대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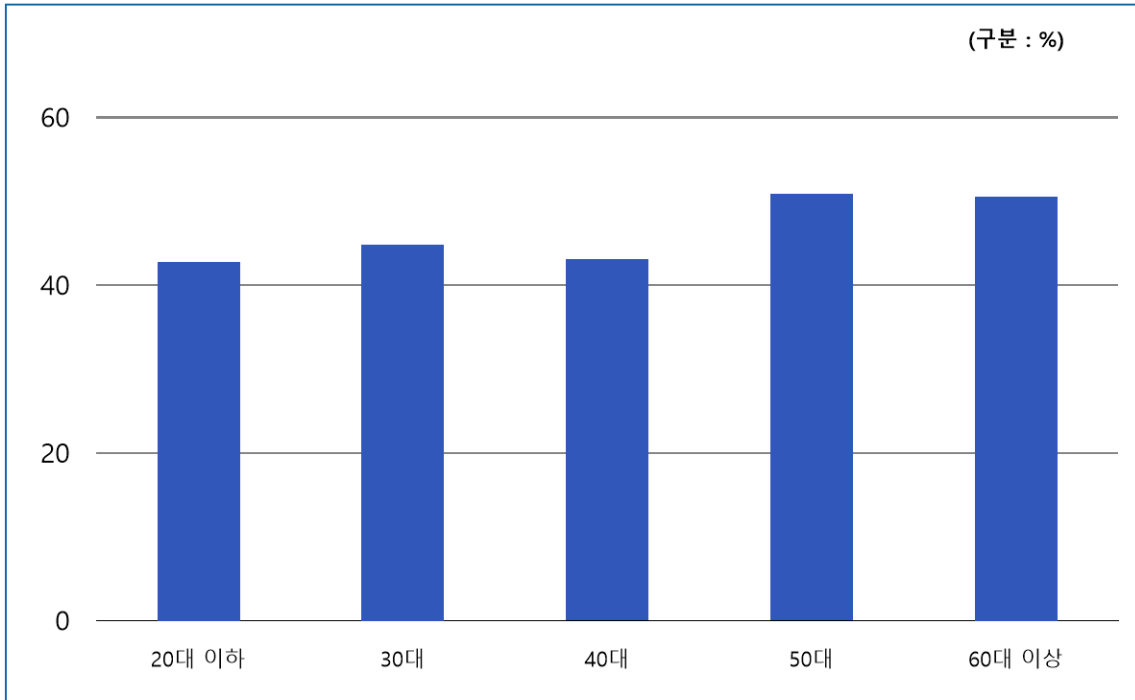


- 북한 정권을 적대시하는 비율은 **60대 이상(63.7%)**과 **20대 이하(6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전통적 안보관을 가진 노년층분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인권 문제를 온라인으로 접한 청년층(20대)도 북한 정권을 명확한 '적(Enemy)'으로 규정하는 '**안보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

2) 통일 가치: 2040의 '통일 회의론' 확산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통일 필요 공감	42.7	44.8	43.0	50.8	50.5

그림 3-2 연령별 통일 필요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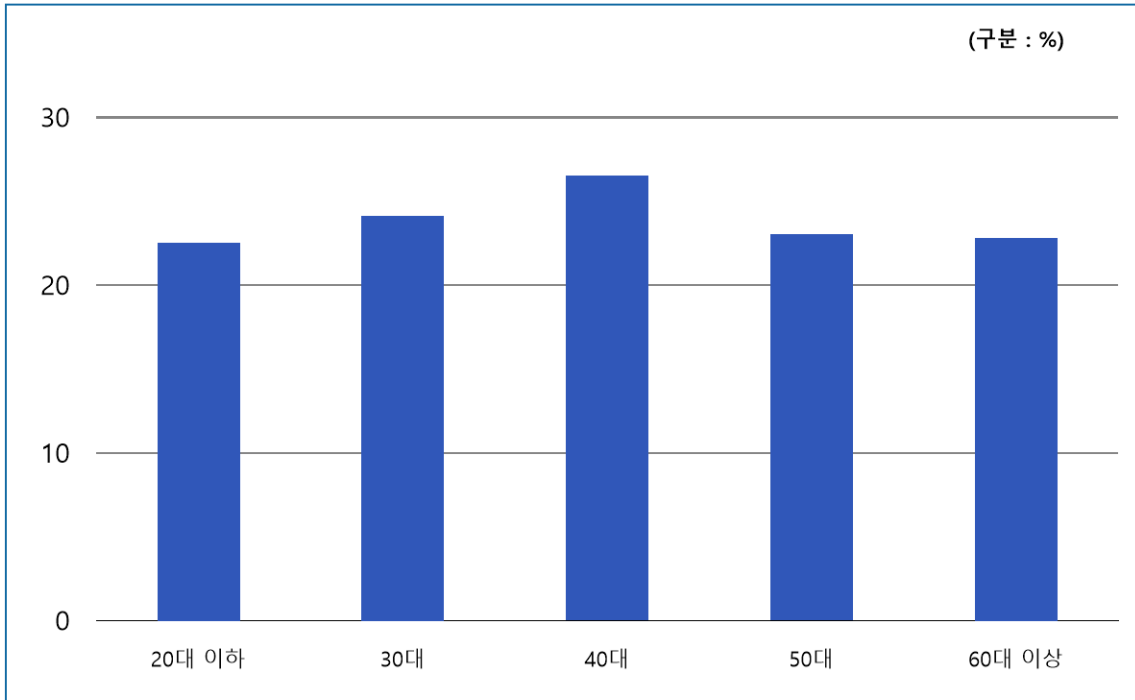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50대(50.8%)**와 **60대(50.5%)**에서 과반을 넘지만, **20대(42.7%)**, **30대(44.8%)**, **40대(43.0%)**는 40% 초반대에 머물렀다.
- 통일을 당위가 아닌 '비용'과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청년층을 넘어 사회 허리층인 40대까지 확산되었다.

3) 미래 선호: 40대의 '현상유지' 회구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현상유지 선호	22.5	24.1	26.5	23.0	22.8

그림 3-3 연령별 장기간 현상 유지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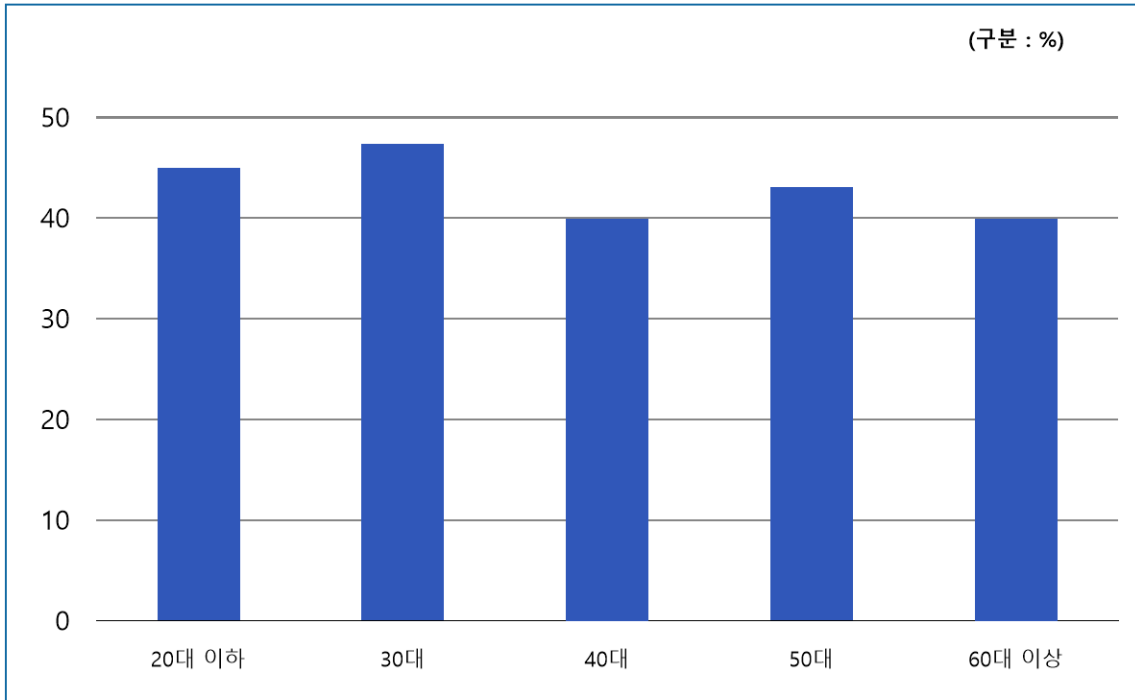


- 통일보다는 '장기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40대(26.5%)**에서 가장 높다.
- 경제 활동과 부양 의무가 가장 큰 40대는 통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나 경제적 리스크를 가장 기피하는 '**안정 지향적**' 태도를 보인다.

4) 정책 원칙: 30대의 '공정성' 민감도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상호주의 요구	44.9	47.3	39.9	43.0	39.9

그림 3-4 연령별 대북 지원 시 엄격한 상호주의 요구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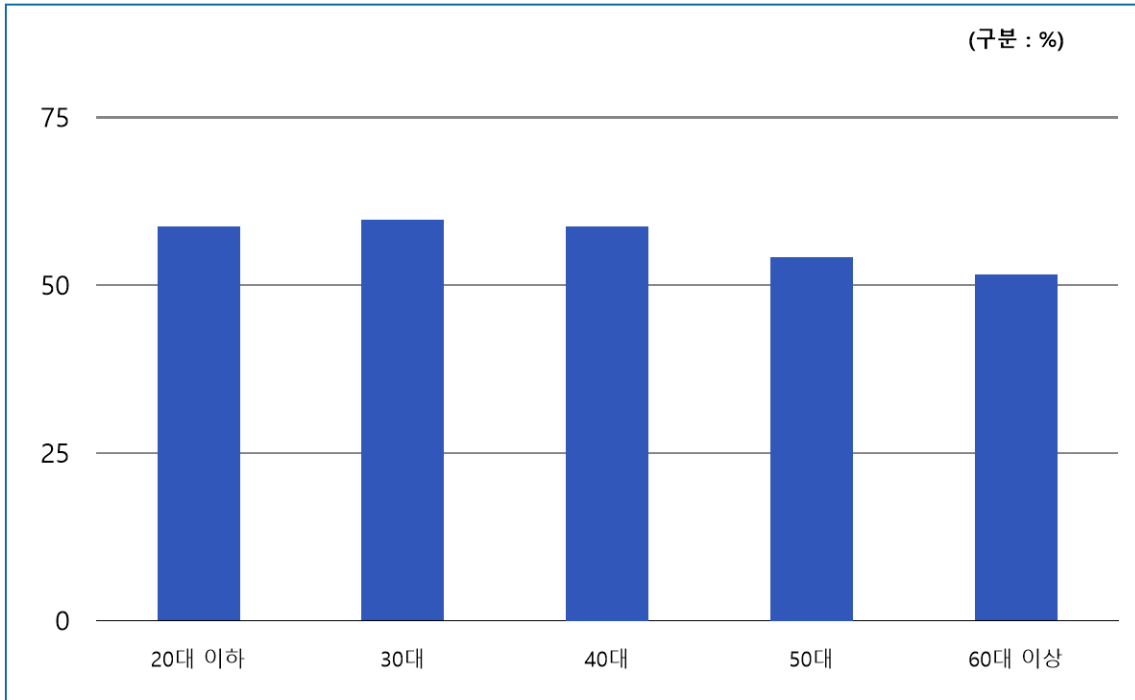


- 대북 지원 시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비율은 **30대(47.3%)**와 **20대(44.9%)**에서 가장 높다.
- 해석: 청년 세대는 대북 정책을 민족적 특수성이 아닌 '**국가 간 거래의 공정성**' 관점에서 바라보며, 일방적 지원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다.

5) 해법 선호: 청년층의 '리스크 관리형' 대화지지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화/협상 선호	58.6	59.6	58.7	54.1	51.5

그림 3-5 연령별 북한과의 대화/협상 선호 차트



-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30대(59.6%)**와 **20대(58.6%)**가 북핵 해법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가장 선호한다.
- 이는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긴장 고조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이나 취업난 등 자신의 삶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30대의 '복합적 현실주의':
 - 30대는 정권에 대한 적대감(61.1%)과 공정성 요구(47.3%)가 높으면서도, 전쟁을 막기 위한 대화(59.6%)를 가장 강력히 원한다. **'원칙은 지키되, 리스크는 관리하라'**는 가장 고도화된 요구를 하고 있다.
- 20대의 '적대적 공존':
 - 20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도(62.6%), 통일보다는 평화적 분단 관리(현상유지+합의)를 선호한다. 이들에게 북한은 '합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다.
- 40대의 '피로감':
 - 40대는 통일 필요성 공감이 낮고 현상 유지 욕구가 강해, 통일 담론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엿보인다.
- 통일 담론의 전환:
 - '민족'이나 '당위'를 앞세운 통일론은 2040세대에게 설득력을 잃었다. **'평화 관리'와 '이익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공정성이 정책 신뢰의 열쇠:
 - 2030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2030 타겟] 안심 & 공정 투트랙 전략:
 - 북한 도발에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여 안보 불안을 해소하되(안심), 대화나 지원 시에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공정)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40대 타겟] "한반도 리스크 관리 보고서":
 -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40대를 위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리한 통일 추진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관리 행위'임을 강조하는 경제 안보 중심의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 [범국민] "평화적 공존 로드맵":
 - 통일 회의론(2040세대)과 통일 지향(5060세대)을 아우르기 위해, '즉각적 통일'이 아닌 **'상호 존중과 불가침'을 통한 평화적 공존을 1단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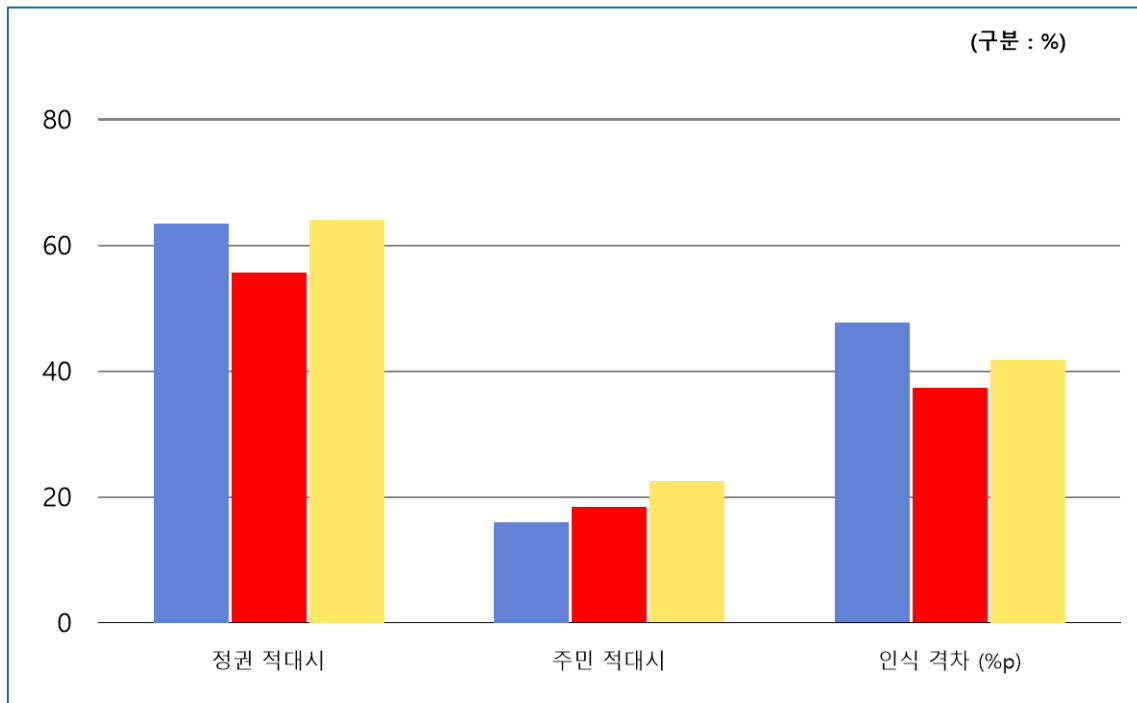
2. 정치적 태도와 정책 신뢰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개인 성향 (DQ8) (진보 / 중도 / 보수)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위협 인식):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vs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Q24, Q25 / 교차분석)
 - 분석 2 (통일 가치): 한반도 통일 필요성 인식 (Q36 / 교차분석)
 - 분석 3 (미래 선호): 한반도 통일 방식 중 '점진적 합의 통일'과 '장기간 현상 유지' 선호 (Q40 / 교차분석)
 - 분석 4 (정책 방향):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 (무상 vs 상호주의 vs 불가) (Q28 / 교차분석)
 - 분석 5 (해법 선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대화 vs 압박) (Q33 / 교차분석)

1) 위협 인식: 진보의 '분리 인식' vs 보수의 '포괄적 경계'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정권 적대시	63.4	55.5	64.0
주민 적대시	15.9	18.3	22.4
인식 격차 (%p)	47.6	37.2	41.7

그림 3-6 개인 성향별 북한 정권 대상 적대감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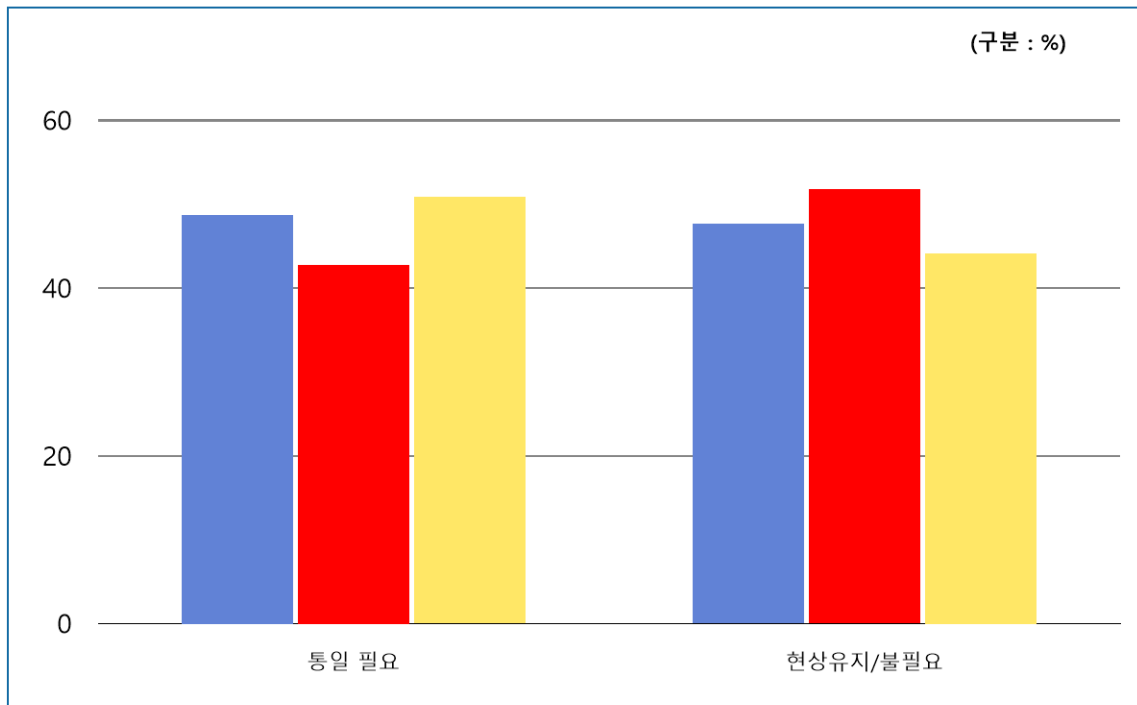


-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은 진보(63.4%)와 보수(64.0%)가 거의 차이가 없으나, 북한 주민에 대한 적대감은 진보(15.9%)가 보수(22.4%)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 진보층은 정권과 주민을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격차 47.6%p)하는 반면,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북한 전체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2) 통일 가치: 중도층의 통일 회의론 심화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통일 필요	48.7	42.7	50.8
현상유지/불필요	47.6	51.7	44.1

그림 3-7 개인 성향별 통일 필요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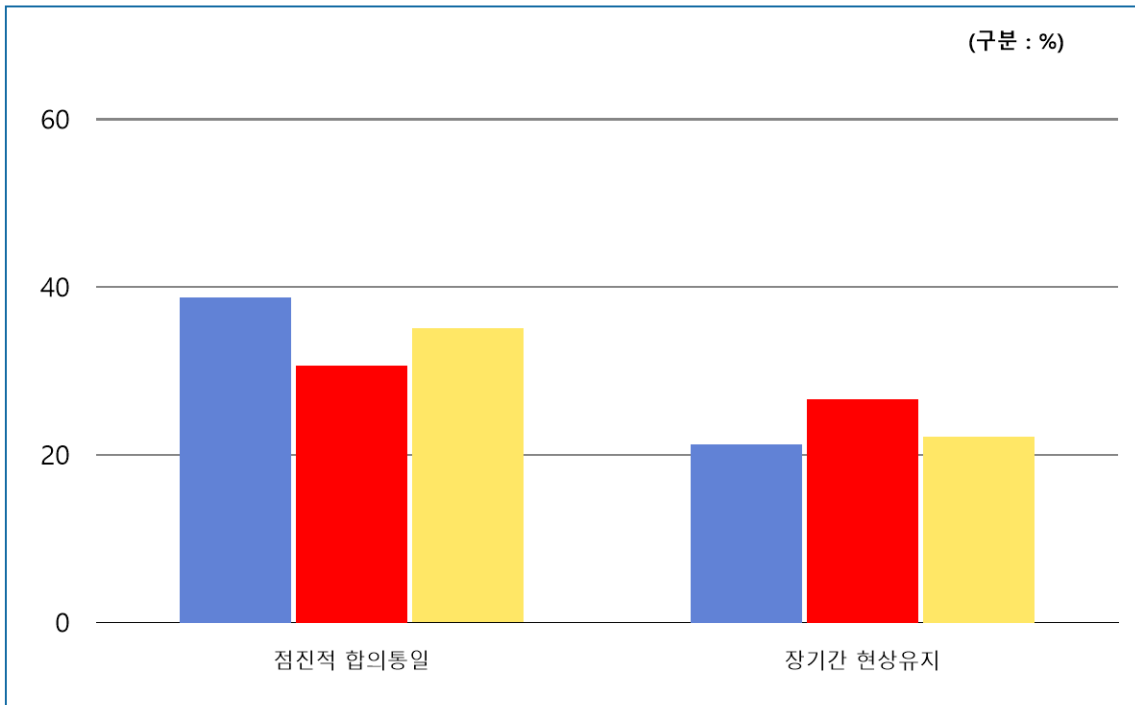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보수(50.8%)가 가장 높고, 오히려 **중도층**(42.7%)에서 가장 낮다. 중도층의 과반(51.7%)은 현상유지나 통일 불필요를 선택해, 통일 담론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임을 보여준다.

3) 미래 선호: 진보의 '합의' vs 중도의 '현상유지'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점진적 합의통일	38.7	30.6	35.0
장기간 현상유지	21.2	26.6	22.1

그림 3-8 개인 성향별 미래 통일 선호 방향성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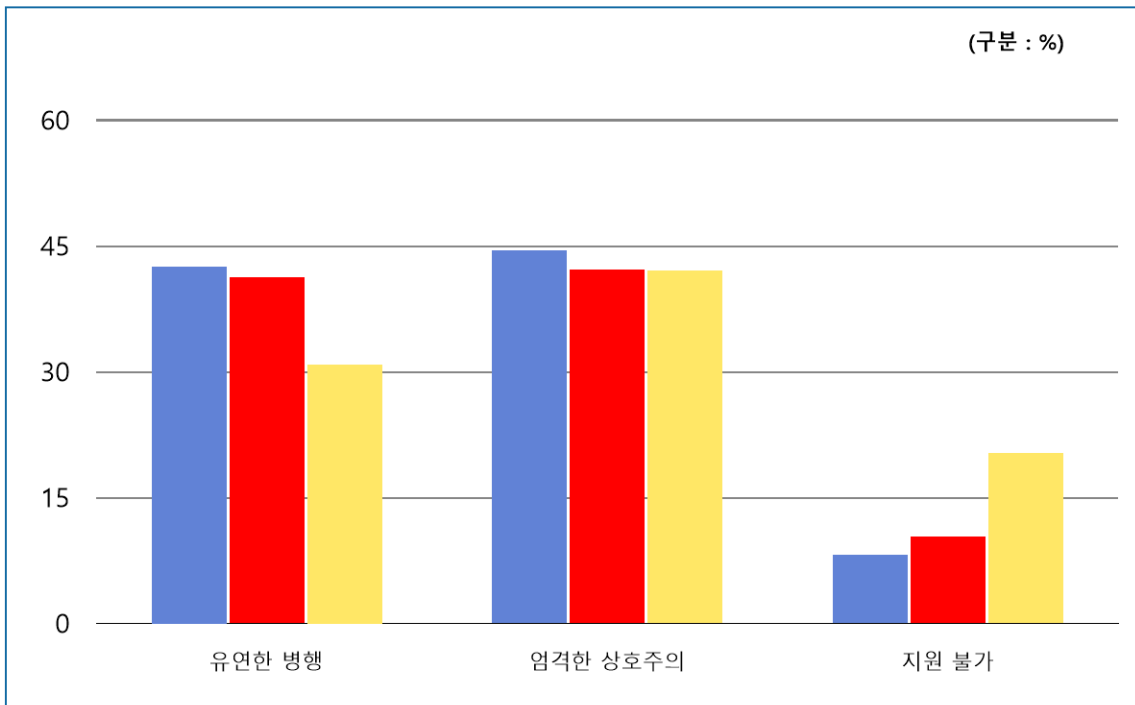


- 진보층은 '점진적 합의통일(38.7%)'을 가장 선호하여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반면, 중도층은 '장기간 현상유지(26.6%)' 선호도가 전 성향 중 가장 높아 리스크 회피 성향이 뚜렷하다.

4) 정책 방향: 진보도 동의하는 '상호주의 원칙'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유연한 병행	42.5	41.2	30.8
엄격한 상호주의	44.4	42.1	42.0
지원 불가	8.1	10.3	20.2

그림 3-9 개인 성향별 대북 정책 엄격한 상호주의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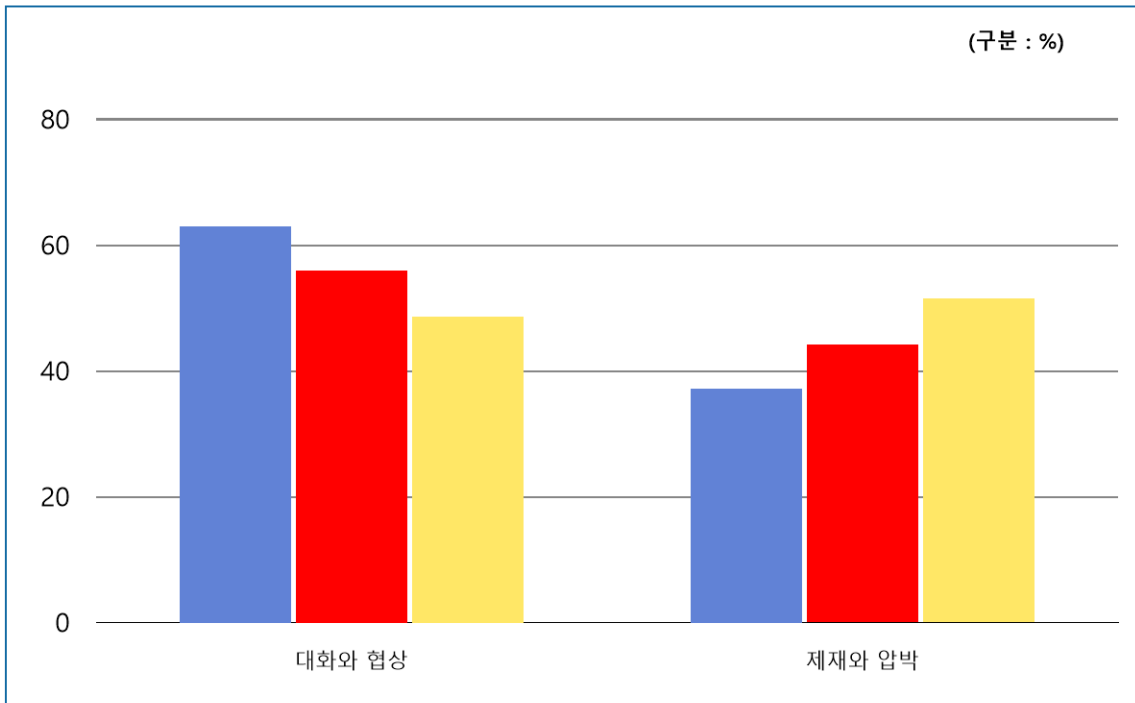


- '조건 없는 지원'은 진보층에서도 5.1%에 불과하다. 진보층(44.4%), 중도층(42.1%), 보수층(42.0%) 모두 '엄격한 상호주의'를 제1원칙으로 꼽아, 대북 지원의 투명성과 대가성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확인되었다.

5) 해법 선호: 해법의 이념적 양극화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대화와 협상	62.9	55.9	48.6
제재와 압박	37.1	44.1	51.4

그림 3-10 개인 성향별 북핵 문제 해결 방안 선호 차트



- 북핵 문제 해결 수단으로 진보층(62.9%)과 중도층(55.9%)은 '대화와 협상'을 지지하지만, 보수층(51.4%)은 과반이 '제재와 압박'을 선택해 해법에 있어서는 이념적 태도가 뚜렷하게 갈린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대북 지원의 골든룰 확인:
 - 진보 진영조차 **퍼주기식 지원**을 거부하고 **상호주의**를 1순위로 지지한다는 사실은, 향후 대북 정책 추진 시 정치적 공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공통 분모이다.
- 중도층의 안보 피로감:
 - 중도층은 통일 필요성과 미래 기대감이 가장 낮고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이는 이념적 통일 담론보다 **내 삶의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 위협 인식의 동조화:
 -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계심은 진보/보수가 일치한다. 따라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은 정쟁의 대상이 아님을 데이터가 증명한다.
- 정책 신뢰의 조건:
 - 국민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북 정책(상호주의)**을 신뢰한다. 일방적 유화책이나 무조건적 강경책 모두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 중도층 포용 전략 부재:
 - 현재의 통일 담론은 **민족(진보)**이나 **자유(보수)**에 치우쳐 있어, 실용과 안정을 중시하는 중도층에게 소구하지 못하고 있다.
-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가이드라인 법제화:
 - 진보총조차 지지하는 '**상호주의(44.4%)**' 원칙을 제도화하여, 대북 지원 시 지원 물품의 분배 투명성 확보와 북한의 상응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
- 통일 효능감 프로젝트:
 - 통일 회의론이 가장 강한 중도층을 위해, 거대 담론 대신 "남북 경험의 우리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군사 긴장 완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경제적 실익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한 인권의 보편적 접근:
 - 진보층의 높은 '**주민 분리 인식(격차 47.6%p)**'을 활용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공격 수단이 아닌 **인류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진보 진영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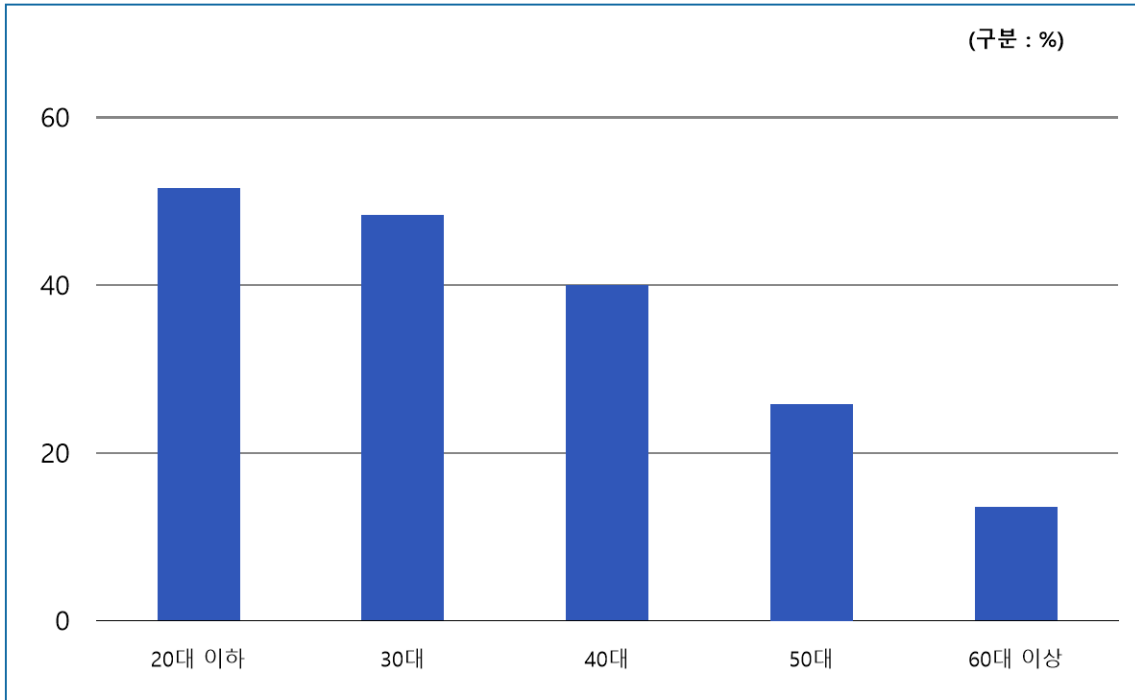
3. 정서적 변수와 정보환경 변화가 정책 수용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정보 환경):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중 '뉴미디어(유튜브/포털)' 의존도 (Q64_1 / 비율비교)
 - 분석 2 (정서적 분리):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적대) vs 북한 주민(동포)에 대한 인식 및 해당 점수 간 차이 (Q24, Q25 / Gap 분석)
 - 분석 3 (정책 수용 - 통일): 한반도 통일 필요성 중 통일 필요 인식 (Q36 / 비율비교)
 - 분석 4 (정책 수용 - 지원):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 중 '엄격한 상호주의(Fairness)' 요구도 (Q28 / 비율비교)
 - 분석 5 (정책 수용 - 해법):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중 '대화(Soft)' vs '압박(Hard)' 선호도 (Q33 / 비율비교)

1) 정보 환경: 2030의 유튜브/포털 안보관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뉴미디어 의존도	51.5	48.3	39.9	25.8	13.5

그림 3-11 연령별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시 뉴미디어 의존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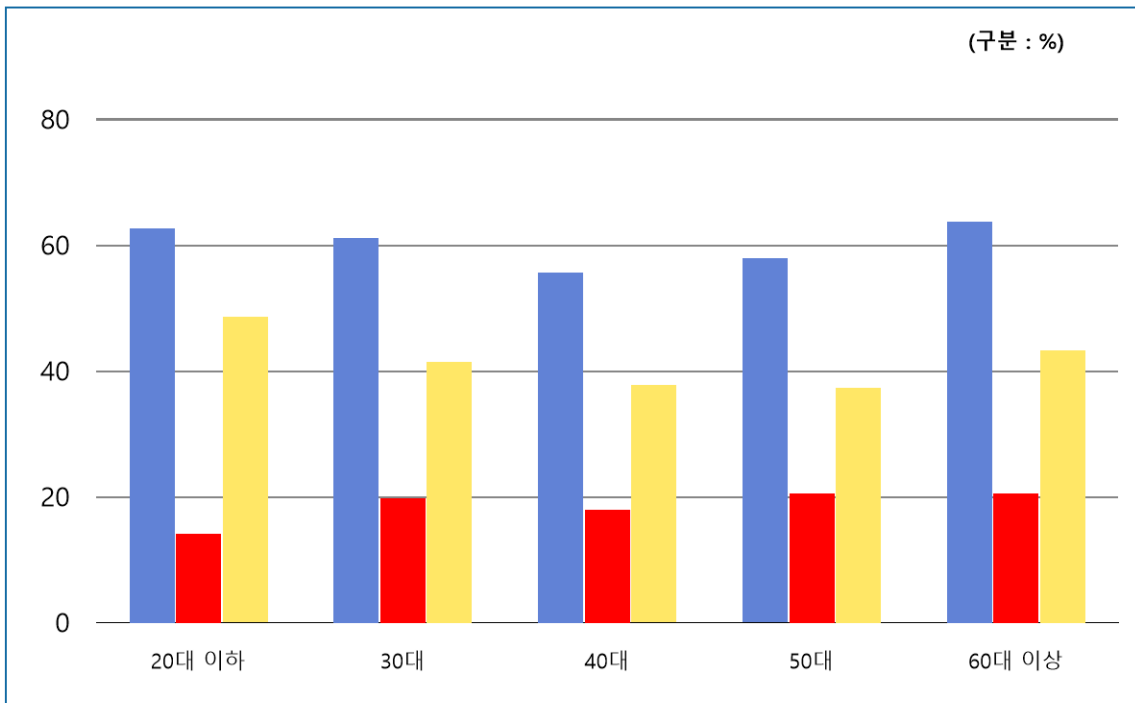


- **20대 이하**(51.5%)와 **30대**(48.3%)의 절반가량은 유튜브, 포털 등 뉴미디어에서 안보 정보를 얻는다. 반면, 60대 이상은 13.5%에 불과해 정보 습득 채널이 세대별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2) 정서적 분리: 디지털 세대의 극적인 분리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정권 적대감	62.6	61.1	55.6	57.8	63.7
주민 적대감	14.1	19.7	17.9	20.5	20.5
분리 격차 (%p)	48.5	41.4	37.7	37.3	43.2

그림 3-12 연령별 북한 정권 및 주민 대상 적대감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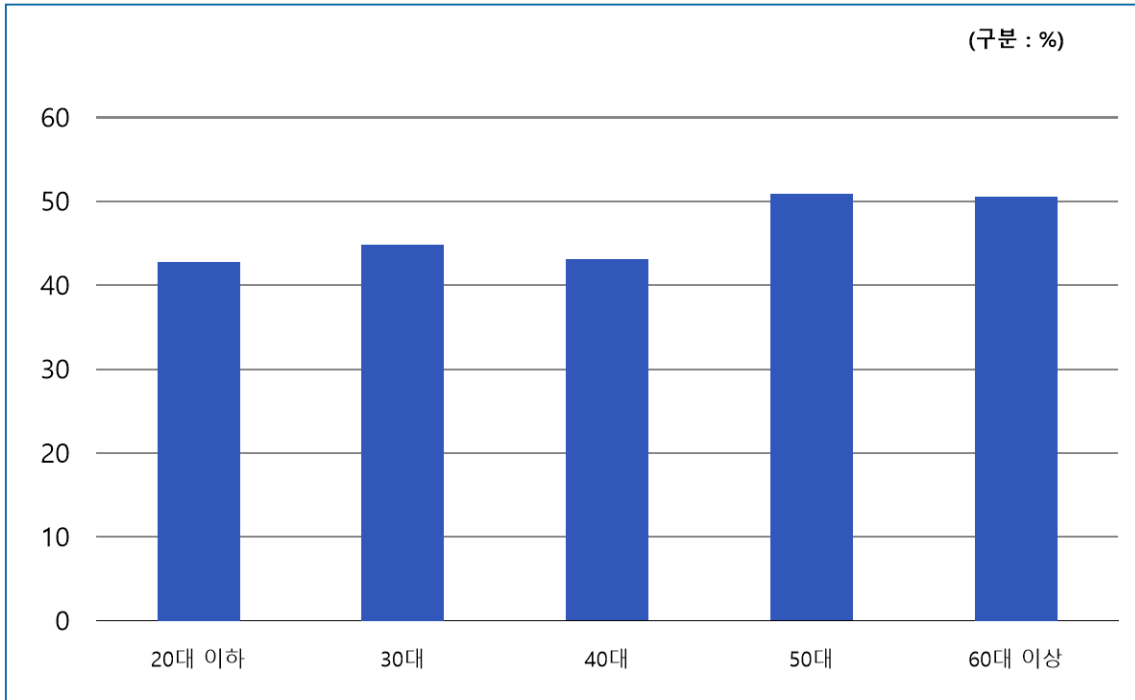


- 뉴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20대 이하는 정권 적대감(62.6%)은 높지만 주민 적대감(14.1%)은 가장 낮아, **감정적 분리 격차(48.5%p)**가 전 세대 중 가장 크다.
- 디지털 매체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와 정권의 폭력성을 접한 청년층은 **'나쁜 정권'과 '불쌍한 주민'**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서적 기제를 형성했다.

3) 정책 수용 - 통일: 정보는 많지만, 통일은 싫다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통일 필요 공감	42.7	44.8	43.0	50.8	50.5

그림 3-13 연령별 통일 필요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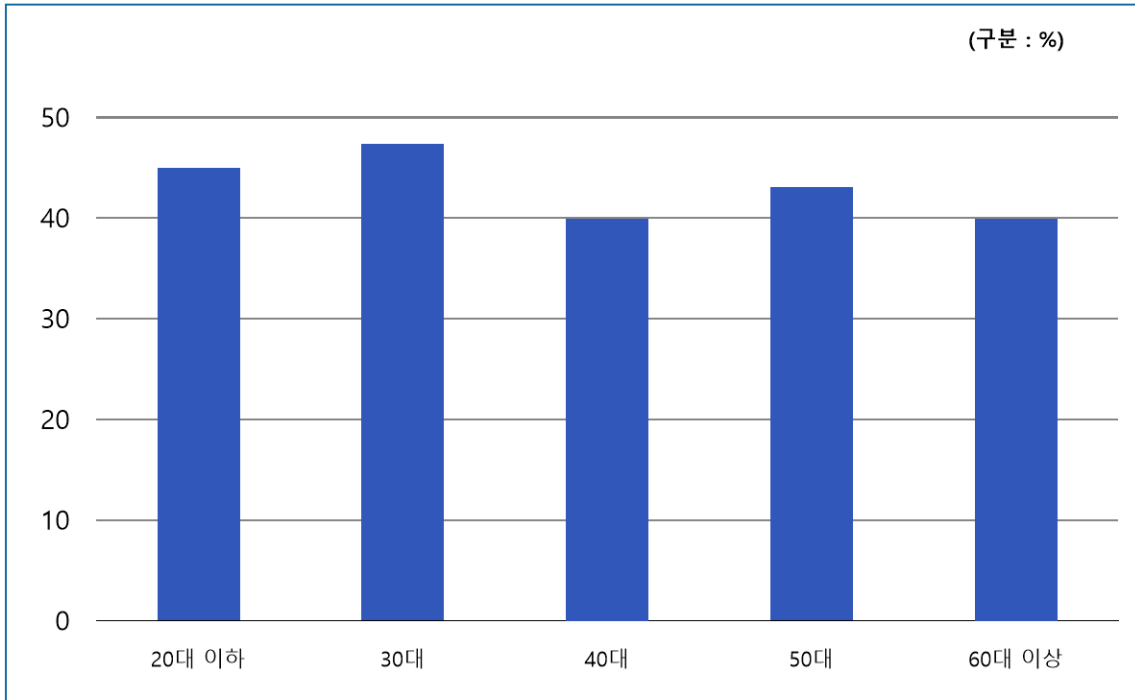


- 정보력이 높은 **20대(42.7%)**와 **30대(44.8%)**는 오히려 통일 필요성에 가장 덜 공감한다.
- 뉴미디어에서 접하는 통일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정보가 '**현실적 회피 심리**'를 자극하여 통일 정책 수용성을 낮추고 있다.

4) 정책 수용 - 지원: 30대의 공정성 민감도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상호주의 요구	44.9	47.3	39.9	43.0	39.9

그림 3-14 연령별 대북 지원 시 엄격한 상호주의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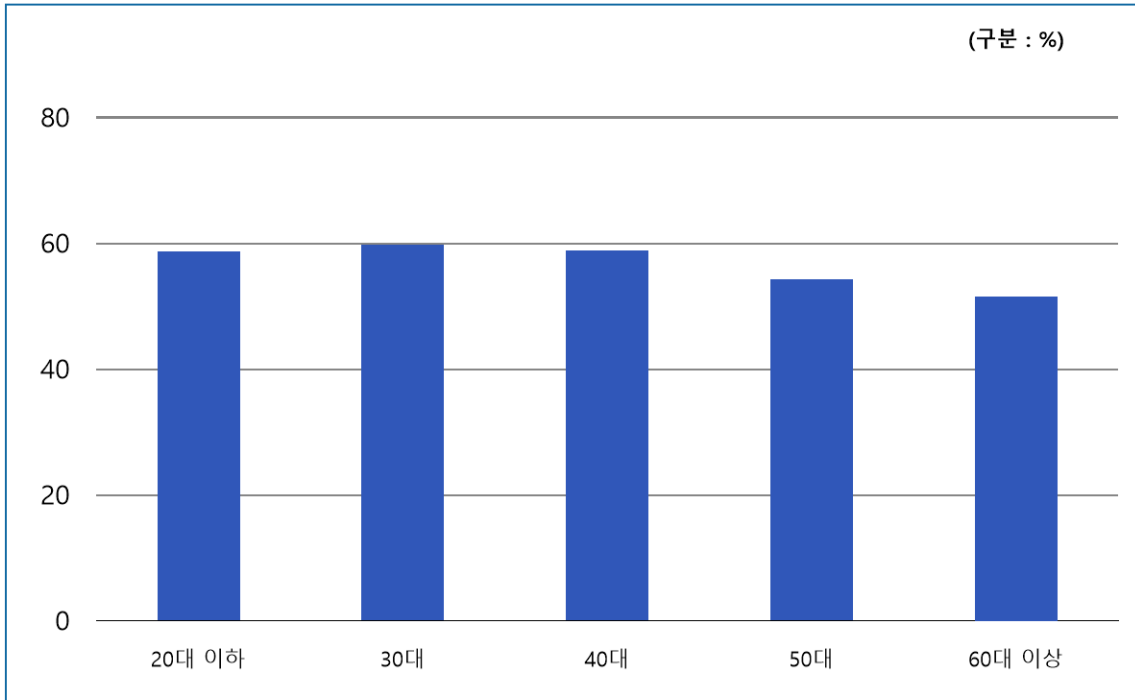


- 30대(47.3%)와 20대(44.9%)는 대북 지원 시 '엄격한 상호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다.
- 청년 세대의 '공정성' 가치가 대북 정책에도 투영되어, "가는 게 있어야(대가) 오는 게 있다(지원)"는 원칙 없이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뚜렷하다.

5) 정책 수용 - 해법: 위험 회피를 위한 대화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화/협상 선호	58.6	59.6	58.7	54.1	51.5

그림 3-15 연령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시 대화/협상 대응 선호 차트



-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높은 2030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북핵 해법으로는 '대화과 협상(58~59%)'을 가장 선호한다.
- 이는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긴장 고조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자산, 취업 등)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실용적 선택이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매체가 만든 클한 대북관:
 - 유튜브 등 뉴미디어는 북한의 실상을 지나라하게 보여주어 청년층의 환상을 깬다. 그 결과, 정권에는 냉정하지만 주민 인권에는 민감하고,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북관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공정성이 정책 신뢰의 핵심:
 - 2030세대가 요구하는 **상호주의**는 단순한 강경책이 아니라, "**지원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대북 정책도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 수단으로서의 평화:
 - 청년들에게 대화는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전을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
- 감성적 호소의 한계:
 -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전통적 감성 호소는 정보력이 높은 청년층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데이터와 팩트, 그리고 **공정성**에 반응한다.
- 채널 맞춤형 메시지:
 - TV를 보는 60대에게는 **안보와 통합**을, 유튜브를 보는 20대에게는 인권과 공정을 이야기 해야 한다.
- 숏폼(Short-form)으로 보는 북한 인권 콘텐츠 확산:
 - 20대의 높은 '**주민 분리 인식**(격차 48.5%p)'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문제를 다룬 1분 내외의 **숏폼 콘텐츠**(유튜브 쇼츠, 릴스)를 제작·배포해 대북 정책의 도덕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 대북 지원 블록체인 투명성 도입:
 - '**상호주의**(47.3%)' 요구가 높은 30대를 위해, 대북 지원 물자의 전달 경로와 배분 결과를 블록체인 기술처럼 투명하게 추적·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홍보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리스크 관리로서의 평화 비전 제시:
 - 통일 회의론이 높은 2040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대북 대화와 협상이 통일 지향이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필수적인 관리 과정임을 강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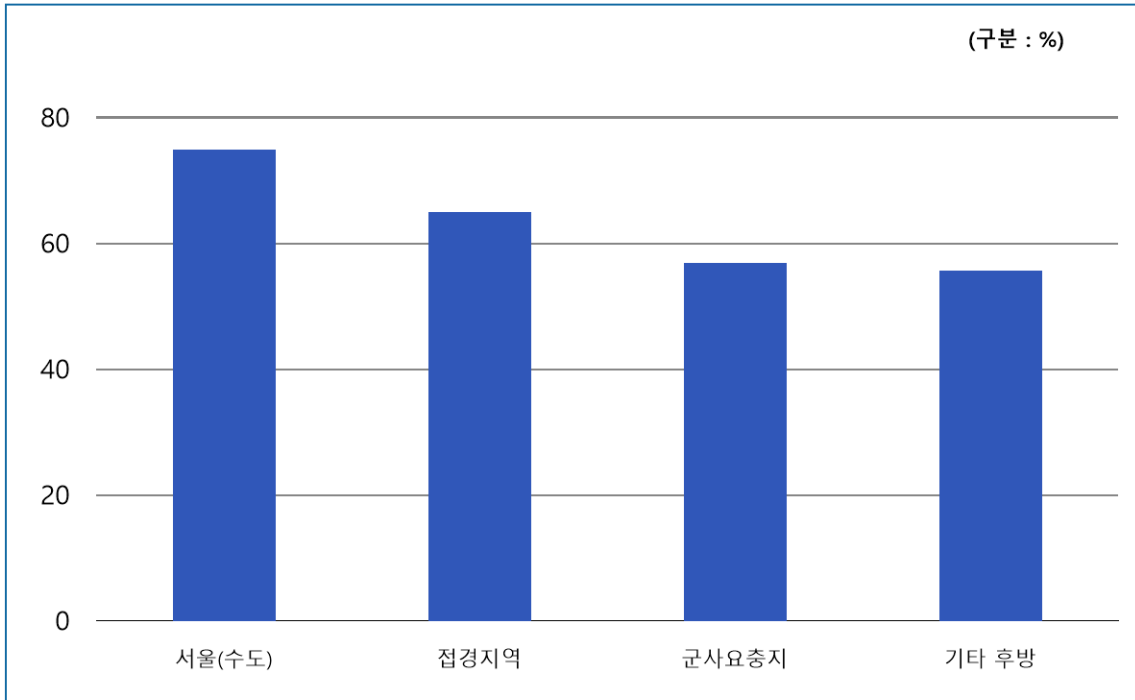
4. 전략적 공간 구획(접경/군 주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전략적 공간 구획 (PQ3)
 - 서울(수도): 수도권 방어의 핵심이자 인구 밀집 지역
 - 접경지역(인천/경기/강원):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전방 지역
 - 군사요충지(대구/경북): 후방 군수 기지 및 전략 자산(THAAD 등) 소재지
 - 기타 후방지역: 직접적 군사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위협 인식):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중 적대시 비율 (Q24 / 비율비교)
 - 분석 2 (불안감): 향후 2~3년 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중 가능성(높음) 인식 (Q30 / 비율비교)
 - 분석 3 (해법 선호):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중 '대화과 협상' 선호도 (Q33 / 비율비교)
 - 분석 4 (정책 수용 - 통일): 한반도 통일 필요성 중 통일 필요 선호 (Q36 / 비율비교)
 - 분석 5 (정책 수용 - 지원):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 중 '엄격한 상호주의' 요구도 (Q28 / 비율비교)

1) 위협 인식: 서울 시민의 높은 적대감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정권 적대시	74.8	64.9	56.8	55.6

그림 3-16 지역별 북한 정권 적대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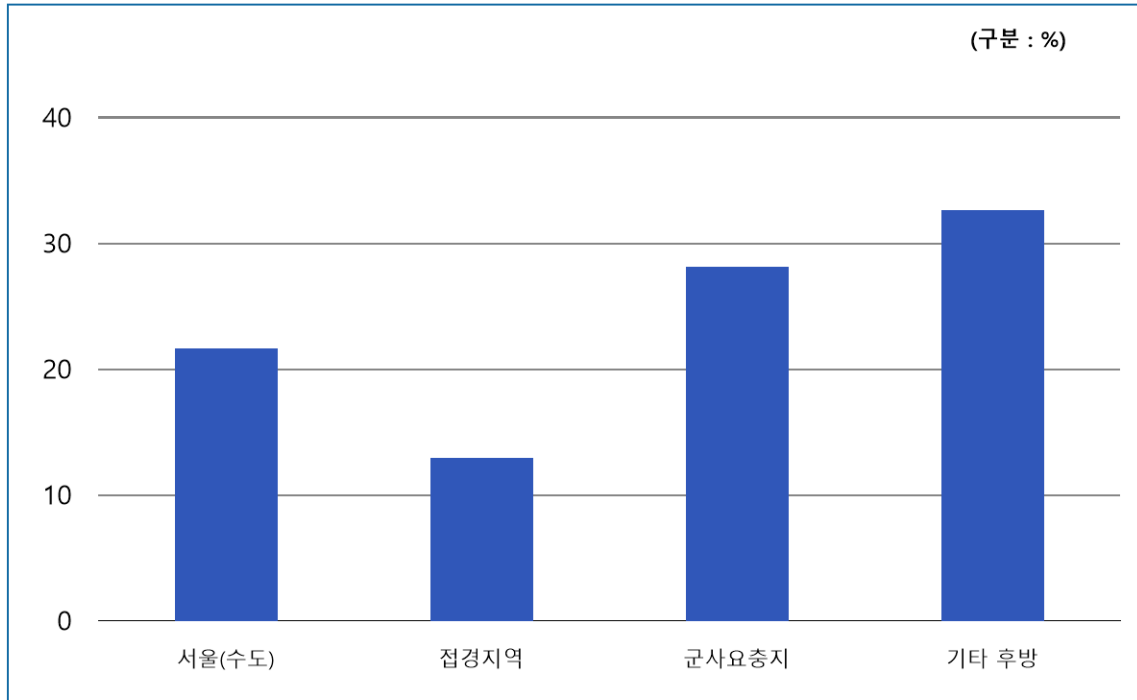


- 북한 정권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74.8%)**이 가장 높고, 오히려 **접경지역 (64.9%)**은 그보다 낮다. 군사요충지(56.8%)와 후방지역(55.6%)은 상대적으로 적대감이 덜하다.
-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직접 노출된 서울의 인구 밀집도와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적대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2) 불안감: 접경지역의 '안보 불감증' 역설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도발 가능성 높음	21.6	12.9	28.1	32.6

그림 3-17 지역별 북한 도발 가능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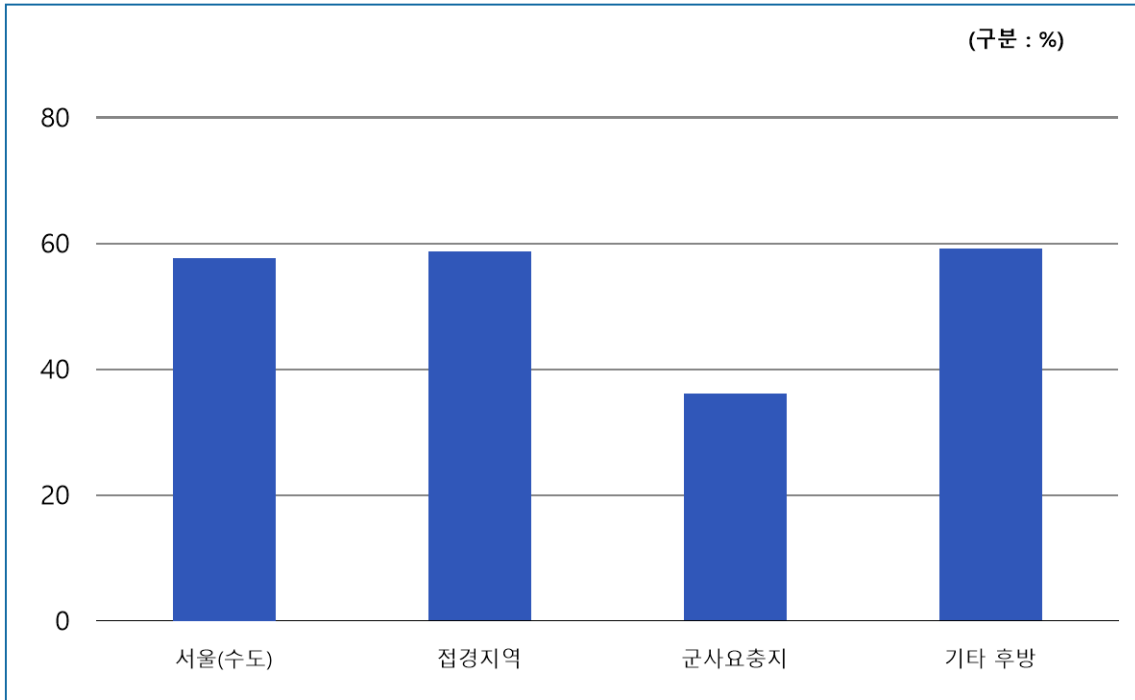


-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비율은 **기타 후방지역(32.6%)**과 **군사요충지(28.1%)**에서 높고, 실제 최전방인 **접경지역(12.9%)**에서 가장 낮다.
-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도발'을 상수로 받아들이는 반면, 후방 지역은 간헐적인 뉴스로만 위협을 접해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리의 역설**'이 나타난다.

3) 해법 선호: 보수적 요충지 vs 유연한 접경지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대화/협상 선호	57.6	58.6	36.0	59.0

그림 3-18 지역별 북한 대응 대화/협상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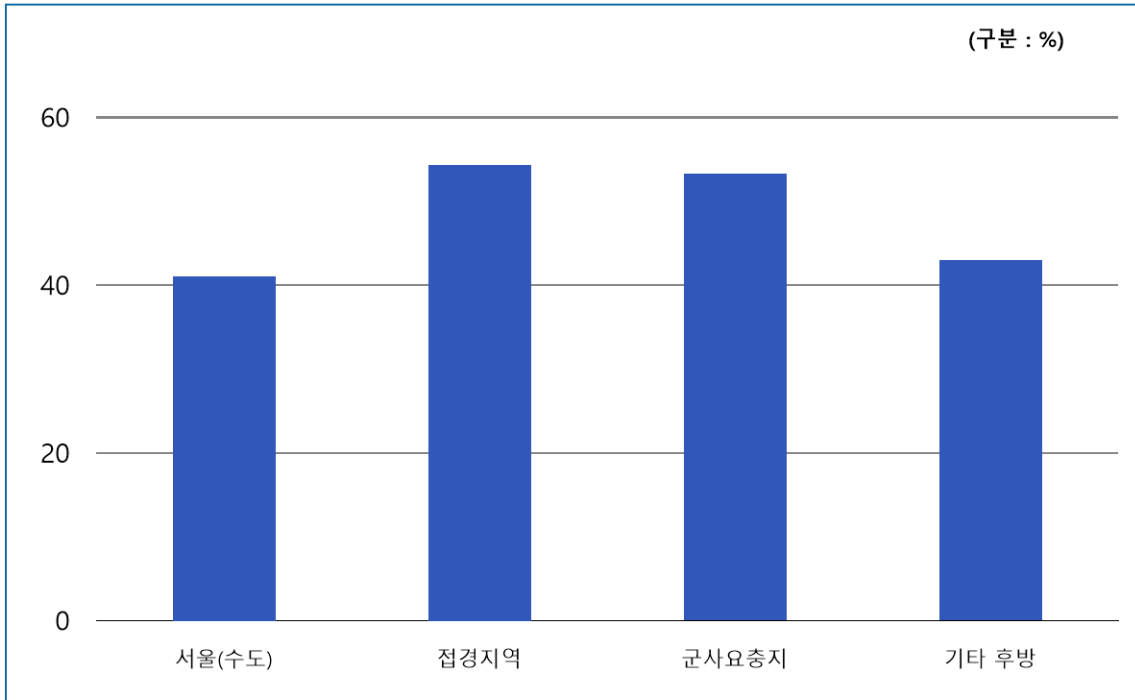


- **군사요충지**(대구/경북)는 '대화와 협상(36.0%)' 선호도가 극도로 낮고 강경책을 선호한다. 반면, **접경지역**(58.6%)과 **후방지역**(59.0%)은 과반수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
- 전쟁 발발 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강경 일변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를 원한다.

4) 정책 수용 - 통일: 접경지의 통일 갈망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통일 필요 공감	41.0	54.3	53.2	42.9

그림 3-19 지역별 통일 필요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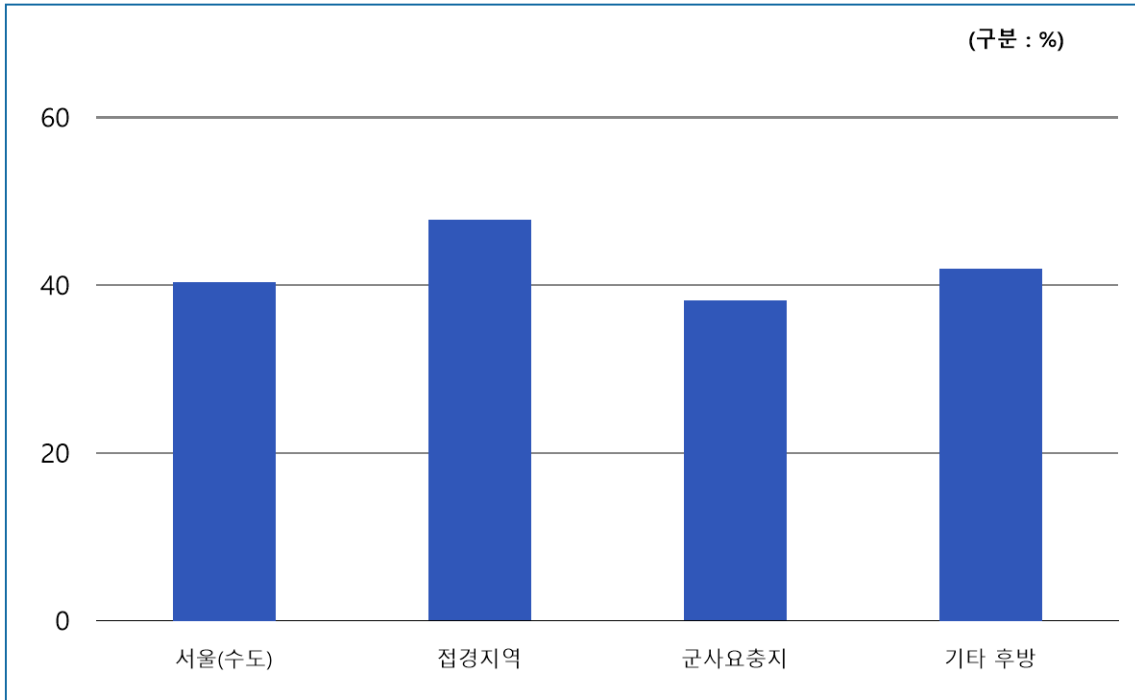


-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접경지역(54.3%)**과 **군사요충지(53.2%)**에서 높고, 서울(41.0%)과 후방(42.9%)에서 낮다.
- 분단의 지리적 제약(개발 제한, 통행 제한)을 직접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통일은 '이념'이 아닌 '생존과 발전의 기회'이다.

5) 정책 수용 - 지원: 접경지의 높은 상호주의 요구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상호주의 요구	40.3	47.7	38.1	41.9

그림 3-20 지역별 대북 지원 시 상호주의 요구 선호 차트



- 대북 지원 시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비율은 **접경지역(47.7%)**에서 가장 높다.
- 접경지역은 대화를 원하고(58.6%) 통일을 바라지만(54.3%),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퍼주기는 안 된다"는 **간간한 잣대(47.7%)**를 가지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북관을 가진 지역이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접경지역의 실용적 현실주의:
 - 접경지역 주민들은 도발 위협에는 덤덤하지만, 대화와 통일을 가장 원하며, 동시에 지원에는 엄격한 조건을 거는 등 가장 성숙하고 복합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
- 서울의 적대적 무관심:
 - 서울은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74.8%)은 가장 높지만, 정작 통일(41.0%)에는 가장 무관심하다. 이는 안보를 **나를 위협하는 귀찮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을 시사한다.
- 요충지의 이념적 강경함:
 - 대구/경북 등 군사요충지는 도발 불안감이 높고 대화보다는 압박을 선호하는 전형적인 **안보 보수** 성향을 보인다.
- 지역별 안보 온도차 고려:
 - 모든 국민이 북한을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 접경지는 **기회로**, 서울은 **위협**으로, 후방은 **불안**으로 인식한다. 정책 메시지도 지역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접경지역의 목소리 경청:
 - 가장 현실적인 대북관을 가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대화 선호 + 상호주의 원칙)이 대북 정책의 **중도적 균형점**이 될 수 있다.
- 접경지역 평화경제 특구 비전 구체화:
 - 통일 열망이 높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막연한 통일 담론 대신, 남북 긴장 완화가 가져올 **규제 완화와 관광/물류 허브화** 등 구체적인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정책 지지도를 결집해야 한다.
- 서울 안보 포럼 개최:
 - 적대감은 높으나 통일에 무관심한 서울 시민들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통일이 서울의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루는 도시형 안보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 찾아가는 안보 설명회:
 - 실제 위협보다 과도한 불안감(32.6%)을 느끼는 후방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 전문가가 지역을 방문하여 **"우리의 방어 태세는 완벽하다"**는 팩트를 전달하고 과도한 공포를 해소해 주는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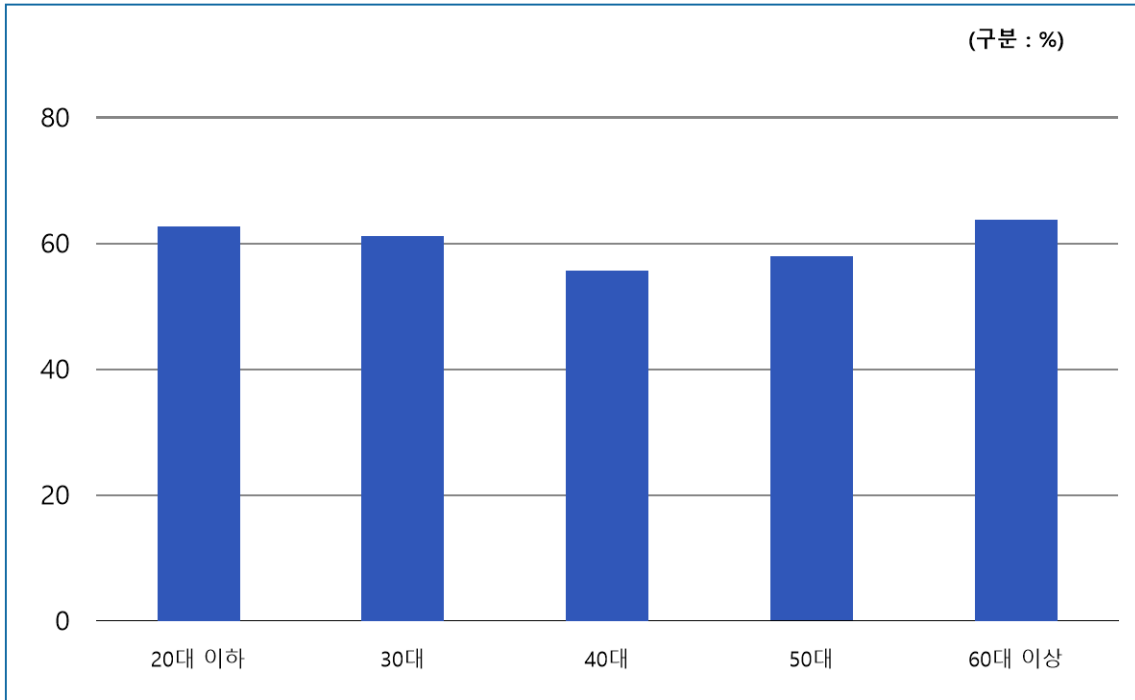
5. 장기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민감도 지수' 개발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프레임: '정책 민감도'를 5가지 차원으로 정의
 - 지표 1 (위협 민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인식 중 적대적 인식 비율 (Q24 / 비율비교)
해석: 높을수록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강하게 인식함.
 - 지표 2 (공정성 민감도):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 방향 중 '엄격한 상호주의' 요구 비율 (Q28 / 비율비교)
해석: 높을수록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공정성 가치에 민감함.
 - 지표 3 (변화 저항성): 한반도 통일 방식 중 '장기간 현상유지' 선호 비율 (Q40 / 비율비교)
해석: 높을수록 통일 등 급격한 변화에 대한 피로감/거부감이 큼.
 - 지표 4 (리스크 민감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방안 중 '대화과 협상' 선호 비율 (Q33 / 비율비교)
해석: 높을수록 전쟁/충돌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함.
 - 지표 5 (핵 민감도):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안보 위협 정도 중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비율 (Q32 / 비율비교)
해석: 높을수록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체감함.

1) 위협 민감도: 20대와 60대의 '적대감 동조화'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위협 민감도	62.6	61.1	55.6	57.8	63.7

그림 3-21 연령별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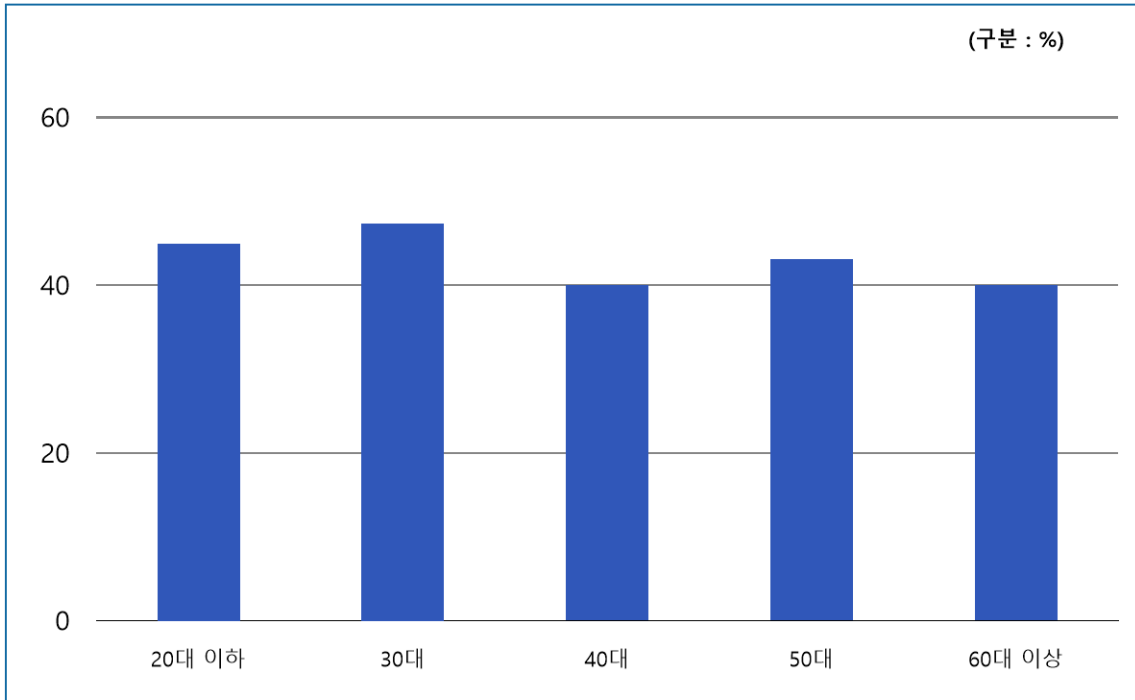


-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감(위협 민감도)은 **60대 이상(63.7%)**과 **20대 이하(6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40대(55.6%)와 비교해 U자형 곡선을 그린다.
- 안보 보수층인 노년층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층도 북한 정권을 명확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공정성 민감도: 30대의 '등가교환' 원칙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정성 민감도	44.9	47.3	39.9	43.0	39.9

그림 3-22 연령별 대북 지원 시 엄격한 상호주의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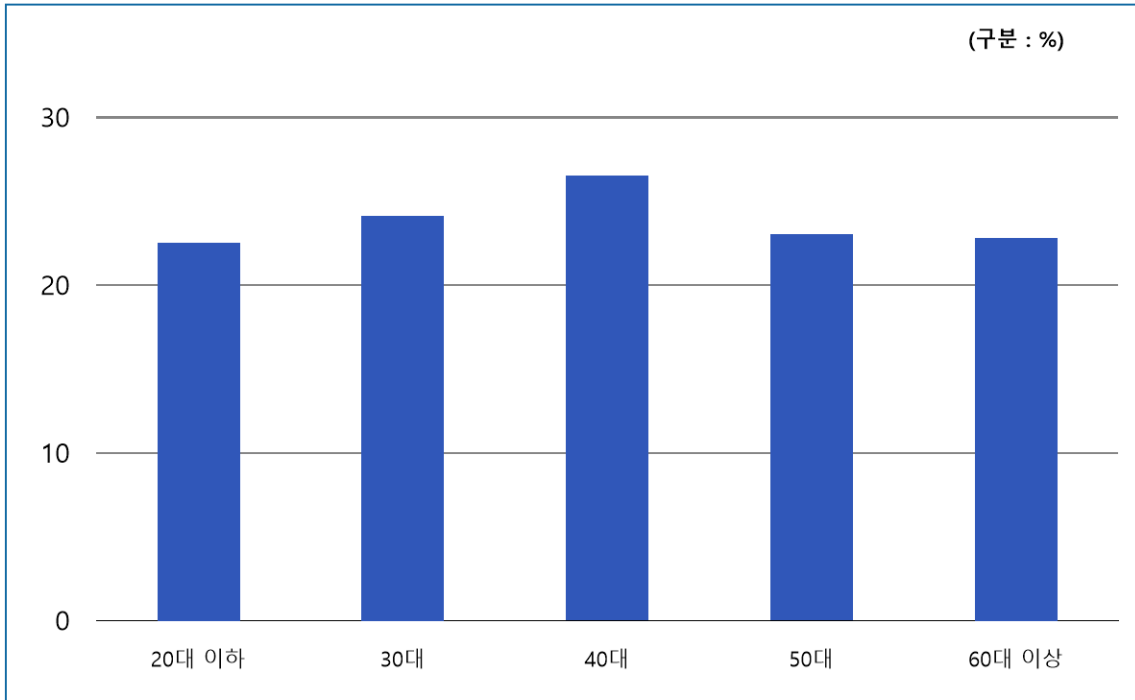


- 대북 지원의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공정성 민감도는 **30대(47.3%)**와 **20대(44.9%)**에서 가장 높다.
- 청년 세대는 대북 정책을 '민족적 특수성'이 아닌 '국가 간 거래의 공정성' 관점에서 바라보며, 일방적 지원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다.

3) 변화 저항성: 40대의 '현상유지' 선호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변화 저항성	22.5	24.1	26.5	23.0	22.8

그림 3-23 연령별 현상 유지 선호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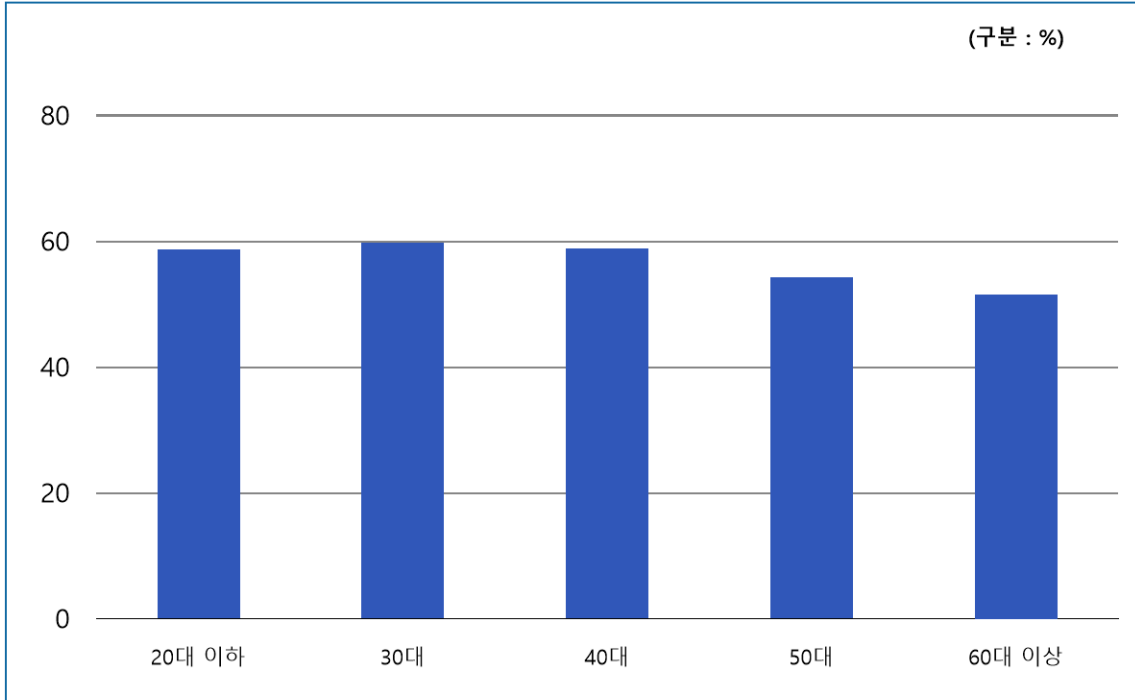


- 통일이나 급변 사태보다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는 변화 저항성은 **40대(26.5%)**에서 가장 높다.
- 경제 활동과 양육 부담이 큰 40대는 통일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가장 기피하는 '안정 지향적' 성향을 보인다.

4) 리스크 민감도: 청년층의 '안전 제일주의'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리스크 민감도	58.6	59.6	58.7	54.1	51.5

그림 3-24 연령별 북한과의 대화/협상 선호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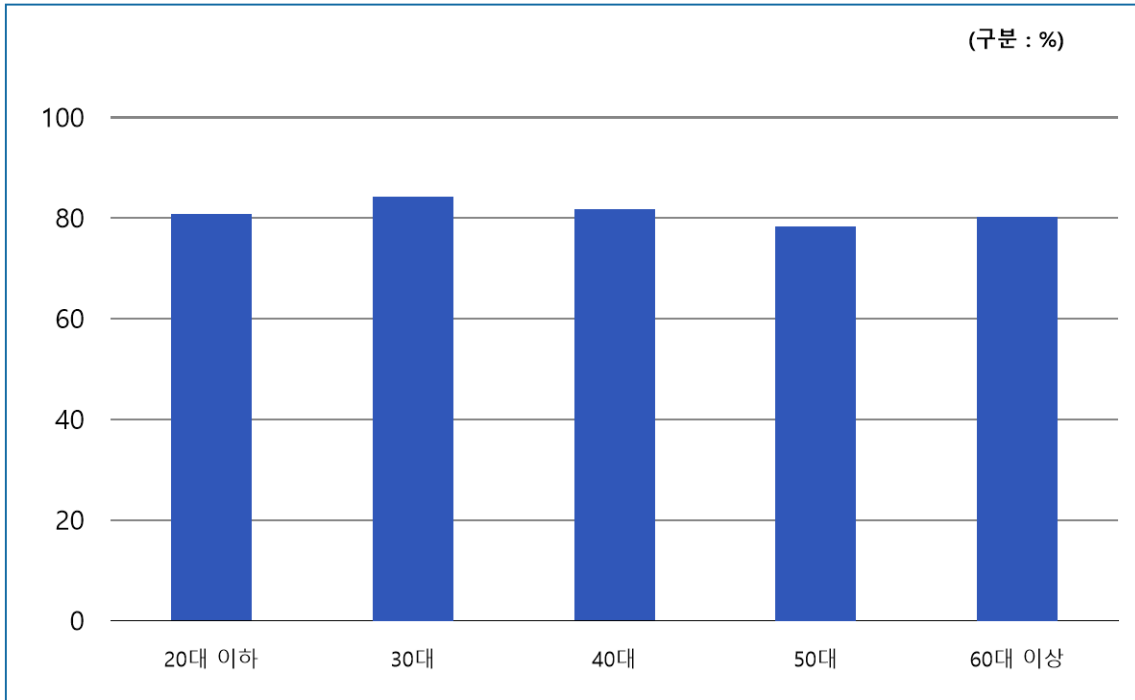


- 대화와 협상을 선호하는 리스크 민감도는 30대(59.6%)와 20대(58.6%)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60대 이상(51.5%)은 상대적으로 낮다.
-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정권을 가장 적대시하는(지표 1) 2030세대가 대화를 가장 선호한다. 이는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고도의 현실주의적 판단이다.

5) 핵 민감도: 전 세대의 '핵 공포' 공유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핵 민감도	80.6	84.2	81.6	78.3	80.2

그림 3-25 연령별 북한의 핵위협 인식 차트



- 북핵 위협 인식은 전 세대에서 80% 내외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30대(84.2%)**가 핵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북핵 문제는 세대 간 이견이 없는 '절대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30대의 복합적 현실주의:
 - 30대는 핵 위협(84.2%)과 공정성(47.3%)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전쟁 리스크(59.6%)는 가장 회피하고 싶어한다. 즉, "**북한은 싫고 핵은 무섭지만, 전쟁은 안 되니 대화로 관리하되, 퍼주지는 말라**"는 가장 까다롭고 복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 20대의 냉정한 분리:
 - 20대는 정권 적대감(62.6%)이 높지만 대화 선호도(58.6%)도 높다. 이는 북한을 **타도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라 볼 수 있다.
- 40대의 안정 희구:
 - 40대는 위협 인식이나 공정성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현상 유지(26.5%) 욕구는 가장 크다. 이들에게 통일은 리스크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 정책의 딜레마와 기회:
 - 강경 대응(적대감)과 **대화**(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요구하는 2030세대의 모순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 있는 포용 전략**이 필요하다.
- 공정성이 대화의 전제 조건:
 -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되, 그 과정이 투명하고 상호주의적이어야만 청년 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안심 & 공정 패키지:
 - 2030세대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되(안심), 대화나 지원 시에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공정)을 데이터와 프로세스로 증명하는 투트랙 소통이 필요하다.
- 한반도 리스크 관리 보고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40대를 위해, 정부의 대북 정책이 통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관리 행위**"임을 강조하는 경제 안보 중심의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 북핵 대응 3단계 로드맵 제시:
 - 전 세대의 높은 핵 민감도(80% 이상)를 고려하여, **[억제 → 단념 → 대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북핵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1. 대북 인식 심층 분석 5대 지수 개발

1) 북한 정권-주민 분리 인식 지수 (Regime-People Separation Index, RPSI)

• 정의: 북한 정권은 적대시하되 주민은 포용하는 '인식의 분리도 (Decoupling)' 측정.

• 구성 변수:

• Q24 (북한 정권 및 북한군 인식), Q25 (북한 주민 인식) 동일 적용:

- 1 (적대 대상) → 0점
- 2 (협력), 3 (지원) → 100점
- 4 (잘 모름) → 50점 (중립 처리)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RPSI = \frac{(\text{주민 호감도 score} - \text{정권 호감도 score}) + 100}{2}$$

※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권은 싫지만 주민은 똬자"는 분리 인식이 뚜렷함.

(50점은 동일시, 50점 미만은 정권보다 주민을 더 싫어함-드문 케이스)

2) 대북 안보 강경화 지수 (Security Policy Hardline Index, SPHI)

• 정의: 대화/협상보다 '제재/군사적 압박/자체무장'을 선호하는 매파(Hawk) 성향 강도.

• 구성 변수:

• Q33 (북핵미사일 해결방안):

- 1,2,3 (대화/협상) → 0점 / 4~8 (동맹/제재/무력/핵무장) → 100점

• Q28 (정부 지원정책):

- 1 (인도적/무조건) → 0점, 2 (병행) → 33점, 3 (상호주의) → 66점, 4 (절대안됨) → 100점

• Q29 (북한과의 군사력비교):

- 1 (한국우위) → 0점 ... 5 (북한우위) → 100점 (위협인식이 강경책 지지로 연결된다는 가정)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SPHI = (Q33_{conv} \times 0.5) + (Q28_{conv} \times 0.3) + (Q29_{conv} \times 0.2)$$

3) 통일 수용성 및 효능감 지수 (Unification Receptivity Index, URI)

- 정의: 통일의 당위성분만 아니라 **개인적/국가적 이익** (효능감)까지 고려한 실질적 통일 지지.

- 구성 변수:

- Q36 (통일 필요성), Q37 (통일의 국가이익), Q38 (통일의 개인이익)
모두 1 (매우긍정) ~ 4 (부정) 척도
- 1 → 100, 2 → 66.6, 3 → 33.3, 4 → 0
- Q36의 5 (모름) → 50점 처리

- 개발 지수 공식 (가중치 적용):

$$URI = (Q36_{rev} \times 0.3) + (Q37_{rev} \times 0.3) + (Q38_{rev} \times 0.4)$$

4) 북한 비핵화 불신 지수 (Denuclearization Skepticism Index, DSI)

- 정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고 핵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부정적 전망**의 강도.

- 구성 변수:

- Q35 (북핵 폐기의사): 1 (있다) ~ 5 (없다) → 정방향 코딩 (x-1) X 25
- Q34 (북핵 사용가능성): 1 (높다) ~ 5 (없다) → 역방향 코딩 (5-x) X 25
- Q30 (북 무력 도발가능성): 1 (높다) ~ 4 (낮다) → 역방향 코딩 (4-x) X 33.3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DSI = \frac{Q35_{score} + Q34_{score} + Q30_{score}}{3}$$

5) 통일 비용 감수 지수 (Unification Cost Tolerance Index, UCTI)

- 정의: 통일 비용을 실제로 지불할 의사와 통일의 시급성을 결합한 **실행 의지**.

- 구성 변수:

- Q41 (통일비용 지불의사):
 - 1 (적극) → 100, 2 → 75, 3 → 50, 4 → 25, 5(전혀없음) → 0
- Q39 (통일시기):
 - 1 (5년내) → 100,
 - 2 (10년) → 80,
 - 3 (20년) → 60,
 - 4 (30년) → 40,
 - 5 (30년후) → 20,
 - 6 (불가능) → 0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UCTI = (Q41_{score} \times 0.7) + (Q39_{score} \times 0.3)$$

6) 지수 결과 제시

순위	지수명	Mean	SD	중위수	설명
1	북한 정권-주민 분리 인식 지수, RPSI	69.58	25.81	50.00	정권은 싫지만 주민은 포용하려는 '분리 대응' 인식이 뚜렷함
2	북한 비핵화 불신 지수, DSI	56.00	14.41	52.78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다소 우세함
3	대북 안보 강경화 지수, SPHI	46.64	27.77	35.00	강경책(제재/무력) 선호도는 50점 미만으로, 아직은 '대화/신중론'이 우위
4	통일 수용성 및 효능감 지수, URI	46.21	21.46	43.33	통일의 당위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중간 이하'로 떨어짐 (통일 회의론)
5	통일 비용 감수 지수, UCTI	42.79	19.15	41.00	실제 비용 지불 의사는 '매우 낮음' (경제적 현실주의)

7) 결과 분석

- 지수에 대한 해석: RPSI(정권-주민 분리)만 70점대로 평창해 있는 반면, 나머지는 40~50점대로 수축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의 대북 인식에서 높은 점수는 "주민은 불쌍하다"는 도덕적 동정심분임을 시사한다. 안보 불안(DSI)과 통일 의지(URI, UCTI) 모두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통일 동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임을 시사한다.

그림 3-26 대북 인식 심층 분석 종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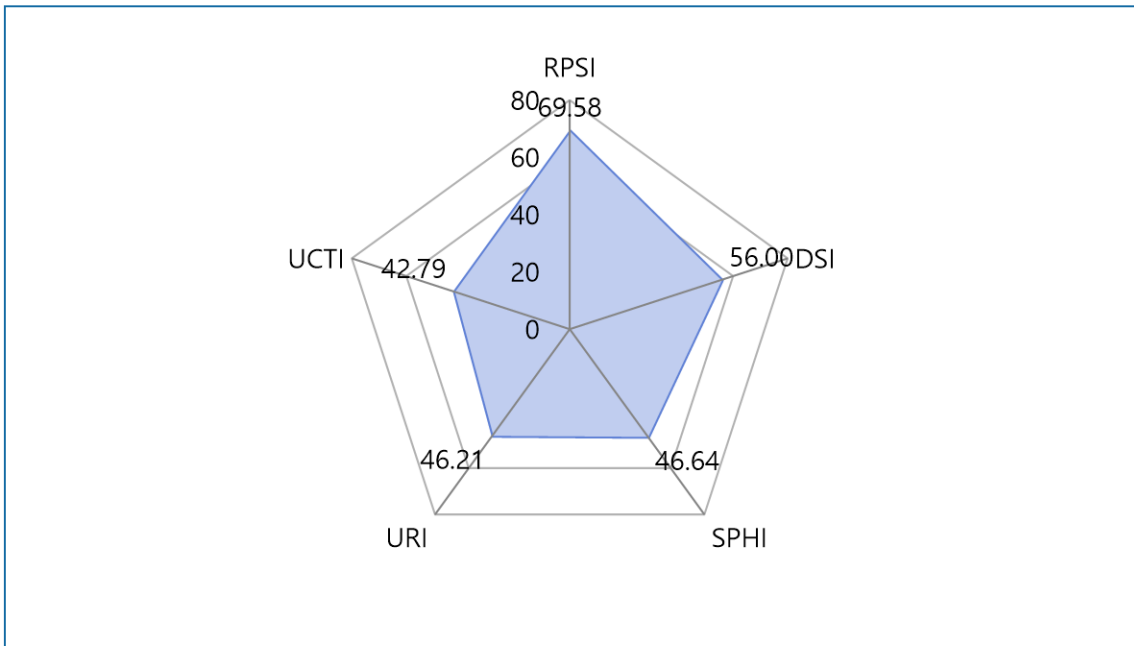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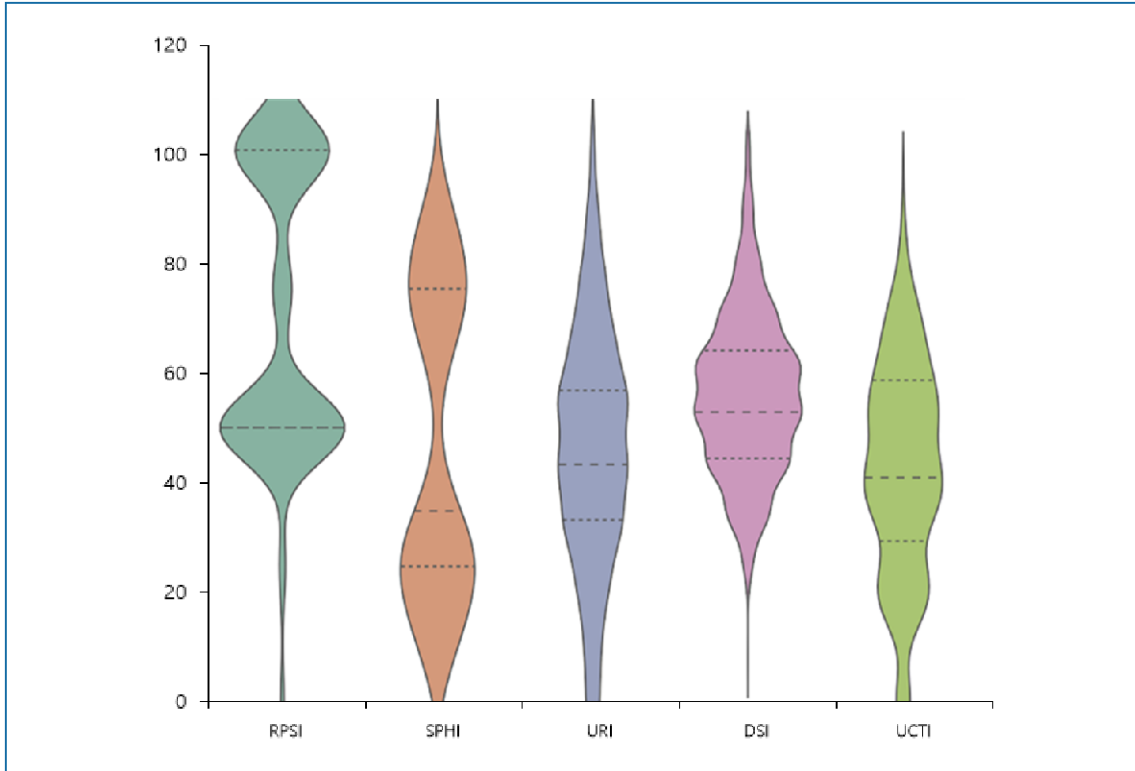


그림 3-27 대북 인식 심층 분석에 대한 분포 분석



- 분포 분석:
 - SPHI(강경화)가 20~40점의 넓은 하단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아직 전쟁/극단적 대결보다는 **신중론/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RPSI(분리인식)는 상단 집중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보는 성숙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포상으로도
- 분포 분석:
 - SPHI(강경화)가 20~40점의 넓은 하단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아직 전쟁/극단적 대결보다는 **신중론/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RPSI(분리인식)는 상단 집중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보는 성숙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분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8)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전략적 분리 인식의 고착화 (RPSI 69.6점의 군사적 의미):
 - 국민들은 북한을 제거해야 할 적(정권)과 구출해야 할 피해자(주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는 대적관 교육이나 대북 심리전 수행에 있어 "**주적은 북한군과 정권이니 주민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관리된 불신과 제한적 강경론:
 -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접었으나(DSI 56점), 이것이 즉각적인 선제타격이나 전면전 불사(SPHI 46.6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국민이 군에게 **압도적 응징보다는 확실한 억제와 상황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통일 담론의 안보 동력 상실 (URI 46.2점, UCTI 42.8점):
 -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감성적 구호는 더 이상 국방력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지 못한다. 특히 비용 감수 의지가 매우 낮아, 통일을 전제로 한 국방 예산 투입이나 전력 증강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 2030세대의 안보 무관심 경고등 (세대 간 이격 심화):
 - 20대의 낮은 통일 수용성과 비용 지불 의사는, 이들이 군 복무의 목적을 조국 통일에서 찾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초급간부 및 용사들의 정신전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 자체 핵무장 잠재 수요의 존재 (상관관계 분석):
 - 비핵화 불신(DSI)이 높을수록 강경책(SPHI)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관성(Corr=0.54)은, 확장 억제 신뢰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경우 국민 여론이 급격히 **독자 핵무장**으로 쏠릴 수 있는 휘발성을 내포한다.
- 대북 정보작전(IO)의 타겟팅 정교화 기회:
 - 국민들의 높은 RPSI 지수는 대북 전단, 확성기 등 심리전 수단 운용 시 **북한 인권과 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는 콘텐츠가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최적의 접근법임을 방증한다.
- 철통 방어 내러티브의 유효성:
 - 국민들이 강경 대응보다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점(Moderate SPHI)은, 군사적 대응 개념을 보복/응징보다는 **방호 능력 강화**로 포괄할 때 예산 확보와 여론 지지가 용이함을 시사한다.

- 정신전력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030 장병들에게 민족적 당위성(통일)을 강조하는 교육은 효용이 다했음을 보여준다. 대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지키기 위해(실리적 안보관)** 북한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환해야 전투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
- 회색지대(Gray Zone) 도발에 대한 취약성:
 - 국민은 전면전은 반대하지만 북한 정권은 싫어한다. 이 간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등 저강도 도발에 대해 군이 과도하게 대응하기도, 무시하기도 어려운 딜레마를 조성한다. 비군사적·비물리적 대응 옵션 개발이 시급하다.
- 통일 대비 전력보다 비대칭 위협 상쇄 전력 우선:
 - 통일 비용(UCTI)에 대한 거부감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재래식 통일 대비 전력(대규모 지상군)보다는, 첨단 감시정찰(ISR) 및 정밀타격 자산 등 **비대칭 상쇄 전력** 위주의 군 구조 개편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여론적 근거가 된다.

라. 정책대안 제시

1. 문제의 구조: 국민의 대북 인식 변화를 반영한 평화공존 정책 추진의 필요성

- 현재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에 놓여 있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은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역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쉽게 이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와 같은 경색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갈등과 대립, 긴장 국면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남북 간 소통 채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우발적 충돌이나 오판에 따른 위기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과거 남북 간 일정 수준의 대화와 교류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최소한의 조정 메커니즘이 존재했던 시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 2025년 범국민 안보의식 및 대북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북한 정권과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여전히 강한 불신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은 세대와 이념 성향을 초월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이러한 위협 인식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응답자 다수는 군사적 역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긴장 고조와 충돌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대북정책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것보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또한 통일을 대북정책의 직접적 목표로 상정하는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통일 담론보다는 **안정적 상황 관리와 실질적 위협 감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통일 수용성(46.21)과 비용 감수 의지(42.79)가 모두 40점대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족이나 당위론 중심의 통일론이 더 이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의 초점을 통일보다는 현실적 평화 관리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국민은 통일이라는 목표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통일을 대북정책의 직접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한반도의 긴장 관리라는 당면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남북대화 재개, 긴장 완화, 평화공존 토대 마련 등과 같은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대안 A: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 강화

- 첫째, 대북 억지 전략을 부정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를 정책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억지력은 여전히 필수적 요소이지만, **억지만으로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 이에 따라 대북정책은 군사적 억지를 기반으로 하되, 우발적 충돌과 위기 확산을 통제하는 상황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정교하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적 판단 체계를** 포함한다. 억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이자, 동시에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억지가 정책의 목적이 될 경우, 대북정책은 긴장 고조의 악순환에 갇힐 위험이 있다. 반대로 억지를 상황 관리의 수단으로 재정의할 경우, 군사적 안정성과 정책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3. 정책대안 B: 군사·비군사 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중층적 관리 체계 구축

- 둘째, 대북 위협을 군사적 도발에 한정하지 않고,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심리전, 회색지대 도발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한 중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은 전통적 군사 충돌보다는 저강도·비대칭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간 군사·정보·외교·사이버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위협 유형별 대응 원칙과 조치 수단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기 발생 시 과잉 대응이나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대응 메시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위협 관리 체계가 군사 영역에만 국한될 경우, 대북 위협은 정책 사각지대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층적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경우, 대북정책은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정책대안 C: 대화와 접촉을 통한 위기 완화 및 불확실성 관리 전략

- 셋째,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비핵화의 즉각적 성과를 기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기관리와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국민은 대화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실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 이에 따라 **남북대화는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 충돌 방지, 정보 오판 및 오해 최소화** 등 구체적 관리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대화의 성공 여부 역시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가 아니라, 위기 발생 빈도 감소와 긴장 관리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 대화를 성과 중심으로만 평가할 경우, 정책은 반복적인 실패와 종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대화를 위기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대북정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5. 정책대안 D: 인권·정보접근·인도주의 정책의 지속 추진

- 넷째, 대북정책에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인도주의·인권·정보 접근을 연계한 관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방적 압박이나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안정과 인도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접근이다.
-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 제기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대북정책을 단기 이벤트 중심에서 벗어나 구조적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인도주의와 인권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경우, 대북정책은 장기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이들 요소가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대북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확보할 수 있다.

6. 결론

- 본 정책제안은 국민의 북한 인식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공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 실현 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 국민 다수가 북한 정권과 군사적 위협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역지력을 전제로 한 안정적 상황 관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동시에 조건과 절차가 충족된다면 적극적인 대화 재개 노력과 관여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이는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을 관리함으로써 전쟁 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제 4 장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 제고 방안**

제4장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 제고 방안

-요약문-

-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단순한 호감도가 아니다. 그것은 막대한 국방 예산을 부담하고 병역 의무를 기꺼이 이행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 신뢰도를 '하드웨어 신뢰(전력·억제력)'와 '소프트웨어 신뢰(운영·문화)'로 구분하여 진단했다.
- 분석 결과, 우리 군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국민에게 높은 평가와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직 문화의 개방성, 사법 절차의 투명성, 장병 인권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신뢰의 이중적 괴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국민들은 "우리 군의 힘은 믿지만, 그 힘을 운용하는 시스템은 믿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결국 국방 예산 증액이나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지불 의사)를 제약하는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뢰를 가르는 결정적 균열

- 이러한 신뢰의 괴리는 영역별, 세대별, 경험별로 뚜렷한 단층선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 영역별 괴리다.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군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불신한다. 이는 군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더라도, 내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조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 둘째, 세대 간 인식의 차이다. 과거 기성세대가 '애국심'과 '희생'을 당연한 가치로 여겼다면, 현재 병역 이행의 당사자인 2030세대는 '공정성'과 '합리적 보상'을 신뢰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이들에게 열악한 처우와 불투명한 일처리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군이라는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 셋째, 경험의 역설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경험하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하지만, 군의 경우 오히려 복무 경험이 소프트웨어(복지·인권)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급식, 피복, 주거 등 장병들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의 수준이 사회적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 군 복무 경험은 오히려 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기제가 된다.

‘강한 군대’에서 ‘존경받는 군대’로의 전환

- 종합하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투자는 무기 도입이 아니라 ‘무너진 소프트웨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방 정책의 무게 중심은 ‘하드웨어 증강’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과감히 이동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첫째, 투명성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사고 발생 시 사실 관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 둘째, 확실한 보상 체계의 구축이다. ‘장병 복지 예산 쿼터제’를 도입하여 국방비가 늘어나면 장병들의 의식주와 처우도 자동으로 개선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이는 국방비 증액이 곧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효능감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동의를 끌어내는 핵심 기제가 될 것이다.
- 셋째, 지역 상생의 관점 전환이다. 군사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 논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소통 협의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소프트웨어)’이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 군은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가.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

1. 국방정책 인식 및 군 신뢰도의 개념적 정의

-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단순한 호감도 차원이 아닌, 국방 예산을 부담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정책적 지지 기반으로 정의한다. 본 장은 우리 군이 첨단 무기체계 확보 등 ‘하드웨어(전력)’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와 사법 절차의 투명성 등 ‘소프트웨어(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신뢰의 이중적 괴리’ 현상을 진단하는 데 주력한다.
-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신뢰’는 대북 억제 능력과 강한 군대 건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신뢰’는 군 조직의 청렴성, 개방성, 혁신성 등 운영 시스템에 대한 평가로 정의한다. 본 분석은 이러한 두 차원 간의 격차가 국방 예산 증액 및 방위력 개선 사업(Q63)에 대한 국민의 지불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의 전제 조건이 ‘신뢰 회복’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2. 기초통계분석 개요

- 상기 정의된 개념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설계된 ‘다섯 차원’을 적용하여 군 신뢰도 저하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 첫째, 세대 간 인식 격차 차원에서는 ‘강한 군대’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군 내 ‘인권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을 신뢰의 척도로 삼는 2030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여, 세대별로 상이한 신뢰 형성 기제를 파악한다.
- 둘째, 정치적 태도 상호작용 차원에서는 군 관련 사건·사고 처리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발생하는 ‘불신의 전이’ 현상을 진단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을 확인한다.
- 셋째, 정서 및 정보환경 차원에서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보다 유튜브 등 사설 미디어를 더 신뢰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석하고, 폐쇄적인 소통 방식이 은폐 의혹 등 부정적 정서를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 넷째, 전략적 공간 구획 차원에서는 군부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규제와 소음의 원인으로 인식하는지 ‘지역 상생 체감도’를 분석하여 민-군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 다섯째, 정책 민감도 차원에서는 군 내 사고 발생 시 지지율이 급락하는 ‘신뢰의 취약성’을 측정하여 예방적 위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지수 개발 개요

- 추상적인 '신뢰' 개념을 정량화하여 국방 운영 혁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고유한 '국방 신뢰도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 이 지수는 전반적인 군 신뢰도(Q42)와 조직 이미지 평가, 그리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인식 변수를 종합하여 산출된다. 지수 분석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군의 전력(하드웨어) 증강 성과와 조직 운영(소프트웨어) 평가 간의 점수 격차를 수치로 시각화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분야(예: 사법 투명성, 인권, 소통)'부터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있다.

나. 기초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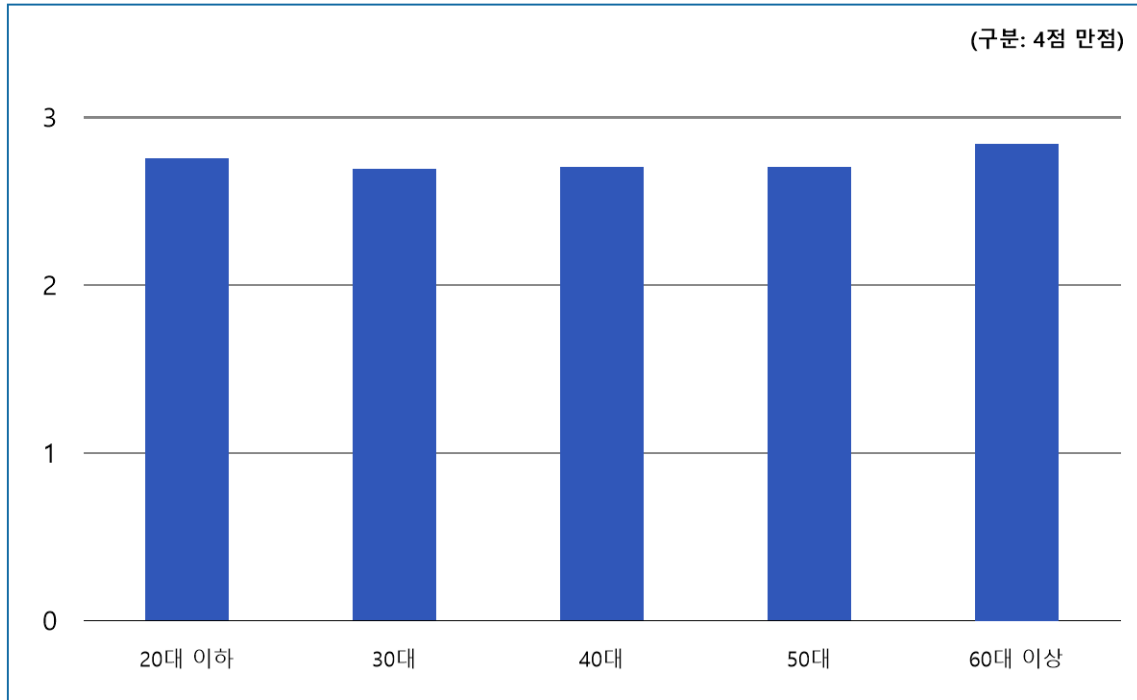
1. 세대 간 인식 격차

- 분석 대상: 일반 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신뢰 수준):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Q42 / 평균 비교)
 - 분석 2 (불신 원인):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Q43_1 / 교차분석)
 - 분석 3 (공정성 인식):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평균비교)
 - 분석 4 (처우 개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대우 (Q46 / 교차분석)
 - 분석 5 (예산 수용성):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 (Q59 / 교차분석)

1) 신뢰 수준: “30대의 신뢰도 최저 기록”

구분 (4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 신뢰도	2.75	2.69	2.70	2.70	2.84

그림 4-1 연령별 군 신뢰도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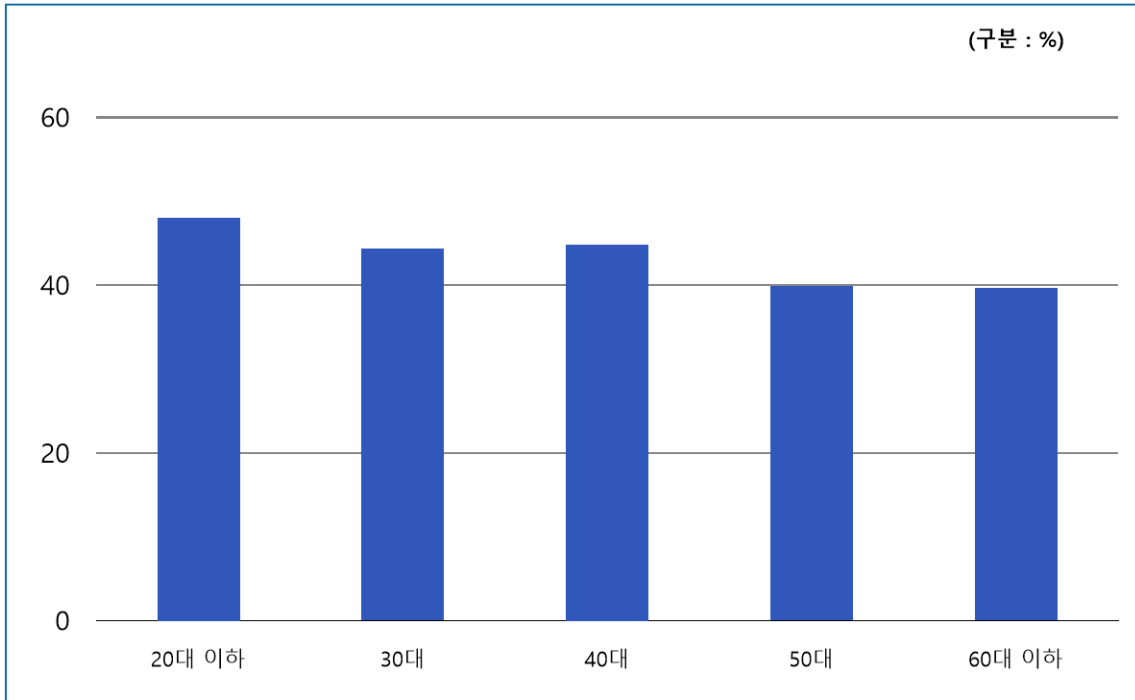


- 군 신뢰도는 전 세대에서 2점대에 있었다. 특히 군 복무 기억이 생생한 30대(2.69점)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여 예비군 세대의 신뢰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군 복무 기억이 생생한 30대(2.69점)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여 **예비군 세대의 불신**이 심각함을 시사한다.

2) 불신 원인: “청년층의 ‘부조리 척결’ 요구”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부조리/관행 척결	48.0	44.3	44.8	39.8	39.6

그림 4-2 연령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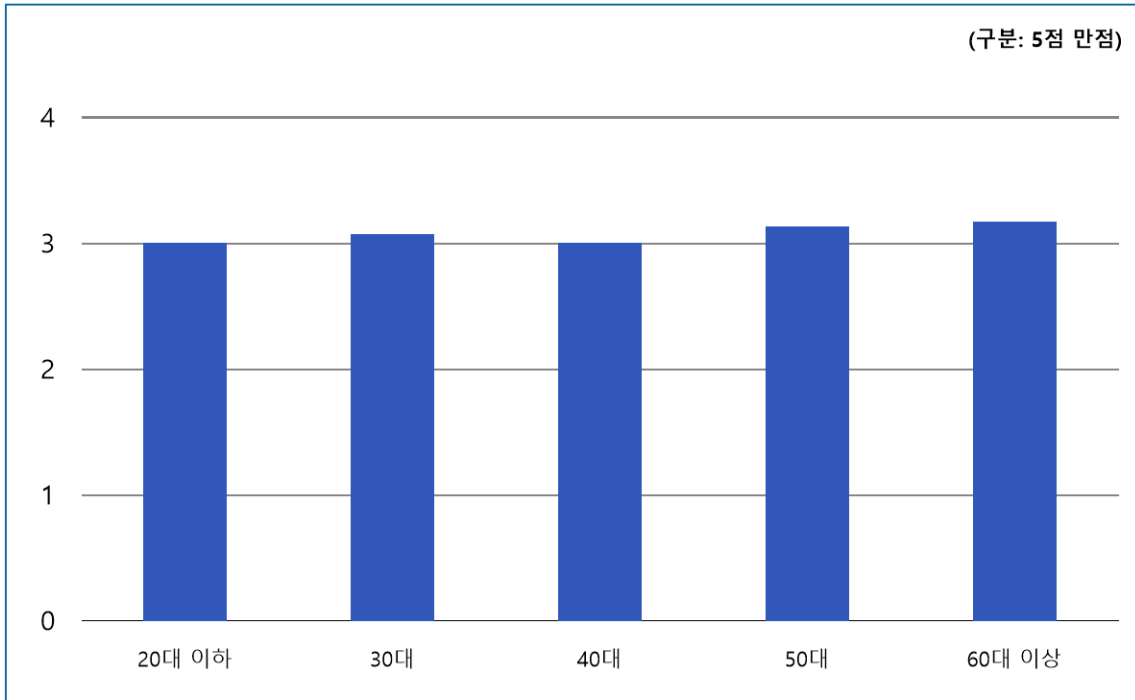


- 모든 세대에서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압도적 1위 과제로 보고된다. 특히 20대(48.0%)의 요구가 가장 거세어, 군 내부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이 청년 불신의 핵심 원인임을 시사한다.

3) 공정성 인식: “당사자(20대)와 부모(40대)의 불만”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징병제 공정성	3.00	3.07	3.00	3.13	3.17

그림 4-3 연령별 징병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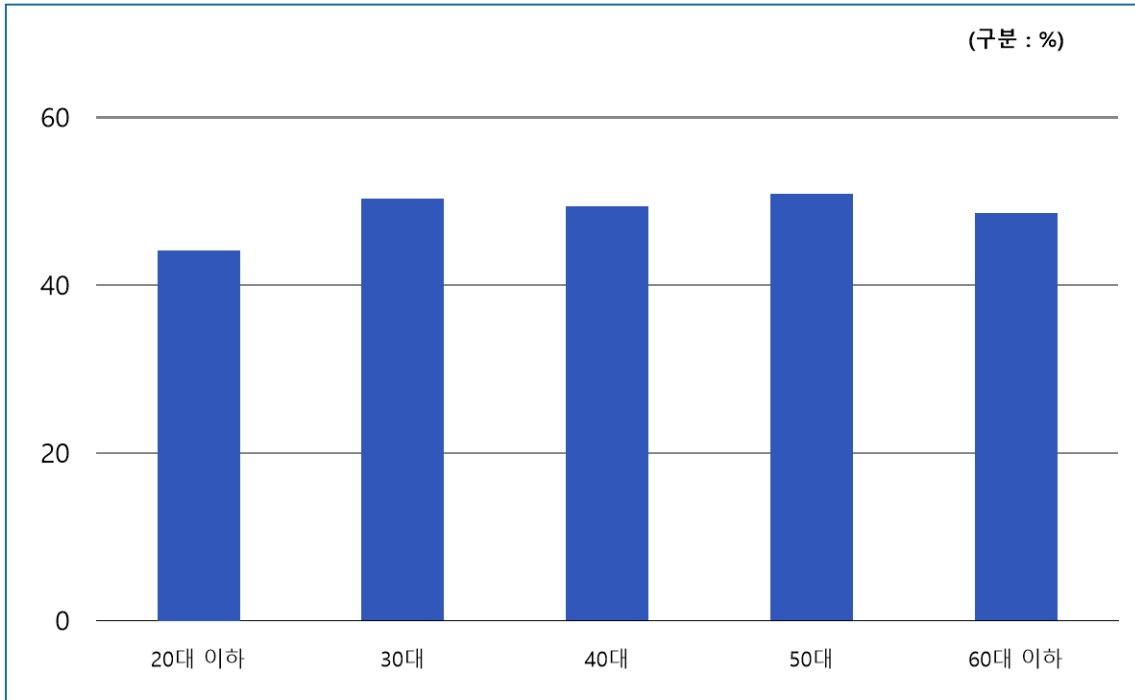


- 현역 복무 당사자인 20대(3.00점)와 그들의 부모 세대인 40대(3.00점)가 징병제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징병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세대일수록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

4) 처우 개선: “처우 개선에는 범국민적 동의”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처우 높여야 한다	44.1	50.2	49.3	50.8	48.5

그림 4-4 연령별 군인들에 대한 처우 상승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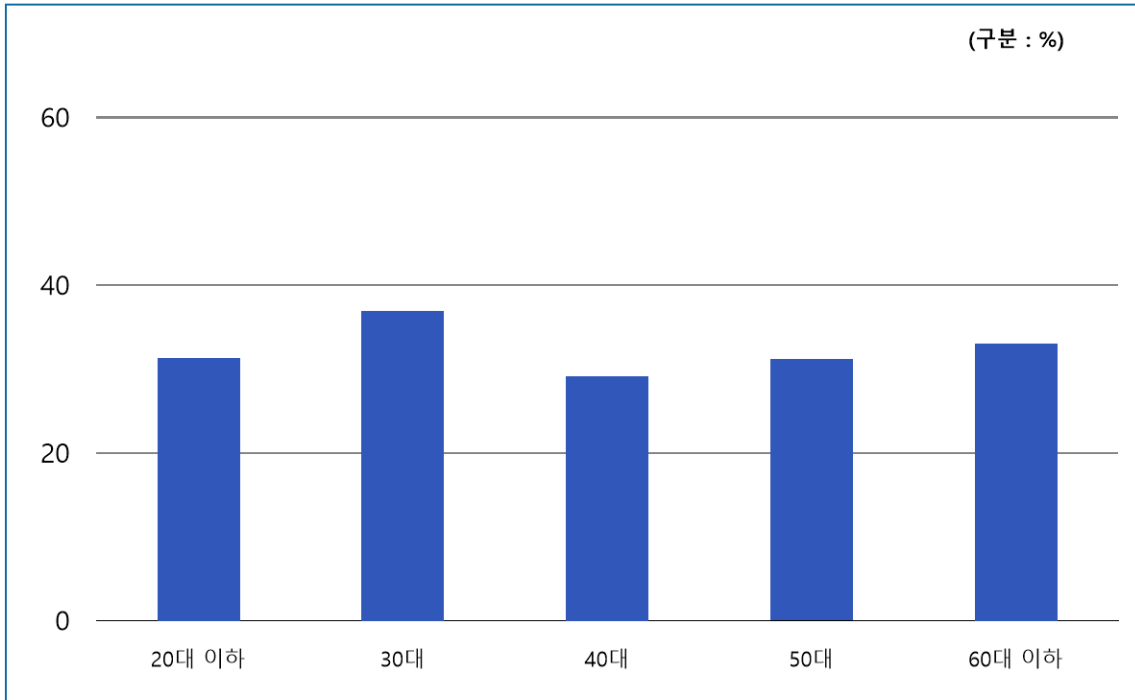


-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의 절반가량(44~51%)이 "군인 대우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군을 가장 불신하는 30대(50.2%)도 처우 개선에는 적극 찬성하는 **비판적 지지** 태도를 보인다.

5) 예산 수용성: 처우는 높되 예산 증액에 대해선 부정적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국방예산 증액	31.3	36.9	29.1	31.1	33.0

그림 4-5 연령별 국방예산 규모 증액 지지 차트



- 처우 개선 지지율(약 50%)에 비해 국방예산 증액 찬성률(약 30%)은 현저히 낮다. 이는 "군인은 더 잘 대우해주라"고 하면서도 "세금을 더 쓰는 건 싫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공정이 곧 안보다':
 - 2030세대의 군 불신은 전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부 부조리와 불공정한 징병 제도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결과는 투명성 확보 없이는 어떤 첨단 무기도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함을 시사한다.
- 30대의 예비군 리스크:
 - 30대의 가장 낮은 신뢰도(2.69점)는 그들이 경험한 군 생활의 부정적 잔재가 사회에 나와서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들은 국방 정책의 가장 강력한 비토 그룹이라 할 수 있다.
- 예산의 딜레마 극복:
 - 국민들은 "돈을 더 써서(증액)" 해결하기보다 "**있는 돈을 잘 써서(효율화)**"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선호한다. 예산 낭비에 대한 불신이 증액 반대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 투명성이 최우선:
 - **부조리 척결**이 전 세대 1순위 과제라는 점은, 군 사법 개혁이나 외부 감시 강화 같은 **제도적 투명성** 조치가 무기 도입보다 시급함을 시사한다.
- 30대 달래기:
 -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30대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면, 이들이 향후 4050 세대가 되어서도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 밀리터리 옴부즈만 권한 대폭 강화:
 - 군 내부 감찰이 아닌, 시민사회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대가 숨기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면 20대의 '**부조리 척결(48%)**'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 예비군 3040 리스펙트 패키지 도입:
 - 신뢰도가 가장 낮은 30대를 위해, 동원 훈련 보상비 현실화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이수 시 직장 내 인사 불이익 금지 감독 강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사회적 존중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국방예산 효율화 백서 발간 (재원 마련의 투명성):
 - 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무조건 증액"을 요구하기보다 "불필요한 행사와 낭비를 줄여 장병 월급과 피복에 재투자"와 같은 **군살 배기** 성과를 먼저 보여주어 예산 증액의 명분을 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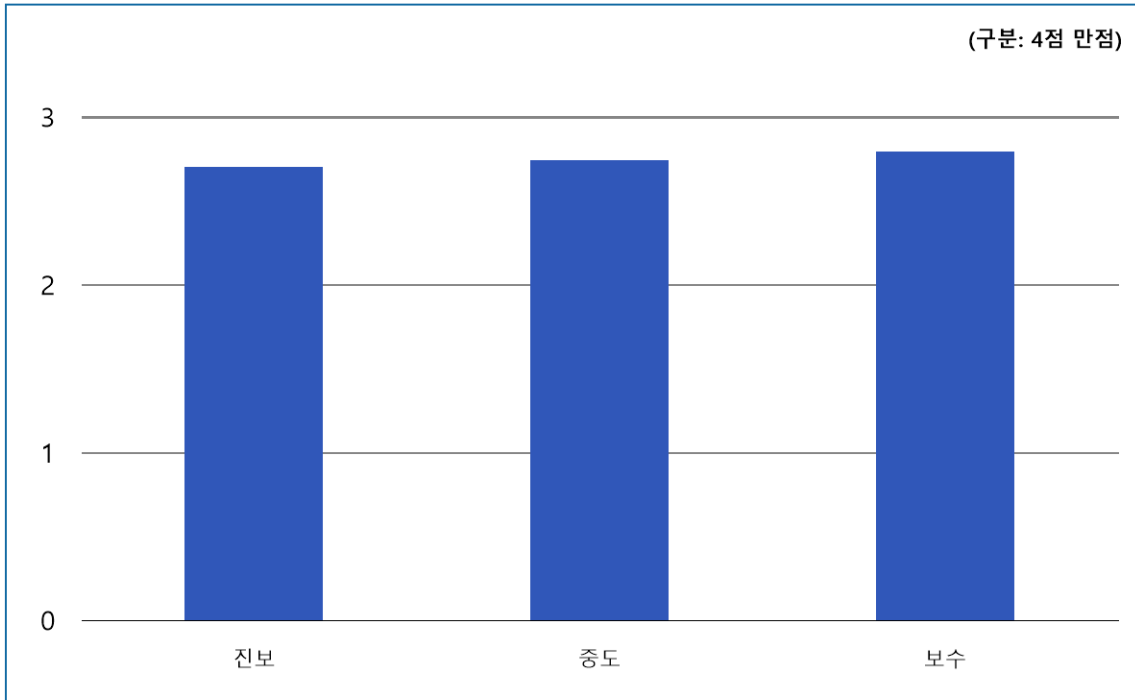
2. 정치적 태도와 정책 신뢰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개인 성향 (DQ8) (진보 / 중도 / 보수)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신뢰 수준): 우리군에 대한 신뢰도 (Q42 / 평균비교)
 - 분석 2 (불신 원인):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선호 (Q43_1 / 교차분석)
 - 분석 3 (공정성 인식):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평균비교)
 - 분석 4 (정책 모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대우,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 (Q46, Q59 / 비율비교)
 - 분석 5 (국제 역할): 전투 발생 지역에 파병을 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Q52 / 평균비교)

1) 신뢰 수준: 이념을 초월한 '군 불신'

구분 (4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군 신뢰도	2.70	2.74	2.79

그림 4-6 개인 성향별 군 신뢰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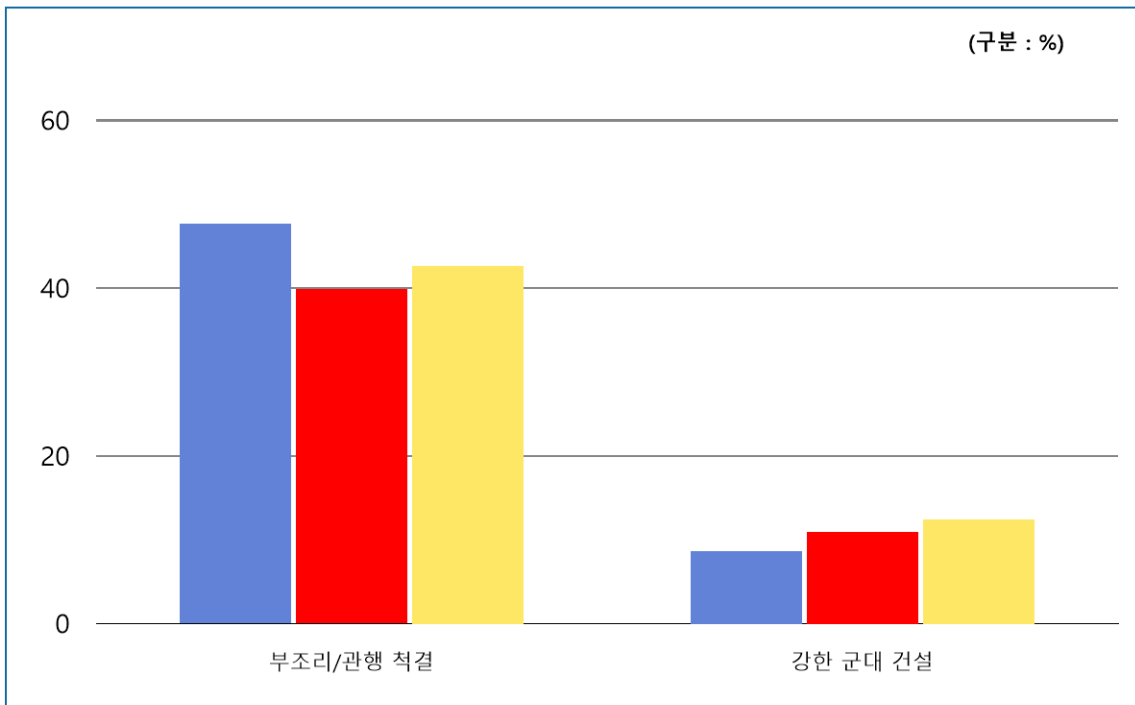


- 보수층(2.79점)이 진보층(2.70점)보다 군을 약간 더 신뢰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모든 성향에서 2점대(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에서 결과를 보였다. "보수는 안보를 신뢰한다"는 통념과 달리, 보수층조차 군에 대해 비판적이다.

2) 불신 원인: 진보의 '부조리 척결' vs 보수의 '강한 군대'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부조리/관행 척결	47.6	39.8	42.6
강한 군대 건설	8.6	10.9	12.4

그림 4-7 개인 성향별 부조리/관행 척결 & 강한 군대 건설 요구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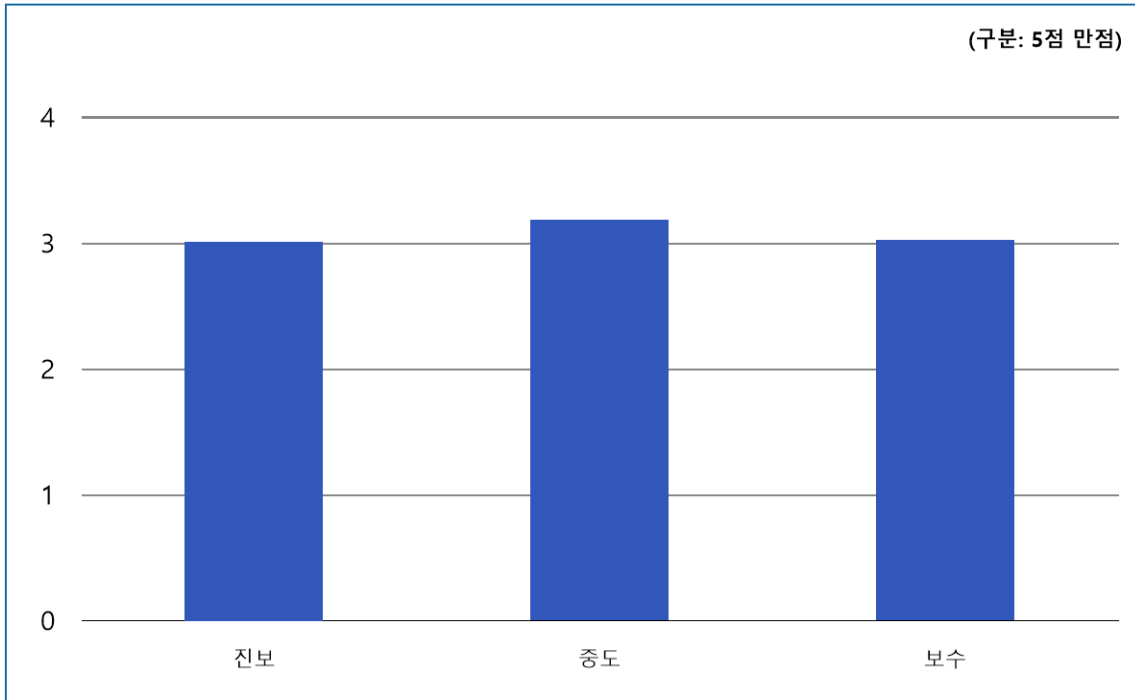


- 모든 성향에서 '부조리 및 관행 척결'이 1순위 과제였다. 다만, 진보층(47.6%)은 부조리 척결을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보수층(12.4%)은 '강한 군대 건설'을, 중도층(11.3%)은 '인권 신장'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3) 공정성 인식: "중도가 그나마 긍정적"

구분 (5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징병제 공정성	3.01	3.18	3.02

그림 4-8 개인 성향별 징병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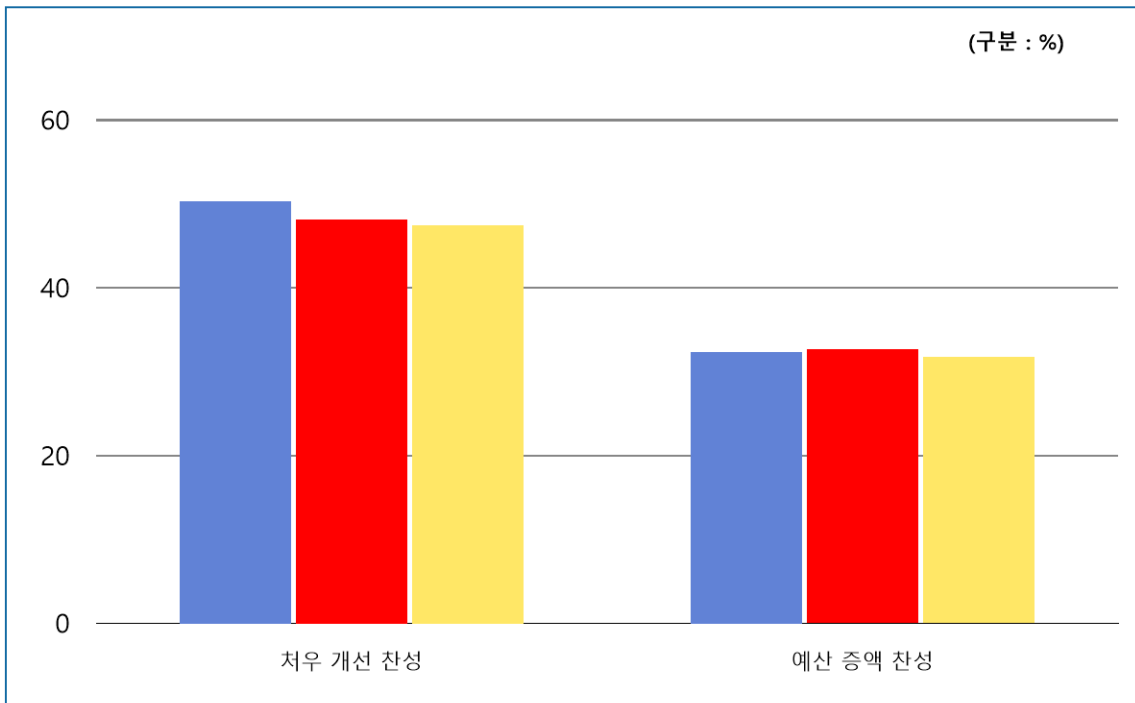


- 흥미롭게도 이념이 뚜렷한 진보(3.01점)와 보수(3.02점)가 징병제 공정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중도층(3.18점)**이 가장 높게 평가했다. 양극단의 정치 고관여층일수록 징병 제도의 불공정성(특혜 시비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4) 정책 모순: "진보의 '복지 확대-예산 억제' 딜레마"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처우 개선 찬성	50.3	48.1	47.4
예산 증액 찬성	32.3	32.6	31.7

그림 4-9 개인 성향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대우와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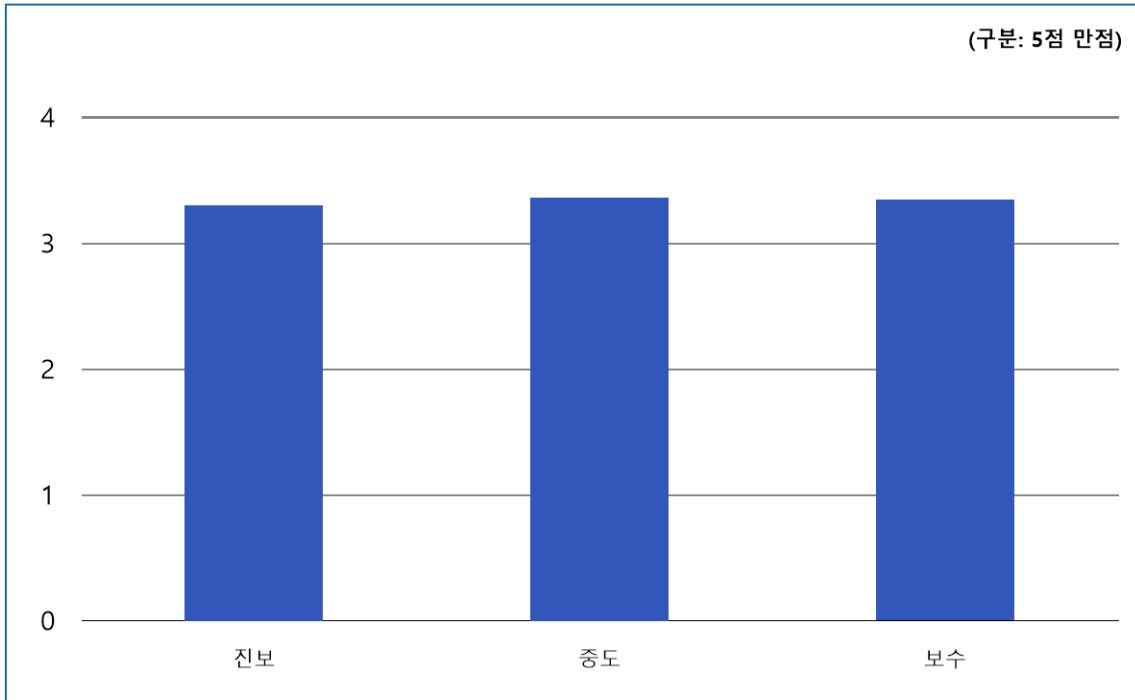


- 진보층은 '군인 처우 개선(50.3%)'을 가장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국방예산 증액(32.3%)' 지지율은 처우 개선 요구의 60% 수준에 그쳤다. "복지는 늘리되 돈은 아껴라"는 요구가 가장 강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보수층 역시 이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5) 국제 역할: “파병에 대한 초당적 동의”

구분 (5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파병 찬성도	3.30	3.36	3.34

그림 4-10 개인 성향별 파병 찬성도 차트



- 전투지역 파병에 대한 찬성도는 진보(3.30점), 중도(3.36점), 보수(3.34점)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국제 평화 유지 활동(PKO) 등 군의 대외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이념적 거부감이 없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군 불신의 '탈이념화':
 - 군에 대한 불신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불투명성(부조리)**'과 '**불공정(징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안보를 보수만의 어젠다로 보거나, 군 개혁을 진보만의 어젠다로 보는 시각은 낡은 것이다.
- 진보층의 '이중적 기대':
 - 진보층은 군 내부 부조리에는 가장 가혹한 잣대를 대지만(부조리 척결 47.6%), 군인 개인의 복지에는 가장 우호적(처우 개선 50.3%)이다. 즉, "**시스템은 개혁하되 사람은 보호하라**"는 것이 진보의 핵심 요구다.
- 예산의 병목현상:
 - 모든 정치 성향에서 예산 증액 찬성률이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군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국방비 증액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예고한다.
- 개혁의 동력:
 - '부조리 척결'과 '처우 개선'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동의하는 교집합이다. 이 두 가치를 국방 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 정쟁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소통의 타겟:
 - 진보층에게는 '인권과 복지'를, 보수층에게는 '강군 건설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맞춤형 소통이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투명성 강화' 없이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 "국방 청렴도 대국민 공시제" 도입:
 - 진보(부조리 척결)와 보수(효율성)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군수품 조달 가격, 급식 단가, 시설 공사비 등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대는 깡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 "장병 복지 예산 쿼터제" 법제화:
 - 처우 개선 요구가 높은 진보층을 설득하기 위해, 국방예산 증액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병사 인건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만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스마트 국방(Smart Defense) 전환 로드맵":
 - '강한 군대'를 원하는 보수층을 위해, 단순히 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AI와 무인 체계를 도입하여 "적은 예산으로 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국방 혁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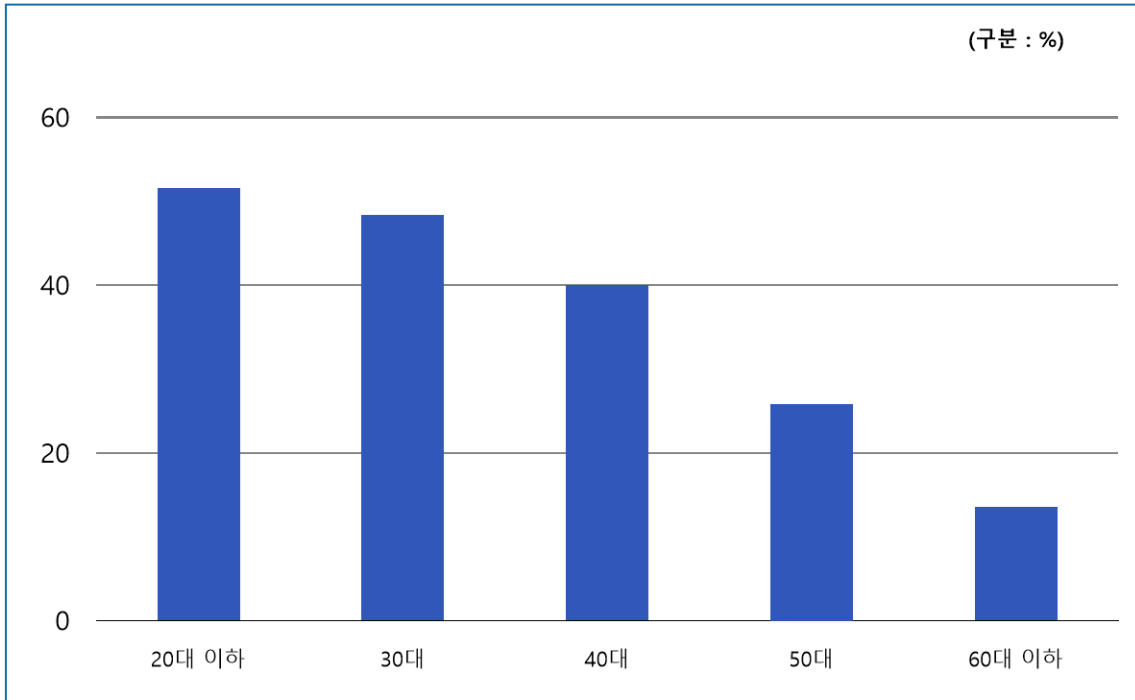
3. 정서적 변수와 정보환경 변화가 정책 수용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정보 환경):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선호 (Q64_1 / 비율비교)
 - 분석 2 (접촉 경험): 지난 1년동안 국방홍보 매체 경험 여부 중 '국방부 및 군 기관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선호도 (Q65_6 / 비율비교)
 - 분석 3 (정서적 태도):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 중 '친근하다' (Q66_5 / 평균비교)
 - 분석 4 (인지적 태도):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 중 '믿을 수 있다' (Q66_1 / 평균비교)
 - 분석 5 (정책 수용):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Q63 / 평균비교)

1) 정보 환경: "정보 소비의 세대 간 단절"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뉴미디어 의존도	51.5	48.3	39.9	25.8	13.5

그림 4-11 연령별 뉴미디어 의존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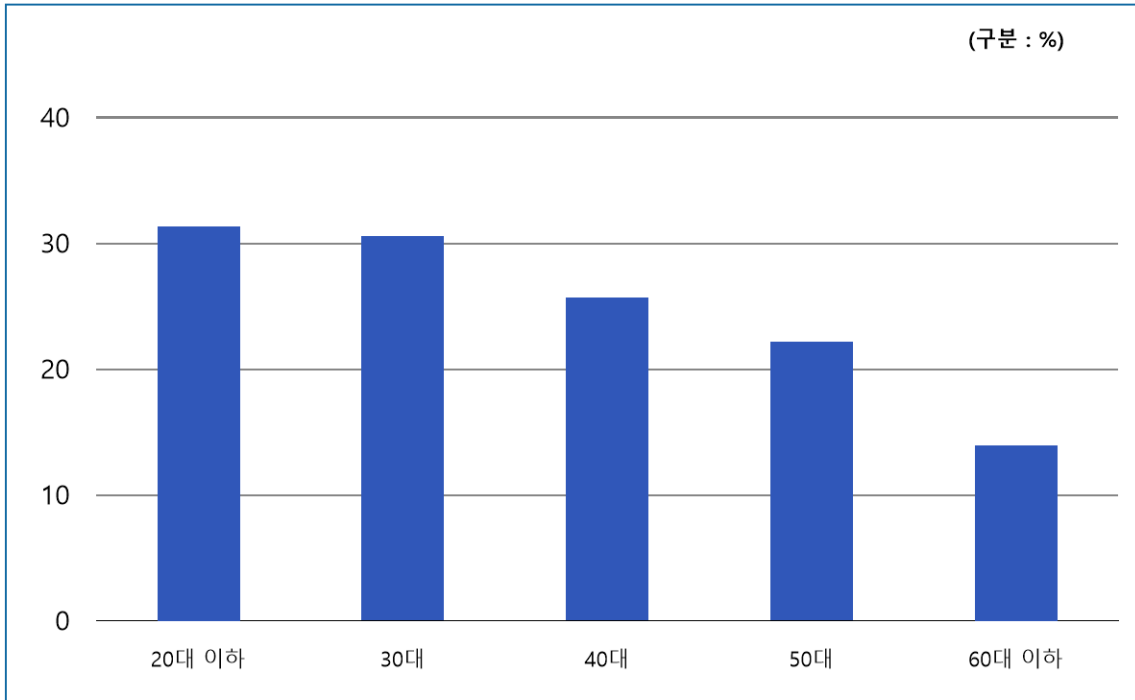


- 20대 이하(51.5%)와 30대(48.3%)의 절반가량은 포털,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 안보 정보를 얻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13.5%에 불과해 세대별로 정보를 얻는 '우물'이 완전히 다르다.

2) 접촉 경험: "공식 채널의 영향력 한계"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식 채널 경험	31.3	30.5	25.6	22.1	13.9

그림 4-12 연령별 지난 1년 동안 국방부 및 군 기관 공식 채널 경험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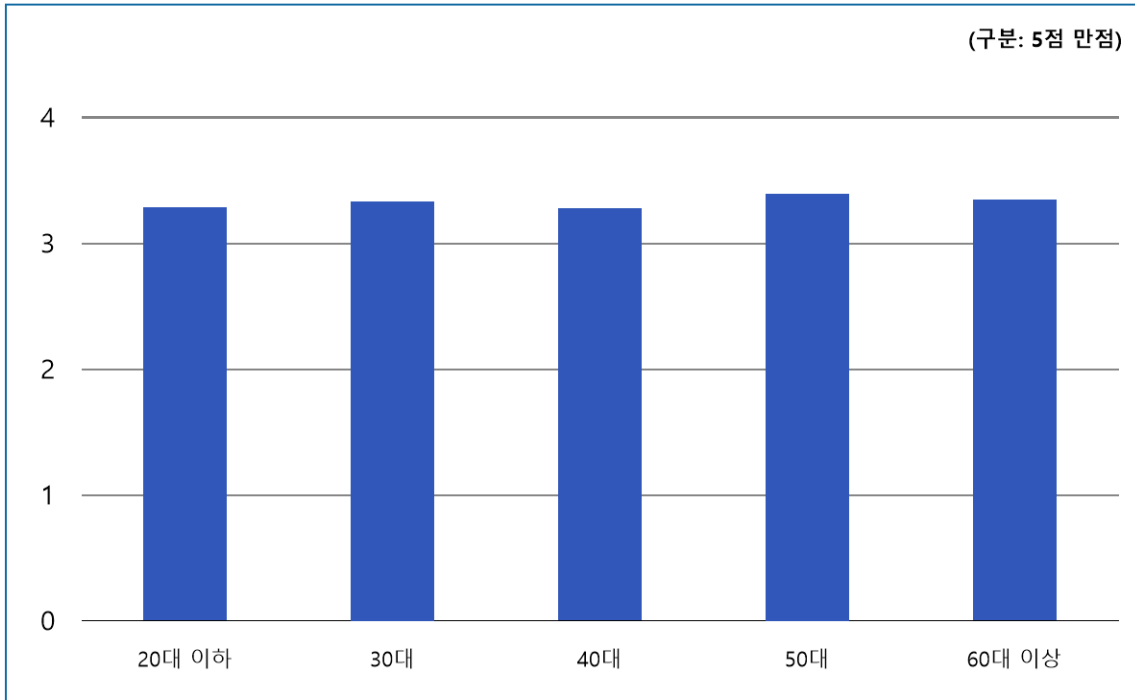


- 2030세대의 뉴미디어 의존도는 50%를 넘지만, 국방부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 접촉 경험은 **30%대 초반(31.3%, 30.5%)**에 그쳤다. 청년층은 민간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 가공된 안보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있으며, 공식 채널의 도달률은 아직 제한적이다.

3) 정서적 태도: "친근감의 상실"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에 대한 친근감	3.28	3.33	3.27	3.39	3.34

그림 4-13 연령별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함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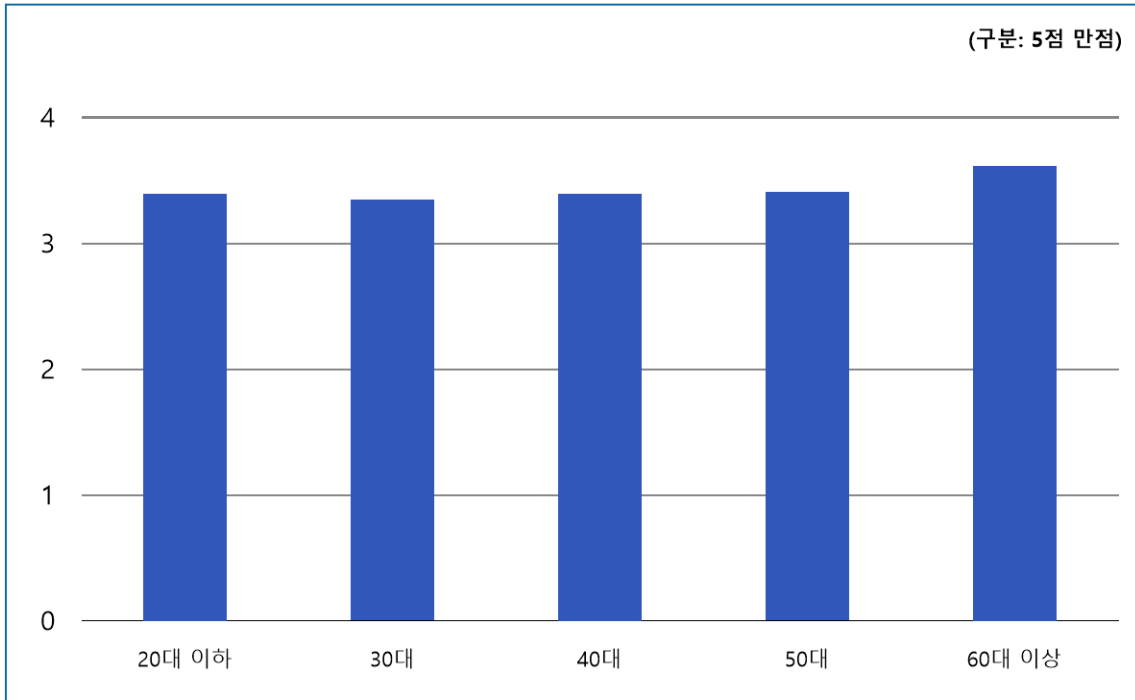


- 군에 대한 '친근감'은 40대(3.27점)와 20대(3.28점)에서 가장 낮았다. 가장 활발한 정보 소비자(20대)와 사회 허리층(40대)이 군에 대해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4) 인지적 태도: "30대의 냉정한 신뢰도"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 신뢰성 인식	3.39	3.34	3.39	3.40	3.61

그림 4-14 연령별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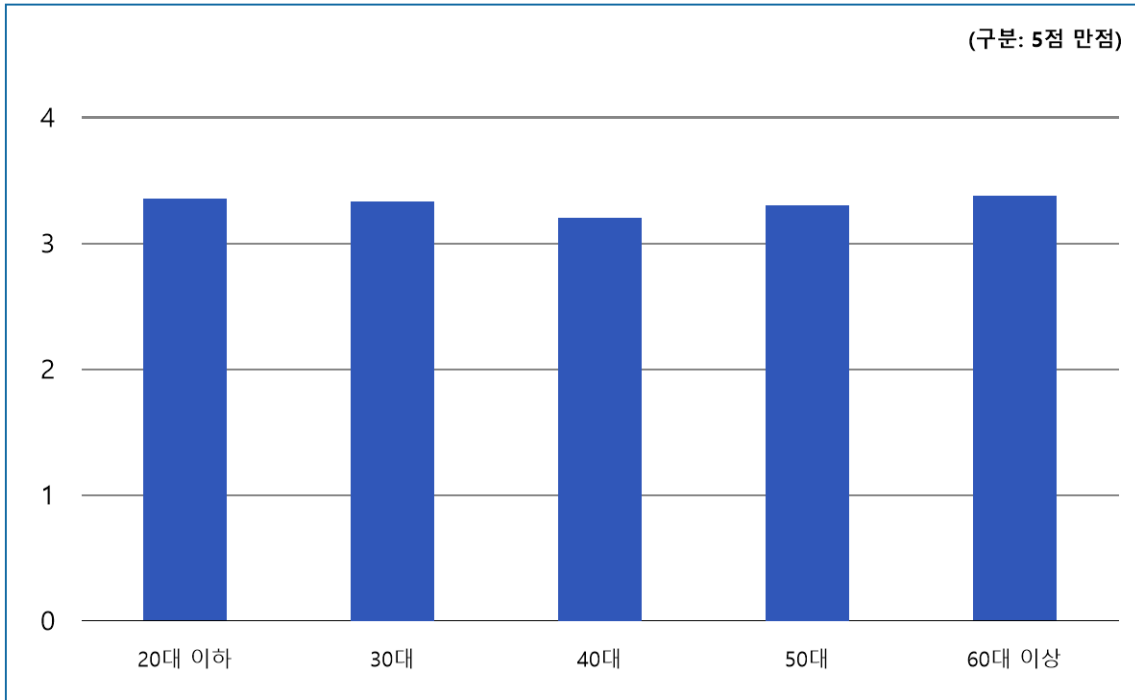


- 군이 '믿을 만하다'는 인식은 **30대(3.34점)**에서 가장 낮았다. 군 복무 경험과 예비군 훈련 등을 통해 군을 가장 잘 아는 30대가 군의 신뢰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경험의 역설'이 나타났다.

5) 정책 수용: "친근감이 낮으면 지갑도 안 연다"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예산 증액 찬성	3.35	3.33	3.20	3.30	3.37

그림 4-15 연령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 찬성 인식 차트



- 친근감이 가장 낮은 **40대(3.20점)**는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도 역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이념이나 안보관을 떠나, 군에 대해 느끼는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비호감)'가 예산 증액 같은 실질적 정책 지지를 가로막는 '**정서적 거부권**'으로 작용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정보의 양 ≠ 정서적 호감:
 - 20대는 유튜브 등을 통해 안보 정보를 많이 접하지만(51.5%), 이것이 군에 대한 친근감(3.28)이나 신뢰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극적인 콘텐츠가 군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 40대의 '침묵하는 비토층':
 - 40대는 정보 의존도나 공식 채널 접촉률은 중간 수준이지만, 친근감과 정책 지지도는 최하위다. 이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국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
- 공식 채널의 콘텐츠 미스매치:
 - 공식 채널 접촉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현재 국방부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2030세대의 '알고리즘'에 선택받지 못하거나, 그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엄격·근엄·진지' 탈피:
 - 딱딱한 보도자료 형식이 아닌, 2030의 문법(밈, 숏폼, 스토리텔링)에 맞는 소통 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 정서적 접근 필요:
 - 40대의 낮은 지지도는 논리적 설득(안보 위협 데이터 제시)보다는, 군의 '인간적인 모습(재난 구조, 헌신)'을 보여주는 감성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
- "국방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 국방부 자체 채널의 한계를 인정하고, 밀리터리/과학/역사 분야의 유력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재미있게 소비되는 안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야 한다. (예: "과학 유튜버가 분석한 K-방산 기술")
- "휴먼 터치 브랜딩":
 - '강한 군대' 이미지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웃으로서의 군인, 가족을 지키는 가장 등의 스토리를 담은 감성 광고 캠페인을 TV와 포털 메인에 집중 노출하여 정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
- "알고리즘 대응형 숏폼 뉴스룸":
 - 긴 호흡의 정책 설명 대신, 1분 내외의 '핵심 요약 숏폼'을 대량 생산하여 틱톡, 릴스, 쇼츠 등 숏폼 플랫폼을 장악함으로써 국민들의 뉴스피드에 국방 소식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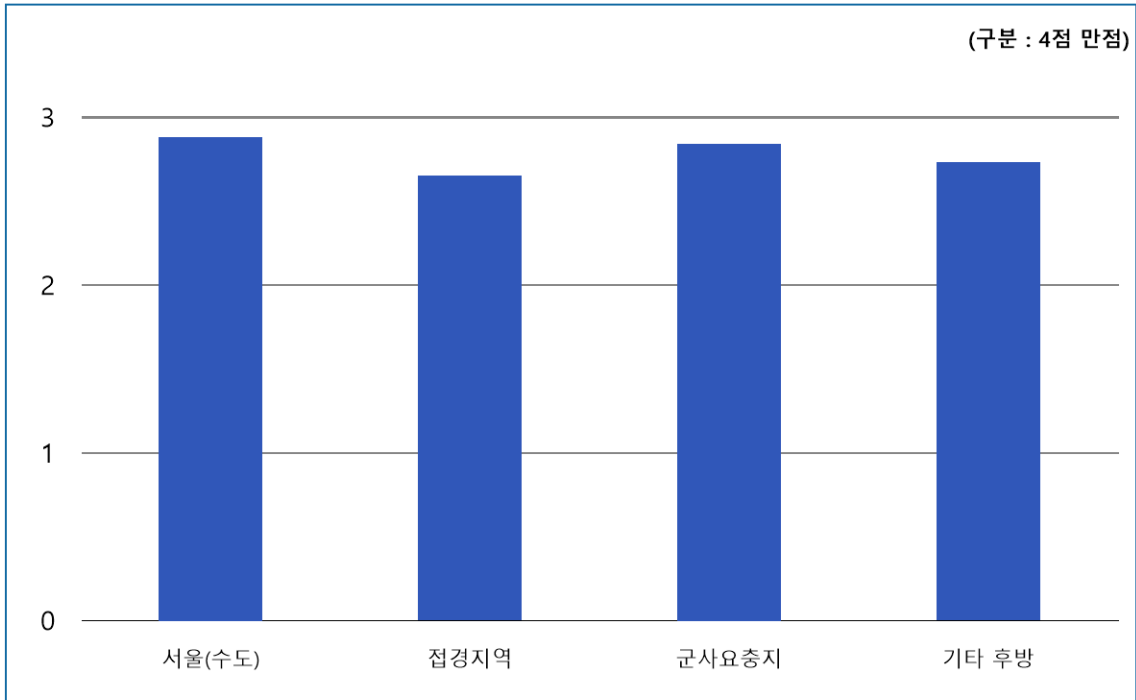
4. 전략적 공간 구획(접경/군 주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지역 (PQ3)
 - 서울(수도): 국방 정책의 중심이자 여론 주도 지역
 - 접경지역(인천/경기/강원): 군부대 밀집 및 군사 훈련 빈번 지역
 - 군사요충지(대구/경북): 후방 사령부 및 주요 군사 시설 소재지
 - 기타 후방지역: 직접적 군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신뢰 수준): 우리군에 대한 신뢰도 (Q42 / 평균비교)
 - 분석 2 (지역 수용성):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Q49 / 평균비교)
 - 분석 3 (절차적 정의):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Q62 / 평균비교)
 - 분석 4 (정책 수용):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Q63 / 평균비교)
 - 분석 5 (불신 원인):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Q43_1 / 교차분석)

1) 신뢰 수준: "접경지역의 '낮은 신뢰' 역설"

구분 (4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군 신뢰도	2.88	2.65	2.84	2.73

그림 4-16 지역별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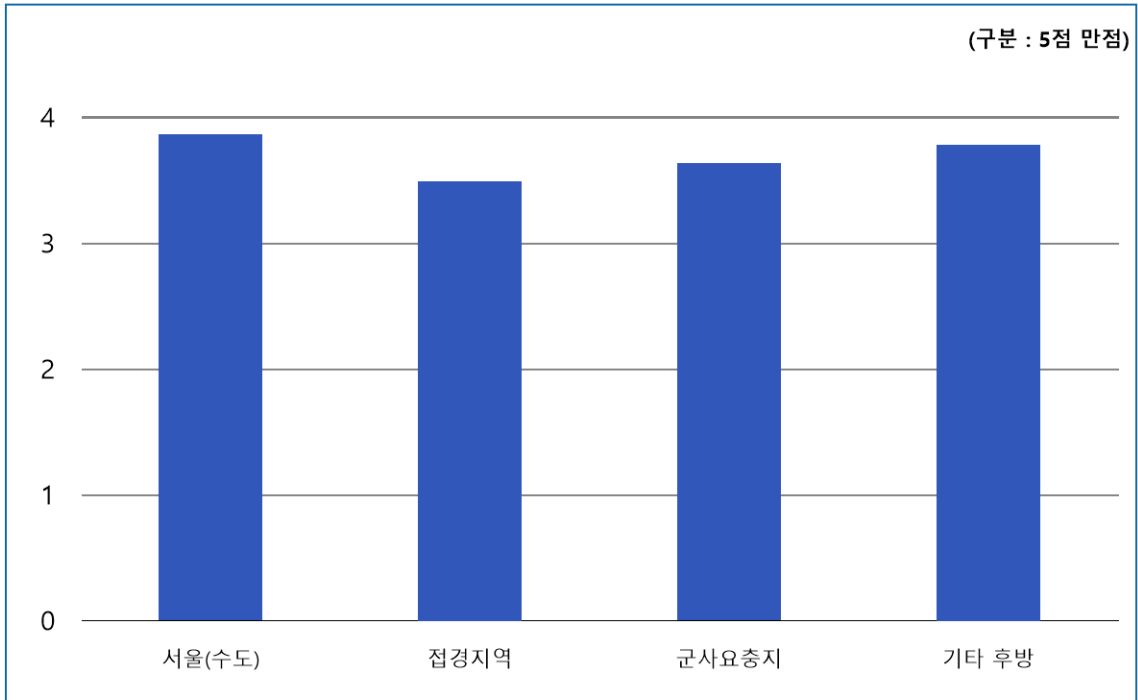


- 군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접경지역(2.65점) 주민들의 군 신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서울(2.88점)과 군사요충지(2.84점)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군과 일상을 공유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잦은 마찰(소음, 통제 등)과 불만족스러운 대민 관계가 신뢰 저하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2) 지역 수용성: "서울과 접경의 온도차"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지역발전 긍정 영향	3.86	3.49	3.63	3.78

그림 4-17 지역별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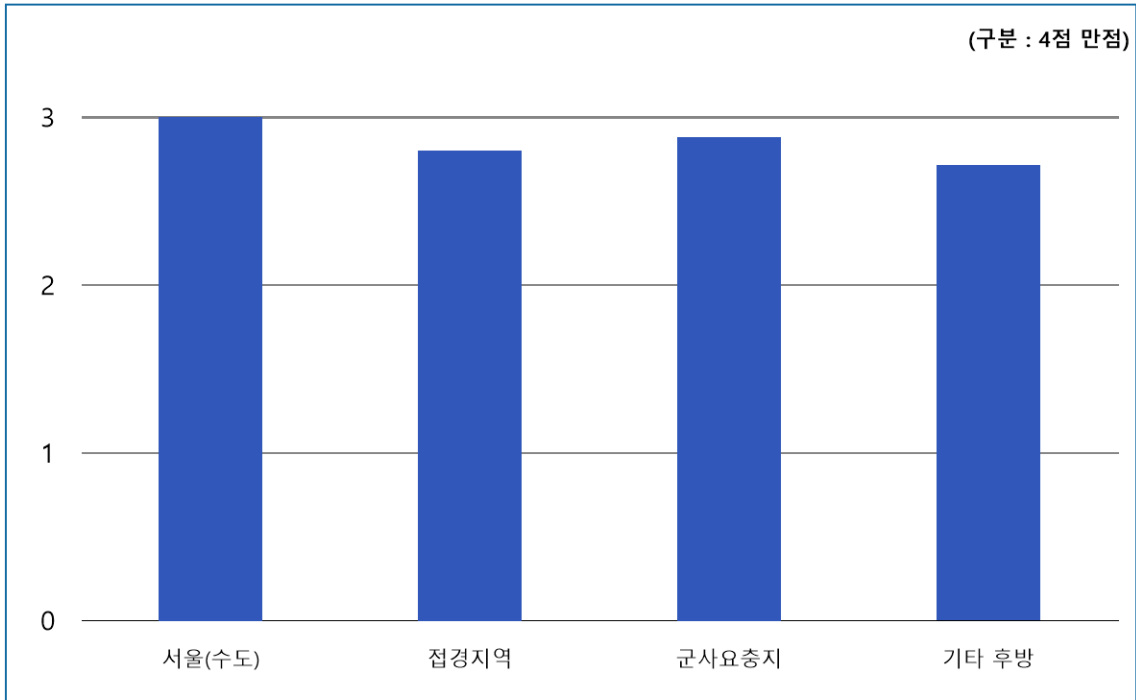


- 군 주둔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은 **서울(3.86점)**에서 가장 높고, **접경지역(3.49점)**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 시민들은 군을 '국가 안보의 수호자'라는 추상적/긍정적 이미지로 소비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개발 제한의 원인'이라는 구체적/부정적 현실로 체감한다.

3) 절차적 정의: "사업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구분 (4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사업 공정성 인식	3.00	2.80	2.88	2.71

그림 4-18 지역별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사업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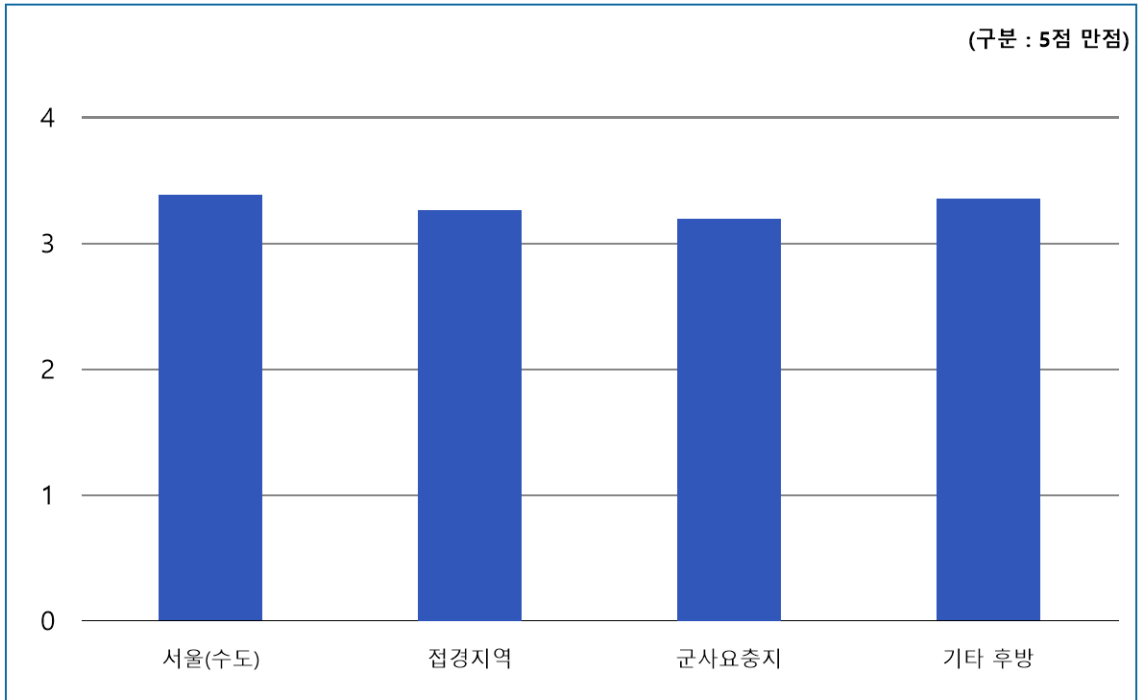


- 무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 사업의 공정성 인식은 **후방지역(2.71점)**과 **접경지역(2.80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국방 사업이 특정 지역(서울/요충지) 중심으로 결정되거나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외감이 반영된 결과다.

4) 정책 수용: "서울의 높은 예산지지"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예산 증액 찬성	3.38	3.26	3.19	3.35

그림 4-19 지역별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 증액 찬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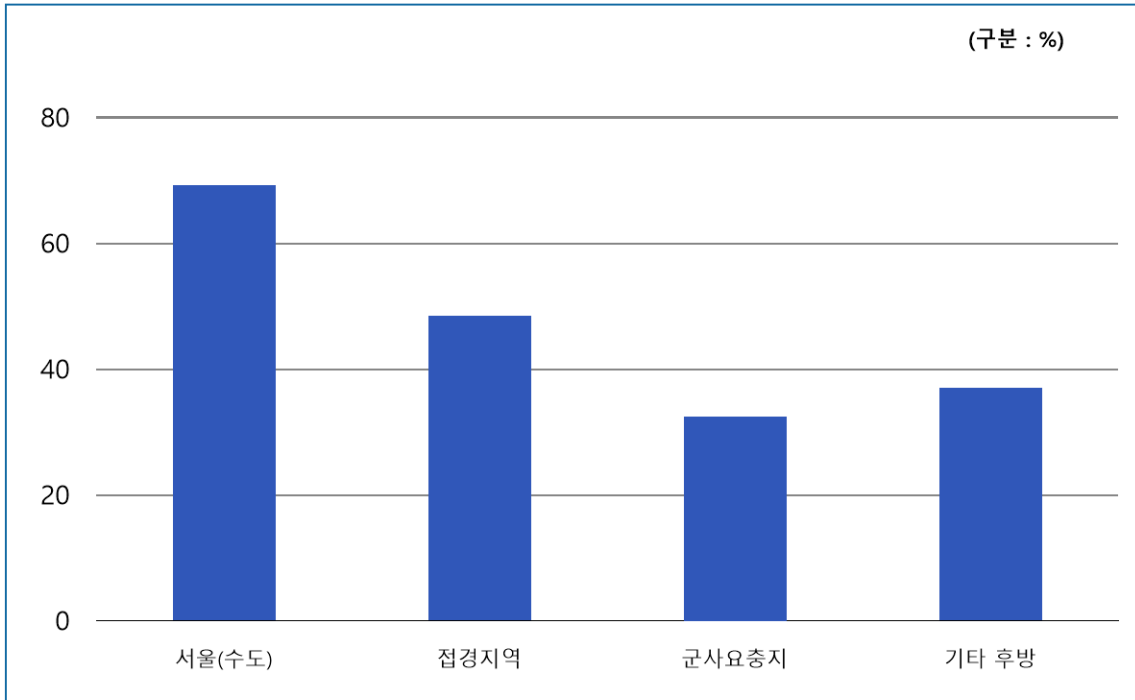


-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도는 **서울(3.38점)**이 가장 높고, **군사요충지(3.19점)**가 가장 낮았다. 안보 위협에 민감한 서울은 '비용 지불' 의사가 높은 반면, 군사 시설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은 예산 투입의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5) 불신 원인: "서울의 '부조리' 민감도 폭발"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부조리 척결 요구	69.1	48.3	32.4	36.9

그림 4-20 지역별 군의 부조리 척결 필요 인식 차트



- 신뢰 회복을 위해 '부조리 및 관행 척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서울(69.1%)**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접경지역(48.3%)이나 군사요충지(32.4%)보다 서울 시민들이 군 내부 비리나 불공정 이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접경지역의 '희생에 대한 피로감':
 - 접경지역은 군 신뢰도와 지역 발전 기여도 인식 모두 최하위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군에 대한 불신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서울의 '도덕적 잣대':
 - 서울은 군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은 지지하지만(높은 수용성), 군 내부의 부조리에는 가장 가혹한 비판(69.1%)을 가한다. 서울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청렴하고 투명한 군대' 이미지가 필수적이다.
- 요충지의 '실리 추구':
 - 대구/경북 등 요충지는 예산 증액에는 소극적이지만 부조리 척결 요구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은 이념적 명분보다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획일적 정책의 한계:
 - 전국을 동일하게 대하는 국방 정책은 서울의 도덕적 요구와 접경지역의 보상 요구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지역별 니즈에 맞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 신뢰 회복의 열쇠:
 - 접경지역에는 '민군 상생 프로그램'을, 서울에는 '국방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 제고의 지름길이다.
- "민군 상생 협의체" 권한 강화:
 - 낮은 신뢰도(2.65점)를 회복하기 위해, 군 부대장과 지자체장,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고, 군사 보호구역 해제나 대민 피해 보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 국방 혁신 오픈 하우스:
 - 부조리에 민감한 서울 시민(69.1%)을 위해, 군의 첨단 과학화 훈련 체계나 개선된 병영 시설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국방 엑스포'나 '오픈 하우스' 행사를 정례화하여 투명하고 발전된 군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 지역 경제 연계형 국방 클러스터:
 - 예산 증액 지지도가 낮은 군사요충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방위산업 부품 단지를 조성하거나 군수 물자 조달 시 **지역 업체 우선 구매 비율(쿼터)**을 확대하여 국방비가 지역 경제로 환류됨을 증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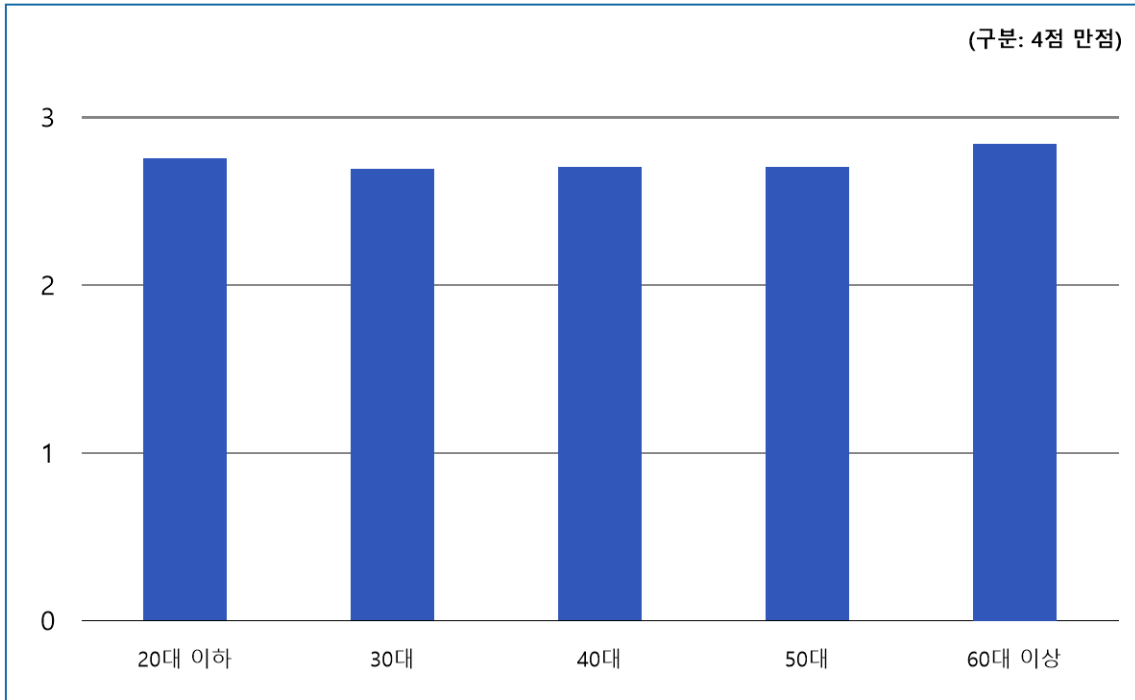
5. 장기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민감도 지수' 개발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프레임: '정책 민감도'를 5가지 차원으로 정의
 - 지표 1 (신뢰 민감도): 우리군에 대한 신뢰도 (Q42 / 4점 만점)
 - 지표 2 (공정성 민감도):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5점 만점)
 - 지표 3 (개혁 민감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 (Q43_1)
 - 지표 4 (복지 민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대우 (Q46)
 - 지표 5 (비용 민감도):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 (Q59)

1) 신뢰 민감도: "30대의 '신뢰 위기' 경보"

구분 (4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신뢰 민감도	2.75	2.69	2.70	2.70	2.84

그림 4-21 연령별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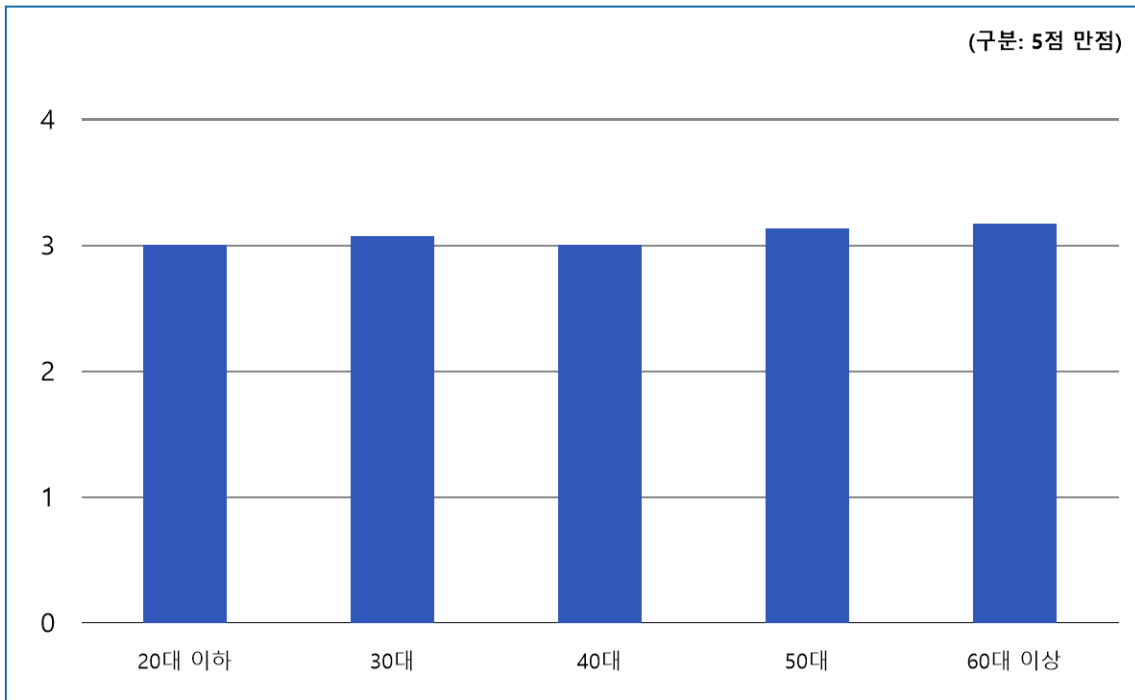


- 군 신뢰도는 전 세대에서 3.0점 미만으로 낮은 편이나, 특히 **30대(2.69점)**가 가장 낮아 군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군 복무 경험과 예비군 훈련 등을 통해 군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30대의 낮은 신뢰도는 군 조직 문화에 대한 구조적 불신을 시사한다.

2) 공정성 민감도: "당사자(20대)와 부모(40대)의 불만"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정성 민감도	3.00	3.07	3.00	3.13	3.17

그림 4-22 연령별 징병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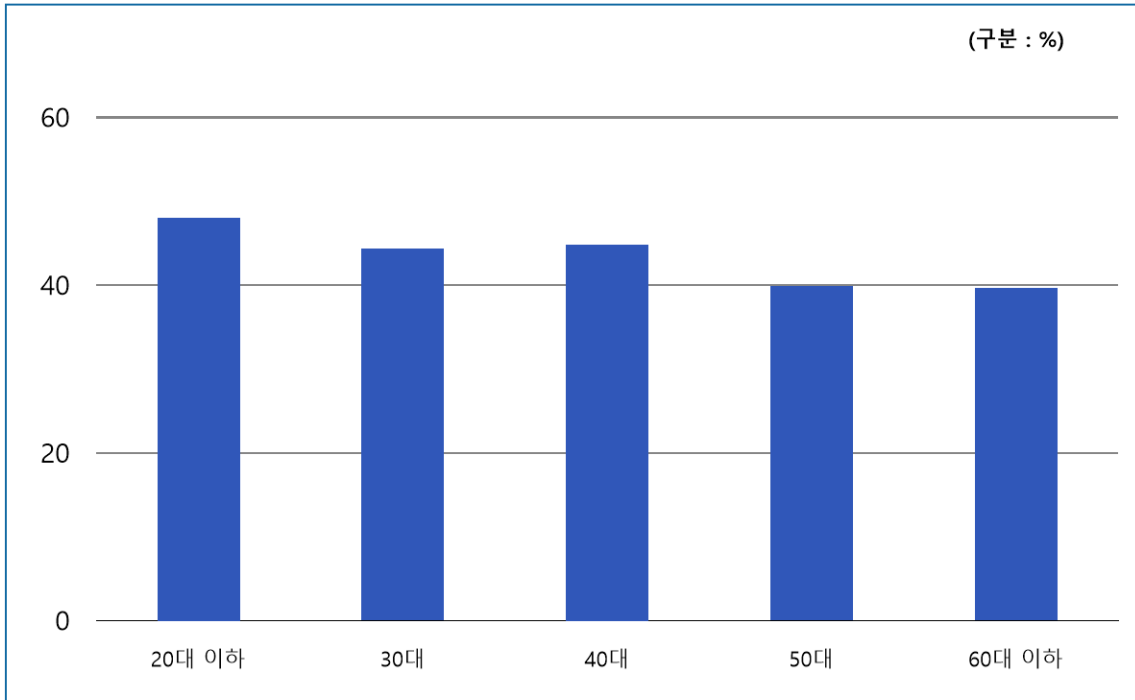


- 징병제 공정성 인식은 현역 복무 대상인 **20대(3.00점)**와 부모 세대인 **40대(3.00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입시 비리나 채용 비리처럼, 병역 비리나 특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들 세대의 분노가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예고한다.

3) 개혁 민감도: "20대의 강력한 '부조리 척결' 요구"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개혁 민감도	48.0	44.3	44.8	39.8	39.6

그림 4-23 연령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개혁 필요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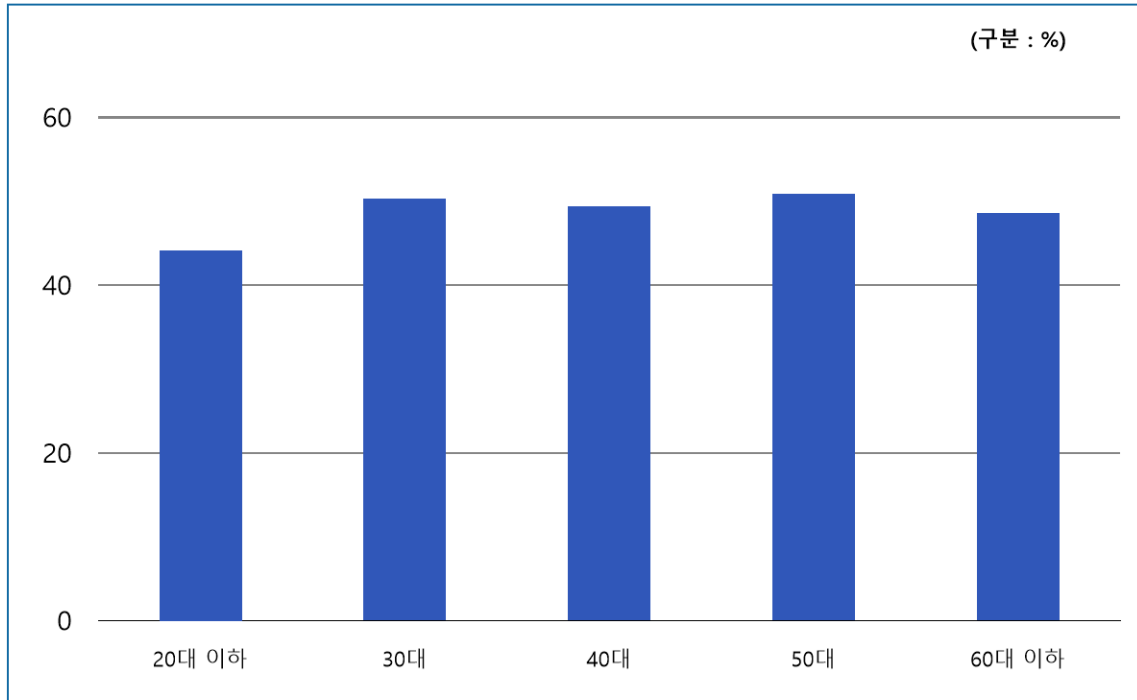


- 군 신뢰 회복을 위해 부조리 척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48.0%)**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세대는 '강한 군대'나 '시설 현대화'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군대**를 원하며, 은폐나 조작 의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4) 복지 민감도: "50대와 30대의 '처우 개선' 공감대"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복지 민감도	44.1	50.2	49.3	50.8	48.5

그림 4-24 연령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복지 필요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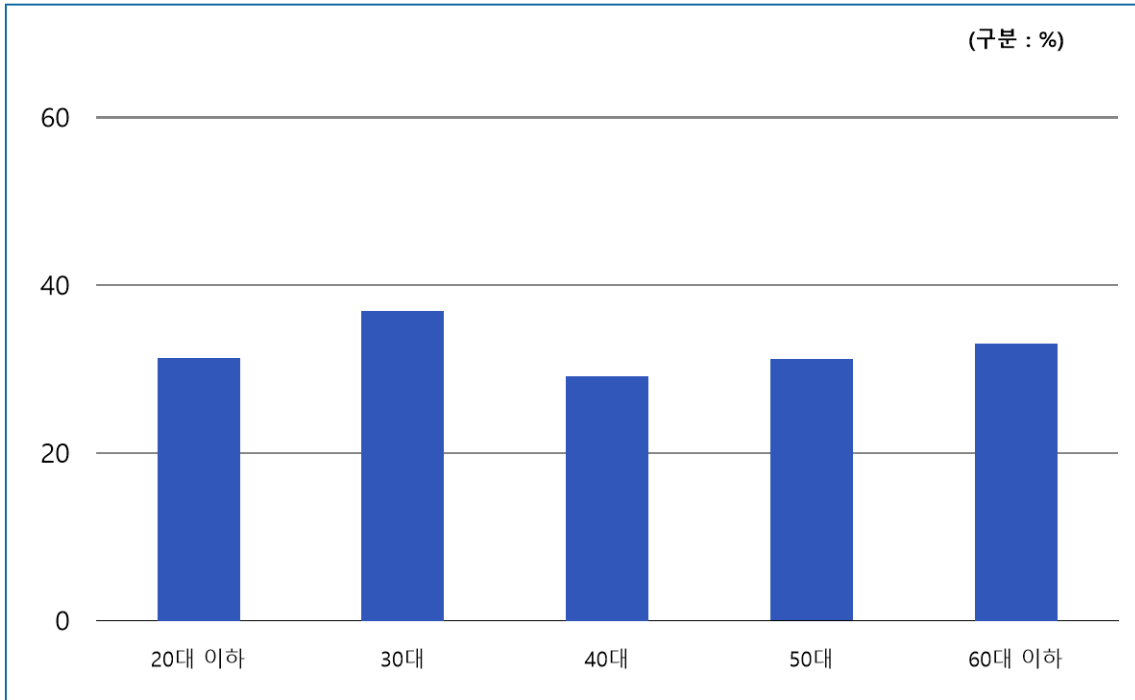


- 군인 처우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50대(50.8%)**와 **30대(50.2%)**에서 과반을 넘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는 본인의 경험에서, 50대는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에서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

5) 비용 민감도: 40대의 '지갑 닫기'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용 민감도	31.3	36.9	29.1	31.1	33.0

그림 4-25 연령별 우리나라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증액 찬성 인식 차트



-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률은 **40대(29.1%)**에서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다. 20대 (31.3%) 역시 낮아, 젊은 층일수록 세금 투입에 대해 냉정하다. 처우 개선(지표 4)은 지지하지만 돈(지표 5)은 쓰기 싫어하는 '**재정적 딜레마**'가 가장 심한 세대가 40대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20대의 '투명성' 갈증:
 - 20대는 공정성(지표 2)과 개혁(지표 3) 민감도가 가장 높은 세대다. 이들에게 국방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강해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가**'다.
- 30대의 '신뢰 붕괴':
 - 30대는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지표 1)이다. 그러면서도 처우 개선(지표 4)에는 적극적이다. 이는 "**고생하는 후배 군인들은 챙겨주되, 군 조직 자체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리된 인식을 보여준다.
- 40대의 '가성비 추구':
 - 40대는 공정성과 예산 문제에 모두 민감하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국방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경영적 증거**'가 필요하다.
- '돈'보다 '룰(Rule)'이 먼저다:
 - 예산을 늘려 최신 무기를 사는 것보다, 징병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부조리를 없애는 '**비에산 개혁**'이 군 신뢰 회복에 훨씬 효과적이다.
- 복지과 예산의 엇박자 해소:
 - 처우 개선에 대한 높은 지지를 예산 증액 지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증액된 예산이 장병 월급과 급식비로 직행한다**"는 명확한 연결 고리를 보여줘야 한다.
- "국방 데이터 공개" 확대:
 - 20대의 개혁 요구(48.0%)를 수용하여, 군 사법 처리 결과, 급식 조달 단가, 사건사고 통계 등 민감한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국방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불투명성 의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 "장병 체감형 복지 로드맵" 제시:
 - 30대의 처우 개선 지지(50.2%)를 활용하여, 봉급 인상뿐만 아니라 '전역 후 사회 진출 지원금', '군 복무 학점 인정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 "국방 경영 효율화 보고서" 발간:
 - 예산 증액에 저항이 큰 40대(29.1%)를 설득하기 위해, 예산 낭비 요소를 얼마나 줄였고 그 재원으로 전력을 얼마나 강화했는지를 기업 재무제표처럼 투명하게 보여주는 '**국방 경영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 한다.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1.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의 종합 평가 지수 개발

1) 국방 신뢰 및 이미지 지수 (Military Trust & Image Index, MTII)

• 정의: 군에 대한 직접적 신뢰와 질적 이미지(역량/도덕성/소통)의 종합 평가

• 구성 변수:

- 신뢰도: Q42 (우리군에 대한 신뢰도)
- 이미지: Q66_1~Q66_5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_믿을 수 있다, 청렴하다, 개방적이다, 혁신적이다, 친근하다)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MTII = [(5 - Q42) \times 25 \times 0.4] + \left[\frac{\sum_{i=1}^5 (5 - Q66_i) \times 25}{5} \times 0.6 \right]$$

※ 100점에 가까울수록 군을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며 깨끗한 조직으로 인식.

2) 국방 예산 효율성 및 지지 지수 (Defense Budget Efficiency & Support Index, DBES)

• 정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예산 증액 지지 강도

• 구성 변수:

- Q60 (국방예산 사용의 효율성)
- Q62 (우리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 Q63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DBES = [(5 - Q60) \times 25 \times 0.4] + [(5 - Q62) \times 25 \times 0.3] + [(5 - Q63) \times 25 \times 0.3]$$

※ 점수가 낮을수록 방산비리/낭비 인식이 강해 예산 증액에 부정적.

3) 병영 인권 및 복무 효능감 지수 (Human Rights & Service Efficacy Index, HRSE)

- 정의: 군대 내 인권 보장 수준과 군 복무 경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긍정 인식
- 구성 변수:

- Q71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 Q44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HRSE = [(5 - Q71) \times 25 \times 0.6] + [(5 - Q44) \times 25 \times 0.4]$$

※ 점수가 높을수록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군대라는 인식이 강함.

4) 국방 문화 건전성 지수 (Defense Culture Health Index, DCHI)

- 정의: 군 내부 조직 문화의 건강성(청렴, 공정, 개방) 평가
- 구성 변수:

- Q66_2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_2) 청렴하다) - 부패 척결
- Q67 (징병제에 대한 의견) - 제도 운영 투명성
- Q66_3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_3) 개방적이다) - 폐쇄성 탈피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DCHI = [(5 - Q66_2) \times 25 \times 0.4] + [(5 - Q67) \times 25 \times 0.3] + [(5 - Q66_3) \times 25 \times 0.3]$$

※ 점수가 낮을수록 군을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인식 (고질적 불신 요인).

5) 미래 국방 역할 확장성 지수 (Future Defense Role Expansion Index, FDRE)

- 정의: 전통 안보를 넘어선 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국제 평화 기여 역할에 대한 지지

- 구성 변수:

- Q53 (비군사적 및 초국가적 위협 대비 필요성)
- Q51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 Q52 (전투 발생 지역에 파병을 해야한다는 인식에 대한 의견)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FDRE = [(5 - Q53) \times 25 \times 0.4] + [(5 - Q51) \times 25 \times 0.3] + [(5 - Q52) \times 25 \times 0.3]$$

※ 100점에 가까울수록 글로벌 포괄 안보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

6) 지수 결과 제시

순위	지수명	Mean	SD	중위수	설명
1	미래 국방 역할 확장성 지수, FDRE	66.73	13.95	67.50	첨단과학군 육성 및 국제 평화 기여 역할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음.
2	병영 인권 및 복무 효능감 지수, HRSE	59.75	15.01	60.00	군 인권 개선과 복무 가치에 대한 평가는 '중상위권'으로 비교적 양호함.
3	국방 신뢰 및 이미지 지수, MTII	59.01	14.76	60.00	군에 대한 전반적 믿음과 이미지는 '약 60점' 수준의 긍정적 지지 유지.
4	국방 예산 효율성 및 지지 지수, DBES	55.91	19.14	57.50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는 '다소 미흡'하여 증액 설득력 약화.
5	국방 문화 건전성 지수, DCHI	50.19	17.50	50.00	청렴성·공정성 등 조직 문화 평가는 '딱 중간(50점)'으로 가장 취약함.

7) 결과 분석

- 지수에 대한 해석:

- FDRE(미래확장성)는 66.7점으로 평창해 있는 반면, 아래쪽의 DCHI(문화건전성)는 50.2점으로 수축되어 있다. 이는 국민들이 국민은 군의 미래 비전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현재의 조직 문화(공정성, 청렴성)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는 밝은데 문화는 낡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시사한다.

그림 4-26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의 종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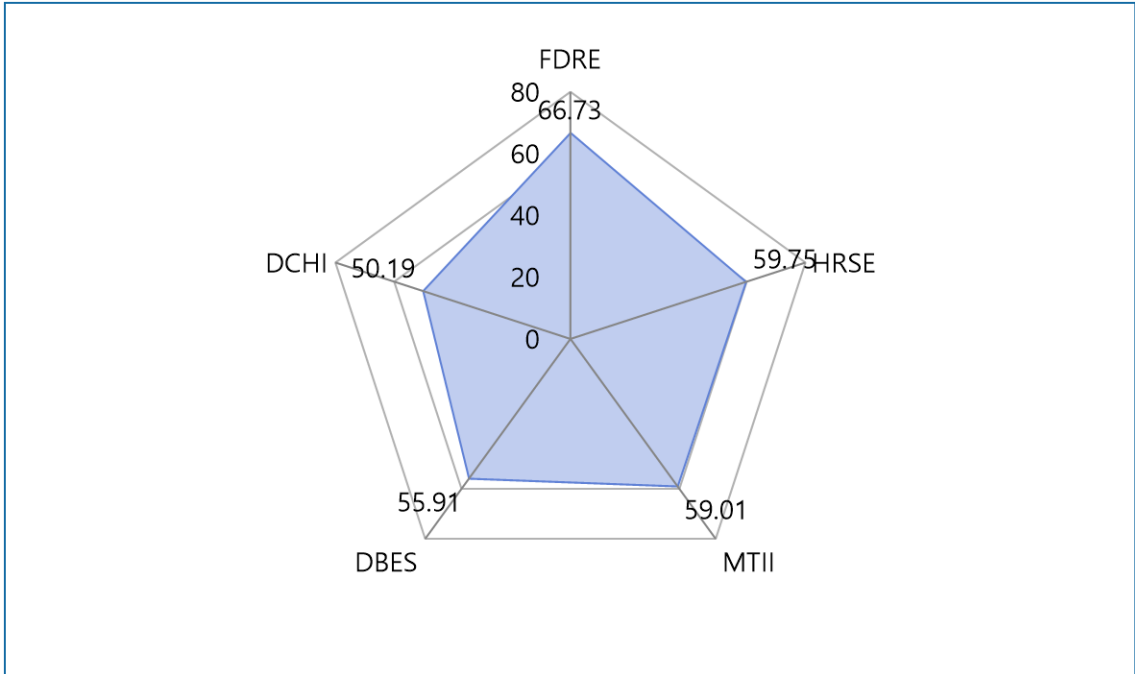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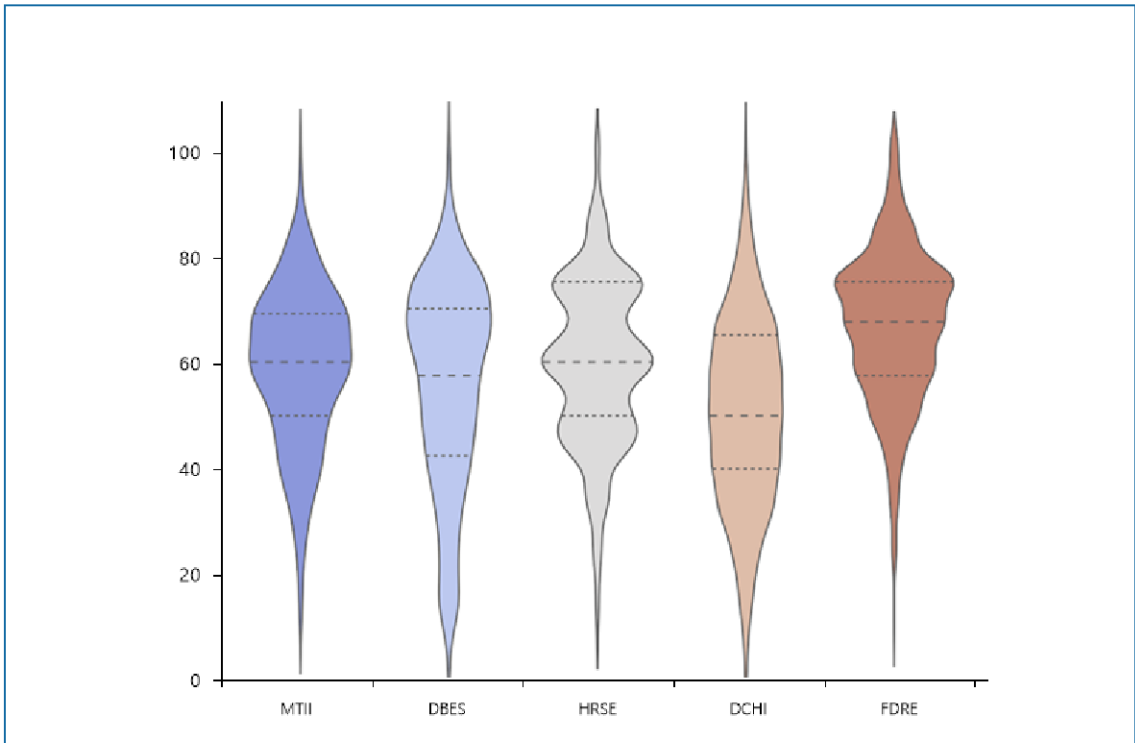


그림 4-27 국방정책 인식과 군 신뢰도에 대한 분포 분석



- 분포 분석:
 - DCHI(문화)가 하단 집중의 형태로 뚱뚱한 부분이 40~60점 구간에 몰려 있으며,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드물다. 이는 '불공정/폐쇄적 문화'에 대한 인식이 소수의 불만이 아니라 국민적 보편 정서임을 시사한다. 반면, HRSE(인권)는 60점을 중심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병영문화 개선 성과가 어느 정도 안착되었음을 시사한다.

8)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하드웨어 강군' vs '소프트웨어 약군'의 불균형 (High FDRE, Low DCHI):
 - 미래 국방 역할 확장성(FDRE 66.7점)은 최고점인 반면, 조직 문화 건전성(DCHI 50.2점)은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군의 첨단 전력 증강 능력은 인정하지만,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불신**하는 '비대칭적 신뢰' 상태임을 시사한다.
- 신뢰의 결정적 변수는 '문화':
 - 산점도 분석 결과, 조직 문화(DCHI)와 대군 신뢰도(MTII) 간의 상관계수가 **0.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무리 첨단 무기를 도입해도(FDRE), 내부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DCHI)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군 신뢰도는 절대 상승할 수 없는 구조**임을 통계적으로 증명한다.
- 예산 증액의 '설득 논리' 고갈(Low DBES):
 - 국방 예산 효율성 및 지지 지수(DBES)가 55.9점에 그침. 국민은 안보 위협은 인식하지만, "국방비가 낭비 없이 쓰인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 위협'만을 근거로 한 예산 증액 요구는 **한계 효용**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 인권이 신뢰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
 - 병영 인권 지수(HRSE 59.8점)가 예산이나 문화 지수보다 상위에 위치되었다. 이는 "인권을 챙기면 군 기강이 무너진다"는 구시대적 우려와 달리, 국민들은 **'인권이 보장된 선진 병영'**을 신뢰의 기본 조건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세대별 '군 경험'의 인식 괴리:
 - 50대 예비역은 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20대 현역/예비역은 인권 및 처우 개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능감을 보인다. 이는 공급자(군) 위주의 만족도 평가와 수요자(MZ 장병)의 체감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 국방혁신 4.0의 '문화적 동반자' 필요: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하드웨어)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완성할 수 없다. 기술 혁신과 동등한 비중으로 '국방 조직문화 혁신(소프트웨어)'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작은 사건·사고 하나로 전체 혁신 동력이 상실될 리스크가 상존함을 시사한다.
- '가성비' 입증에 예산 확보의 열쇠:
 - 향후 국방 예산 확보전의 핵심은 '얼마나 더 필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썼는가'**이다. 획득 사업의 비리 척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데이터가 곧 예산 방어에 핵심 무기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 인권 친화적 부대 관리가 곧 '전투력 보존':
 - HRSE 지수의 선전은 군의 인권 정책 방향이 옳았음을 방증한다. 이제 인권 보장은 복지 차원을 넘어, 대국민 신뢰를 유지하고 우수 자원을 획득(모병)하기 위한 '필수 직전 요소'로 격상되어야 한다.
- '공정성'이 군심(軍心) 결집의 핵심:
 - 가장 낮은 DCHI(50.2점)는 내부 구성원 및 예비 자원의 사기 저하 요인이다. 진급, 보직, 포상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초급 간부 이탈 및 병역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
- 글로벌 안보 기여에 대한 국민적 승인:
 - 높은 FDRE 지수는 PKO, 재난 구호, 방산 수출 지원 등 군의 비전통적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레버리지로 삼아 **군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라. 정책대안 제시

1. 문제의 구조: ‘강한 전력-취약한 신뢰’라는 구조적 불균형

- 첨부자료가 보여주는 핵심 문제는 명확하다. 국민은 군의 미래 비전과 전력 증강 능력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지만,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의 조직문화는 낡았다”는 인식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국방문화건 전성지수(DCHI)가 5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응답 분포 역시 중·저점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군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 인식이 일부 계층의 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공유된 정서임을 시사한다.
- 더 중요한 점은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 결과다. 첨부자료에 따르면 조직문화(DCHI)와 대군 신뢰·이미지(MTII) 간 상관계수는 0.74로 매우 높다. 이는 군 신뢰 회복의 핵심 변수가 무기체계나 전력 규모가 아니라, 공정성·청렴성·투명성과 같은 ‘운영 원리’에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 이러한 내용은 다른 문항에서도 확인된다. 군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이 모든 세대에서 1순위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48.0%로 가장 높다. 징병제 공정성 평가 역시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20대와 부모 세대인 4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각각 3.00점). 이는 병역제도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군 전체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 국민 다수는 군인 처우 개선에는 찬성하지만(세대별 44~51%),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예산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국방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뢰 부족”에서 찾고 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재원의 규모가 아니라, 재정 운영의 신뢰성이라는 것이다.
-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신뢰 형성의 환경 변화다. 2030 세대는 뉴미디어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국방부 공식 채널 접촉 경험은 30%대 초반에 불과하다. 이는 군이 아무리 타당한 메시지를 내더라도 기존 방식의 소통으로는 청년층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 이러한 문제 구조를 종합하면, 정책대안의 방향은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투명성 강화, 둘째, 공정성의 제도화, 셋째, 예산 효율성의 증명, 넷째, 세대적 특성에 맞는 소통 전략이다.

2. 정책대안 A: 부조리 척결을 ‘의지’가 아닌 ‘구조’로 고정하는 투명성 개혁

- 첫 번째 정책 영역은 군 내부 부조리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이나 사후 처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적 통제와 외부 검증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투명성 강화 없이는 군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부조리 척결이 윤리 담론이 아니라, **국방정책 지속 가능성의 핵심 조건**임을 의미한다.
- 대표적인 정책대안은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사의 일차적 권한을 지휘계통 밖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휘관의 재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폐·축소의 근본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 부족이 아니라, 사건 공개가 곧 지휘관의 책임·평정·진급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인사 구조와 지휘책임 체계에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1차 보고와 사실 확인, 외부 공시 여부를 해당 부대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두는 한 은폐 유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국방부는 중대 사건 발생 시 지휘관 판단과 분리된 감찰관(Inspector General) 과 법무부·민간 수사 체계가 자동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사건을 숨겼다**”는 **행위가 훨씬 더 큰 불이익**으로 작동한다. 한국군 역시 중대 인권·사고·범죄 사건에 대해 보고-초동조사-공개 판단을 지휘계통에서 분리한 독립 절차로 자동 전환하도록 법·제도를 개편해야 하며, 이때 핵심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은폐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은폐·축소를 근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숨기면 손해, 투명하게 보고하면 보호받는다**”는 규칙이 예외 없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있다.
- 두 번째 정책대안은 **독립적 외부 감시 체계의 강화**다. 여러번 거론되었던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실질적 도입**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내부 감찰만으로는 부조리 은폐 의혹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영국은 군 고충 처리 전반을 ‘Service Complaints Ombudsman’이 감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군 내부 문제를 사회적 통제 아래 두고 있다. 국방 옴부즈만은 군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보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군에서도 시민사회·법조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독 체계는 부조리 척결을 선언이 아닌 구조로 고정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세 번째는 **내부고발 보호의 실질화**다. 부조리 척결이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미국 국방부는 감찰관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 이후 발생하는 인사상 불이익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¹⁾ 이는 조직 내 침묵 문화를 완화하는

1) 물론 이 제도 역시 완벽한 것이 아니다. 이들 감찰관들이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유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독자적 외부 감시구조의 구축이다. “미 국방부 前감찰관 “정부가 내부고발자 신원 수사기관에 제공” 『연합뉴스』(2016년 5월2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60523060400009> (검색: 2025년 12월10일)

핵심 장치로 작동해 왔다. 한국군에서도 내부고발 보호를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 안전장치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문화 개선과 신뢰 회복의 필수 조건이다.

3. 정책대안 B: 병역·인사·사법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성 개혁

- 두 번째 축은 ‘공정이 곧 안보’라는 인식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징병제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20대와 4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준다.
- 정책의 핵심은 **병역의 전 과정에서 설명 가능한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다. 선발·판정·분류·배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며, 예외가 기록되고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요구다.
- **인사 공정성 역시 동일한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 조직에서 진급과 보직은 개인의 경력과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사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납득되지 않을 경우, 조직문화는 빠르게 왜곡되고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렵다. 영국과 미국 군대의 경험에서도, **인사 절차의 문서화와 불복·재심 가능성 확보는 조직 신뢰 유지의 핵심 요소**로 적용해 왔다.
- **군 사법·징계 영역에서는 신속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군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건 그 자체보다, 처리 과정에서 은폐·지연·책임 회피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 군사사법제도는 반복적 비판 속에서도 절차와 권한 구조를 명문화함으로써 ‘임의적 처리’ 인식을 완화해 왔다. 한국군 역시 사법·징계 절차의 표준화와 피해자 보호의 자동화 없이는 ‘소프트 웨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 또한 **30대 예비군 세대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세대는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 기억으로 고착된 집단이며, 예비군 정책과 훈련 경험은 군에 대한 장기적 인식을 형성한다. **예비군 정책은 단순한 동원 논리가 아니라, 필요성·안전성·보상 체계를 통해 부정적 기억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4. 정책대안 C: ‘증액 요구’ 이전에 ‘가성비를 증명’하는 재정 개혁

- 세 번째 정책 축은 **국방비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저항은 안보 불감증이 아니라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역시 예산 확대 국면에서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다.

- 미국 국방부는 예산 비판이 거세질 때마다, **단순 증액 논리 대신 낭비 제거와 구조조정 성과를 먼저 제시해** 왔다. ‘Better Buying Power’와 같은 개혁 프로그램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을 전면에 내세워 예산 증액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북유럽 국가들 또한 국방비 논의에서 ‘얼마를 쓰는가’보다 ‘어떻게 쓰는가’를 강조하며, 장병 복지와 생활 여건 개선을 핵심 사용처로 명확히 설정해 왔다.
- 한국군에 제안되는 ‘**장병 복지 예산 쿼터제**’는 이러한 해외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방비 증액분의 일정 비율을 병사 인건비와 주거·생활 환경 개선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는, **국방비 증액이 곧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한다. 이는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실제 정책 신뢰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다.
- **급식, 피복, 주거와 같은 체감 복지 영역**은 장병 경험을 변화시키고, 그 경험이 사회로 확산되며 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러한 개선은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명과 결합될 때만 지속 가능한 신뢰로 이어진다.

5. 정책대안 D: 신뢰 형성의 채널을 재설계하는 전략적 소통과 지역 맞춤형 접근

- 네 번째 정책 축은 소통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군 신뢰 회복에서 소통은 홍보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제도 개혁의 결과를 사회와 연결하는 메커니즘**이다.
- 영국과 캐나다는 군 관련 논란 발생 시, 사실·경과·조치·재발 방안을 체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은폐’ 프레임을 최소화해 왔다. 이는 위기 대응이 아니라, **평시 신뢰 축적의 원칙으로 작동**한다. 또한 해외 미군 기지 인근 지역 사례에서 보듯, **군 신뢰 문제는 안보 인식보다 생활 피해와 보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군 협의체와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 한국에서도 **지역별 신뢰 요인은 상이**하다. 접경지역에서는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과 상생이 핵심이며, 대도시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투명성이 더 중요한 신뢰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일 메시지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지역별 신뢰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 **친근감 회복 역시 이벤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과 접촉하는 경험의 질, 즉 **민원 처리, 보상, 설명 책임의 수준이 누적되면서 친근감과 신뢰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통은 앞에서 제시한 영역에서의 제도 개혁 성과를 사회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마지막 고리**다. 구체적인 신뢰 회복 조치가 누적되지 않는다면 소통의 기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6. 결론

- 설문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군 신뢰의 문제는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며, 신뢰는 선언이나 홍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 영국, 북유럽 국가들이 경험했듯이, **투명성 강화, 공정성의 제도화, 예산 효율성의 증명, 그리고 변화된 신뢰 형성 환경(채널)에 맞춘 소통 전략이 결합될 때 군 신뢰는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 한국군 역시 동일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부조리 척결을 구조로 고정하고, 병역과 인사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며, 예산의 가성비를 먼저 증명하고, 제도 개혁의 성과를 사회와 연결할 때, **군 신뢰 회복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강군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군이 존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2025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제 5 장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와
정책적 함의**

제5장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와 정책적 함의

-요약문-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인구 절벽이라는 물리적 한계와 청년 세대의 권리 의식 상승이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충돌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보고서는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 국가가 개인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 '공정한 사회적 계약' 관계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진단했다.
- 분석 결과, 국민들은 병역 제도를 평가할 때 더 이상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절차적 공정성(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가)', '보상의 적절성(합당한 대가를 받는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이라는 세 가지 잣대를 통해 병역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병역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주고받는 기여와 보상의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구 절벽과 공정성 요구가 빚어낸 구조적 딜레마

- 병역 제도를 둘러싼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뚜렷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다. 국민들은 징병 대상의 선정과 예외(특례) 적용 과정이 특권 없이 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불공정한 면제나 특례는 제도의 신뢰를 부리째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한다.
- 둘째, 보상의 적절성 문제다. 청년들은 병역 이행을 '청춘의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며, 이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현실화와 사회적 존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열정 페이'나 '애국 페이'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경제적 보상 없는 의무 부과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인구 감소로 인해 현행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모병제나 혼합형 제도와 같은 대안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했다. 특히 접경지역에서 모병제 도입 찬성률(49.3%)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최전방 지역 주민들이 안보 공백을 우려하기보다, 오히려 숙련된 전문 군인이 지역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 기반의 실용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존을 위한 선택, '하이브리드 병역'으로의 전환

- 종합하면, 더 이상 '값싼 징병제'는 유효하지 않으며, 인구 구조와 국민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병역 제도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기존 징병제의 틀을 깨는 '혼합형 병역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 우선, 전문성의 강화다.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징집병이 아닌 모병(전문병)으로 채우고, 이들에게는 사회적 수준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 또한,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수적이다. 이스라엘 모델과 같이 평시에도 일정 기간 복무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파트타임 상비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동원 훈련을 넘어, 병력 감축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다.
- 결론적으로, 병역은 이제 '희생'이 아닌 '기여'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가는 청년들의 헌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존중이라는 확실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무너진 사회적 계약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가. 병역제도 및 병역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와 정책적 함의

1. 병역제도 인식의 개념적 정의

- 현재의 병역제도 관련 인식을 단순한 제도 만족도 평가가 아닌,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청년 세대의 권리 의식이 충돌하는 '구조적 딜레마'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즉, 병역을 국가가 개인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신성한 의무'로 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 '공정한 사회적 계약'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병역 인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절차적 공정성, 보상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으로 정의한다. '절차적 공정성'은 징병 대상 선정 및 예외(특례) 적용 과정이 특권 없이 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며, '보상의 적절성'은 청년기의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급여와 사회적 존중이 제공되는지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위기를 국민이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지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모병제 전환 등 대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측정한다.

2. 기초통계분석 개요: 5대 심층 분석 차원의 적용

- 상기 정의된 개념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설계된 '다섯 차원'을 적용하여 병역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갈등 구조를 심층 분석한다.
- 첫째, 세대 간 인식 격차 차원에서는 병역을 '당연한 희생'으로 여기는 기성세대와 달리, '독박 징병'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20대 남성(이대남)의 인식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이 '손해'가 아닌 '자부심'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보상의 수준을 세대별 시각차로 분석한다.
- 둘째, 정치적 태도 상호작용 차원에서는 모병제 전환이나 여성 징병 이슈가 안보적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표심 잡기)으로 소비되는 경향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에 대한 합리적 여론을 식별한다.
- 셋째, 정서 및 정보환경 차원에서는 군 복무 경험이 개인에게 주는 정서적 효능감(리더십 등)과 박탈감(시간 낭비 등)을 분석하고,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군 비하 문화가 병역 기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넷째, 전략적 공간 구획 차원에서는 격오지(GOP/해안)와 도심 근무 간의 복무 환경 격차에 따른 ‘보상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비상근 예비군 제도 등 지역 기반 병력 활용 방안의 수용성을 검토한다.
- 다섯째, 정책 민감도 차원에서는 병사 월급 인상이나 복무 기간 단축 등 보상 정책 제시 시 병역 이행 의사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상승하는지를 측정하여 정책 효과를 예측한다.

3. 지수 개발 개요

- 인구 절벽으로 인한 현행 징병제의 붕괴 위기를 경고하고 새로운 병역 시스템 도입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유한 ‘병역제도 수용성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 이 지수는 병역 제도의 공정성, 보상 만족도, 군 복무의 사회적 효용감 변수를 종합하여 산출된다. 분석의 최종 목표는 이 지수를 통해 현행 징병제 시스템이 유지 가능한 ‘사회적 임계점’이 어디인지를 진단하고, 징병·모병 혼합제나 유인·무인 복합체계 도입 등 미래형 병역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정성과 보상의 가이드라인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나. 기초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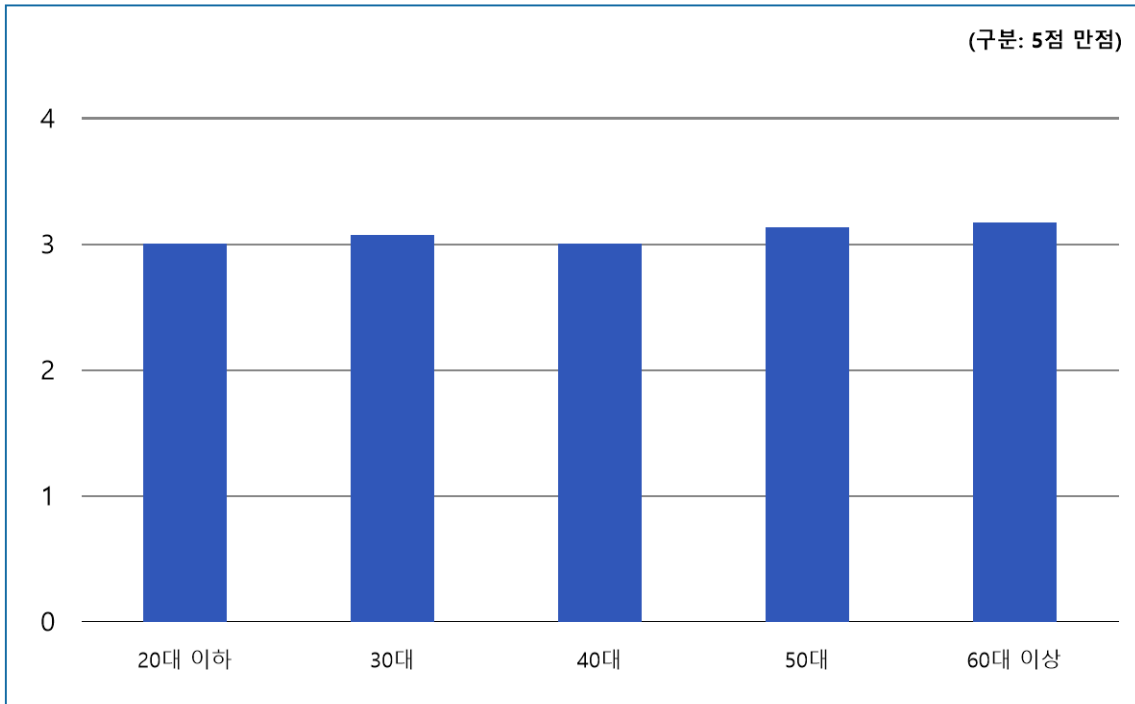
1. 세대 간 인식 격차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제도 공정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평균비교)
 - 분석 2 (미래 대안):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Q68 / 교차분석)
 - 분석 3 (병영 문화):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Q71 / 평균비교)
 - 분석 4 (경험 가치):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Q44 / 평균비교)
 - 분석 5 (특혜 인식): 예술·체육·과학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Q70 / 교차분석)

1) 제도 공정성: "당사자 세대의 불신"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징병제 공정성	3.00	3.07	3.00	3.13	3.17

그림 5-1 연령별 징병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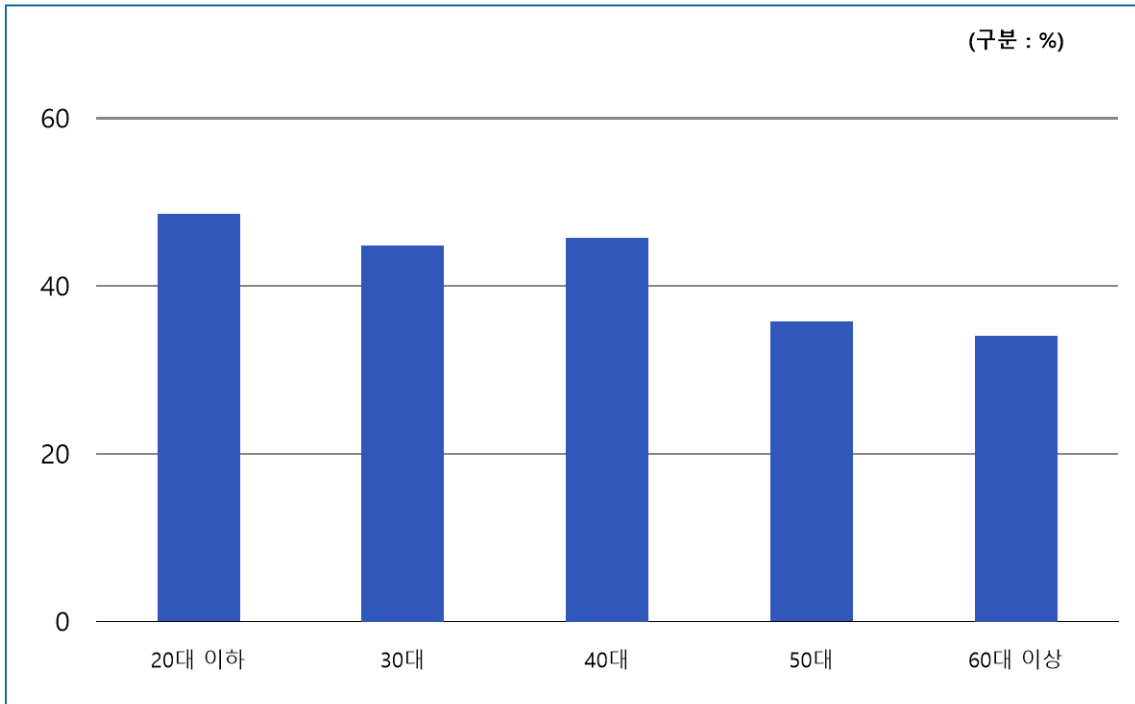


- 현역 복무 대상인 **20대(3.00점)**와 부모 세대인 **40대(3.00점)**가 징병제 공정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징병제는 전 세대에서 3.0~3.1점 수준의 '턱걸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적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2) 미래 대안: "청년층의 모병제 선호 뚜렷"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병제 도입 찬성	48.5	44.8	45.7	35.7	34.0

그림 5-2 연령별 모병제 도입 찬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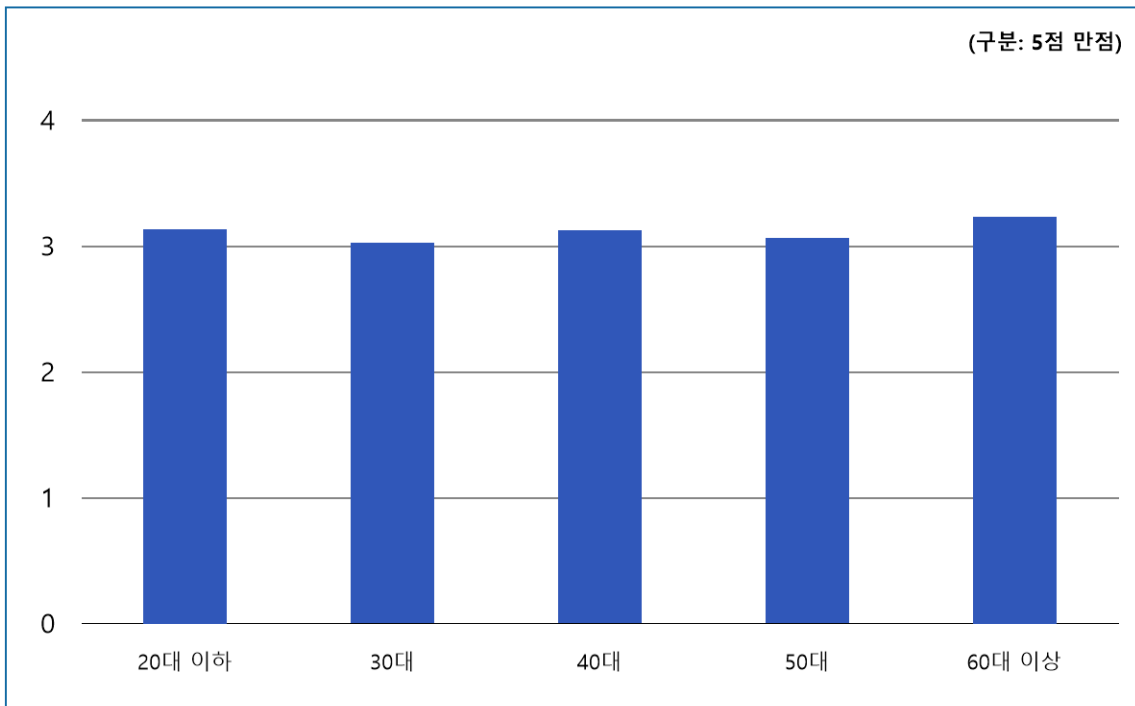


- **20대 이하(48.5%)**의 절반 가까이가 모병제 전환을 지지하여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50대 이상은 30%대 중반에 그쳐 징병제 유지를 선호하는 보수적 경향이 뚜렷했다.

3) 병영 문화: "30대의 인권 불감증 경보"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 인권 보장	3.13	3.02	3.12	3.06	3.23

그림 5-3 연령별 군 인권 보장 필요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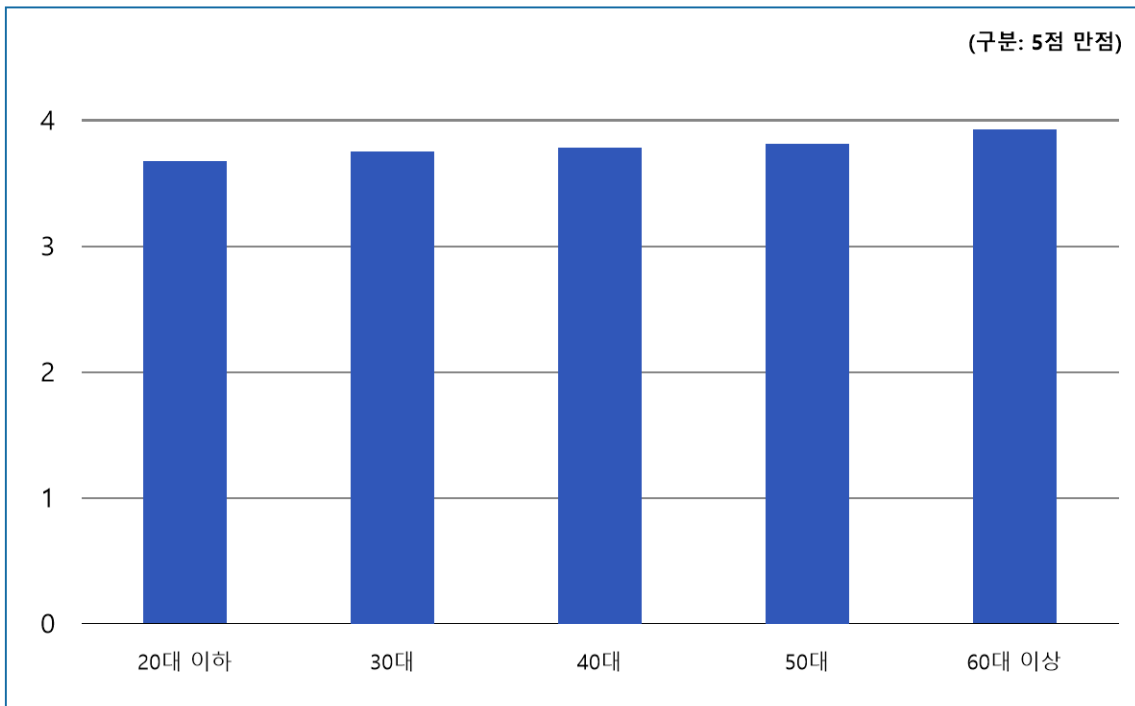


- 군 복무 기억이 생생한 **30대(3.02점)**가 군 인권 보장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는 20대(3.13점)보다도 낮은 수치로, 30대가 복무했던 시기의 부정적 경험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4) 경험 가치: "군 복무 가치의 세대 하락"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회생활 도움	3.67	3.75	3.78	3.81	3.92

그림 5-4 연령별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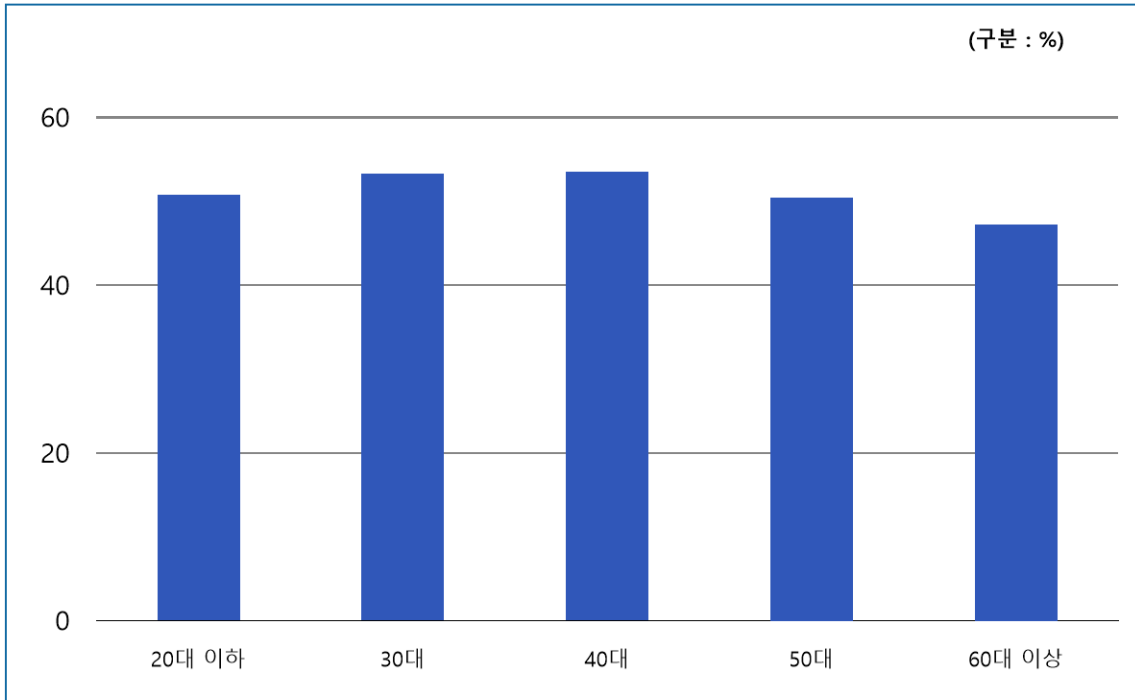


- 고연령층일수록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반면, **20대(3.67점)**는 그 효용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청년들에게 군대는 더 이상 '사람 되어 나오는 곳'이 아닌 '경력 단절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5) 특혜 인식: "특례 축소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특례 축소/폐지	50.7%	53.2%	53.4%	50.4%	47.2%

그림 5-5 연령별 예술·체육·과학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축소/폐지 지지 차트



- 30대(53.2%)와 40대(53.4%)를 필두로 전 세대 과반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축소/폐지에 찬성했다.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3040세대가 특혜 축소를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공정성 위기와 모병제 요구의 결합:
 - 징병제 공정성에 가장 불만을 가진 20대는 그 대안으로 '모병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즉, 청년들에게 모병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불공정한 강제 복무'를 해결할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된다.
- 군 경험 가치의 급락:
 - 과거에는 군 복무가 '남성됨의 통과 의례'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으나, 취업난과 스펙 경쟁이 치열한 20대에게는 **명백한 손해**로 인식되고 있다(3.67점 최저).
- 30대의 트라우마:
 - 30대는 인권 평가(3.02점)에서 전 세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군 생활의 기억이 '자부심'보다 '고통'이나 '부조리'로 남아있어, 사회에 나와서도 군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견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애국페이'의 종말:
 - 더 이상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만으로는 20대의 박탈감을 위로할 수 없다. 군 경험이 사회 진출에 실질적 이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특례 제도의 전면 재검토:
 - 3040세대의 높은 특례 축소 요구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예외 조항이 병역 제도의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임을 보여준다.
- "군 경력 인증" 법제화:
 - 군 복무 기간을 단순 호봉 인정이 아니라,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학점 인정, 기업 인턴십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법제화하여 '경력 단절'을 '경력 개발'로 프레임 전환해야 한다.
- 병역특례 일몰제 및 투명성 강화:
 - 특례 축소 여론(53%)을 반영하여, 예술·체육 요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선발 과정을 대국민 공개 오디션처럼 투명화하여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 "한국형 모병제 로드맵" 공론화:
 - 20대의 높은 지지(48.5%)와 인구 절벽을 고려하여, 완전 모병제가 아니더라도 '징-모 혼합제(전문병사 확대)' 등 병역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50대 기성 세대와 함께 출범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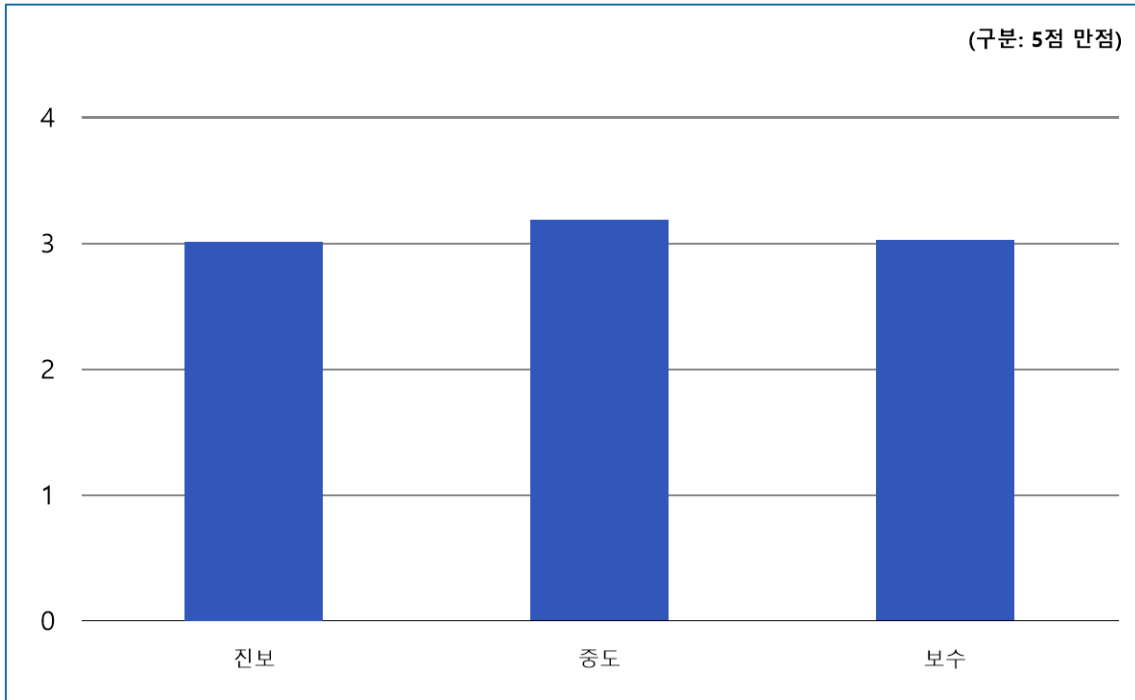
2. 정치적 태도와 정책 신뢰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개인 성향 (DQ8) (진보 / 중도 / 보수)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제도 공정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평균비교)
 - 분석 2 (미래 대안):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Q68 / 교차분석)
 - 분석 3 (병영 문화):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Q71 / 평균비교)
 - 분석 4 (특혜 인식): 예술·체육·과학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Q70 / 교차분석)
 - 분석 5 (경험 가치):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Q44 / 평균비교)

1) 제도 공정성: "이념을 초월한 공정성 위기"

구분 (5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징병제 공정성	3.01	3.18	3.02

그림 5-6 개인 성향별 징병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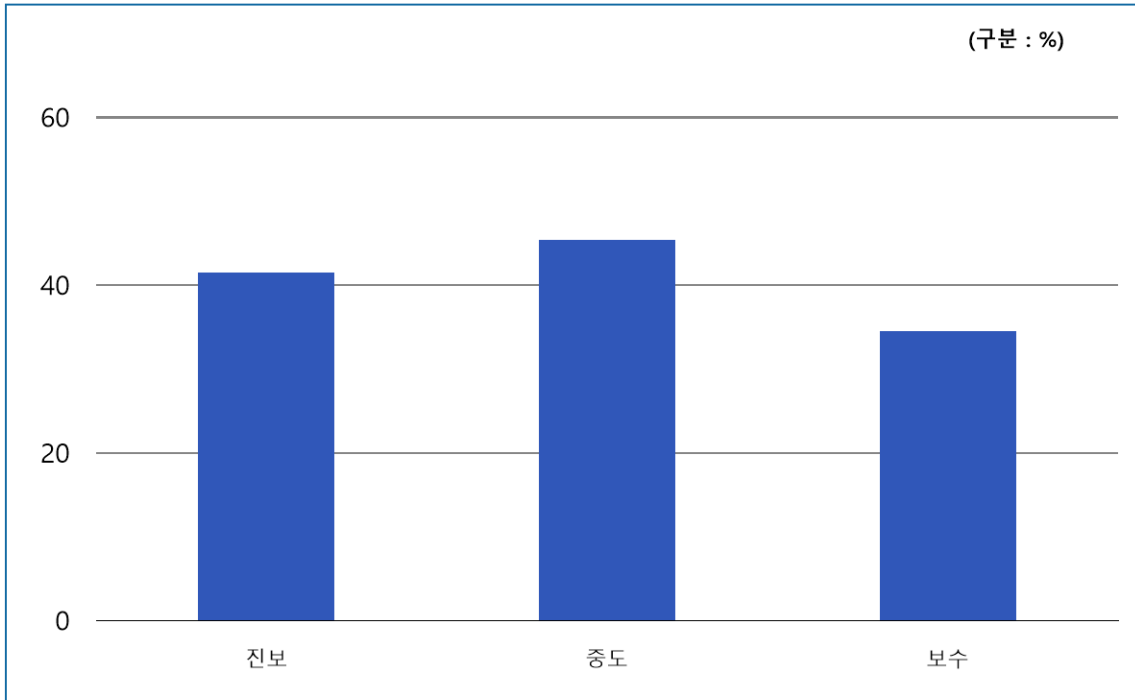


- 징병제 공정성은 진보(3.01점)와 보수(3.02점)가 거의 동일하게 낮게 평가했다. 오히려 정치색이 옅은 중도층(3.18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병역 제도의 불공정성(징병 기준, 예외 등)은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불만이 누적된 '초당적 난제'임을 보여준다.

2) 미래 대안: "중도층의 강력한 모병제 선호"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모병제 도입 찬성	41.4	45.3	34.4

그림 5-7 개인 성향별 모병제 도입 찬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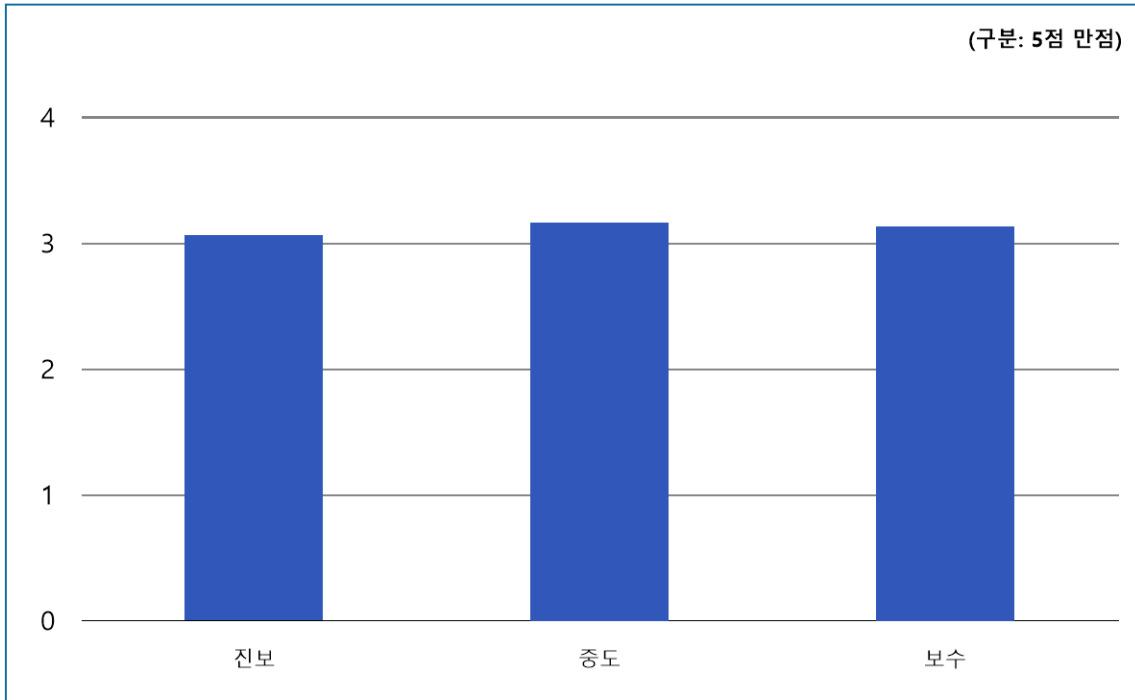


- 모병제 도입에 대해 **중도층(45.3%)**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보수층(34.4%)이 가장 낮았다. 기존의 '진보=모병제, 보수=징병제' 공식이 약화되고, 실용주의 성향의 중도층이 인구 절벽 시대의 현실적 대안으로 모병제를 주목하고 있다.

3) 병영 문화: "진보의 인권 감수성 vs 보수의 긍정 평가"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인권 보장 체감	3.06	3.16	3.13

그림 5-8 개인 성향별 인권 보장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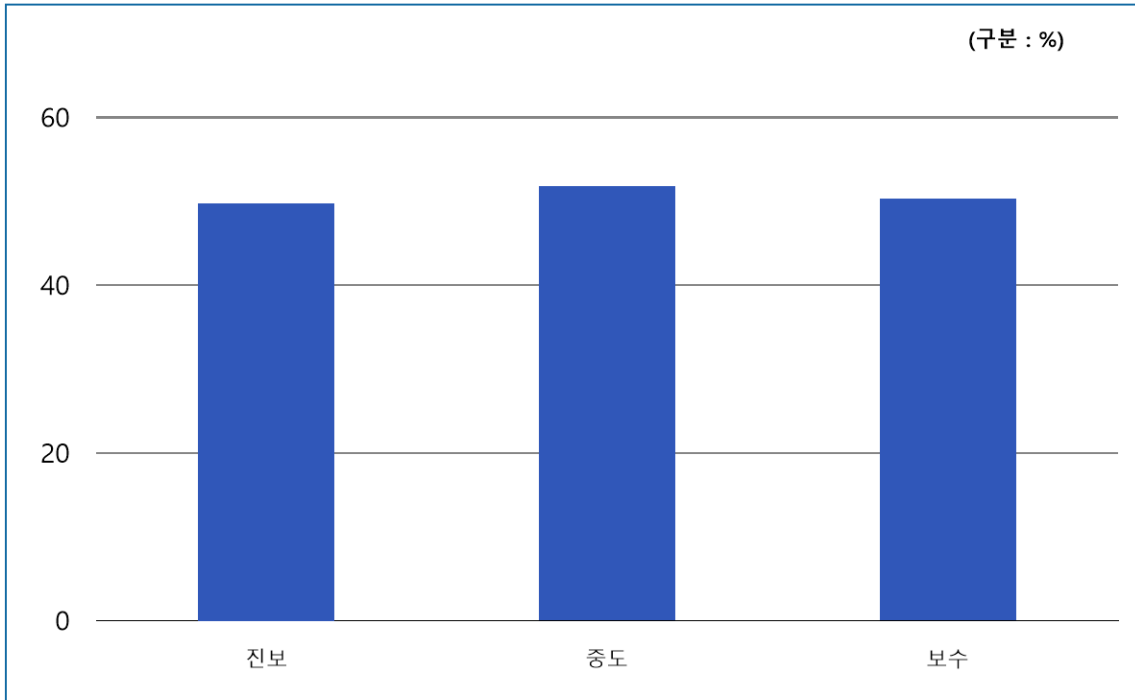


- 군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해 **진보층(3.06점)**이 가장 낮게 평가했다. 중도(3.16)와 보수(3.13)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나, 전반적으로 '보통(3.0)' 수준을 겨우 턱걸이하고 있어 병영 문화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지 않다.

4) 특혜 인식: "특례 축소는 국민적 합의 사항"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특례 축소/폐지	49.7	51.7	50.2

그림 5-9 개인 성향별 예술·체육·과학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특례 축소/폐지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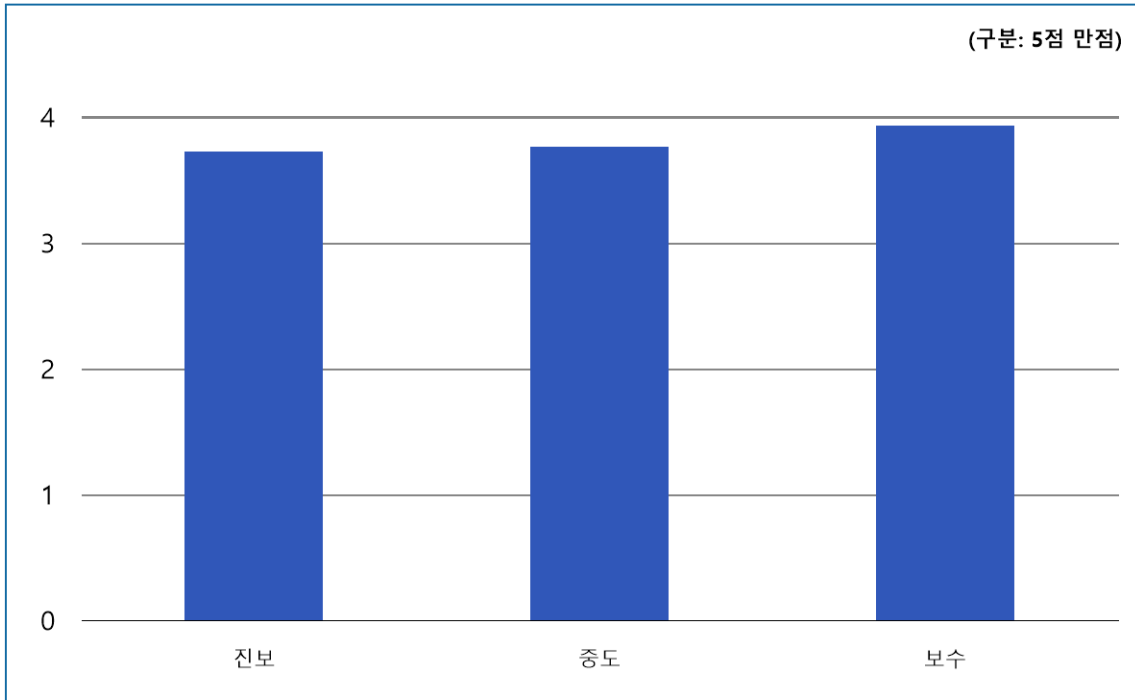


- 예술·체육 요원 등 병역특례 축소/폐지에 대해 진보(49.7%), 중도(51.7%), 보수(50.2%) 모두 과반 내외의 찬성률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병역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공정성 원칙이 국민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5) 경험 가치: "보수의 높은 가치 부여"

구분 (5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사회적 유용성	3.72	3.76	3.93

그림 5-10 개인 성향별 군복무 경험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차트



-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보수층(3.93점)에서 가장 높고, 진보층(3.72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수층은 군 경험을 '시민성 함양의 기회'로 보는 전통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공정성 이슈의 탈정치화:
 - 병역 특례 축소와 징병제 불공정 인식은 진보와 보수가 완벽하게 동조하고 있다. 이는 병역 정책 개혁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민생 공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 모병제 논의의 주도권 이동:
 - 모병제는 더 이상 급진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며, 중도층과 무당층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되었다. 이는 2030세대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 인권과 가치의 괴리:
 - 진보층은 군 경험의 유용성은 낮게 보고 인권 상황은 비판적으로 보지만, 병역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공정성 요구). 보수층은 군 경험을 높게 평가하지만, 모병제 전환에는 소극적인 '현상 유지' 성향을 보인다.
- 개혁의 골든타임:
 - 병역특례 축소 등 '공정성 강화' 조치는 여야 지지층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치적 부담 없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다.
- 중도층 설득의 키:
 - 중도층의 높은 모병제 선호는 '징병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작용이다. 완전 모병제가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병역특례 일몰제 및 전수 조사" 추진:
 - 진보(49.7%)와 보수(50.2%)가 모두 동의하는 특례 축소 여론을 반영하여, 예술·체육·산업 기능요원 제도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병역 공정성 강화 로드맵**'을 여야 합의로 발표해야 한다.
- "징-모 혼합형 스마트 강군" 비전 제시:
 - 모병제 선호도가 높은 중도층과 인권에 민감한 진보층을 위해, 징병제를 유지하되 전문 특기병은 모병으로 선발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국형 혼합 병역제도**'를 공론화해야 한다.
- "군 복무 사회적 인증제" 확대:
 - 군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군 복무 경력이 공무원 채용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채용, 국가 자격증 취득 등에서 실질적인 '스펙'으로 인정받도록 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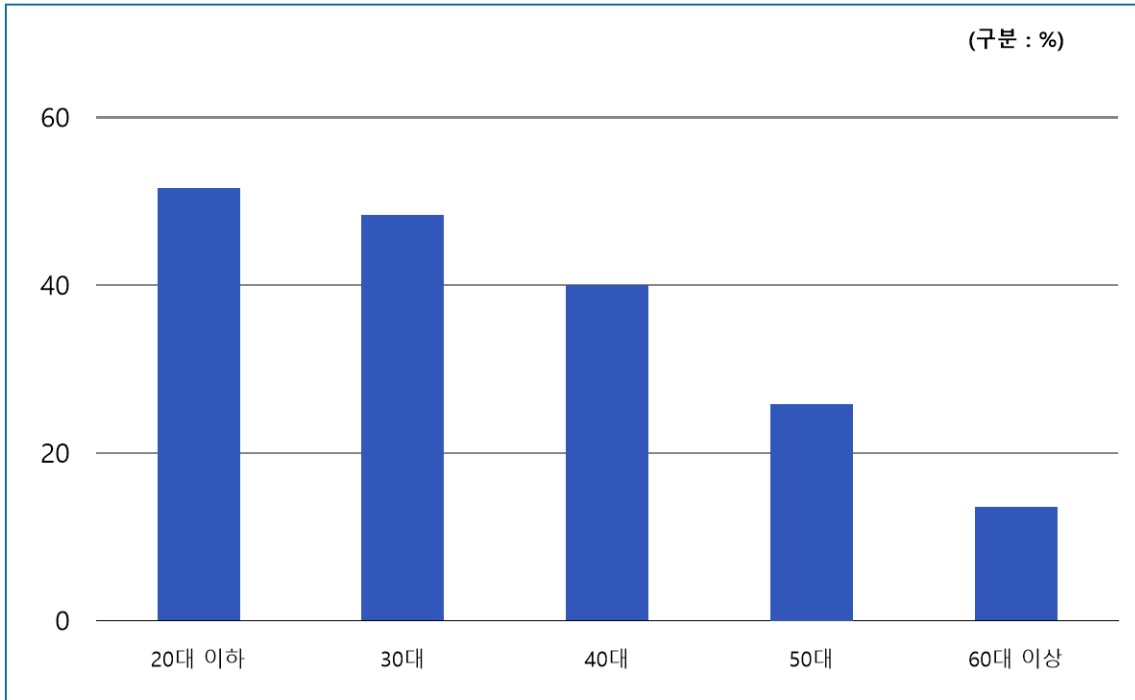
3. 정서적 변수와 정보환경 변화가 정책 수용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정보 환경):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Q64_1 / 비율비교)
 - 분석 2 (정서적 태도):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_5) 친근하다 (Q66_5 / 평균비교)
 - 분석 3 (정서적 신뢰):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Q71 / 평균비교)
 - 분석 4 (정책 수용 - 공정):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평균비교)
 - 분석 5 (정책 수용 - 변화):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Q68 / 비율비교)

1) 정보 환경: "2030의 유튜브 병영 학습"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뉴미디어 의존도	51.5	48.3	39.9	25.8	13.5

그림 5-11 연령별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시 뉴미디어 의존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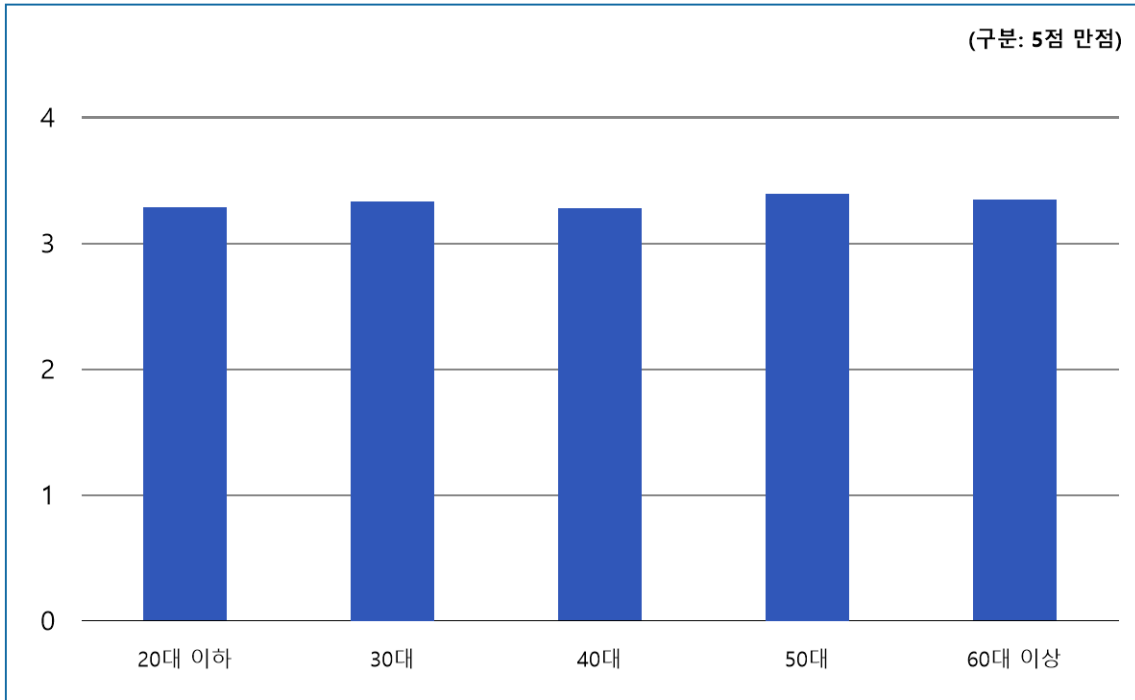


- **20대 이하(51.5%)**와 **30대(48.3%)**의 절반가량은 뉴미디어를 통해 군 소식을 접했다. 60대 이상(13.5%)과는 정보의 원천이 완전히 다르다. 청년층은 유튜브나 커뮤니티의 '병영 부조리 고발' 콘텐츠나 '군대 셀'을 통해 군을 간접 경험하며, 이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감정적 파급력이 크다.

2) 정서적 태도: "친근하지 않은 군대"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군에 대한 친근감	3.28	3.33	3.27	3.39	3.34

그림 5-12 연령별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친근감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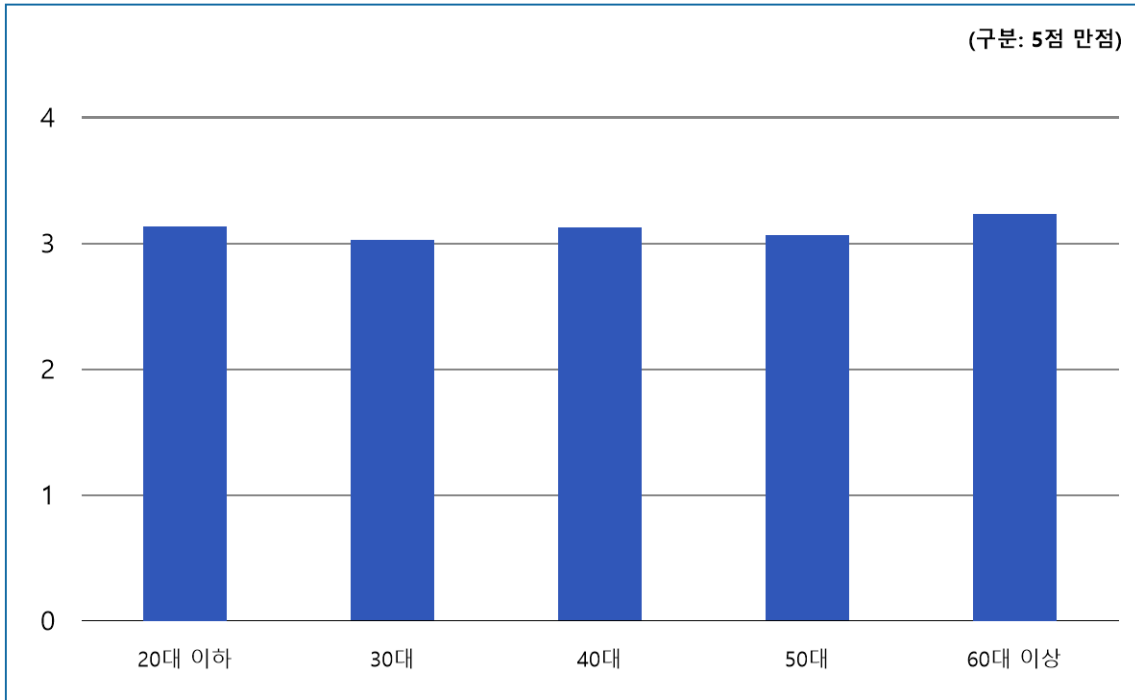


- 군에 대한 친근감은 40대(3.27점)와 20대(3.28점)에서 가장 낮았다. 가장 활발한 정보 소비자(20대)와 부모 세대(40대)가 군에 대해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3) 정서적 신뢰: "30대의 인권 트라우마"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권 보장 체감	3.13	3.02	3.12	3.06	3.23

그림 5-13 연령별 군대 내 인권 보장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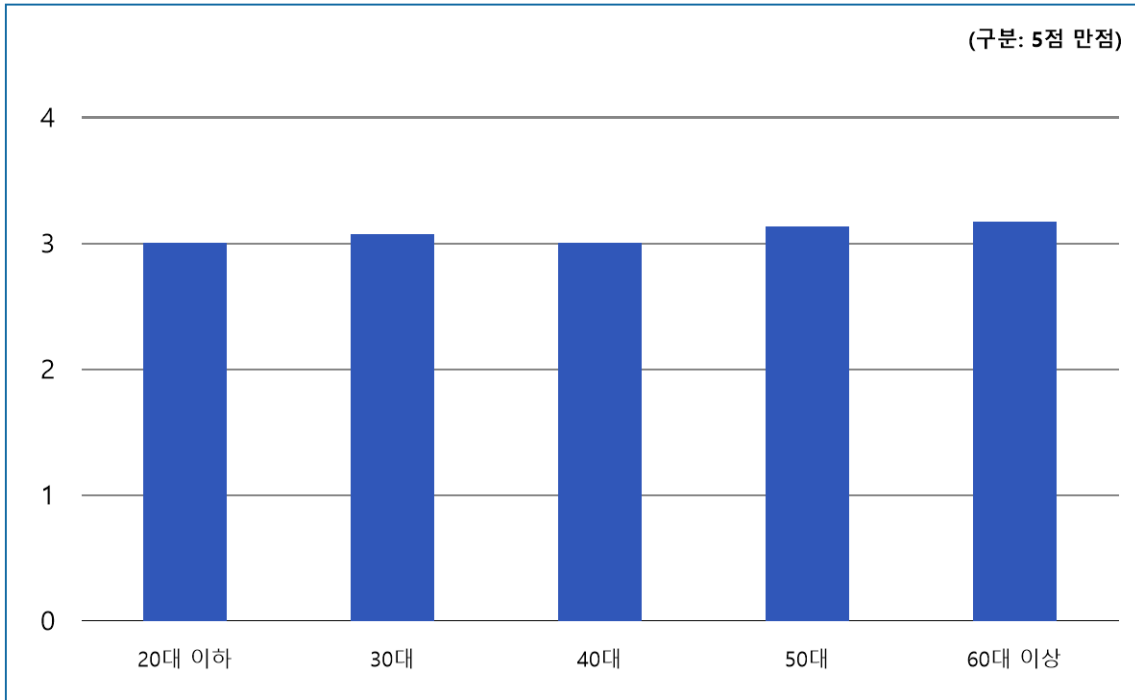


- 군 인권 보장 체감도는 **30대(3.02점)**에서 가장 낮아 '낙제점(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군 복무의 기억이 생생한 30대가 느끼는 이 '정서적 불신'이 군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진다.

4) 정책 수용 - 공정: "낮은 친근감과 공정성 불만"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징병제 공정성	3.00	3.07	3.00	3.13	3.17

그림 5-14 연령별 징병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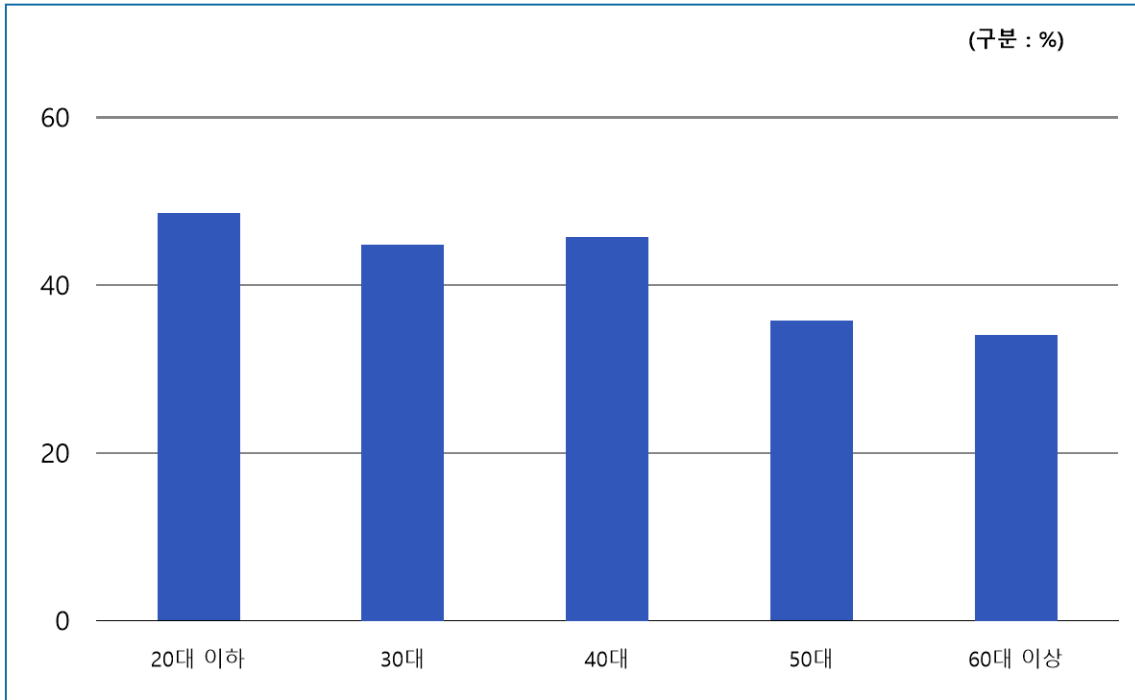


- 친근감이 가장 낮은 **20대(3.00점)**와 **40대(3.00점)**가 징병제 공정성 역시 가장 낮게 평가했다. 군에 대한 '비호감(정서)'이 제도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5) 정책 수용 - 변화: "디지털 세대의 탈출구, 모병제"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병제 도입 찬성	48.5	44.8	45.7	35.7	34.0

그림 5-15 연령별 모병제 도입 찬성 차트



- 뉴미디어 의존도가 높고 공정성 인식이 낮은 **20대(48.5%)**와 **40대(45.7%)**에서 모병제 도입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이들에게 모병제는 단순한 정책 대안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비호감인 징병 시스템으로부터의 '**정서적 탈출구**'로 인식된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알고리즘이 키운 '불공정 감각':
 - 20대는 유튜브 등을 통해 군대의 부조리나 열악한 처우 사례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분노(정서)를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 정서가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를 '불공정한 것'으로 낙인찍게 만든다.
- 3040의 '정서적 동조':
 - 30대(경험자)와 40대(부모)는 군에 대한 친근감이 낮고 인권 상황을 불신한다. 이들은 모병제와 같은 급진적 변화를 지지하며 기존 징병 체계에 대한 '**정서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 정책 소통의 실패:
 - 군은 '신성한 의무'를 강조하지만, 정작 국민(특히 청년)은 군을 '친근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느낀다. 이 정서적 괴리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다.
- 감정이 정책을 이긴다:
 - 아무리 징병제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군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이라는 정서적 장벽을 넘지 못하면 공정성 시비는 계속될 것이다.
- 매체 전략의 전면 수정:
 - 청년층이 정보를 얻는 뉴미디어 공간에서 군의 이미지는 '통제'와 '부조리'로 소비되고 있다. 이를 상쇄할 '소통'과 '존중'의 콘텐츠가 절실하다.
- 병영 생활 팩트체크 및 소통 채널:
 - 폐쇄적인 국방뉴스 대신, 병사들이 직접 휴대폰 사용, 급식, 여가 생활 등 '**달라진 병영의 진짜 모습**'을 브이로그 형태로 공유하는 숏폼 챌린지를 활성화하여, 뉴미디어 상의 '왜곡된 군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 "군 인권 옴부즈만 리포트" 발송:
 - 인권 불신이 깊은 3040세대를 위해, 군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처리 결과, 개선 현황을 투명하게 담은 '**인권 소식지**'를 카카오톡이나 앱으로 정기 발송하여 "군대가 숨기지 않고 바뀌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 "모병제 공론화 위원회" 출범:
 - 20대와 40대의 높은 모병제 요구(약 46~48%)를 수용하여, 무조건적 반대 대신 '징-모 혼합제' 등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적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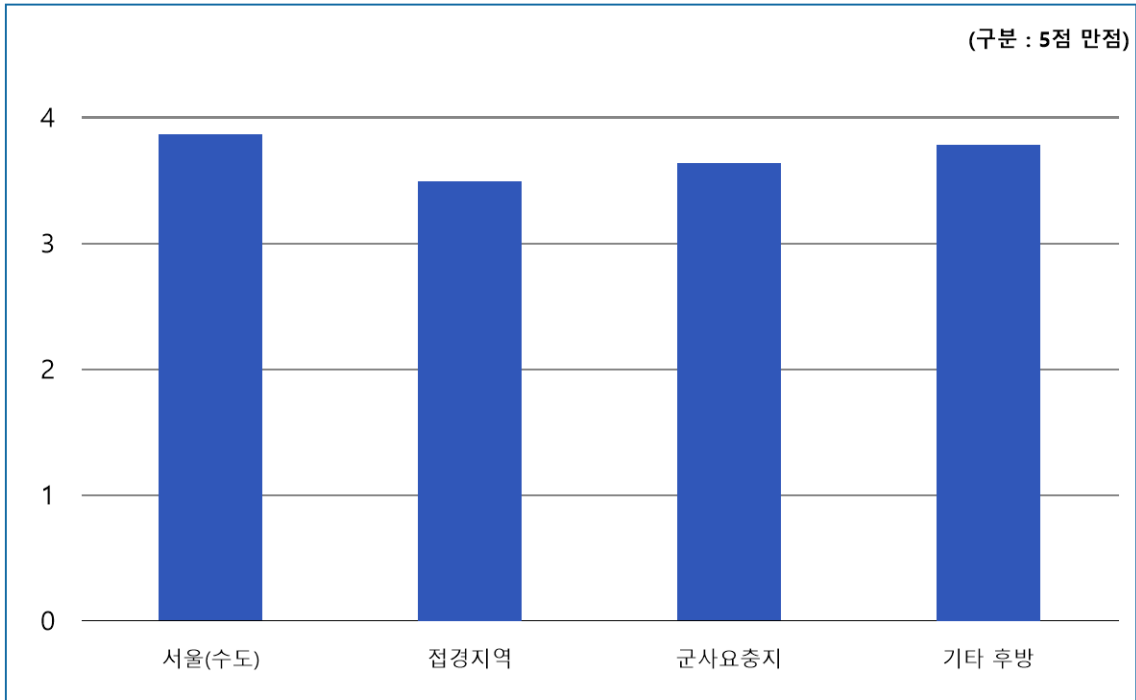
4. 전략적 공간 구획(접경/군 주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지역 (PQ3)
 - 서울(수도): 국방 정책의 중심이자 여론 주도 지역
 - 접경지역(인천/경기/강원): 군부대 밀집 및 군사 훈련 빈번 지역
 - 군사요충지(대구/경북): 후방 사령부 및 주요 군사 시설 소재지
 - 기타 후방지역: 직접적 군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지역 수용성):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Q49 / 평균비교)
 - 분석 2 (제도 공정성):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평균비교)
 - 분석 3 (병영 문화):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Q71 / 평균비교)
 - 분석 4 (정책 대안):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Q68 / 비율비교)
 - 분석 5 (경험 가치):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Q44 / 평균비교)

1) 지역 수용성: "접경지역의 희생 감수"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지역발전 기여	3.86	3.49	3.63	3.78

그림 5-16 지역별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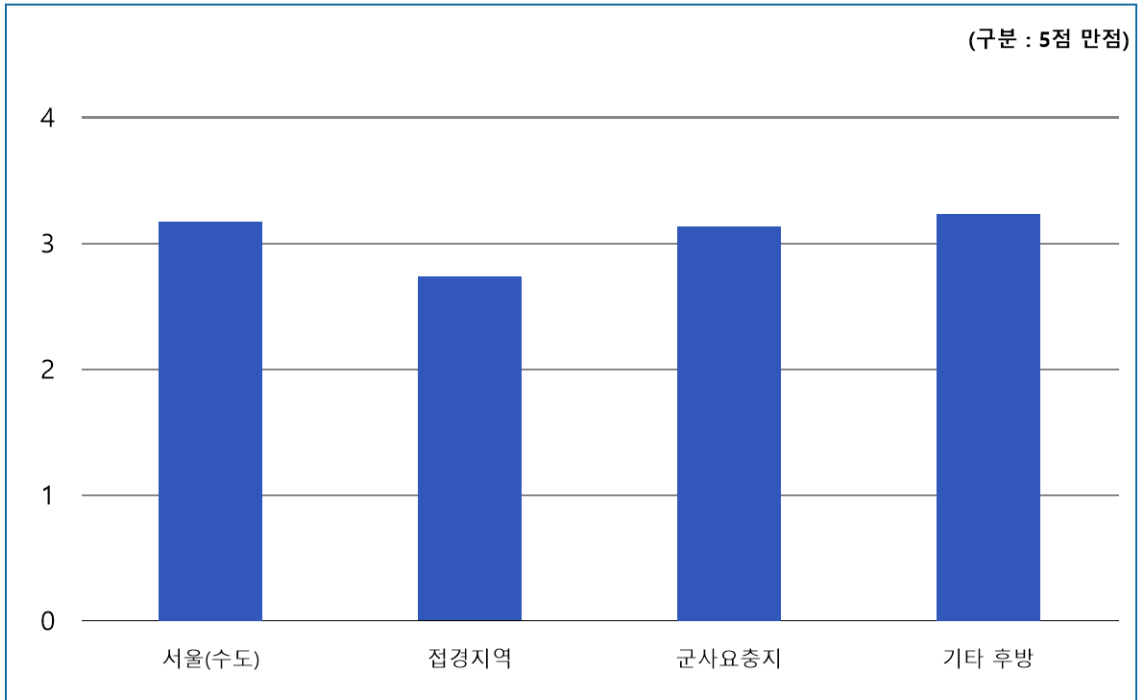


- 군 주둔이 지역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인식은 **서울(3.86점)**에서 가장 높지만, 실제 군과 일상을 함께하는 **접경지역(3.49점)**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안보의 혜택을 누리면서 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접경지역은 개발 제한과 소음 등 실질적 피해로 인해 군의 존재를 '발전 저해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2) 제도 공정성: "접경지역의 불공정 인식 심화"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징병제 공정성	3.17	2.73	3.13	3.23

그림 5-17 지역별 징병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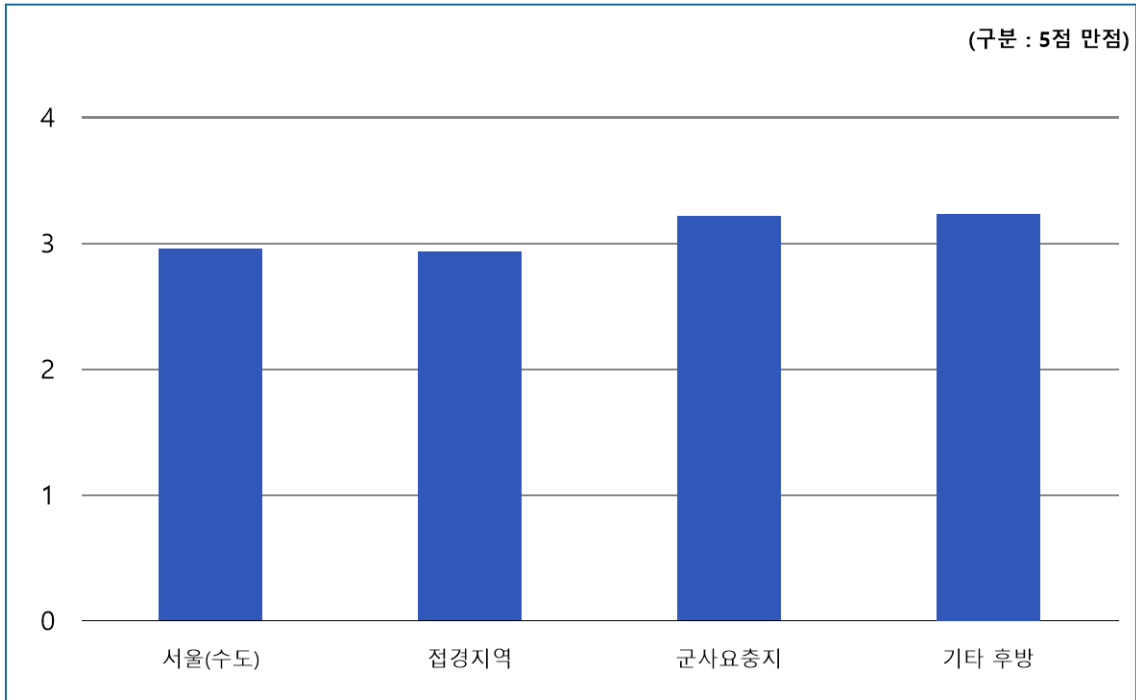


- 징병제 공정성 인식은 **접경지역(2.73점)**에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타 지역(3.1~3.2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군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병역 제도의 운영 방식이나 처우에 대해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병영 문화: "수도권과 접경지의 인권 우려"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인권 보장 체감	2.95	2.93	3.21	3.23

그림 5-18 지역별 군대 내 인권 보장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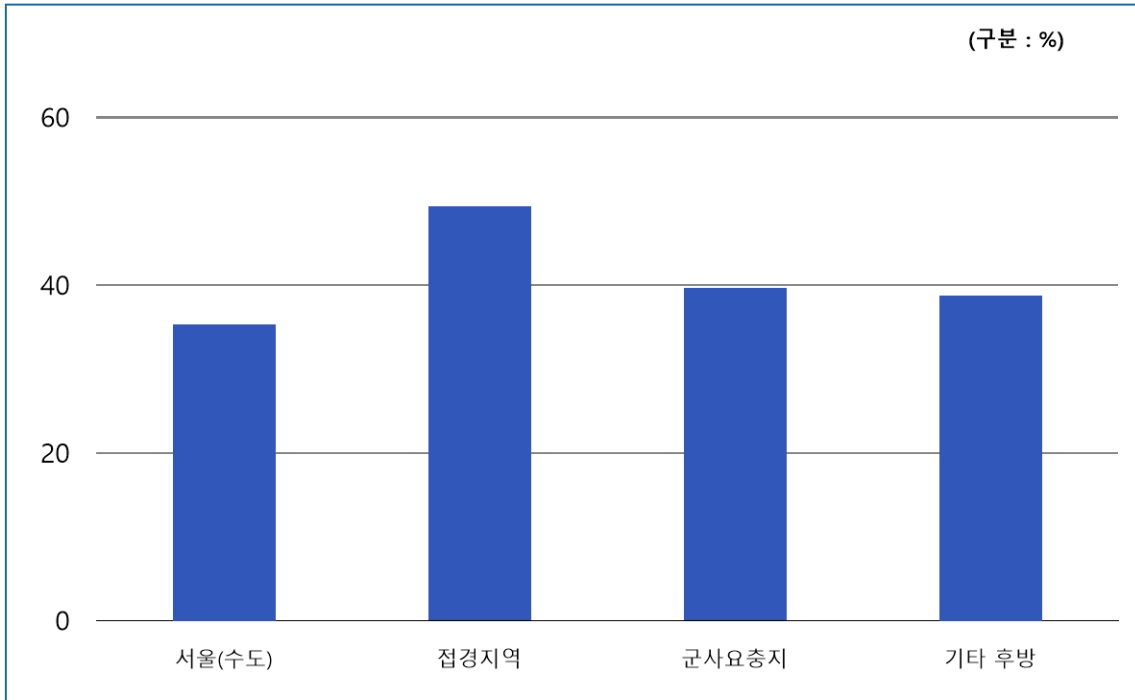


- 군 인권 보장 체감도는 **접경지역(2.93점)**과 **서울(2.95점)**에서 모두 3.0점 미만의 '낙제점'을 기록했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서울과 현장을 목격하는 접경지역 모두 군대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 반면, 후방지역은 상대적으로 긍정적(3.2점대)이다.

4) 정책 대안: "접경지역의 강력한 모병제지지"

구분 (%)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모병제 찬성	35.3	49.3	39.6	38.7

그림 5-19 지역별 모병제 찬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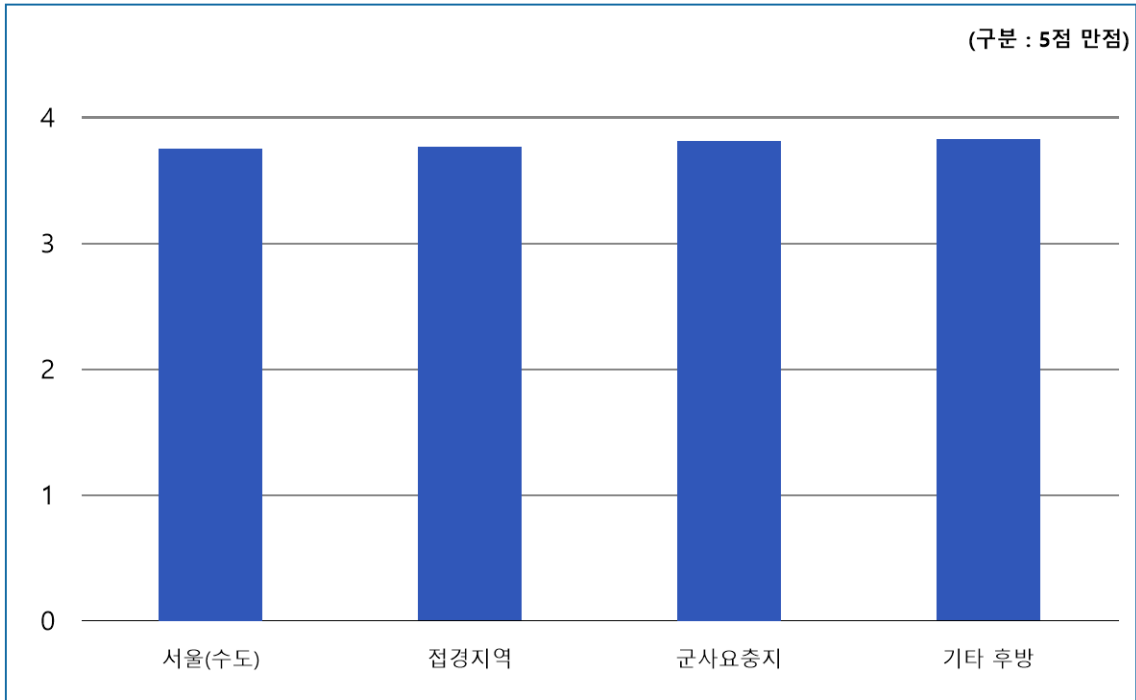


- 모병제 도입 찬성률은 **접경지역(49.3%)**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35.3%)과는 약 14%p의 격차를 보인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모병제는 단순한 병역 제도 변경이 아니라, '비자발적 징병'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사고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된다.

5) 경험 가치: "지역 불문, 군 복무 가치 인정"

구분 (5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사회적 유용성	3.75	3.76	3.81	3.82

그림 5-20 지역별 군복무 경험의 사회적 유용성 인식 차트



-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지역별 큰 차이 없이 3.7~3.8점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도에 대한 불만(공정성, 모병제)과는 별개로, 군 복무 경험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접경지역의 '이중고'와 정책 저항:
 - 접경지역은 지역 발전 저해와 징병제 불공정을 동시에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징병제 유지가 아닌 '모병제 전환'을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변화의 진원지**'가 되었다.
- 서울의 '비판적 지지':
 - 서울은 군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인권 문제에는 민감하며, 모병제 전환에는 신중하다. 즉, "**제도는 유지하되 인권은 개선하라**"는 개혁적 보수 성향을 보인다.
- 거리와 인식의 반비례:
 - 군 부대와 거리가 멀수록(후방지역)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권 평가가 후한 경향이 있다. 이는 군의 현실을 직접 접하지 않는 데서 오는 '막연한 긍정'일 가능성이 있다.
- 현장이 답이다:
 - 접경지역의 낮은 공정성 인식과 높은 모병제 요구는, 현재의 징병 시스템이 현장에서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다.
- 지역별 보상 체계의 차별화:
 - 접경지역에는 '희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서울 등 도시 지역에는 '투명성과 인권 가치 제고'를 제공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 "지역 상생형 모병제 시범 실시" 검토:
 - 모병제 요구(49.3%)가 가장 높은 접경지역 부대를 대상으로, 전문 하사관이나 군무원을 지역 주민 우선으로 선발하는 '부분적 모병제'를 시범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
- "군 인권 모니터링 센터" 시민 참여 확대:
 - 인권 감수성이 높고 군에 대한 불신(2.95점)이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군 인권 감시단'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군 복무 사회적 가치 인증" 제도화:
 - 전 지역에서 군 복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국가가 인정하는 실질적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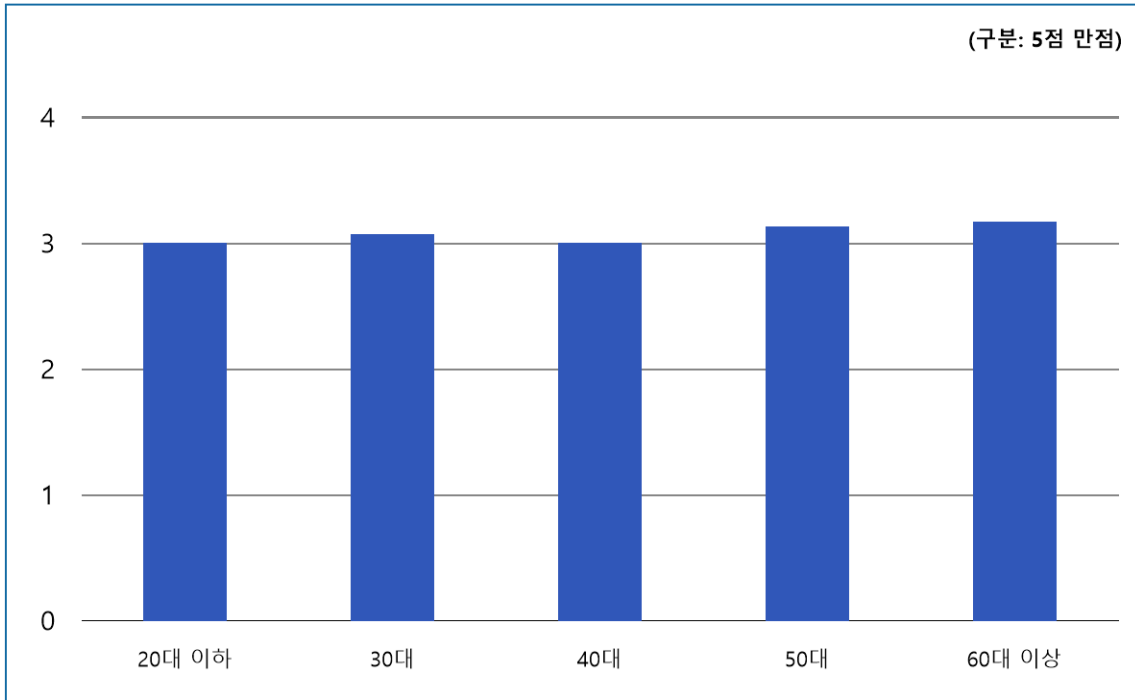
5. 장기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민감도 지수' 개발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프레임: '정책 민감도'를 5가지 차원으로 정의
 - 지표 1 (공정성 민감도): 징병제에 대한 의견 (Q67 / 5점 만점)
 - 지표 2 (인권 민감도): 군대 내 인권 보장 정도 (Q71 / 5점 만점)
 - 지표 3 (개혁 민감도):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Q68 / 비율비교)
 - 지표 4 (효용 민감도): 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Q44 / 5점 만점)
 - 지표 5 (형평성 민감도): 예술·체육·과학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의견 (Q70 / 비율비교)

1) 공정성 민감도: "당사자(20대)와 부모(40대)의 불만 연대"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정성 인식	3.00	3.07	3.00	3.13	3.17

그림 5-21 연령별 징병제에 대한 공정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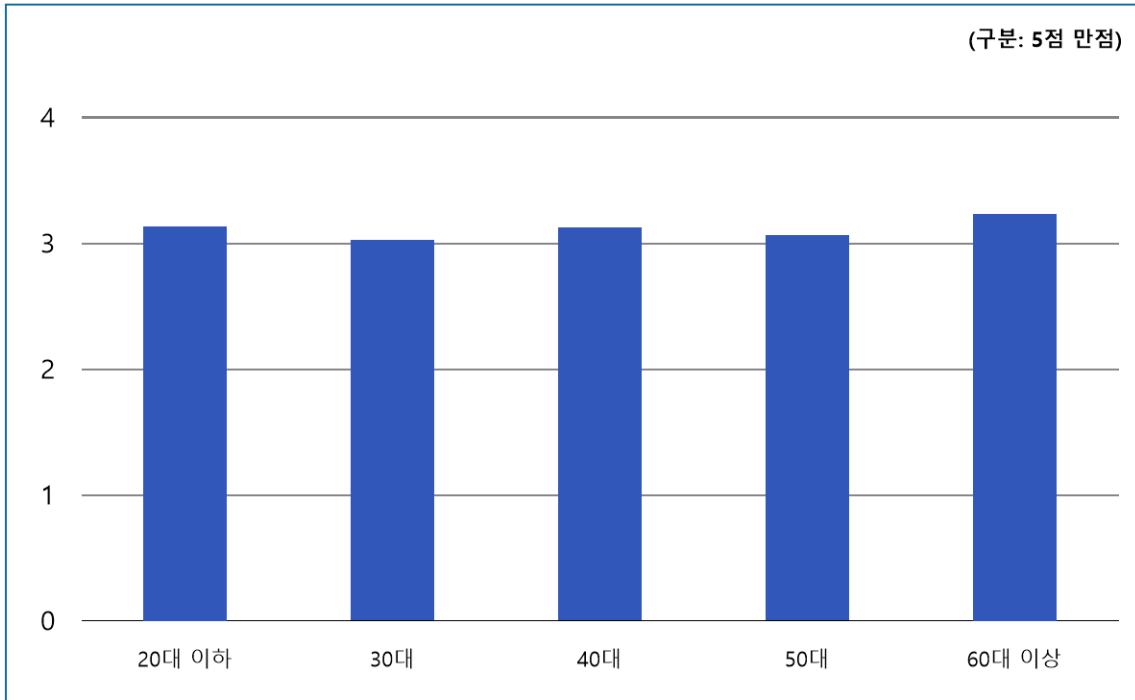


- 징병제 공정성에 가장 민감한(비판적인) 세대는 현역 복무 대상인 **20대(3.00점)**와 그 부모 세대인 **40대(3.00점)**다. 이들은 병역 비리나 불공정 처우 이슈에 가장 폭발력 있게 반응할 '핵심 이해당사자'이다.

2) 인권 민감도: "30대의 깊은 트라우마"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인권 보장 체감	3.13	3.02	3.12	3.06	3.23

그림 5-22 연령별 군대 내 인권 보장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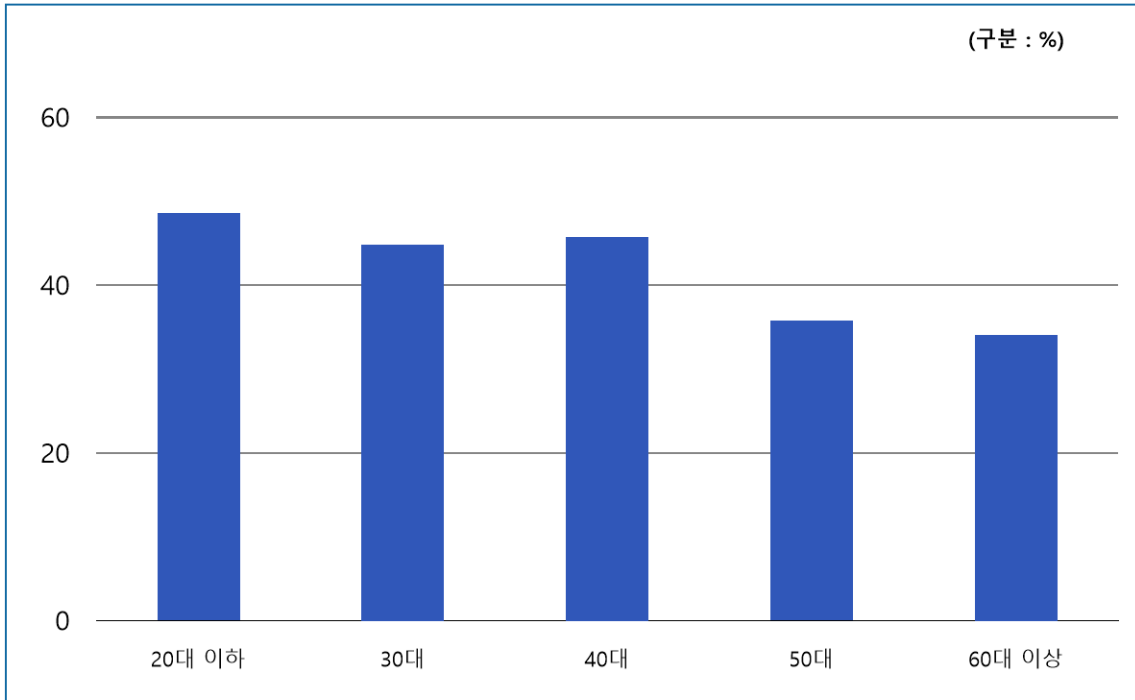


- 군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민감한) 세대는 **30대(3.02점)**다. 군 생활의 기억이 생생하고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30대는 군 인권 사고 발생 시 여론 악화를 주도하는 그룹이다.

3) 개혁 민감도: "청년층의 '탈출' 욕구"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병제 도입 찬성	48.5	44.8	45.7	35.7	34.0

그림 5-23 연령별 모병제 도입 찬성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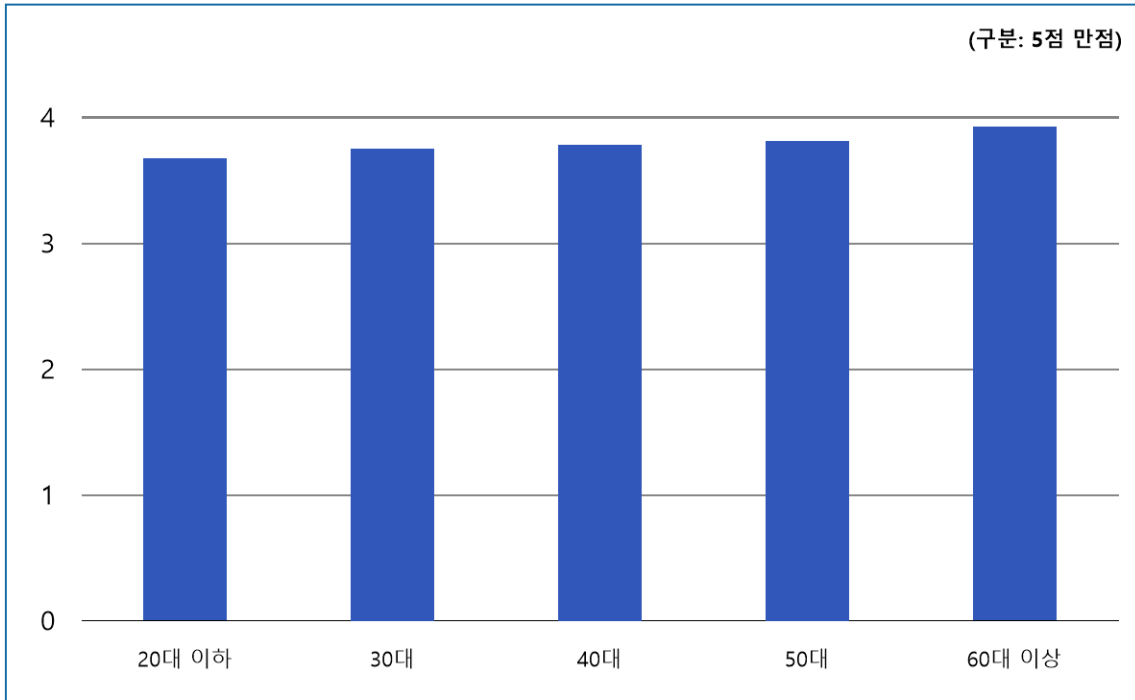


- 모병제 도입을 요구하는 개혁 민감도는 **20대(48.5%)**와 **40대(45.7%)**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성에 불만을 가진 세대가 기존 제도의 '개선'보다는 '판을 바꾸는 개혁(모병제)'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4) 효용 민감도: "20대의 가치 상실감"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회적 가치 인식	3.67	3.75	3.78	3.81	3.92

그림 5-24 연령별 군복무 경험의 사회적 가치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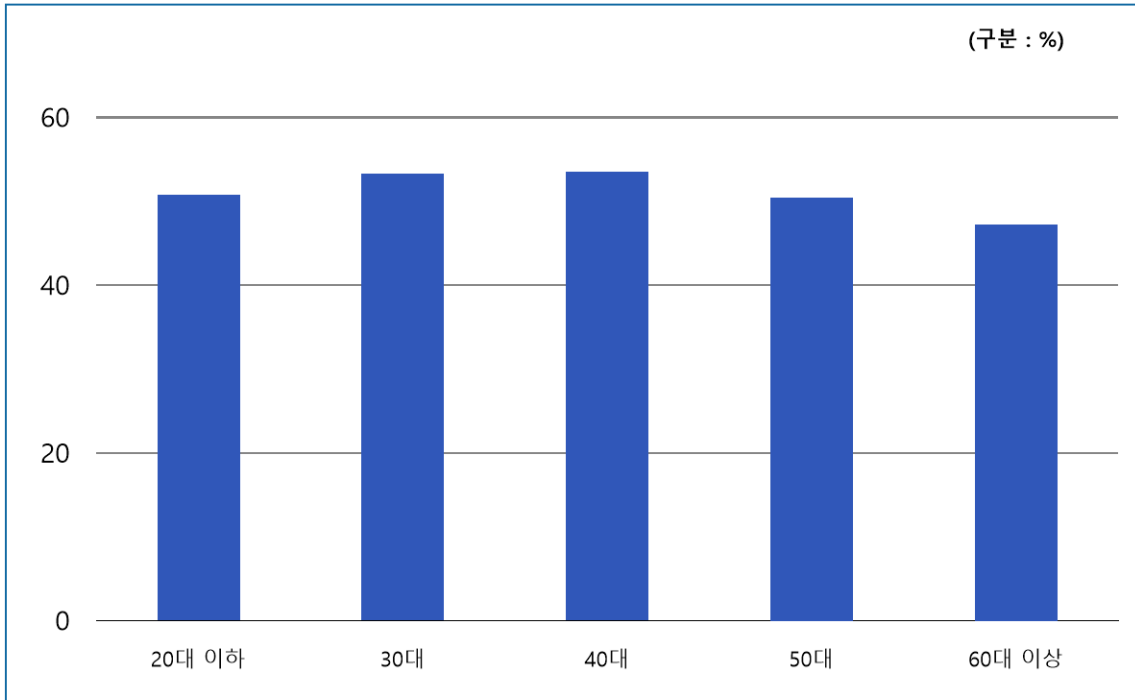


- 군 복무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효용 인식은 **20대(3.67점)**에서 가장 낮았다. 취업난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군대는 '기회비용'이 큰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상쇄할 보상이 시급하다.

5) 형평성 민감도: "3040의 특혜 거부감"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특례 축소/폐지	50.7	53.2	53.4	50.4	47.2

그림 5-25 연령별 예술·체육·과학특기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특례 축소/폐지 지지 차트



- 병역특례 축소를 요구하는 형평성 민감도는 40대(53.4%)와 30대(53.2%)에서 과반을 넘으며 가장 높았다. '공정'과 '능력주의' 가치에 예민한 3040세대는 예술/체육 요원 등 예외적 혜택에 가장 비판적이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세대 연합의 형성:
 - 20대(당사자)와 40대(부모)가 '불공정 인식'과 '개혁 요구(모병제)'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현 병역 제도의 가장 강력한 비토 그룹으로, 정책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 30대의 '이성적 비판':
 - 30대는 인권(감성적) 문제와 형평성(이성적) 문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인다. 군의 '도덕성'과 '원칙'을 감시하는 가장 까다로운 여론 주도층이다.
- 가치 보상의 위기:
 - 20대의 낮은 효용 인식(3.67점)은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식의 정신적 보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공정성이 정책의 생명줄:
 - 징병제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공정하게 부과되는가'에 달려 있다. 3040세대의 높은 형평성 민감도는 특례 축소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시사한다.
- 보상의 패러다임 전환:
 - 20대의 가치 상실감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명예'가 아닌 '경력'과 '경제적 이익' 중심의 실질적 보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군 경력-사회 자격 연동제":
 - 낮은 효용 민감도(3.67점)를 극복하기 위해, 군 특기 교육을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과정과 100% 연동하고, 전역 시 '국가 공인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실질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 "병역 특례 투명성 지수" 도입:
 - 형평성 민감도가 높은 3040을 위해, 예술·체육 요원 선발 기준과 복무 실태를 점수화하여 매년 공개하고, 국민 배심원단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국민 눈높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미래 병역 거버넌스" 구축:
 - 2040세대의 높은 개혁 요구(모병제 지지)를 수용하여,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징-모 혼합형 병역 구조 개편'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1. 병역제도 및 문화 심층 분석 지수 개발

1) 모병제 전환 지향성 지수(Volunteer Military Orientation Index; VMOI)

- 정의: 현행 징병제를 넘어 모병제로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강도

- 구성 변수:

- Q68(병역제도에 대한 의견)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VMOI = (Q68 - 1) \times 33.3333$$

※ 100점에 가까울수록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가지는 의견이 강함.

2) 병역 제도 공정성 인식 지수(Conscription Fairness Perception Index, CFPI)

- 정의: 병역 제도의 운영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믿음

- 구성 변수:

- Q67(징병제에 대한 의견):
 - 1(매우 공정) ~ 5(매우 불공정)
- Q66_2(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한 의견_2) 청렴하다:
 - 1(매우 그렇다) ~ 5(전혀 아니다)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CFPI = [(5 - Q67) \times 25 \times 0.5] + [(5 - Q66_2) \times 25 \times 0.5]$$

※ 점수가 낮을수록 병역은 불공정(유전면제 무전입대)하다는 박탈감이 큼.

3) 병력 부족 위기감 및 예비전력 중요성 지수

(Crisis Awareness & Reserve Importance Index; CRII)

- 정의: 인구 절벽으로 인한 현역 부족을 위기로 인식하고 예비전력을 대안으로 중시하는 태도
- 구성 변수:

- Q54(우리군 병력수에 대한 의견):
 - 1(많다) ~ 5(아주 부족하다) → 정방향 코딩(부족하다고 느껴야 위기감 High); 공식: $(Q54 - 1) \times 25$
- Q56(예비군/예비전력의 중요성) 1(매우 중요) ~ 5(전혀 중요 X) → 역방향 코딩; 공식:
 - $(5 - Q56) \times 25$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CRII = [(Q54 - 1) \times 25 \times 0.4] + [(5 - Q56) \times 25 \times 0.6]$$

※ 점수가 높을수록 사람이 없으니 예비군이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 대안 지지.

4) 군인 처우 및 보상지지 지수(Treatment & Compensation Support Index; TCSI)

- 정의: 군인의 희생에 대해 더 높은 경제적·사회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지 의사
- 구성 변수:

- Q46(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대우):
 - 2(높여야) → 100점, 1(유지) → 50점, 3(모름) → 50점
- Q72(병사 봉급 수준에 대한 걱정성):
 - 1(최저임금 ↑/긍정) ~ 5(적어야/부정) → 역방향 코딩 $(5 - Q72) \times 25$
- Q47_1(군인의 직접적 특수성(제한성) 고려 군인연금 관련 인식):
 - 1(확대) → 100점, 2(현행)/3(일부개선) → 50점, 4(개혁/축소) → 0점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TCSI = (Q46_{score} \times 0.4) + (Q72_{rev} \times 0.3) + (Q47_{1score} \times 0.3)$$

※ 점수가 높을수록 군인에게 돈과 대우를 더 해줘야 한다는 보상 강화론자.

5) 군 복무 사회적 가치 지수(Social Value of Service Index; SVSI)

• 정의: 군 복무가 개인의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인식

• 구성 변수:

- Q44(군복무 경험의 사회생활 도움 정도)
- Q45(직업군인에 대한 의견)
- Q49(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SVSI = [(5 - Q44) \times 25 \times 0.4] + [(5 - Q45) \times 25 \times 0.3] + [(5 - Q49) \times 25 \times 0.3]$$

※ 점수가 높을수록 군 복무를 존중받을 만한 경력으로 인식.

6) 지수 결과 제시

순위	지수명	Mean	SD	중위수	설명
1	병력 부족 위기감 및 예비전력 중요성 지수, CRII	65.12	12.94	65.00	인구 절벽 위기 인식과 예비전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 형성.
2	군 복무 사회적 가치 지수, SVSI	64.96	12.38	67.50	군 복무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3	군인 처우 및 보상 지지 지수, TCSI	60.89	15.67	62.50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보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
4	병역 제도 공정성 인식 지수, CFPI	51.23	18.62	50.00	병역 제도의 공정성 평가는 '딱 중간(50점)'으로, 불공정 인식이 여전함.
5	모병제 전환 지향성 지수, VMOI	43.46	29.47	33.33	징병제 유지/보완론이 우세하며, 모병제 전환에 대한 요구는 아직 과반에 미달.

7) 결과 분석

- 지수에 대한 해석: 2시 방향의 SVSI(사회적 가치, 65.0점)와 12시 방향의 CRII(위기감, 65.1점)는 높게 튀어나와 있지만, 10시 방향의 VMOI(모병제, 43.5점)는 꼭 꺼져 있다. 국민들은 병력 부족 위기(CRII)를 심각하게 느끼고 군 복무 가치(SVSI)도 인정하지만, 그 대안으로 '모병제'를 즉각 도입하는 것(VMOI)에는 아직 주저하고 있다. 위기는 알지만 급진적 변화는 두렵다는 심리다.

그림 5-26 병역제도 및 문화 심층 분석 종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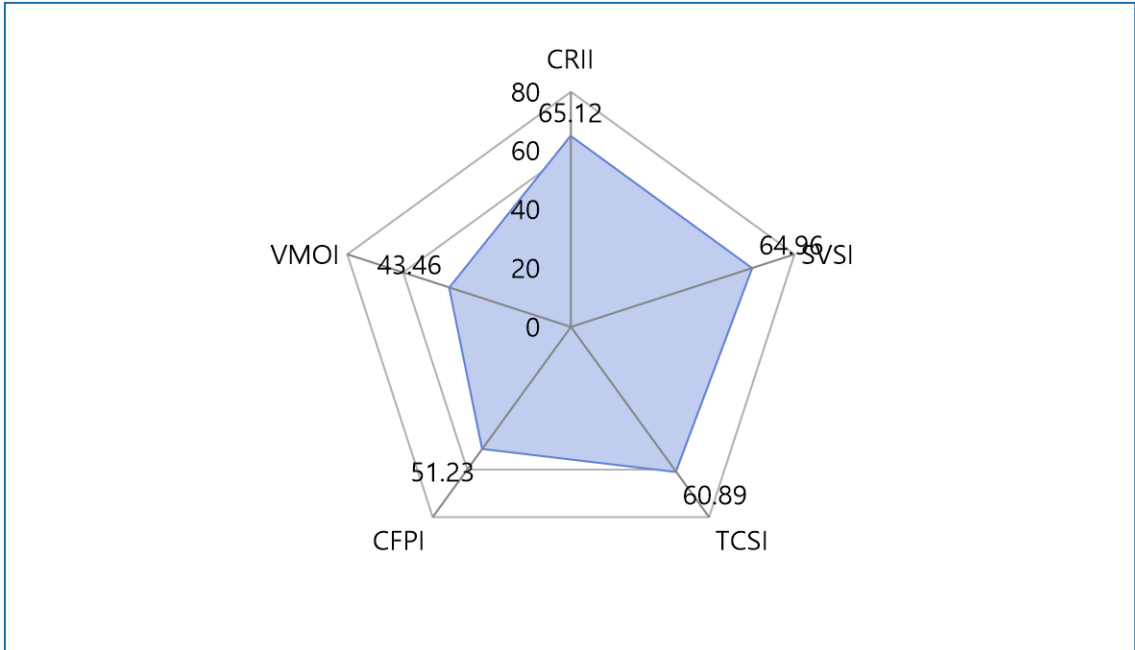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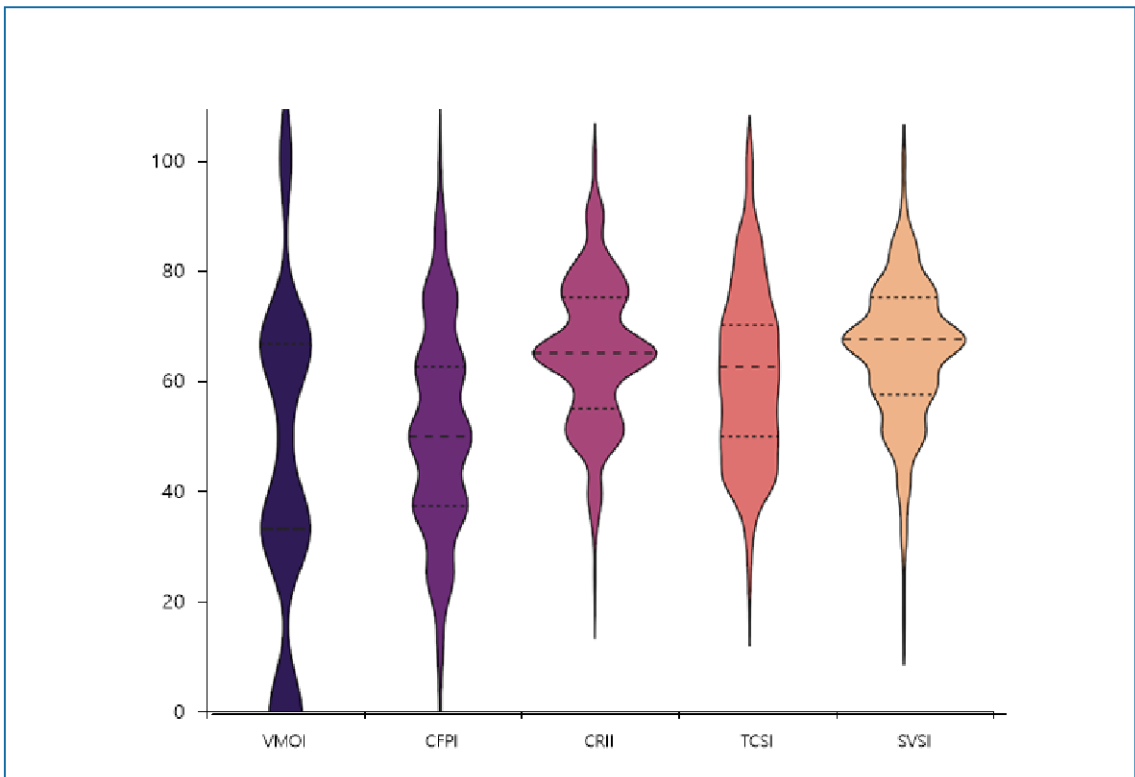


그림 5-27 병역제도 및 문화 심층 분석에 대한 분포 분석



- 분포 분석:
 - VMOI(모병제)의 양극화 조짐으로 보라색 바이올린의 허리가 잘록하고 위아래가 뚱뚱한 형태(약한 쌍봉형)를 보인다. 이는 모병제에 대해 "적극 찬성"파와 "절대 반대"파가 나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다. CRII(위기감)의 상단 집중으로 위기감 지수는 60~80점에 두텁게 몰려 있어,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8)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징병제의 '사회적 유효기간' 연장 (Low VMOI, High CRII):
 - 모병제 전환 지향성(VMOI 43.5점)이 과반에 미달한 반면, 병력 부족 위기감(CRII 65.1점)은 높았다. 국민은 급진적 제도 변경(모병제)보다는 **현행 징병제 틀 내에서의 효율화**를 현실적 해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세대별 '박탈감의 U자 곡선':
 - 병역 제도 공정성(CFPI 51.2점) 분석 결과, 입대 당사자인 **20대**와 그 부모 세대인 **4050세대**에서 공정성 인식이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병역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가족 단위의 사회적 불만 요인'으로 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모병제 요구의 본질은 '효율'이 아닌 '반발':
 - 산점도 분석에서 공정성 인식(CFPI)이 낮을수록 모병제 전환(VMOI) 요구가 높아지는 역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즉, 국민들이 모병제를 원하는 주된 이유는 국방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징병제가 불공정해서 싫다**는 반발 심리에 기인한다.
-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국민적 승인' (High CRII):
 - 인구 절벽의 대안으로 예비전력 활용을 지지하는 점수가 65.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확대 등 하이브리드형 병역 모델 추진에 대한 강력한 여론적 명분을 제공한다.
- 보상 심리의 임계점 도달 (High TCSI):
 - 군인 처우 및 보상 지지(TCSI 60.9점)와 사회적 가치(SVSI 65.0점)가 모두 높았다. 국민들은 이제 '애국페이'를 거부하며, 군 복무를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계약적 관계**로 재정의하고 있다.

- '공정성'이 병역 제도 유지의 핵심 안보 자산:
 - 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역 제도의 신뢰성이었다. CFPI(51.2점)가 50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징병제 거부 운동이나 병역 기피가 확산될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외 없는 병역 이행** 원칙 강화가 시급하다.
- 모병제 전환 논의의 '속도 조절' 필요:
 - VMOI 지표(43.5점)는 전면 모병제 추진 시 심각한 국론 분열과 안보 공백 우려를 시사한다. 따라서 '징병제 폐지'가 아닌 '징-모 혼합형' 또는 **전문 기술병 위주의 부분 모병**으로 정책 프레임을 정교화해야 한다.
- '부모 세대(4050)'를 겨냥한 소통 전략 부재:
 - 공정성 인식에서 4050세대가 20대만큼이나 비판적이라는 점은, 군의 소통이 장병 당사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음을 경고한다. 자녀를 보낸 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급식, 의료, 병영 부조리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사회적 존중'이 병력 획득의 새로운 경쟁력:
 - SVSI(65.0점)는 우리 군의 자산이다.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 자원을 획득(모병)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제복 입은 군인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적 인프라(할인, 우선권, 예우)** 구축이 필수적이다.
- 예비군이 '상비 전력'의 공백을 메울 골든타임:
 - 높은 위기감(CRII)은 예비군 예산 증액과 훈련 강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낮은 시기임을 의미한다. 현재의 동원 훈련 수준을 넘어, 평시 복무하는 **파트타임 현역** 개념을 과감히 도입할 적기다.

라. 정책대안 제시

1. 문제의 구조: ‘신성한 의무’ 프레임에서 ‘공정한 사회적 계약’ 프레임으로 전환

- 현행 병역제도는 ‘신성한 의무’ 프레임에서 ‘공정한 사회적 계약’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 제도 운영의 공정성, 보상의 적절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병역 인식의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병역제도 공정성 인식지수(CFPI)는 51.23점으로 ‘딱 중간’ 수준에 머물러 불공정 인식이 상존한다.
- 병력 부족 위기감 및 예비전력 중요성 지수(CRII)는 65.12점으로 높게 나타나 국민이 **인구절벽의 영향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예비전력 강화를 필요 과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확인된다. 군 복무 사회적 가치 지수(SVSI)도 64.96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모병제 전환 지향성 지수(VMOI)는 43.46점으로 과반에 미달하며, **모병제에 대한 찬반이 양극화**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된다.
- 정서·정보환경 측면에서는 2030세대의 뉴미디어 의존이 절반 수준이며, **20대·40대의 군에 대한 친근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30대의 인권 보장 체감이 최저(3.02점)**로 나타난다. 이는 ‘군을 잘 아는 경험자·부모 세대’에서 정서적 불신이 누적되는 메커니즘을 시사한다.
- 공간 요인도 뚜렷하다. 접경지역은 징병제 공정성 인식이 전국 최저(2.73점)로 확인되고, 인권 보장 체감도 역시 3.0 미만(2.93점)으로 낮다. 접경지역의 모병제 찬성률은 49.3%로 서울(35.3%) 대비 약 14%p 높다. 현장 불신과 변화 요구가 접경지역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이 진단을 정책 언어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병역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병력 수급’보다 먼저 ‘공정성 신뢰’와 ‘체감 보상’에 의해 좌우된다. 모병제는 효율 논쟁이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반발을 흡수하는 “탈출구”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은 전면 모병제 찬반을 앞서기보다, 공정성·보상·병역문화 개선으로 “징병제의 사회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면서, **예비전력 정예화와 부분 모병(전문특기 중심)을 결합하는 단계적 설계가 필요하다.**

2. 정책대안 영역 A: 공정성·형평성 기반의 병역 신뢰 회복

- **병역특례는 신뢰를 갉아먹는 핵심 취약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성 인식이 50점대 초반에 머무는 조건에서 예외 조항은 여론 폭발의 촉발점이 된다. 정책대안은 ‘특례 전면 폐지’와 ‘무제한 유지’의 이분법을 피하고, (a) 일몰제(예: 3~5년) + (b) 전수평가(효과·대체가능성·형평성) + (c) 축소·전환의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조정해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능요원

· 예술체육요원 등은 국가전략·산업정책과 연결되므로 “존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정량·정성으로 매년 공개하는 구조가 신뢰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즉, “예외를 최소화하고, 인정이 불가피하면 기준·절차를 공개하고 사후 점검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이를 한국형으로 적용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외의 최소화 + 절차 투명”이 공정성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 **병역판정 데이터를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병역 공정성 대시보드”를 공개하고 상시 감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공정성은 주장으로 회복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검증 가능성으로 회복**된다. 정책대안은 면제나 대체복무 등을 포함 병역판정 결과를 표준화된 지표로 공개하는 것이다. 병역판정의 “유형·사유·절차·소요기간·재심 결과” 중심의 자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개인별 판정결과를 비실명으로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접근은 **징병제에 대한 불신의 증폭을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 해외의 감사·감찰 모델은 ‘독립성’이 핵심이다. 군 내부에만 맡기면 ‘자기검증’으로 인식되기 쉽다. 한국에서는 병무청, 국방부, 인권·감찰 기구 간 역할을 재정의해 “데이터 공개-감사-피드백”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절차적 공정성의 강화도 중요하다.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병역판정만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형성**된다. 보직 배치, 격오지·위험 근무, 휴가·외출, 징계 등 생활 전반의 체감 공정성이 군 전체 이미지와 결합한다. 특히 접경지역의 공정성 인식이 매우 낮고(2.73점), 인권 체감도도 3.0 미만이다.
- 정책대안은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동일 적용**’을 담보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배치 원칙과 기록, 자동화된 승인·반려 사유, 실질적 이의제기 창구가 필요하다. “**불만의 축적을 제도적으로 배출**”하는 채널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정책대안 영역 B: 보상·경력 전환을 통한 ‘애국페이 종말’ 대응

- 조사결과 군 복무 가치가 인정(SVSI 64.96점)되는 반면, 청년층은 군을 ‘경력 단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한다. 정책대안은 ‘호봉 가산’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군 특기·교육·경험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검증 가능한 역량(자격·학점·경력)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군복무가산점제의 도입이 가장 절실한 정책대안**이다. 좀 더 세분화된다면 전역 시 표준화된 “국가 공인 역량증명서(직무기술서 기반)”를 발급하고, 국가자격(NCS)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군 복무경험을 채용 가점으로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교육·전환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GI Bill은 군 복무 이후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고, 교육과 취업성장에 대한 대규모 평가자료가 축적돼 있다. 한국군에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으나, “군 복무의 기회비용을 교육·자격·전환으로 상쇄”한다는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군 복무와 사회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의 실질적 확대가 절실하다.**
- 병사 급여 인상은 필요하지만 단일 축으로는 공정성·체감 보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정책대안은 **보상의 구조를 다층화**하는 것이다. 기본급은 사회적 기준(최저임금 등)과의 격차 논쟁을 관리하되, **격오지·위험·고난도 직무에는 명확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동시에 군이 요구하는 자격·훈련을 취득하면 ‘역량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간 보상”이 아니라 “성장 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는 SVSI가 높은 조건에서 **“사회적 존중”을 실질적 이익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 해외사례로는 싱가포르의 국가복무(National Service) 인정 체계가 참고가 된다. 싱가포르는 NS HOME Awards 등 복무 마일스톤 기반의 금전적 보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현금성 보상만이 아니라, 학자금·주거·의료·자격 취득 지원을 묶어 청년층의 체감 편익을 높이는 방향이 적절하다.
- **복무 경험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사결과 SVSI가 64.96점으로 비교적 높다는 것은 “가치 인정의 토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정책대안은 **상징적 예우를 넘어, 생활 속 혜택(공공서비스 우선권, 교통·문화 할인, 공공임대 가점 등)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영국의 Armed Forces Covenant는 군 공동체가 의료·교육·주거·고용 등에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받도록 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다수 기관이 서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산시켰다.
-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전역-취업 전환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전역지원은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병역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다. 전역 전 6개월~1년 구간에 직무교육·자격·인턴십을 연계해 ‘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실제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전역자 전환 지원(CTP 등)을 통해 민간 정착을 돕는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같은 제도를 한국군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다. 기존 전역장병 전직 지원을 의무복무 병사들까지 확대하여 **전역-취업구조를 제도화**는 것이 절실하다.

4. 정책대안 영역 C: 병영문화 신뢰 회복과 뉴미디어 시대의 소통 재설계

- “인권 체감도”를 바꾸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이다. 조사결과 인권 보장 체감은 30대가 최저(3.02점)이며, 접경·수도권도 3.0 미만으로 낮다. 정책대안은 인권 규정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사건 처리의 투명성·피해자 보호·재발 방지의 실행력을 체감**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 침해·가혹행위·사망사고 등의 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공개하고(익명화),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외부가 점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군이 숨기지 않고 바뀌고 있다**”는 신뢰로 연결된다.

- **은폐·축소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립적 조사·공개 체계의 자동 발동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강조되었던 내용이지만, 병영문화의 혁신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병영문화 불신이 누적될수록 단일 사건이 제도 전체의 불신으로 전이된다. 은폐·축소는 인권 이슈의 치명적인 증폭기다. 정책대안은 중대 사건에서 **보고-초동조사-대외공개 판단을 지휘계통 밖 독립기구가 자동으로 담당**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인을 제거하는 제도 설계다. 은폐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건 자체보다 “사후 처리가 정당했다”는 인식이 축적된다면, 신뢰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팩트-체험-대화’의 3요소를 결합해야 한다. 2030세대는 뉴미디어를 통해 군 소식을 접하고, 군에 대한 친근감은 20대·40대에서 낮다. 정책대안은 **홍보를 ‘이미지 관리’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설득의 3요소인 (a) 팩트 제공(정책·통계), (b) 체험 기반 콘텐츠(병사 일상·개선 사례), (c) 대화 채널(질문-답변-개선 피드백)을 결합하는 것이다. 설문결과가 지적하듯이 알고리즘 환경에서는 부정 사례가 빠르게 증폭되므로, ‘검증 가능한 팩트’와 ‘현장 체험’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 우리 군은 중앙(국방부) 중심의 단일 채널에서 벗어나, 군-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기반 군-사회 접점**”을 늘리는 편이 뉴미디어 시대의 신뢰 회복에 더 유리하다.
- 군 경험자이자 부모세대인 **3040 대상 신뢰 회복 패키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공정성·정서 불신이 20대뿐 아니라 40대(부모 세대)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병 대상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별 설명회·온라인 브리핑 등 ‘가족 기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병역제도 신뢰를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확장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5. 정책대안 영역 D: 지속가능 병역구조와 예비전력 정예화

-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모병제 찬반이 양극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전면 모병제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징병제 틀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특기·직위는 모병으로 확대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혼합형’을 개선 방안을 모색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는 ‘효율’보다 ‘불공정 반발’을 완화하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
- 접경지역에서 모병제 찬성률이 높다는 점(49.3%)은 ‘현장 기반 전문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접경·격오지부터 전문병·전문부사관 비중을 높이는 시범사업이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파트타임 현역(상비예비군)’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CRII가 65.12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예비전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 기반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정책대안은 동원 중심의 예비군에서 벗어나, 평시에 일정 수준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비예비군’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규모 예비전력 중심의 군대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단순 동원훈련 증대가 아니라, **“임무형 예비전력”을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비·지휘·훈련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접경지역은 군 인권 불신과 공정성 불신이 동시에 높고, 변화 요구가 강하다.** 접경지역 부대를 대상으로, 군무원·기술부사관·전문병 선발에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의 시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형은 지역 일자리와 군 전문성 강화라는 두 목표를 결합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정책 저항을 완화한다.
- **‘병역제도 공론화 위원회’의 같은 방식의 논의구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모병제 논의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소비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현실적 대안에 대한 합리적 여론을 식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제도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제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목표는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수용 가능한 속도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병역특례의 전수조사, 병역 데이터 투명화, 절차적 공정성의 표준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CFPI가 ‘중간’ 수준에 머무는 조건에서 공정성 개선은 병역제도의 생명줄로 작동한다.
- 그 다음으로는 **군 복무의 보상/경력으로의 전환**이다. SVSI가 높은 상태는 정책 자산이며, 이를 ‘민간에서 통하는 경력’으로 환산할 때 청년층의 기회비용 인식이 완화된다.
- **병영문화와 ·인권 신뢰 회복, 그리고 은폐 유인 제거**도 병영문화 개선에서 핵심적 과제다. 인권 체감이 3.0 언저리에 머무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독립적 조사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장기 신뢰의 핵심 기반이 된다.
- 끝으로 **지속가능한 병역구조 개편**이다. 모병제에 대한 지지가 과반에 미달하고 양극화 조짐이 있는 조건에서, 전면 모병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신 **예비전력 정예화와 부분 모병제(전문특기 중심)**를 중심으로 ‘현실적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

법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연구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제 6 장

**대주변국 인식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

제6장 대주변국 인식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

-요약문-

-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한국 외교의 오랜 공식이었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본 보고서는 우리 국민의 대주변국 인식이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는 ‘전략적 선명성’으로 급격히 전환되었음을 진단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개발한 ‘대외전략 명확성 지수(PACI)’는 100점 만점에 84.21점, ‘경제안보 미국 편중도 지수(SEASI)’는 80.15점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들이 이미 주변 4강(미·중·일·러)을 단순한 이웃이 아닌, 국익에 기여하는 ‘기여 국가’와 위협이 되는 ‘경계 국가’로 명확히 구분하는 냉철한 ‘전략적 피아식별’을 끝마쳤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피아식별과 인식의 재편

- 이러한 전략적 선명성은 세대, 이념,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 대상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정교한 차이가 존재한다.
- 첫째, 미국은 ‘대체 불가능한 상수’로 자리 잡았다. 과거 “경제는 중국”이라던 공식이 깨지고, 경제 파트너로서도 미국을 선택한 비율(72%)이 중국(16%)을 압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진보층에서조차 경제 파트너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6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반미/친중’이라는 낡은 이분법이 붕괴되고,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연대를 생존 전략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 둘째, 중국은 ‘구조적 위협’으로 고착화되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 인식(ABTI)은 전 세대에 걸쳐 4점 만점에 가까운 극도의 경계심을 기록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게 반중(反中)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정성 훼손과 안보 위협에 대한 ‘현실적 생존 본능’으로 작동하며 강력한 친미 노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 셋째, 일본은 ‘협력과 경계의 딜레마’ 대상이다.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JSCRI, 67.46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감과 과거사 문제라는 ‘정서적 상한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특히 30대와 진보층은 일본의 재무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조차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협력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보수의 역설’이 나타난다.

- 넷째, 지역별 인식의 분화다. 서울은 안보에서는 확실한 친미를 지지하면서도 경제에서는 중국의 비중을 고려하는 정교한 ‘분리 대응’을 선호한다. 반면, 생존이 걸린 접경지역(인천·경기·강원) 주민들은 경제 문제에서조차 미국을 압도적으로 선택(88.4%)하며, “경제가 곧 안보”라는 가장 강력한 동맹 의존도를 보인다.

가치 기반의 연대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

- 국민 여론은 이미 ‘줄타기 외교’가 아닌 ‘확실한 줄 서기(가치 연대)’를 선택했다. 따라서 정부의 외교 정책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외교·경제·기술의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대중·대러 관계는 관계 단절이 아닌 ‘리스크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할 말은 하되, 불필요한 경제적 충돌은 최소화하는 정교한 관리 모드가 필요하다. 대일 외교의 경우, 국민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양자 협력보다는 미국이 보증하는 ‘한미일 3자 협력’ 프레임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외교는 모호한 균형자론을 폐기하고,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는 ‘단호하고 실용적인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가. 대주변국 인식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

1. 대주변국 인식의 개념적 정의

-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 국민의 대주변국 인식이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하여,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하는 '전략적 선명성'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대주변국 인식을 단순한 호감도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피아식별, 가치 연대의 확장, 외교적 균형점의 이동 차원에서 정의하고 분석한다.
- 구체적으로 '전략적 피아식별'이란 주변 4강(미·중·일·러)을 우리 안보와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여 국가' 혹은 위협이 되는 '경계 국가'로 명확히 구분하는 국민들의 냉철한 인식 기제를 의미한다. '가치 연대의 확장'은 일본을 과거사 문제의 대상에서 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재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균형점의 이동'은 미·중 및 미·러 갈등 상황에서 기계적 종립을 버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하는 여론의 쏠림 현상을 진단하는 개념이다.

2. 기초통계분석 개요

- 상기 정의된 개념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설계된 '다섯 차원'을 적용하여 급변하는 외교 인식의 지형도를 심층 분석한다.
- 첫째, 세대 간 인식 격차 차원에서는 이념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기성세대의 반중 정서와 달리, 문화 공정(동북공정 등) 및 인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 세대의 '공정성 기반 반중 정서'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 둘째, 정치적 태도 상호작용 차원에서는 대일 외교에 있어 '과거사 원칙론'과 '미래지향적 협력론'이 진영 논리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을 진단하되,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지지가 초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검증한다.
- 셋째, 정서 및 정보환경 차원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는 혐중·혐일 감정이 실제 무역이나 교류 정책 지지에 미치는 '정서적 비토' 현상을 분석하여 이성적 외교 전략 수립의 장애 요인을 파악한다.
- 넷째, 전략적 공간 구획 차원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 안보 민감 지역 간의 외교적 선호도 차이를 다룬다.

- 다섯째, 정책 민감도 차원에서는 독도 문제나 역사 왜곡 등 ‘트리거(Trigger)’ 이슈 발생 시 우호 여론이 얼마나 급격히 냉각되는지 여론의 가변성을 측정한다.

3. 지수 개발 개요

-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외교 안보 노선의 좌표를 명확히 하고, 대중·대러 관계의 리스크 관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외교전략 선호도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 이 지수는 한미동맹 강화 선호도, 한미일 협력 지지도, 자주적 균형 외교 선호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된다. 분석의 최종 목표는 이 지수를 통해 우리 사회 내에서 ‘전략적 선명성(한미동맹 중심)’을 지지하는 여론이 얼마나 압도적인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를 수치로 증명하고,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외교적 관여’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하여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 기초 통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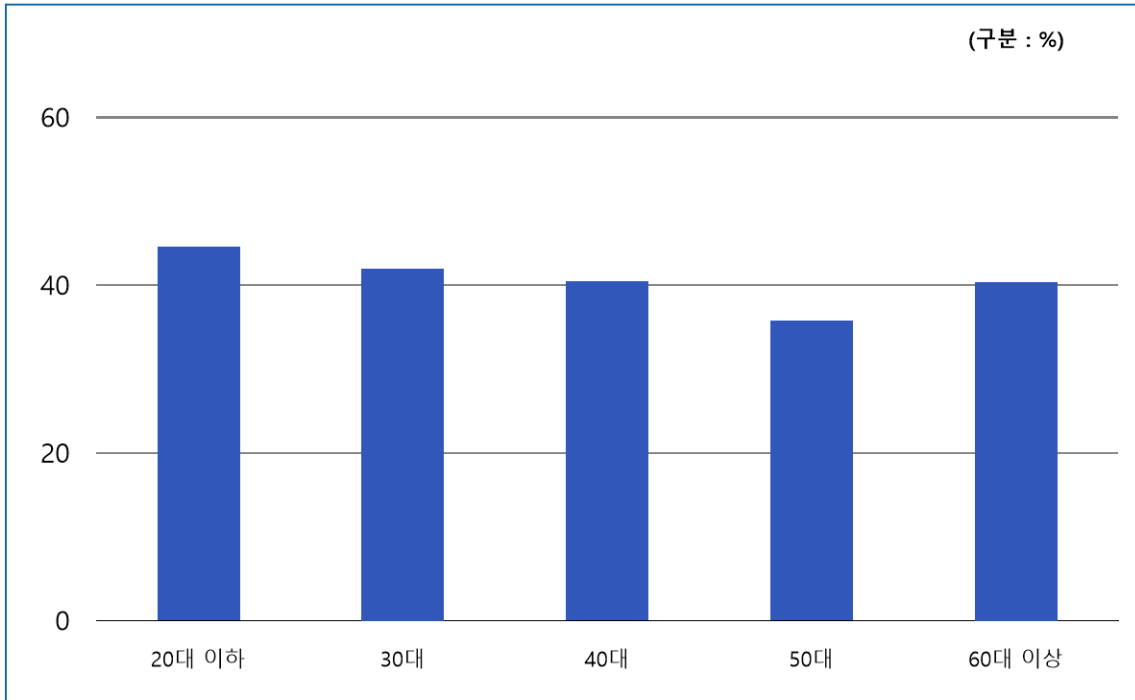
1. 세대 간 인식 격차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대중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Q11_1)
 - 분석 2 (한일 협력): 한·일 양국 간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9) (4점 만점)
 - 분석 3 (3자 공조): 한·미·일 3국의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10) (4점 만점)
 - 분석 4 (러북 대응): 러북협력 심화에 대한 외교적 선택으로 적절한 방법 (Q14 옵션 2+3 합계)
 - 분석 5 (경제 파트너):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Q6_2)

1) 대중전략: “20대의 확고한 친미 노선”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미동맹 우선	44.5	41.9	40.4	35.7	40.3

그림 6-1 연령별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한미동맹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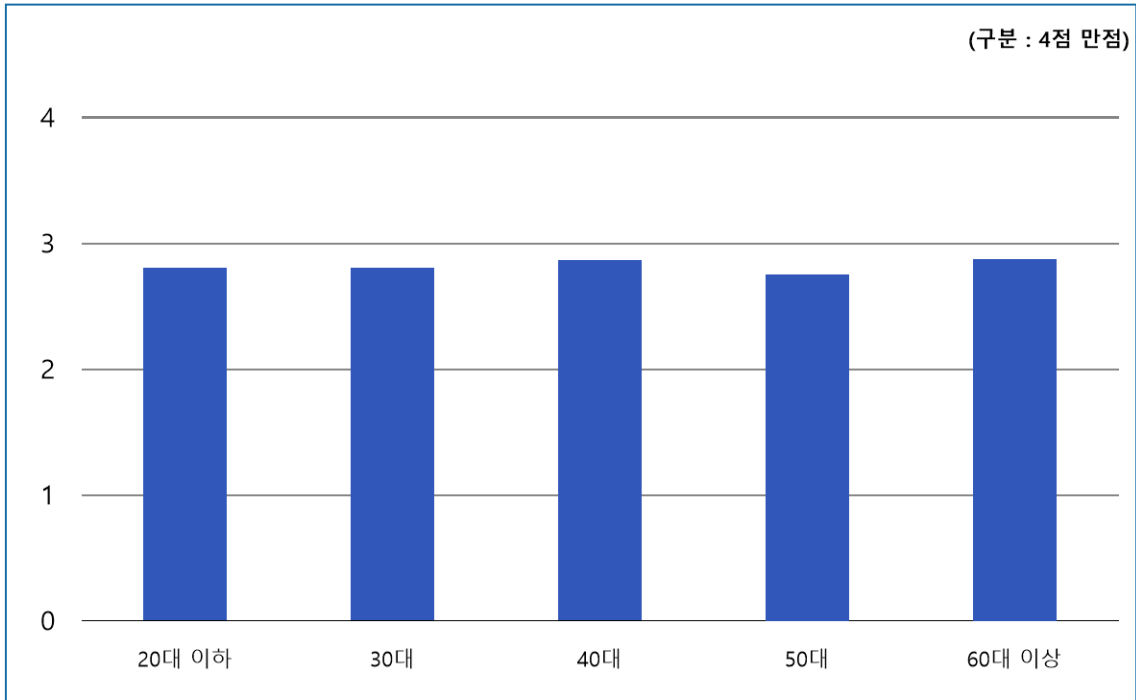


-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이하(44.5%)**에서 가장 높고, **50대(35.7%)**에서 가장 낮다. 50대는 균형 외교나 다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2) 한일 협력: "세대 불문 '미지근한' 찬성"

구분 (4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일협력 찬성도	2.80	2.80	2.86	2.75	2.87

그림 6-2 연령별 한·일협력 안보 강화 찬성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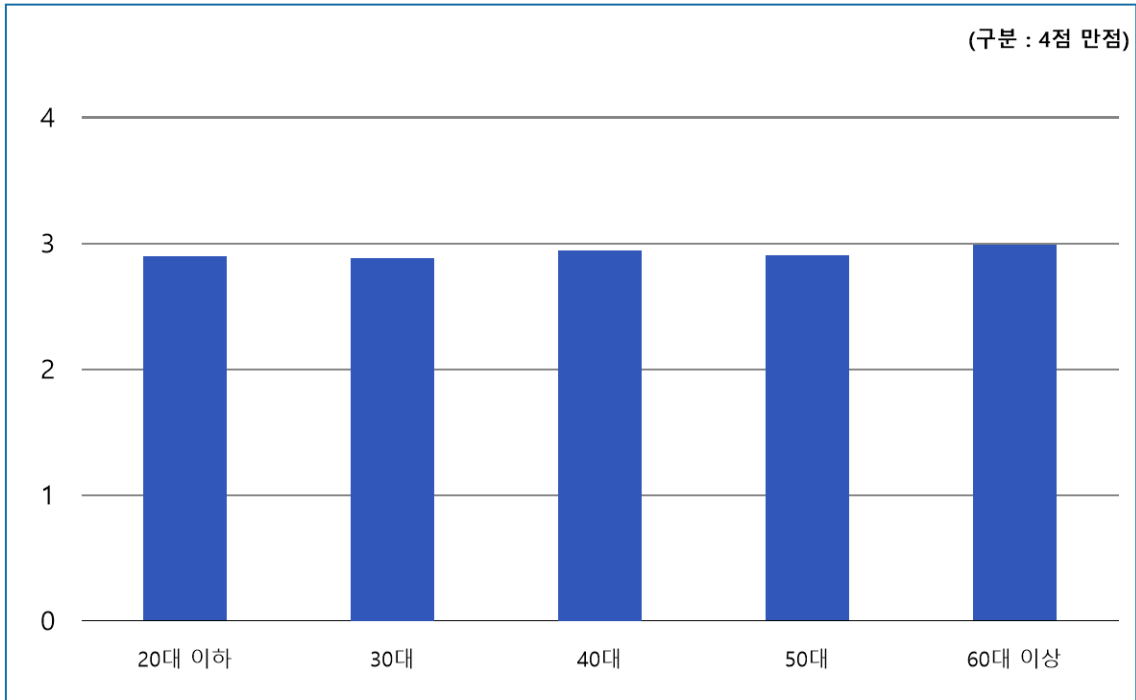


-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찬성도는 전 세대가 **2.8점대(4점 만점의 2.5점이 중립)**로 대동소이하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적극 찬성하기엔 꺼림칙한" 유보적 태도가 전 세대에 걸쳐 있다.

3) 3자 공조: "한일이 아닌 한미일"

구분 (4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미일협력 찬성도	2.89	2.88	2.94	2.90	2.98

그림 6-3 연령별 한·미·일 안보 협력 찬성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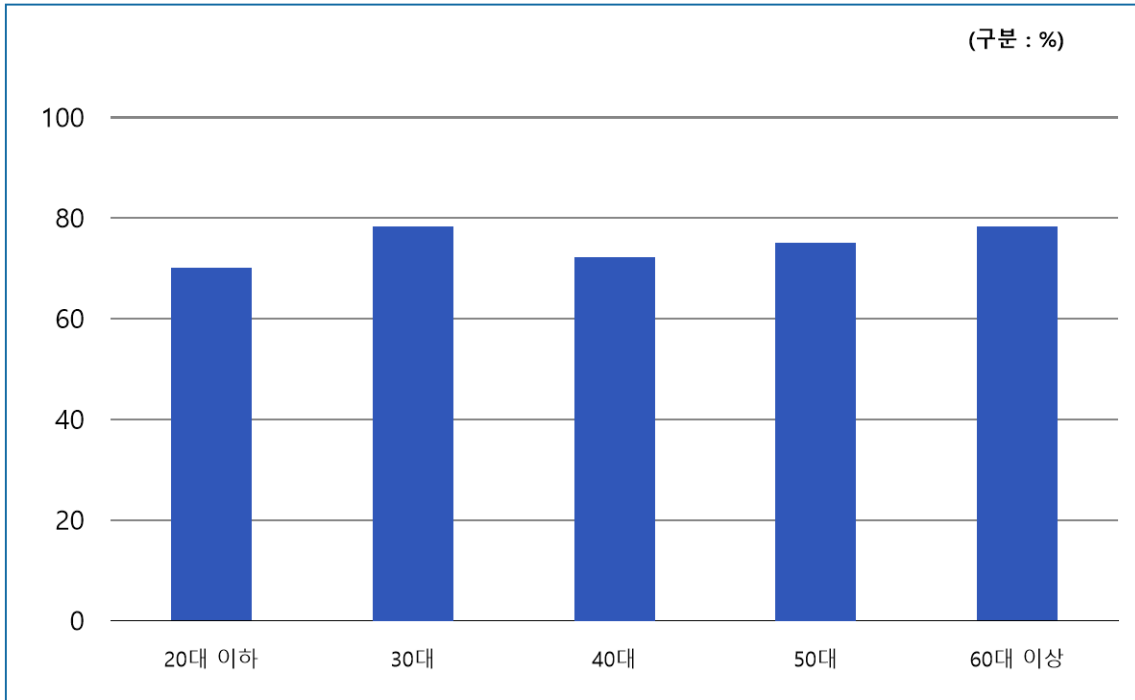


-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한일 양자 협력보다 소폭 높다(약 2.9점대). 미국이 포함된 3자 틀 내에서의 협력을 더 안정적으로 인식한다.

4) 러북 대응: "30대의 강력한 강경 대응지지"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맹/공조 강화	70.0	78.3	72.2	75.0	78.2

그림 6-4 연령별 러북 협력에 대해 동맹/공조 대응 필요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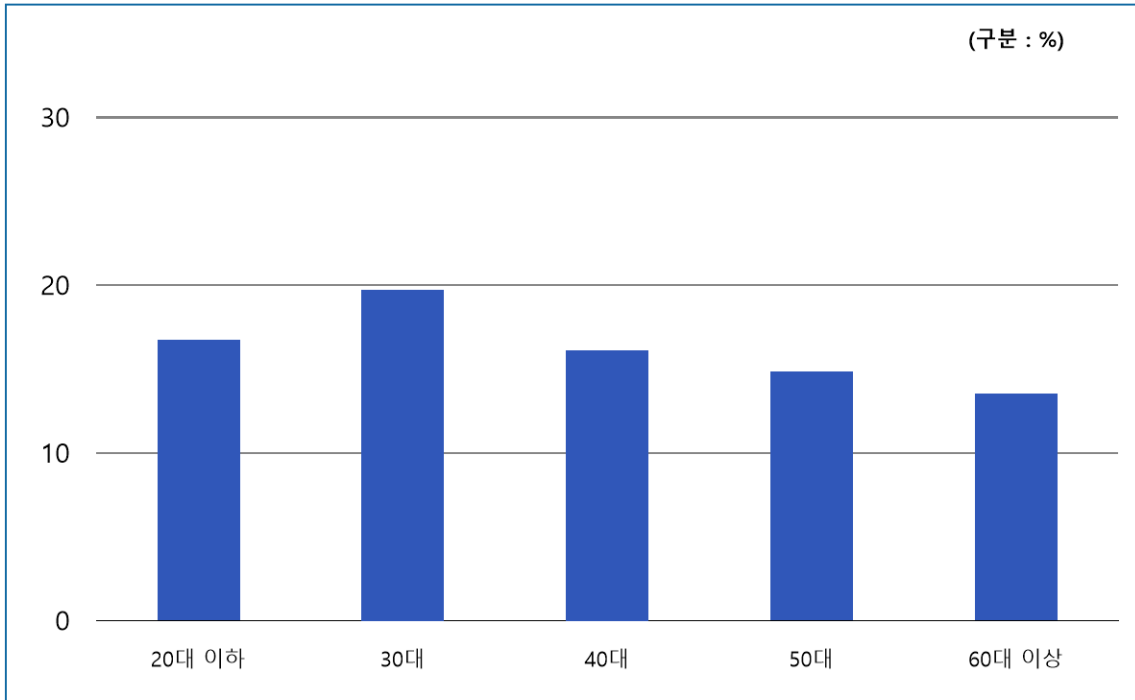


- 러북 밀착에 대해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은 **30대(78.3%)**와 **60대(78.2%)**에서 가장 높다. 30대는 안보 위협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보수' 성향을 보인다.

5) 경제 파트너: "탈중국 인식의 보편화"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국 선택	16.7	19.7	16.1	14.8	13.5

그림 6-5 연령별 경제안보적 측면 파트너로 중국 인식 선택 차트



- 경제적으로 중국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전 세대에서 10%대에 불과하다. 특히 **60대 이상(13.5%)**과 **50대(14.8%)**에서 가장 낮아, 기성세대조차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를 접었음을 보여준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50대의 '전략적 모호성':
 - 50대는 한미동맹 우선 지지율이 가장 낮고(35.7%), 한일 협력 찬성도도 가장 낮다(2.75점). 이는 미중 간 균형을 중시하고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전통적 진보/자주 외교' 성향이 5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2030의 '안보 보수화':
 - 20대는 대중 전략에서 가장 친미적(44.5%)이고, 30대는 러북 위협에 대해 가장 강경한 대응(78.3%)을 주문한다. 청년 세대는 이념보다 '힘의 우위'를 통한 안보를 선호한다.
- 한일 관계의 한계:
 - 모든 세대에서 한일 협력 점수가 3.0(긍정)을 넘지 못했다. 이는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알지만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한 '감정적 거부감'이 여전한함을 보여준다.
- 외교 노선의 세대 분화:
 - 과거 진보(반미)-보수(친미) 구도가 아닌, '**현실주의(2030)**' vs '**균형주의(50대)**'의 새로운 구도로 재편되었다.
- 중국 경제 효용의 소멸: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 [2030 타겟] "가치 외교" 비전 강화:
 -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미국, 유럽 등)와의 연대를 강조하여, 명분과 실리를 중시하는 청년층의 지지를 결집해야 한다.
- [50대 타겟] "실용적 대중(對中) 접근법" 제시:
 - 50대의 균형 외교 선호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국익 기반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하여 외교 정책의 포용성을 넓혀야 한다.
- [범국민] "한미일 협력의 경제적 실익" 홍보:
 - 한일 관계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기 위해, 3자 협력이 안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익 중심' 소통이 필요하다.

2. 정치적 태도와 정책 신뢰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개인 성향 (DQ8) (진보 / 중도 / 보수)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대중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Q11_1 / 교차분석)
 - 분석 2 (한일 뇌관): 한·일 양국 간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9 / 평균비교)
 - 분석 3 (3자 공조): 한·미·일 3국의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10 / 평균비교)
 - 분석 4 (러북 대응): 러북협력 심화에 대한 외교적 선택으로 적절한 방법 (Q14 / 교차분석)
 - 분석 5 (경제 파트너):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Q6_2 / 교차분석)

※ 평균 산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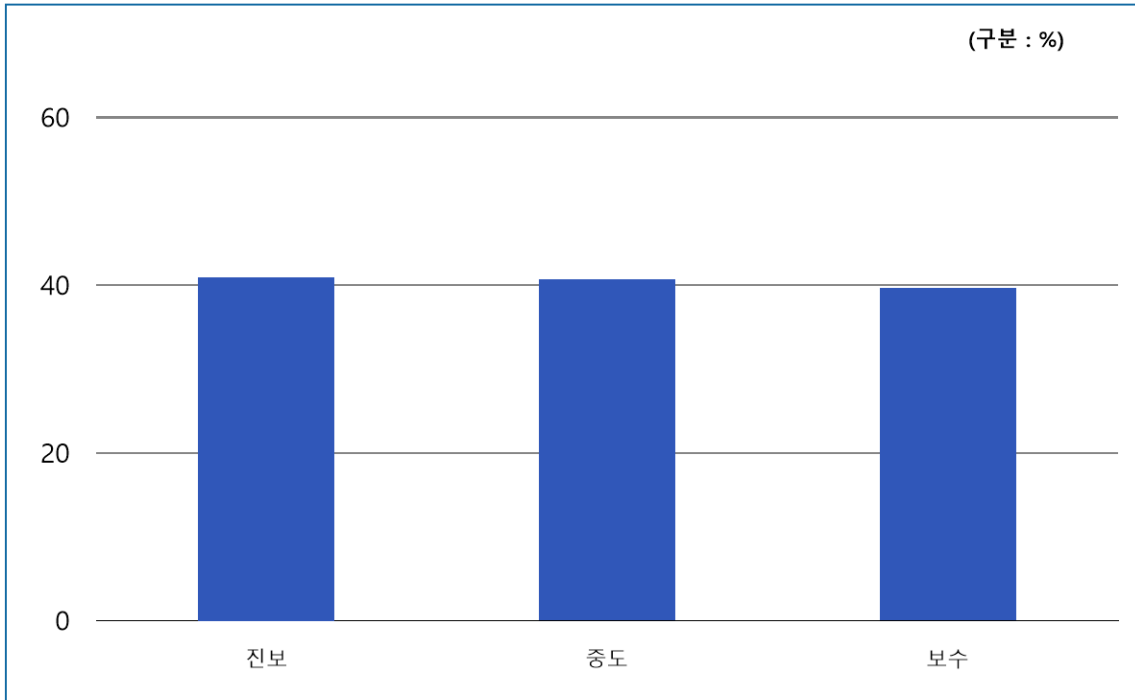
4점 척도 문항(1=매우긍정...4=전혀부정, 5=모름)은 '모름'을 제외하고

역코딩(5-x)하여 4점 만점(높을수록 친성/긍정)으로 환산했다.

1) 대중 전략: "의외의 진보층 '친미(親美)' 전략"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한미동맹 우선	40.9	40.6	39.6

그림 6-6 개인 성향별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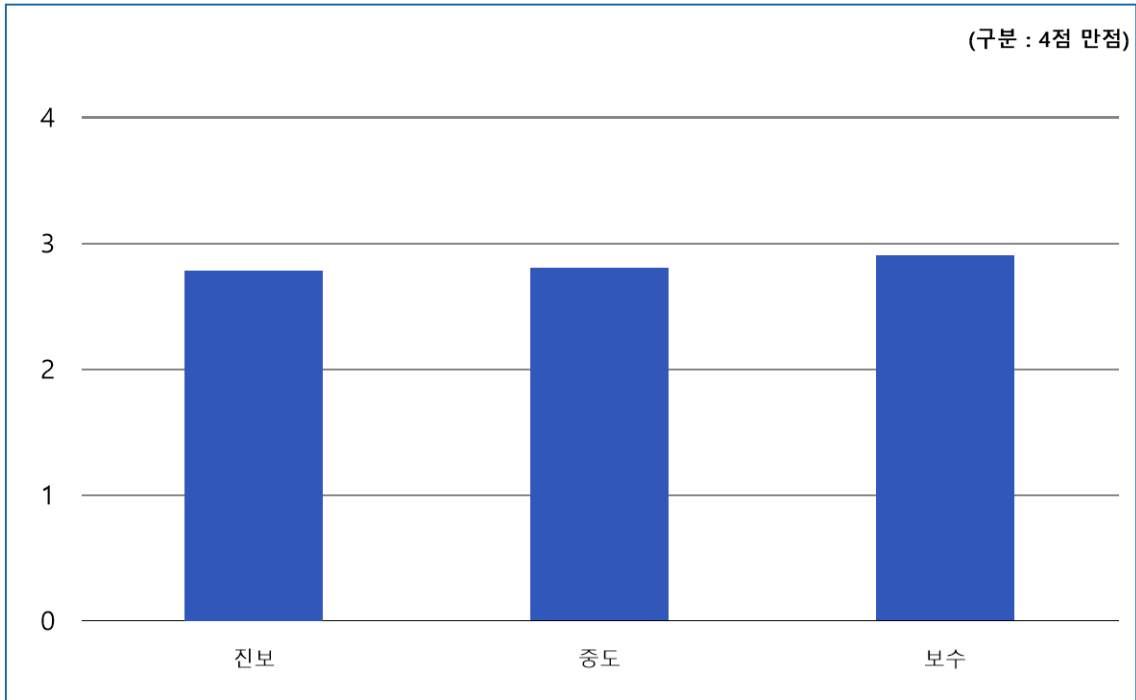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진보층(40.9%)**이 보수층(39.6%)보다 오히려 소폭 높았다. 통념과 달리 진보층이 중국에 대해 유화적이지 않으며, 힘의 균형을 위해 한미동맹을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2) 한일 뇌관: "이념 간 가장 큰 간극"

구분 (4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한일협력 찬성	2.78	2.80	2.90

그림 6-7 개인 성향별 한일 안보협력 찬성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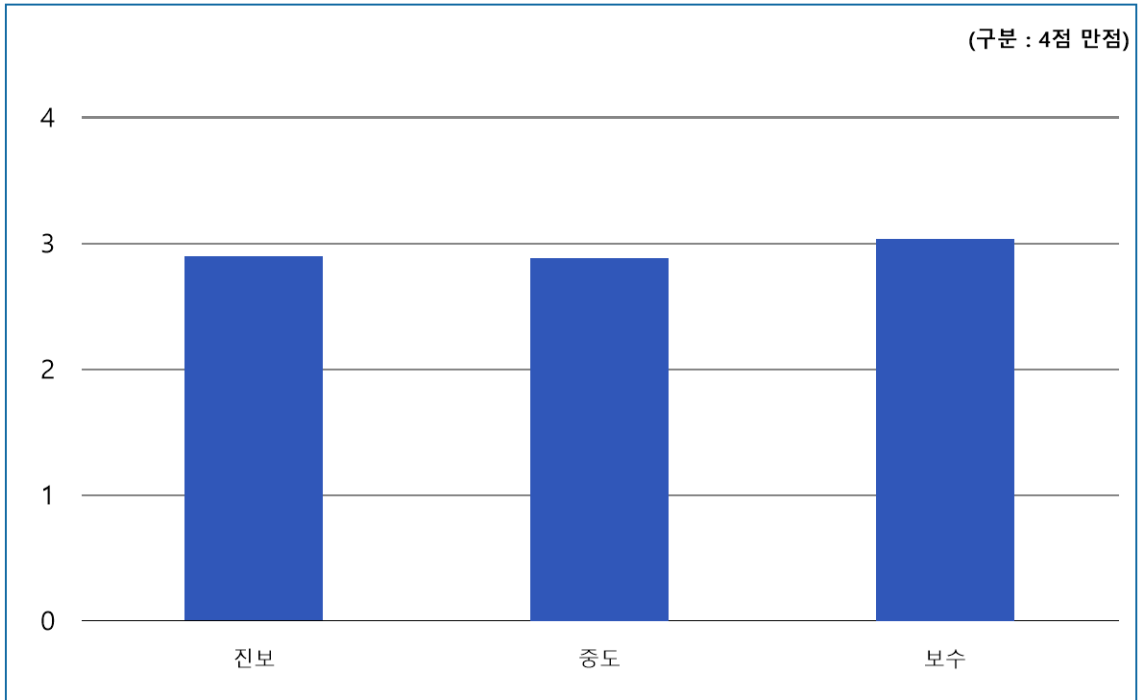


-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보수층(2.90점)은 긍정적 태도(3.0에 근접)를 보이지만, 진보층(2.78점)은 상대적으로 냉담하다. 한미동맹과 달리 일본 이슈에서는 이념적 격차가 여전히 작동하는 '감정적 뇌관'임이 확인된다.

3) 3자 공조: "한일보다는 한미일이 낫다"

구분 (4점 만점)	진보	중도	보수
한미일협력 찬성	2.89	2.88	3.03

그림 6-8 개인 성향별 한·미·일 3자 협력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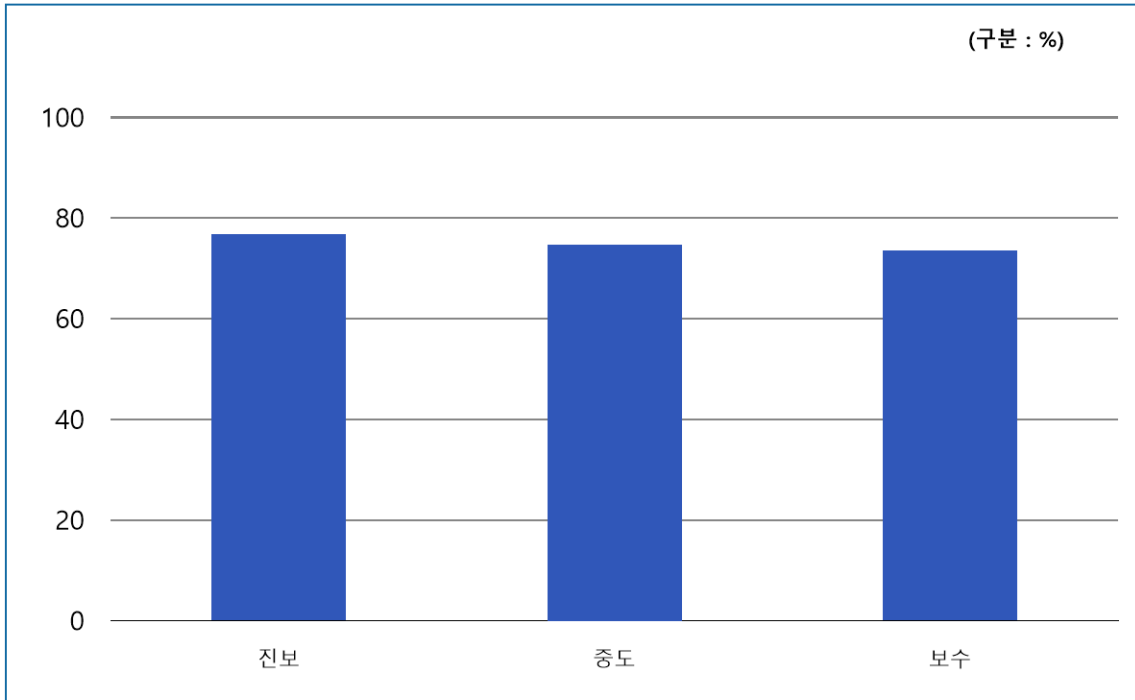


- 한일 양자 협력(2.7~2.9점)보다 한미일 3자 협력(2.8~3.0점)에 대한 지지도가 전 성향에서 더 높다. 특히 보수층(3.03점)은 3자 협력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3.0 이상)' 평가를 내렸다. 미국이 중재하는 다자 틀을 더 신뢰한다.

4) 러북 대응: "진보의 강경 대응지지"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동맹/공조 강화	76.6	74.6	73.4

그림 6-9 개인 성향별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동맹/공조 강화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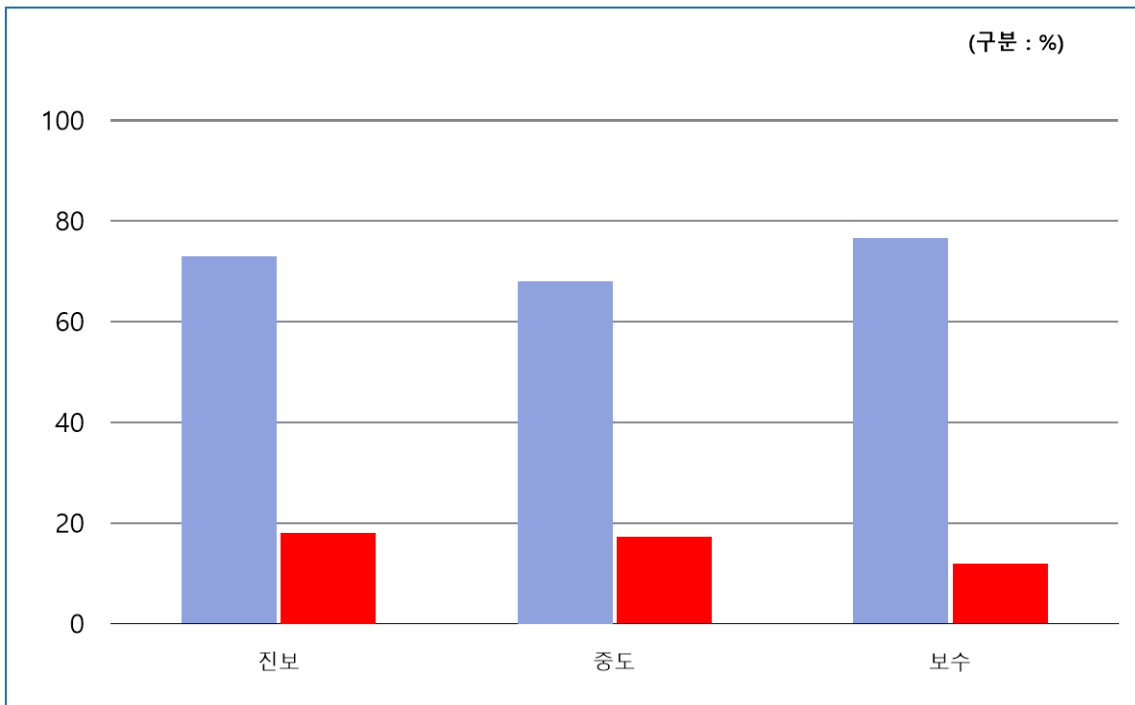


-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한미동맹 및 3자 공조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은 **진보층(76.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 정권과 러시아의 밀착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진보층은 이념을 떠나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동맹)**을 지지하는 실용성을 보인다.

5) 경제 파트너: "경제 친중론의 종말"

구분 (%)	진보	중도	보수
미국 선택	72.8	68.0	76.4
중국 선택	18.0	17.1	11.8

그림 6-10 개인 성향별 미국 선택/중국 선택 차트



- 경제적으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은 진보층에서도 18.0%에 불과하다. 미국 선택 비율(68~76%)이 압도적으로 높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외교 안보의 '초당적 합의' 형성:
 - 대중국 전략, 러북 위협 대응, 경제 파트너 선택 등 주요 외교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사라지거나 역전(진보의 강경화)되었다. 이는 외교 정책이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일본 이슈의 잔존 리스크:
 - 유일하게 정치 성향별 차이가 뚜렷한 분야는 '일본'이다. 진보층은 일본과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에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한일 관계가 외교 정책 신뢰의 '**악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
- 중도층의 미국 의존도 경계:
 - 중도층은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 선택 비율이 가장 낮아(68.0%), 미중 사이에서의 균형이나 경제적 실리를 가장 고민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 진보의 재발견:
 - 진보층을 '반미/친중'으로 규정하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은 안보 위협 앞에서 현실적인 힘(한미동맹)을 선택하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 한미일 협력의 우회로:
 -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자 협력보다는, 미국이 관여하는 '한미일 3자 협력' 프레임을 활용하는 것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 "여야정 외교안보 상설 협의체" 가동:
 - 대중, 대러 정책에서 진보/보수의 인식이 일치함(Analysis 1, 4)을 근거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초당적 국가 안보 전략서**'를 여야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선포해야 한다.
- "3자 안보 협력의 제도화":
 - 한일 협력에 대한 진보/중도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보 공유나 훈련을 한일 양자가 아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체제' 내에서 제도화하여 미국의 보증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
- "탈중국 연착륙 지원":
 - 전 성향에서 중국 경제 의존도 축소(Analysis 5)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공급망을 다변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 안보 강화법**'을 추진하여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한다.

3. 정서적 변수와 정보환경 변화가 정책 수용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정보 환경):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경로 (Q64_1 / 비율비교)
 - 분석 2 (정서적 위협 - 일본):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Q8_2 / 평균비교)
 - 분석 3 (정책 수용 - 일본): 한·일 양국 간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9 / 평균비교)
 - 분석 4 (정서적 위협 - 중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Q8_3 / 평균비교)
 - 분석 5 (정책 수용 - 중국):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Q11_1 / 비율비교)

※ 평균 산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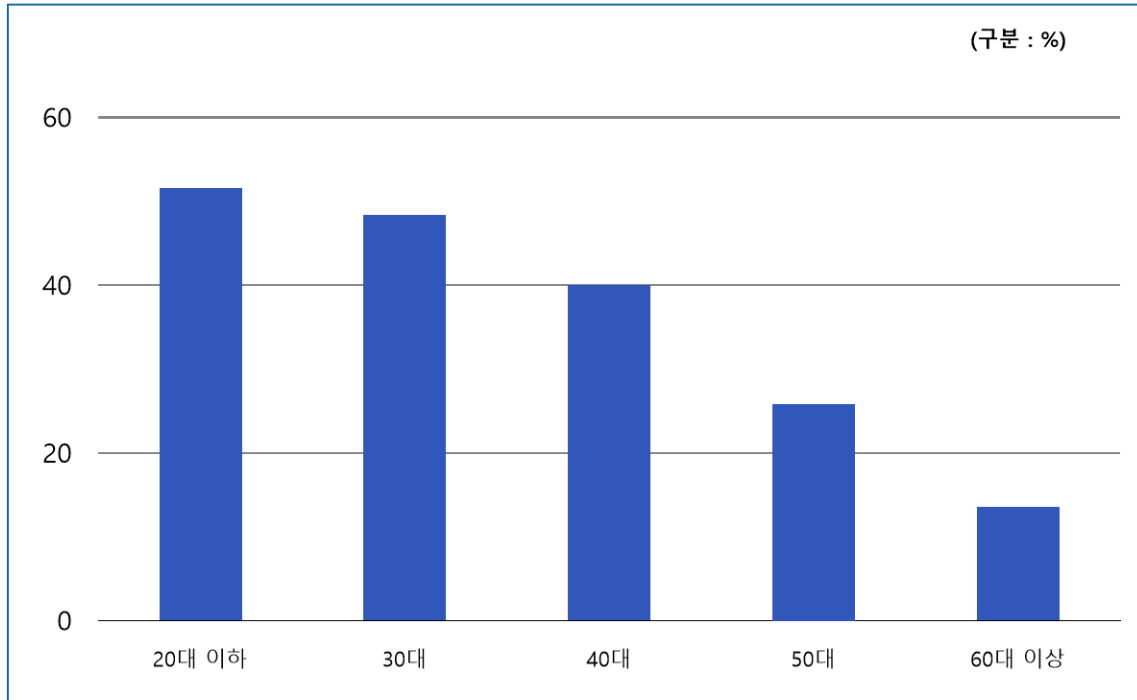
위협 인식: 1(매우긍정)~5(매우부정) →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감/부정적 정서가 높음.

정책 찬성: 1(매우찬성)~4(반대) → 역코딩하여 4점 만점(높을수록 찬성).

1) 정보 환경: "2030의 유튜브 외교 학습"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뉴미디어 의존도	51.5	48.3	39.9	25.8	13.5

그림 6-11 연령별 안보 및 국방 관련 소식 접촉 시 뉴미디어 의존도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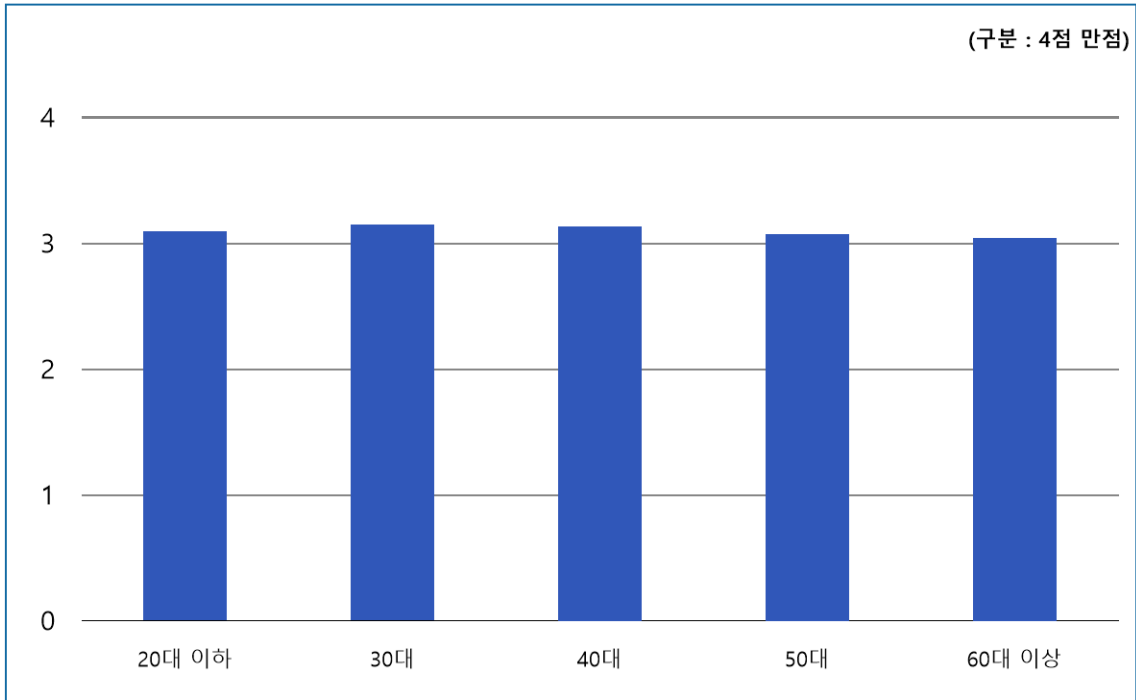


- **20대 이하(51.5%)와 30대(48.3%)**의 절반가량은 뉴미디어를 통해 주변국 소식을 접한다. 이들은 기존 언론의 해설보다 유튜브 등에서 제공하는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외교 콘텐츠(예: 혐중/반일 콘텐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2) 정서적 위협 - 일본: "30대의 높은 경계심"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본 위협 인식	3.09	3.14	3.13	3.07	3.04

그림 6-12 연령별 일본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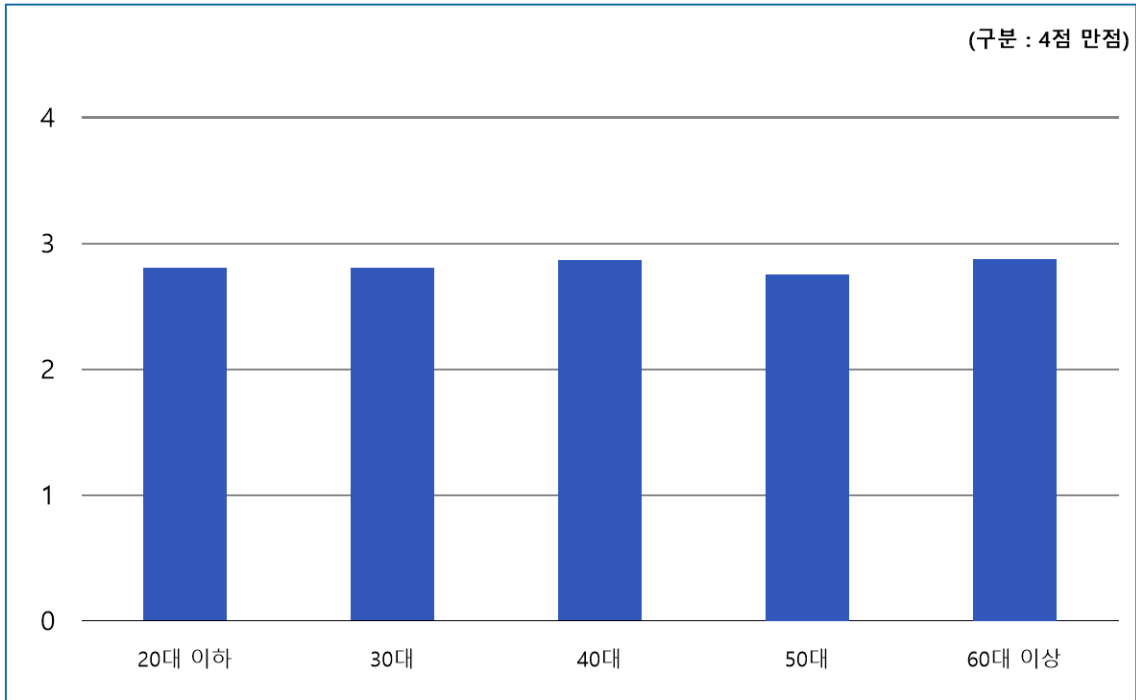


- 일본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 인식(부정 평가)은 **30대(3.14점)**에서 가장 높다. 뉴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30대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 그 자체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정책 수용 - 일본: "위협감과 협력의 딜레마"

구분 (4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일협력 찬성	2.80	2.80	2.86	2.75	2.87

그림 6-13 연령별 한일 협력 찬성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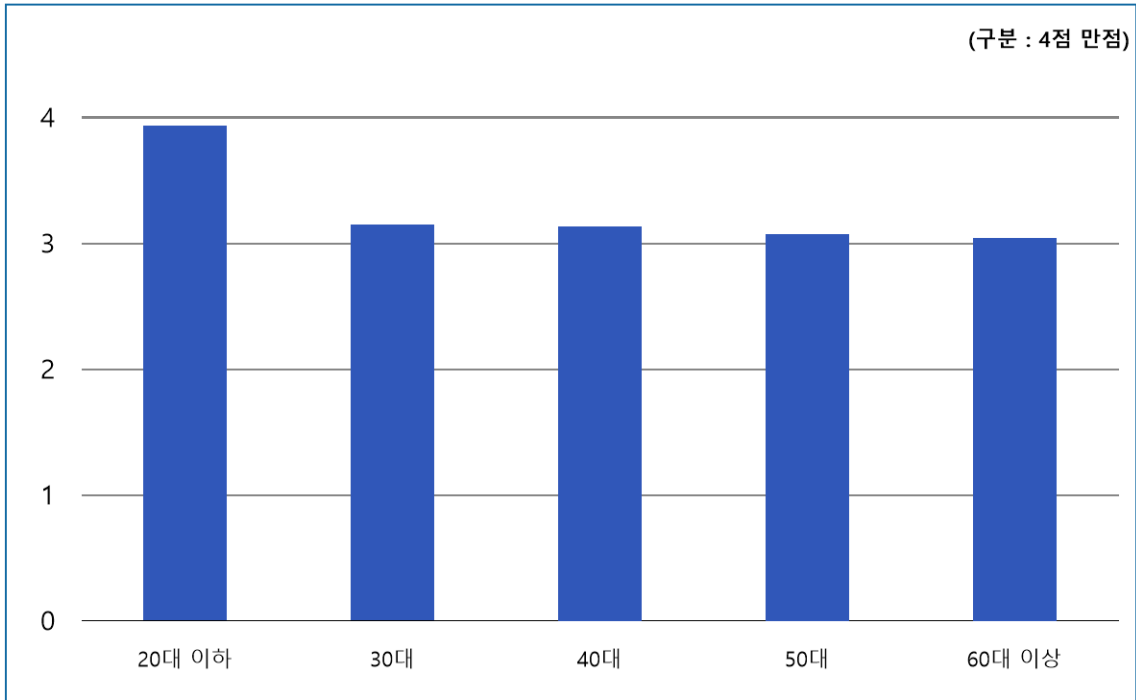


- 위협 인식이 가장 높은 30대의 한일 협력 찬성도는 2.80점으로 낮다. 반면, 60대 이상은 2.8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에 대해 느끼는 '군사적 위협감(정서)'이 안보 협력이라는 '이성적 정책'의 수용성을 제한하는 '상한선(Ceiling)' 역할을 하고 있다.

4) 정서적 위협 - 중국: "전 세대의 압도적 반감"

구분 (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국 위협 인식	3.93	4.00	3.96	3.91	3.95

그림 6-14 연령별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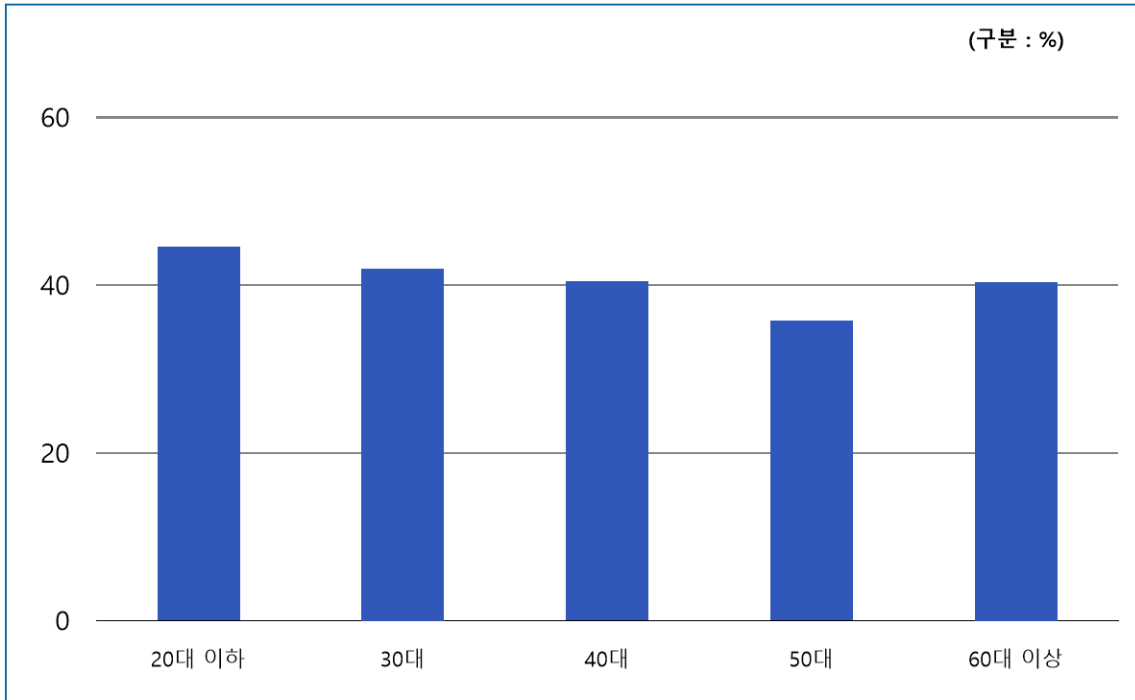


-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 인식은 전 세대에서 **3.9~4.0점(매우 부정적)**의 극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3.0~3.1점)보다 중국에 대해 훨씬 강력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5) 정책 수용 - 중국: "위협감이 만든 20대의 친미(親美) 노선"

구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한미동맹 우선	44.5	41.9	40.4	35.7	40.3

그림 6-15 연령별 중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한미동맹 선호 차트



-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20대 이하(44.5%)**는 대중국 대응 전략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대에게 반중(反中) 정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내 편(미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연결된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반중(反中) 정서의 보편화와 정책지지:
 - 중국에 대한 정서적 위협감(3.9~4.0점)이 임계점을 넘어섬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정책은 세대와 이념을 초월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
- 일본에 대한 복합적 감정:
 - 일본에 대해서는 위협감(3.1점대)이 중국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이 '찝찝한 감정'이 한일 안보 협력의 전면적 확대를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정보력이 높은 3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 뉴미디어의 '확증 편향' 우려:
 - 2030세대가 유튜브 등을 통해 주변국의 위협적인 모습(중국의 전랑외교, 일본의 재무장 등)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외교 정책에 대한 태도가 '**강경 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 감정이 외교의 상수다:
 -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감'과 '비호감'은 외교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은 유화책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한일 관계의 디테일:
 -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민(특히 3040)이 느끼는 '군사 대국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정책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 "팩트 기반 주변국 안보 리포트" 슷폼 배포:
 - 유튜브상의 자극적인 '혐중/반일' 콘텐츠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방부나 외교부가 주변국의 실제 군사력 현황과 우리의 대응 태세를 객관적 데이터와 그래픽으로 정리한 1분 슷폼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한일 안보협력 가이드라인" 공개:
 - 일본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불안감(30대 3.14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일 협력의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 방어'에 국한되며 "**자위대의 독자적 진입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대국민 소통 캠페인이 필요하다.
- "경제적 실리 + 안보적 원칙"의 투트랙 메시지:
 - 높은 반중 정서(4.0점)를 고려하여 안보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보여주되, 경제/문화 교류에서는 "**국익을 위한 필수적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감정과 정책을 분리하는 성숙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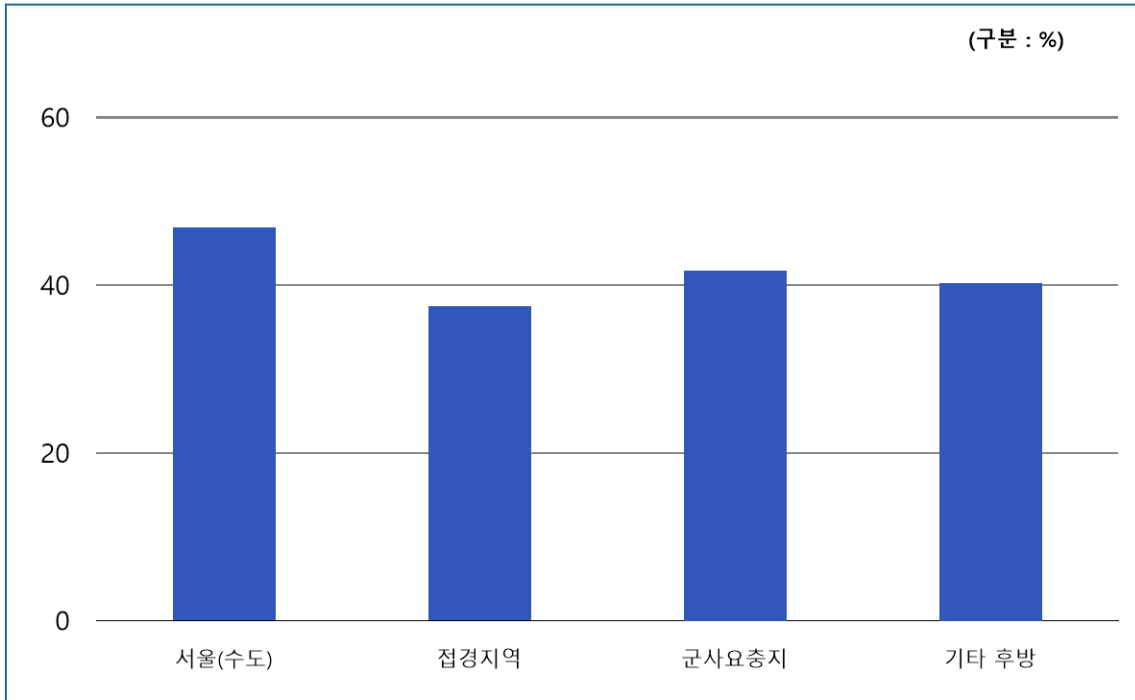
4. 전략적 공간 구획(접경/군 주둔)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기준: 전략적 공간 구획 (PQ3)
 - 서울(수도): 외교 여론의 중심이자 인구 밀집 지역
 - 접경지역(인천/경기/강원): 북한/중국 등 주변국 위협의 최전선
 - 군사요충지(대구/경북): 한미동맹 핵심 자산 배치 지역
 - 기타 후방지역: 직접적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
- 분석 변수 및 방법:
 - 분석 1 (대중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Q11_1 / 비율비교)
 - 분석 2 (한일 협력): 한·일 양국 간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9 / 평균비교)
 - 분석 3 (3자 공조): 한·미·일 3국의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10 / 평균비교)
 - 분석 4 (러북 대응): 러북협력 심화에 대한 외교적 선택으로 적절한 방법 (Q14 / 비율비교)
 - 분석 5 (경제 파트너):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Q6_2 / 비율비교)

1) 대중전략: "서울의 강경한 친미 노선"

구분(%)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한미동맹 우선	46.8	37.4	41.7	40.2

그림 6-16 지역별 중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한미동맹 대응 우선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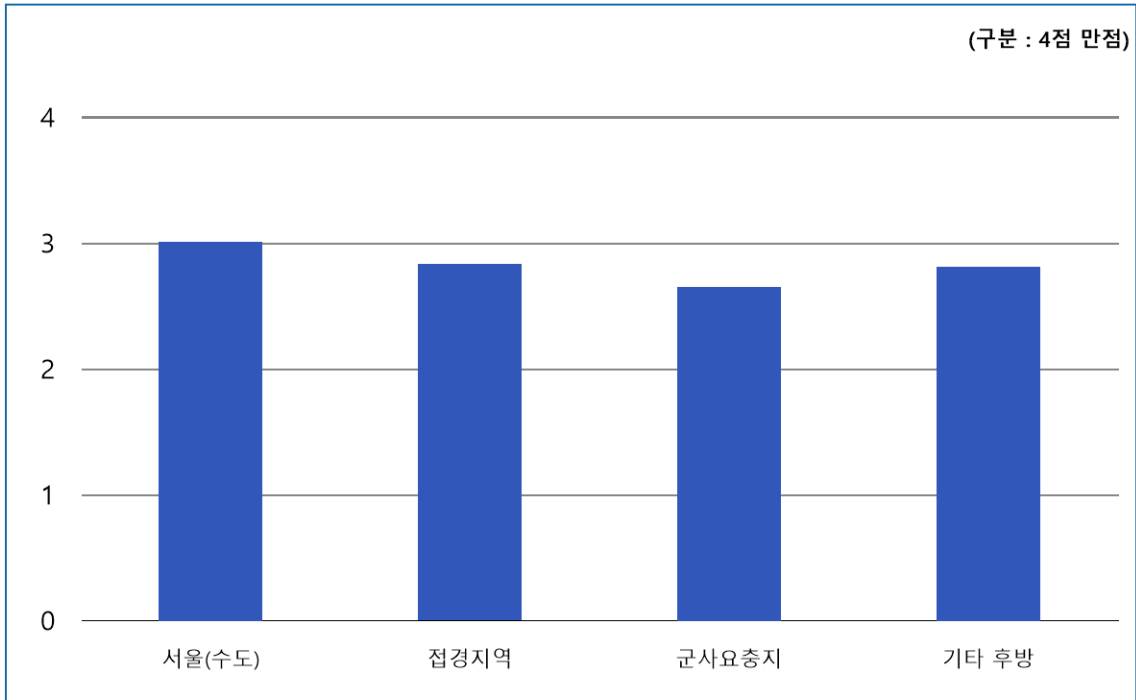


- 중국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46.8%)**에서 가장 높고, 접경지역 (37.4%)에서 가장 낮다. 정치적 고관여층이 많은 서울은 중국 견제 심리가 강한 반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접경지역(인천/경기 서부 등)은 대중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신중론이 엇보인다.

2) 한일 협력: "요충지의 반일 정서 역설"

구분(4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한일협력 찬성	3.01	2.83	2.65	2.81

그림 6-17 지역별 한일 안보협력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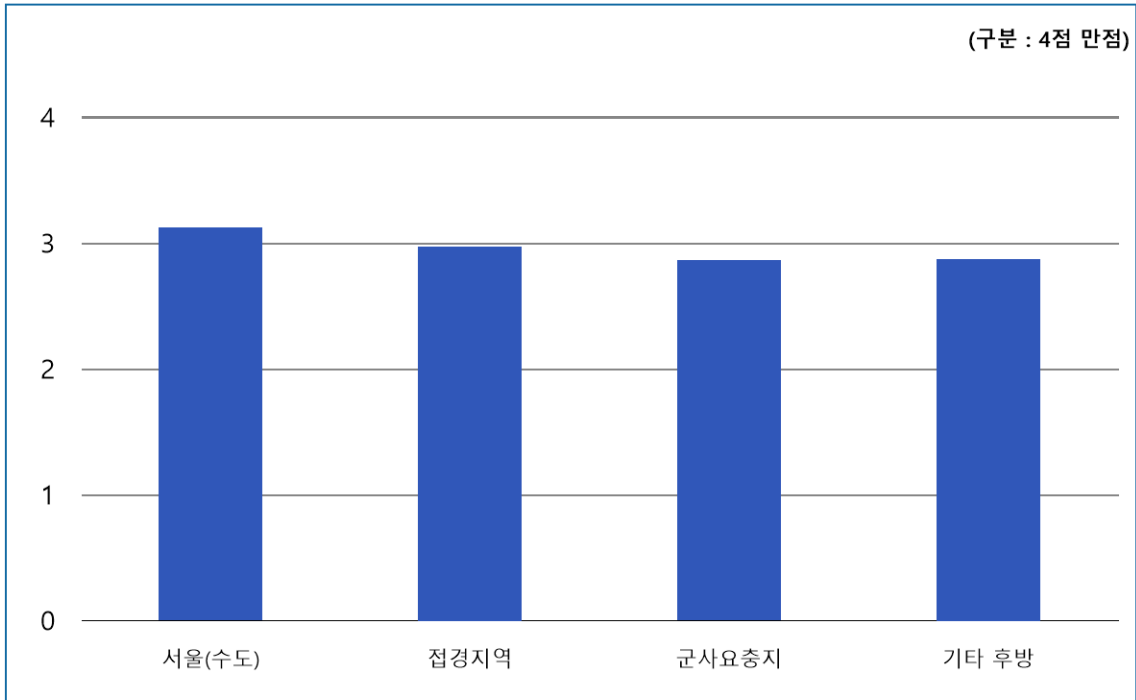


- 보수세가 강한 **군사요충지(2.65점)**가 오히려 한일 안보협력 찬성도가 가장 낮다. 서울(3.01점)만이 유일하게 '긍정(3.0 이상)' 평가를 했다. 군사요충지인 대구/경북 지역의 보수성은 '친미' 성향이 지 무조건적인 '친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독도 이슈 등 영토 문제에 민감한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3자 공조: "서울 주도의 한미일지지"

구분(4점 만점)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한미일협력 찬성	3.12	2.97	2.86	2.87

그림 6-18 지역별 한·미·일 3자 협력 지지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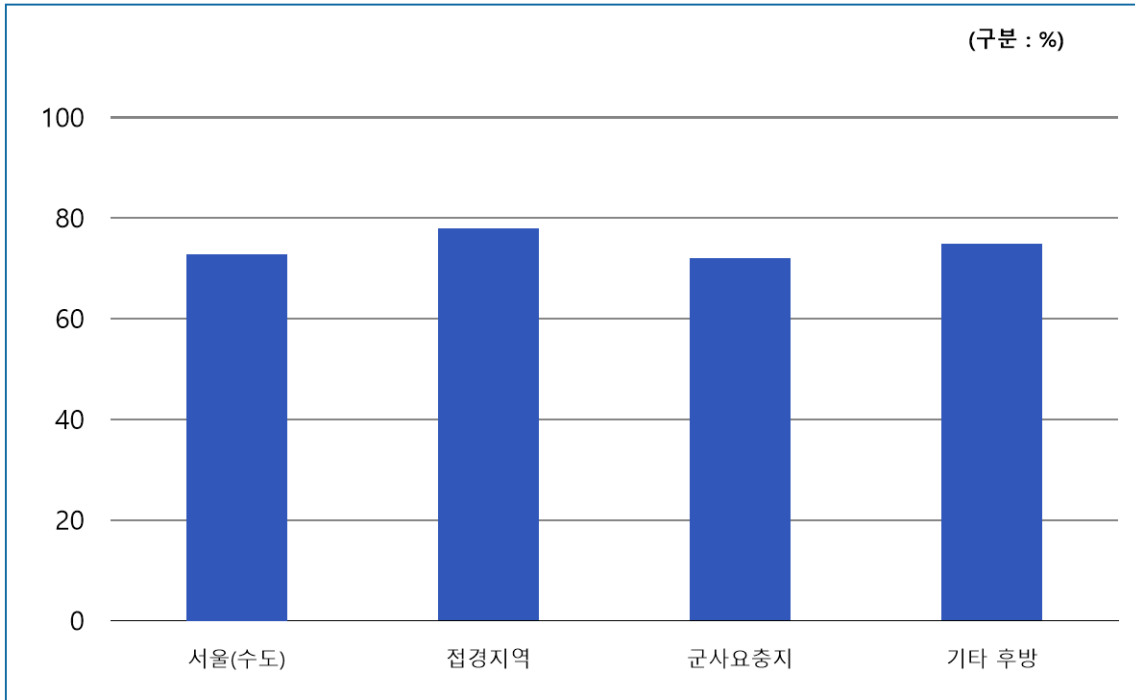


- 한미일 3자 협력 역시 **서울(3.12점)**의 지지도가 가장 높다. 접경지역(2.97점)과 요충지(2.86점)는 3.0점 미만으로, 최전방 지역일수록 주변국(중·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자 안보 체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4) 러북 대응: "접경지역의 생존 본능"

구분(%)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동맹/공조 강화	72.7	77.8	71.9	74.7

그림 6-19 지역별 러북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공조 대응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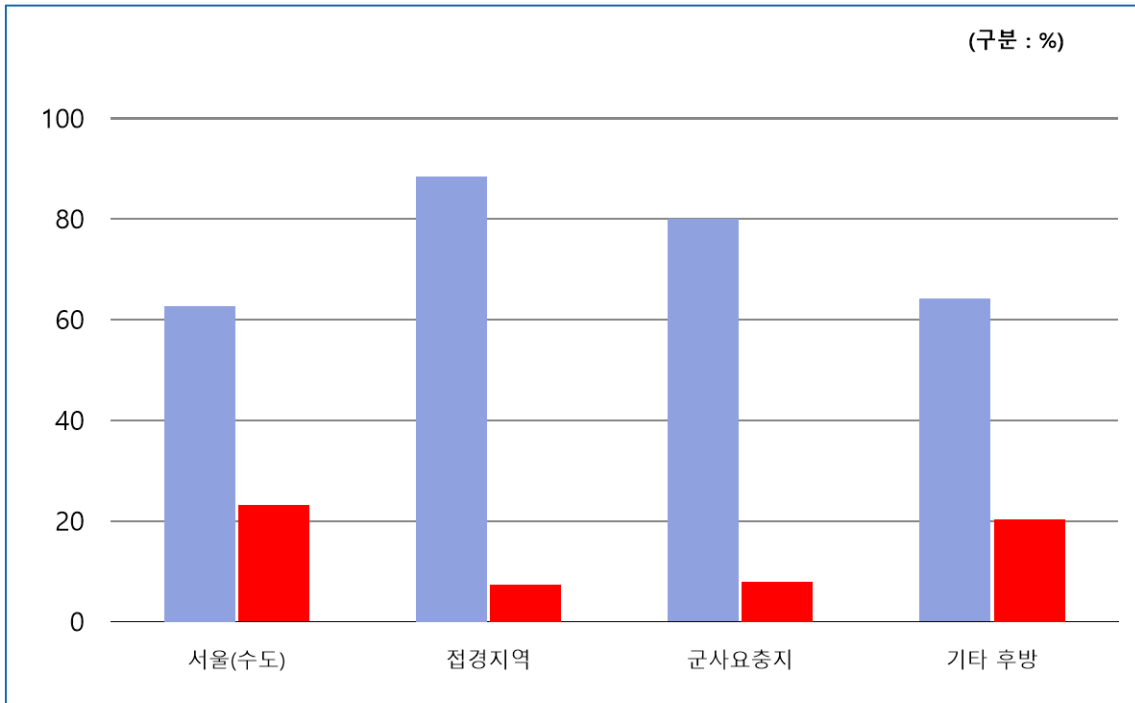


- 러북 위협에 대해 '동맹/공조 강화'로 맞서야 한다는 비율은 **접경지역(77.8%)**에서 가장 높다. 평소 외교 전략(대중국)에서는 신중하지만, 당장의 실질적 군사 위협(러북) 앞에서는 가장 확실한 억제력인 **한미동맹에 의지하려는 '생존 본능'**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5) 경제 파트너: "접경/요충지의 확실한 미국 선택"

구분(%)	서울(수도)	접경지역	군사요충지	기타 후방
미국 선택	62.6	88.4	79.9	64.0
중국 선택	23.0	7.3	7.9	20.3

그림 6-20 지역별 경제안보적 협력 대상으로 미국 선택/중국 선택 선호도 차트



-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을 선택한 비율은 **접경지역(88.4%)**과 **군사요충지(79.9%)**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서울은 중국 선택 비율(23.0%)이 상대적으로 높다. 안보 최우선 지역인 접경/요충지는 경제 역시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 반면, 서울은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놓지 않고 있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서울의 '전략적 분리':
 - 서울은 안보에서는 '친미/한일협력'을 지지하지만, 경제에서는 중국의 비중을 인정하는 가장 정교하고 실리적인 분리 대응 전략을 선호한다.
- 접경지역의 '안보 일체화':
 - 접경지역은 대중 전략에서 신중함을 보이지만, 경제 파트너십에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을 선택(88.4%)하여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다. 러북 위협 등 실제 위기 시 동맹 의존도가 매우 높다.
- 요충지의 '자주적 보수성':
 - 대구/경북 등 군사요충지는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질서를 지지하지만(79.9%),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는 가장 부정적(2.65점)이다. 이는 '친미'와 '반일'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 정서를 보여준다.
- 지역별 외교 쟁점의 차이:
 - 서울은 '국익 극대화', 접경지는 '생존', 요충지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외교 사안을 판단한다.
- 한일 관계의 지역적 장벽:
 - 보수 텃밭인 영남권(군사요충지)의 낮은 한일 협력 지지도는, 정부의 대일 외교 드라이브가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접경지역 안보-경제 결합 모델":
 - 접경지역의 높은 미국 경제 의존도(88.4%)를 활용하여, 미군 기지 주변 상권 활성화나 한미 공동 평화 공원 조성 등 동맹이 지역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
- "독도/영토 수호 의지 재확인":
 - 한일 협력에 거부감이 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한일 안보 협력과는 별개로 **"영토 주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 "도시형 경제안보 포럼":
 - 미중 사이에서 실리적 균형을 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반도체 공급망이나 금융 안보 등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외교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화 장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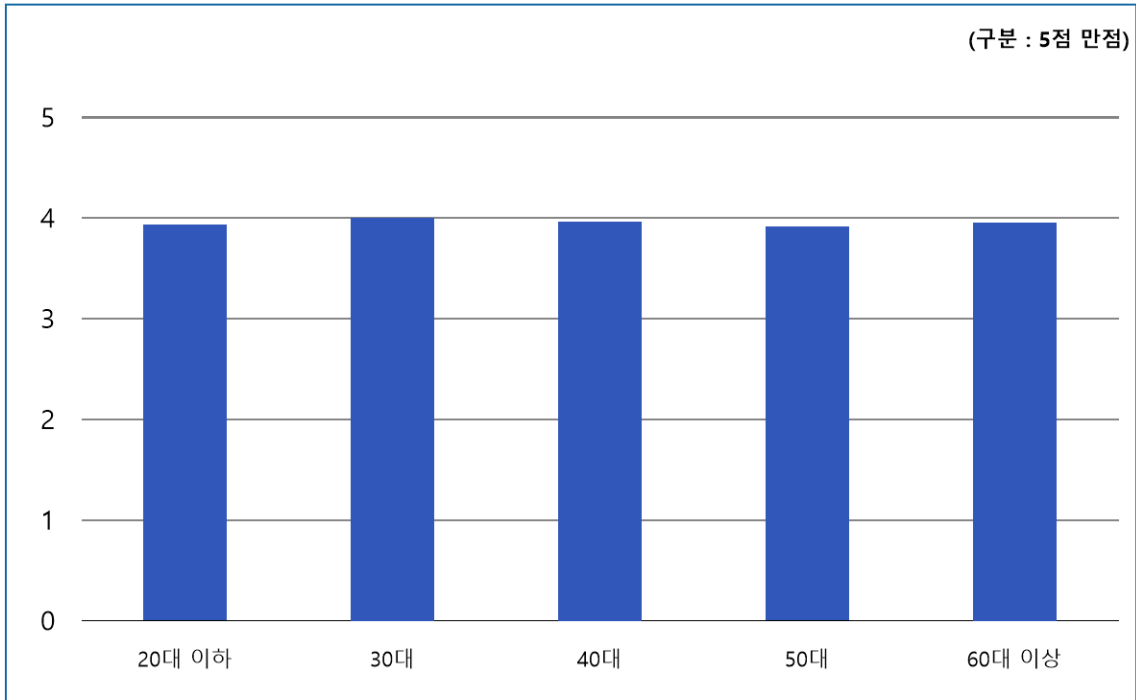
5. 장기적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민감도 지수 개발

- 분석 대상: 일반국민 (TYPE=1)
- 분석 프레임: '정책 민감도'를 5가지 차원으로 정의
 - 지표 1 (중국 위협 민감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Q8_3)
해석: 점수(5점 만점)가 높을수록 중국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함.
 - 지표 2 (일본 위협 민감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Q8_2)
해석: 점수(5점 만점)가 높을수록 일본 재무장에 대한 경계심이 큼.
 - 지표 3 (동맹 결속 민감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Q11_1)
해석: 비율이 높을수록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 편입을 선호함.
 - 지표 4 (공조 수용성): 한·미·일 3국의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Q10)
해석: 점수(4점 만점)가 낮을수록 3자 협력에 대한 저항감이 큼.
 - 지표 5 (경제안보 민감도):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 선택 비율 (Q6_2)
해석: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탈중국/친미 성향이 강함.

1) 중국 위협 민감도: "전 세대의 '최고조' 경계심"

구분(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국 위협 민감도	3.93	4.00	3.96	3.91	3.95

그림 6-21 연령별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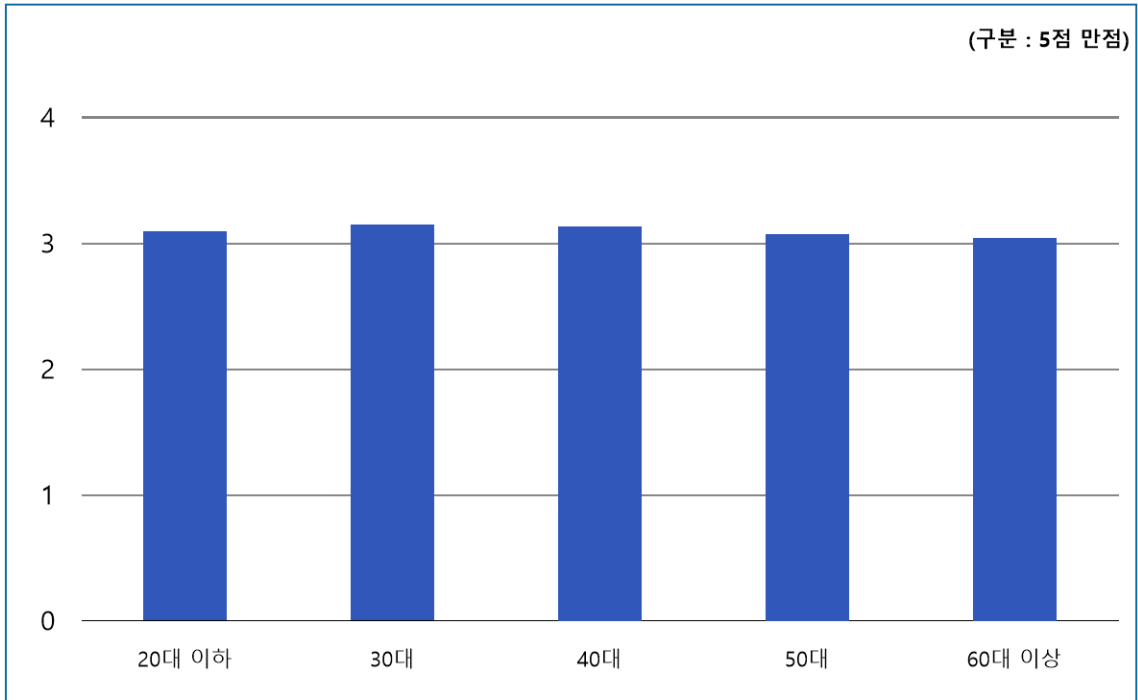


-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전 세대에서 **3.9~4.0점**의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30대(4.00점)**가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 반중 정서는 특정 세대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상수'**가 되었다. 대중국 유화 정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2) 일본 위협 민감도: "3040의 '잠재적' 불안"

구분(5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본 위협 민감도	3.09	3.14	3.13	3.07	3.04

그림 6-22 연령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 인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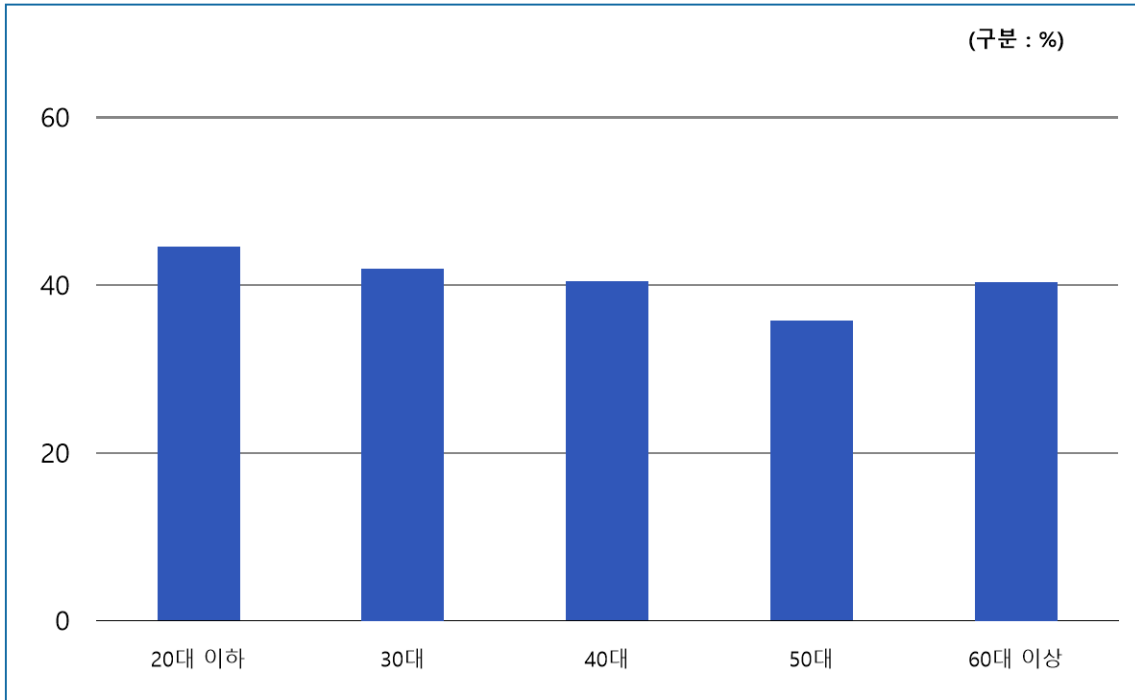


- 일본에 대한 위협 민감도는 **30대(3.14점)**와 **40대(3.13점)**에서 가장 높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시선(3.0 이상)'을 거두지 않고 있다.

3) 동맹 결속 민감도: "20대의 선명한 '친미' 노선"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맹 결속 민감도	44.5	41.9	40.4	35.7	40.3

그림 6-23 연령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한미 동맹 결속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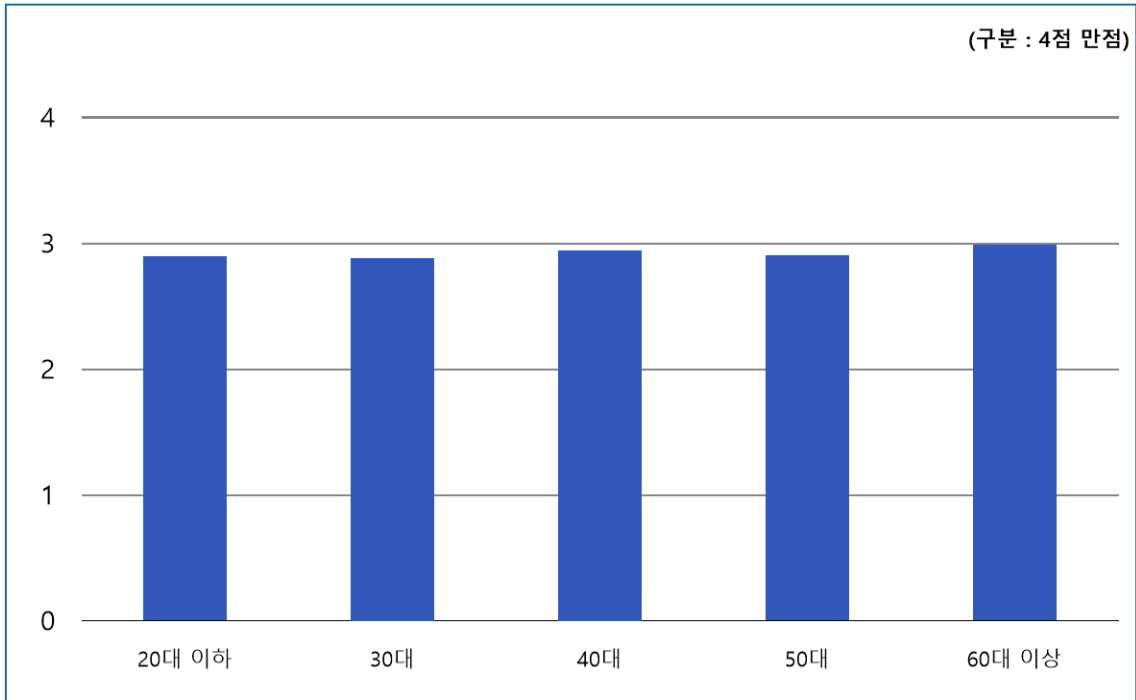


- 중국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속 민감도는 **20대 이하(44.5%)**에서 가장 높다. 반면, **50대(35.7%)**는 상대적으로 낮아 외교적 균형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4) 공조 수용성: "60대의 지지, 30대의 유보"

구분(4점 만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공조 수용성	2.89	2.88	2.94	2.90	2.98

그림 6-24 연령별 한·미·일 안보협력 선호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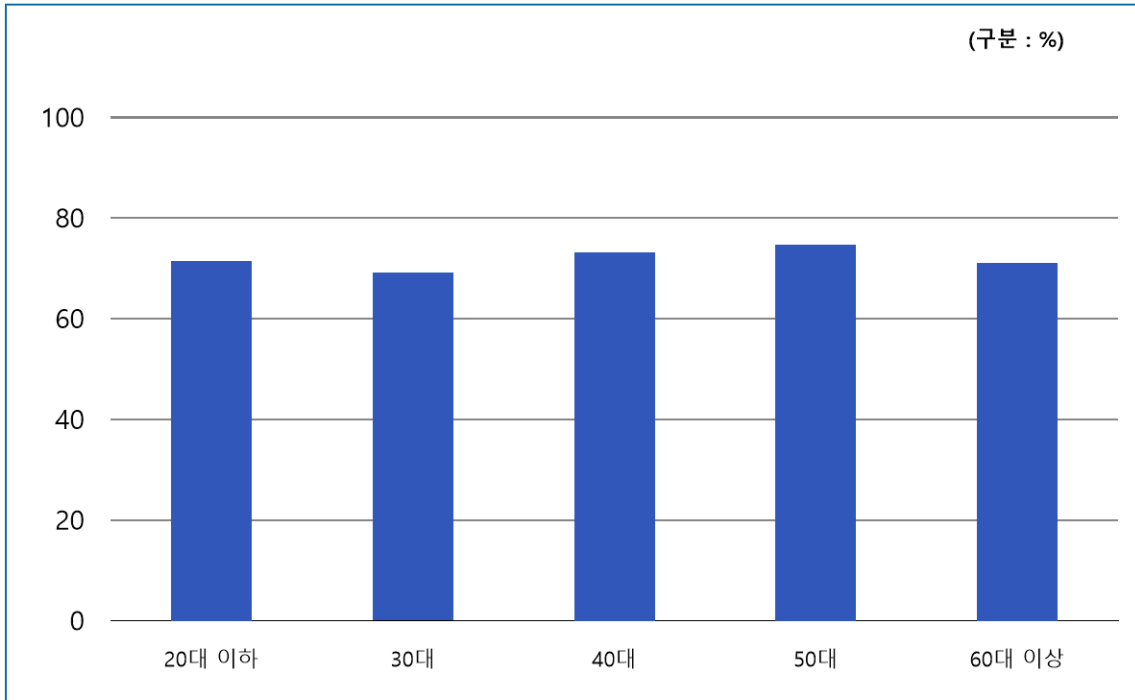


- 한미일 안보협력 수용성은 **60대 이상(2.98점)**에서 가장 높고, **30대(2.88점)**에서 가장 낮다. 30대는 일본에 대한 위협 민감도(지표 2)가 가장 높아, 일본이 포함된 안보 협력에 가장 소극적이다.

5) 경제안보 민감도: "30대의 '경제 독자성' 고민"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안보 민감도	71.4	69.0	73.1	74.6	71.0

그림 6-25 연령별 경제안보적 파트너 미국 선호 차트



- 경제 파트너로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50대(74.6%)와 40대(73.1%)에서 높지만, 30대(69.0%)에서 가장 낮다. 30대는 안보에서는 반중(反中)이지만, 경제에서는 미국 일변도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느끼며 '경제적 실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6)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30대의 '복합적 딜레마':
 - 30대는 중국도 싫고(지표 1 최고), 일본도 불안하며(지표 2 최고), 경제적으로 미국만 믿기도 불안해하는(지표 5 최저) '**삼중고**'에 빠져 있다. 외교 정책 수립 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계층이다.
- 20대의 '확실한 선택':
 - 20대는 중국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결속(지표 3)을 선택하는 등 가장 명쾌하고 직관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 50대의 '균형 감각':
 - 50대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선호(지표 5)하지만,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 '올인'을 경계(지표 3 최저)하며 신중한 접근을 선호한다.
- 반중(反中)은 상수, 반일(反日)은 변수:
 -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전 세대 공통이지만, 일본에 대한 경계심은 3040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 추진 시 '일본의 역할 확대'에 대한 3040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 경제 안보의 다변화:
 - 30대의 낮은 미국 경제 의존도 선호는, 공급망 다변화 등 '**미국 외 대안**'을 제시할 때 정책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일 안보 '레드라인(Red-line)' 선언":
 - 일본 위협 민감도가 높은 30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불가**"와 같은 안보 협력의 한계선을 명확히 공개 천명해야 한다.
- "가치 동맹 캠페인":
 - 동맹 결속 민감도가 높은 20대에게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조약을 넘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 "경제안보 리스크 헤징 지원":
 - 경제 실리를 중시하는 50대를 위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 지수 개발 및 심층 분석

1. 대북 인식 심층 분석 5대 지수 개발

1) 경제안보 미국 편중도 지수 (Strategic Economic Alignment Shift Index, SEASI)

• 정의: 경제 안보 파트너로 중국을 이탈하여 미국 및 서방 동맹국을 선택하는 경향성 측정.

• 구성 변수:

- Q6_2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
 - 1 (미국) → 100점 (강력한 편중)
 - 2 (일본), 5 (인도/태평양) → 75점 (서방/가치동맹 연대)
 - 4 (러시아) → 25점 (반서방)
 - 3 (중국) → 0점 (중국 편중)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SEASI = \text{Map}(Q6_2)$$

※ 100점에 가까울수록 "경제도 안보도 미국과 함께(안미경미)" 노선 지지.

2) 대일 안보협력 수용성 지수 (Japan Security Cooperation Receptivity Index, JSCRI)

• 정의: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현실적 필요에 의해 수용하는 정도.

• 구성 변수:

- Q9 (한·일 양국 간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1(매우 그렇다) → 100점
- Q10 (한·미·일 3국의 대북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1(매우 그렇다) → 100점
- Q7_2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일본의 태도): 1(지원) → 100점, 5(북한지원) → 0점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양자협력 40% + 3국공조 30% + 신뢰도 30%):

$$JSCRI = (5 - Q9) \times 25 \times 0.4 + [(5 - Q10) \times 25 \times 0.3] + [(5 - Q7) \times 25 \times 0.3]$$

※ 점수가 높을수록 "과거사보다 안보 협력이 우선"이라는 현실주의적 태도.

3) 대외전략 명확성 지수 (Pro-US Alliance Clarity Index, PACI)

- 정의: 모호한 균형 외교보다 한미동맹 중심의 확실한 노선(전략적 명확성)을 선호하는 강도.

- 구성 변수:

- Q11_1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Q12_1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적 선택)
 - 1(한미동맹), 2(한미일/한미러) → 100점 (명확성)
 - 3(한중일/동북아), 4(다자협력/한러) → 50점 (모호성/균형)
 - 5(한중양자), 6(기타) → 0점 (이탈)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PACI = \frac{\text{Map}(Q11_1) + \text{Map}(Q12_1)}{2}$$

※ 100점에 가까울수록 정부의 '가치 외교 및 동맹 밀착' 기초를 강력히 지지.

4) 권위주의 블록 위협 인식 지수 (Authoritarian Bloc Threat Index, ABTI)

- 정의: 북·중·러의 군사적 부상과 밀착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수준.

- 구성 변수:

- Q13 (러북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한 의견):
 - 1(매우 위협) → 100점 역코딩 $(5 - x) \times 25$
- Q8_3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Q8_4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긍정) ~ 5(매우 부정) → 정방향 코딩: $(x-1) \times 25$

- 개발 지수 공식(가중치 적용):

$$ABTI = [(5 - Q13) \times 25 \times 0.4] + [(Q8_3 - 1) \times 25 \times 0.3] + [(Q8_4 - 1) \times 25 \times 0.3]$$

※ 점수가 높을수록 "북중러는 적대적 위협 세력"이라는 인식이 뚜렷함.

5) 인도-태평양 전략 기대 지수 (Indo-Pacific Strategy Potential Index, IPSPI)

- 정의: 인도·호주 등 인태 국가들과의 연대와 그들의 군사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대감.
- 구성 변수:

- Q7_5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국가의 태도):
- 1(지원/우호) → 100 (역코딩: $(5-x) \times 25$)
- Q8_5 (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국가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
- 1(긍정적) → 100 (역코딩: $(5-x) \times 25$)

※ 주의: ABTI와 달리 여기서는 '군사력 증강'을 '우리 편의 자산'으로 보므로 긍정 응답이 고득점.

- 개발 지수 공식(신뢰도 50% + 자산화인식 50%):

$$IPSPI = [(5 - Q7_5) \times 25 \times 0.5] + [(5 - Q8_5) \times 25 \times 0.5]$$

※ 점수가 높을수록 "4강을 넘어선 외교 다변화(인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봄.

6) 지수 결과 제시

순위	지수명	Mean	SD	중위수	설명
1	대외전략 명확성 지수, PACI	84.21	21.70	100.00	한미동맹 중심의 확실한 외교 노선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임
2	경제안보 미국 편중도 지수, SEASI	80.15	36.91	100.00	'안미경중'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경제도 미국/서방과 함께해야 한다는 '안미경미' 인식이 확고함.
3	권위주의 블록 위협 인식 지수, ABTI	75.62	15.14	75.00	북·중·러의 밀착과 군사력 증강을 심각한 '현실적 위협'으로 체감 중.
4	대일 안보협력 수용성 지수, JSCRI	67.46	16.03	67.50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안보 파트너로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67.5점)하고 있음.
5	인도-태평양 전략 기대 지수, IPSPI	56.19	15.61	50.00	인도/호주 등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아직 4강 외교만큼의 '확신이나 기대감'은 부족함.

7) 결과 분석

- 지수에 대한 해석:
 - SVSI(사회적 가치, 65.0점)와 CRII(위기감, 65.1점)는 높게 튀어나와 있지만, VMOI(모병제, 43.5점)는 폭 꺼져 있다. 이가 의미하는 것은 국민들은 병력 부족 위기(CRII)를 심각하게 느끼고 군 복무 가치(SVSI)도 인정하지만, 그 대안으로 '모병제'를 즉각 도입하는 것(VMOI)에는 아직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는 알지만 급진적 변화는 두렵다는 심리이다.

그림 6-26 대주변국 인식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 종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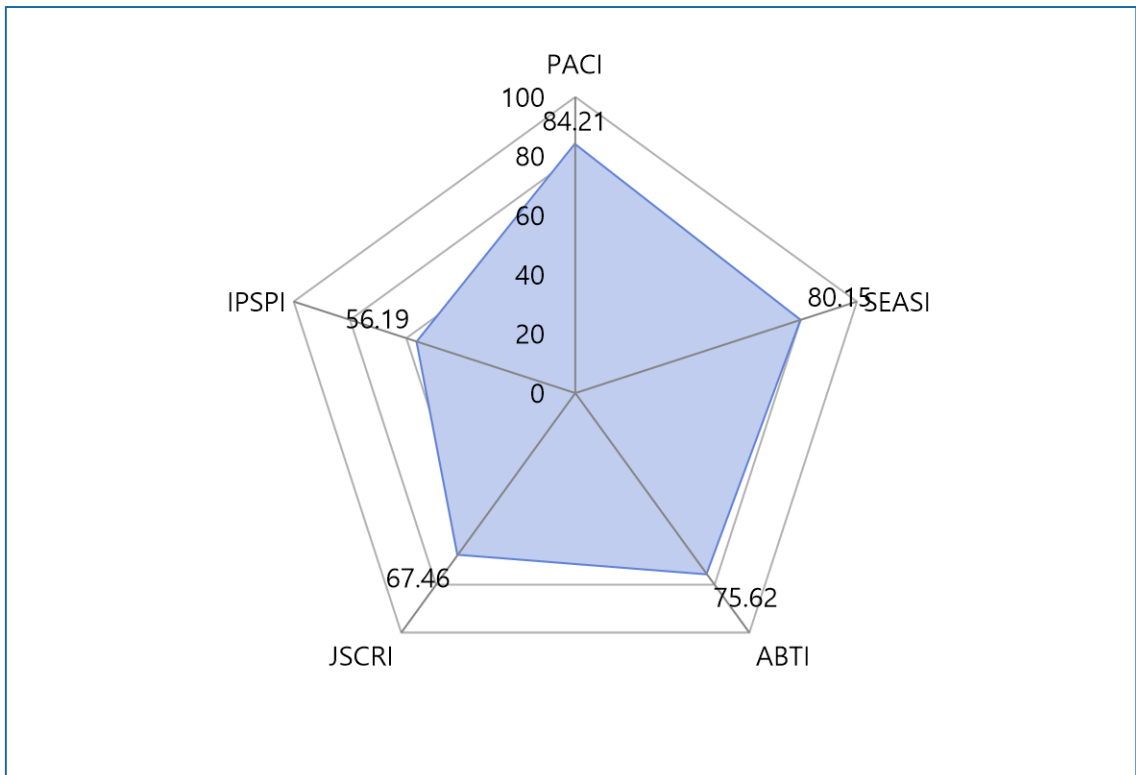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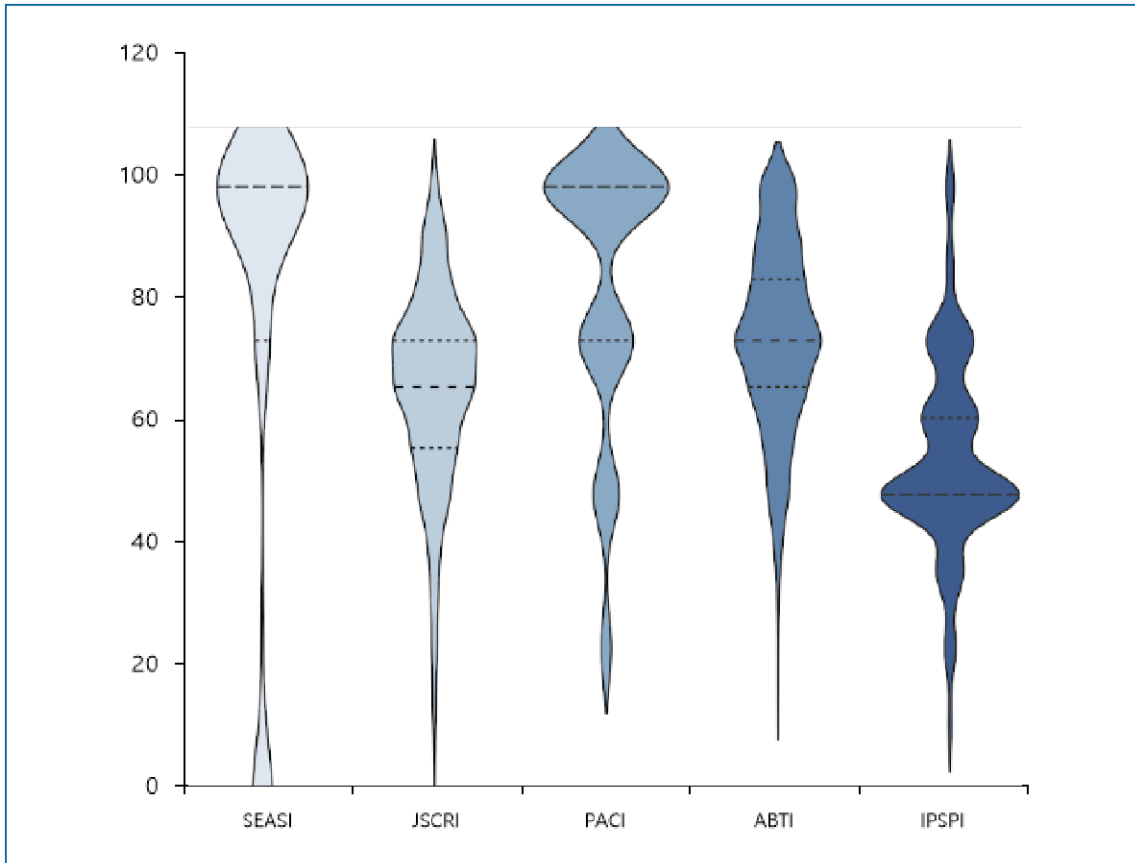


그림 6-27 대주변국 인식변화 및 외교정책 추진 방향 분포 분석



- 분포 분석: SEASI(미국편중)와 PACI(전략명확성)가 80점대 이상으로 높게 솟아 있어,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중심이 '한미동맹 강화'와 '탈중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IPSPI(인태 전략)는 50점대로 낮아, 아직 국민들의 시선이 전통적 4강 외교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8) 결과 해석 및 시사점

-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공식적 증언 (SEASI 80.2점): 경제 안보 파트너로 중국(16%) 대신 미국 (72%)을 선택한 압도적 비율과 SEASI 지수(80.2점)는, 우리 국민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안보 위협을 겪으며 **"경제도 안보도 미국과 함께(안미경미)"**라는 새로운 생존 공식을 확립했음을 보여준다.
- 전략적 명확성의 '쏟림 현상' (Median PACI 100점): 대외전략 명확성 지수(PACI)의 중위수가 100점을 기록한 것은,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한미동맹 중심의 서방 연대'**로 여론이 완전히 결집(Consensus)했음을 의미한다. 이견 없는 주류 여론 형성된다.

- 위협이 견인하는 '한일 안보 밀착' (Correlation 0.53): 대일 안보협력 수용성(JSCRI 67.5점)은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특히 북·중·러 위협 인식(ABTI)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본과의 협력은 감성적 차원이 아닌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수용되고 있다.
- 권위주의 블록(북·중·러)의 '적대적 실체화' (ABTI 75.6점):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개별적 사안이 아닌 '**단일한 위협 블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신냉전' 구도를 학술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 안보 환경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인태 전략의 '인지적 공백' (Low IPSP): 인도-태평양 전략 기대 지수(IPSPI 56.2점)는 5대 지수 중 가장 낮다. 정부의 외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야는 여전히 미·중·일·러 4강에 고정되어 있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인태 국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 동맹 외교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 해소: 압도적인 친미·반중 정서는 정부와 군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다. 과거와 같은 '사대 외교' 프레임이나 '균형론' 비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안보 지형이 형성된다.
- 대중(對中) 레버리지의 상실과 새로운 접근법 필요: 국민 다수가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도 신뢰하지 않는 상황(SEASI 고득점)은, 군이 중국과의 군사 외교나 우발 충돌 방지 협의 시 '**눈치 보기**'보다 '**원칙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
- 한일 군사협력의 '속도전' 가능: 위협 인식에 기반한 일본 수용성(JSCRI)은, 북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넘어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더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론적 명분이 축적되었음을 시사한다.
- '가치 동맹' 내러티브의 확장성: 권위주의 블록에 대한 높은 경계심(ABTI)은,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대만 해협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관여할 때 '**자유 진영의 수호**'라는 명분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방산 수출의 '전략적 외연' 확대 기회: 인태 전략에 대한 낮은 기대감(IPSPI)은 역설적으로 '블루 오션'이다. K-방산 수출을 매개로 폴란드(NATO), 호주, 사우디(중동) 등과의 안보 협력을 가시화 한다면, 국민들의 **외교적 시야를 4강에서 글로벌로 확장**시킬 수 있다.

라. 정책대안 제시

1. 문제의 구조: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반 주변국 외교 전략 강화 필요성

- 미·중 전략적 경쟁의 장기화,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과 북러 협력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는 최근 한국 외교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외교정책은 더 이상 전통적 외교·안보 의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안보·첨단기술·공급망·산업정책과 결합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 외교는 ‘관계개선’이나 ‘균형외교’와 같은 추상적 목표만으로는 **외교정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주변국 외교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는 국민 인식을 반영하여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2025년 범국민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외교정책에서 명확한 방향 설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전략 명확성 지수(PACI)는 평균 84.21점, 중위수 100점을 기록하여 외교정책이 모호한 균형보다는 분명한 기준 위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명확한 외교정책 노선의 정립이 곧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안보 인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경제 안보 파트너 선택은 미국이 72%, 중국이 16%**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대미·대중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과거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안보 역시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 또한 이번 조사에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 지수(ABTI)도 7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러시아·북한을 상호 연계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국 외교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을 넘어 변화하는 **국가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이와 같은 국민 인식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추진과정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한일관계는 성숙하게 관리하고, 한중·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정책 제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전제로, 국민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대주변국 외교정책의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정책대안 A: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주변국 외교 정책 전개

- 첫째, 한미동맹을 대주변국 외교의 출발점이자 기준 축으로 설정하되 이를 단순한 군사 동맹 차원을 넘어 외교·경제안보 전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에도 나타난 것처럼 국민 다수는 미국과의 협력을 한국 외교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제 규범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경향이다.
- 이에 따라 대주변국 외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 경제안보, 기술·공급망 협력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외교 정책 전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적대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외교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특히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핵심 광물, 방산·우주·사이버 분야 등에서 동맹 및 우방과 공유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경우 외교정책의 수립 추진 과정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외교 정책의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대주변국 외교는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동맹 기반 기준이 명확히 제도화될 경우, 한국 외교는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정책대안 B: 대중 외교의 실용적 협력과 위험 관리 병행

- 둘째, 중국을 단일한 협력 또는 경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협력 영역과 위험 관리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대중 인식은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경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기후변화, 보건, 환경, 일부 경제 협력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영역에서는 실용적 협력을 유지하되, 안보·경제안보·기술·공급망 분야에서는 위험 관리와 기준 설정을 강화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리는 외교 정책의 경직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대중 외교에서 기준 없는 유연성은 정책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반대로 협력과 관리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과잉 대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정책대안 C: 대일 외교의 단계별·기능별 협력

- 셋째, 일본과의 관계를 **역사·영토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 영역으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범국민안보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일본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 역사 인식과 실용적 협력 기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나타냈다.
- 이에 따라 과거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되, 안보 협력, 경제·기술 협력,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서는 실용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트랙 전략은 양국 간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 가능한 영역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갈등과 협력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대일 외교는 감정적 충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투트랙 전략이 정착될 경우, 한국은 원칙과 실용을 병행하는 안정적 대일 외교를 구현할 수 있다.

5. 정책대안 D: 대러 외교의 안정적 관리

- 넷째, 러시아를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재정의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위험 관리 중심의 외교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러시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신뢰 수준과 함께 안보 불안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러 외교는 관계 개선이나 확대보다는 **에너지·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 국제사회와의 공조, 군사적 긴장 관리 등 위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이다.
- **대러 외교에서 명확한 위험 관리 기준이 부재할 경우 한국은 불필요한 외교·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반대로 위험 관리 중심 접근이 정착될 경우 대러 외교는 국익 중심의 안정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6. 정책대안 E: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용적 접근 강화

- 이번 조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체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동 전략이 한국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이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참여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확보, 신흥국과의 산업협력 등 경제안보와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이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한국 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7 결론

- 본 정책 제안은 2025년 범국민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민 인식이 향후 대주변국 외교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에서 작성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외교정책이 모호한 균형보다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될 것을 희망하였다. 과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인식도 상당 부분 퇴색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제안은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핵심 토대로** 삼고, 군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첨단기술·공급망 협력 등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중 외교에서는 안정적 관계 유지를 전제로 실용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첨단기술과 공급망, 경제안보 등 민감한 분야에서는 **위험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대일 외교는 **국민 인식과 정서를 반영하여 단계적·기능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과거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한 정책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병행될 필요도 있다. 대러 외교는 단계적 관계 개선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본**으로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에너지·경제 분야의 충격 완화를 병행하는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동 전략의 기본틀을 존중하되, **한국의 참여 과정에서 경제안보·산업협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전략의 실질적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대주변국 외교를 **국익 확보와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는 실용 중심, 실행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5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정책대안 연구용역

발행일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편집/인쇄 소랑커뮤니케이션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
(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모바일로도 신고/상담 가능]